

청소년정책 총괄조정 방안 연구

- ▶ 책임연구원 : 윤철경(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선임연구위원)
- ▶ 공동연구원 : 박병식(동국대학교 · 교수)
김진호(한국방송통신대학교 · 교수)
강현주(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부연구위원)
- ▶ 연구보조원 : 엄아람(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발 간 사 ■ ■ ■

청소년은 사회적 관점에 따라 상이하게 인식되고 있습니다. 청소년은 종잡을 수 없는 문제거리로 인식되기도 하고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사회적 자원으로 인식되기도 합니다.

청소년정책은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관점과 합의의 결과물로서 그 시대, 그 사회의 변화와 청소년들의 욕구를 잘 담아내야 합니다. 그러나 기능중심의 행정조직은 청소년의 일상적 삶과 수요에 부합한 정책을 구현하는데 상당한 한계를 드러내 왔습니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정책이 여러 부처에 산재되어 있다 보니 정책의 통일성과 효율성이 떨어지면서 청소년의 삶의 질 개선에 뚜렷한 성과를 보이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청소년들의 참여를 강화하고 그들의 교육과 고용, 시민성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세계적 추세와 더불어 한국의 현실을 고려하여 한국청소년정책을 일정한 방향으로 통합시키고자 하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합니다.

다양한 연구방법을 활용하여 정부 각 부처의 청소년정책 추진현황을 분석하고 청소년정책의 총괄조정 기능의 원활한 작동을 위해 필요한 정책방안을 마련하고자 수행된 본 연구결과가 한국 청소년정책의 발전을 위해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 동안 본 연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설문조사와 자문, 자료 분석, 세미나 등에 참여해주신 청소년, 학부모, 학계전문가, 관계 공무원 분들께 감사드리며 광범위한 주제와 실증자료의 부족 등 여러 가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성실하게 연구를 수행해 온 연구진의 노고를 치하합니다.

2012년 12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원장 이 재 연

국 문 초 록

본 연구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이 교육, 복지, 문화, 고용 등 여러 부처에 흩어져 일정한 목적과 방향성이 없이 추진됨으로써 나타나는 문제점을 해결하고 청소년정책의 시너지 효과를 증대하기 위한 청소년정책의 총괄조정 방안을 모색하는데 목적이 있다.

먼저 UN 등 국제기준에 따라 청소년정책의 영역을 구분하고 청소년정책 총괄조정의 범주를 설정하였다. 정부조직법과 직제규정, 중앙행정기관 정책자료 분석을 통해 부처별 청소년관련 사무관장 및 정책추진 현황을 분석하였으며 청소년과 학부모 총 3,000여명을 대상으로 청소년정책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하였다. 아울러 국내의 정책사례 분석을 통해 청소년정책 총괄조정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부처별 청소년정책 추진현황을 볼 때 청소년관련 예산규모는 교과부, 고용부, 여가부, 복지부 순으로 나타났다. 부처별 주요 정책영역을 볼 때 여가부, 교과부, 통일부, 농림부, 복지부 등은 사회통합·위기청소년 지원에, 국방부, 행안부, 지경부, 환경부 등은 청소년교육에, 법무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유해환경에, 외교부는 국제활동에, 문화부는 여가활동에, 고용부는 청소년고용 지원에 가장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었다. 총괄조정이 필요한 정책영역의 우선순위와 해당부처를 도출한 결과 사회통합, 위기청소년지원, 청소년교육, 청소년유해환경단속 영역이 개입 부처수와 예산규모가 커서 총괄조정의 필요성이 가장 높았다. 청소년정책 주무부처와 가장 많은 영역에서 협력이 요청되는 부처는 교과부와 복지부이며 여가활동영역에서는 문화부, 고용영역에서는 고용부와 지경부, 국제활동영역에서는 외교부와 협력이 필요하였다.

정책영역별 예산 투입현황과 청소년·학부모의 정책수요를 비교하여 보았을 때 수요조사의 중요도에 비해 예산투입 순위가 가장 떨어지는 것은 유해환경 단속, 가족지원, 건강, 위기청소년지원 영역이었다. 세부 정책 사업별로는 정신건강증진, 부모교육, 가족상담, 술·담배 판매금지, 유해업소 감시·단속 등이 정책수요에 비해 예산투입 순위가 가장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상의 정책영역과 사업을 지원하는 방향으로의 정책조정이 필요하다.

청소년정책의 총괄조정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청소년정책영향평가제 도입, 범부처 청소년 예산을 확정하기 위한 기준마련, 청소년지표 및 통계산출과 같은 정보관리능력 확보, 청소년정책

에 대한 정기적인 수요조사 등을 통한 사업 우선순위, 총괄조정 우선순위 및 상대 부처 설정 등과 같은 로드맵을 설정하고 총괄조정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주제어: 총괄조정, 정책영역, 예산투입과 정책수요, 총괄조정 우선순위

연구 요약

1. 연구목적

- 청소년정책은 대상 중심정책으로 여러 부처에 산재되어 추진되고 있음. 청소년이라는 동일 대상을 놓고 여러 부처에서 각기 서로 다른 정책목표를 추진할 때는 정책효과를 반감시키게 돼 정책의 총괄조정이 필요함.
- 본 연구는 청소년정책의 총괄조정의 의미를 규명하기 위해 국제기준에 따라 청소년정책영역을 구분하고 청소년 정책의 총괄조정 범주를 확립하고자 하였음.
- 그리고 이에 따라 한국의 범부처 청소년정책업무 관장사무와 정책추진현황을 분석하였으며 청소년 및 학부모에 대한 청소년정책 수요조사결과를 분석하여 청소년정책 총괄조정의 방향 및 추진방안을 제시하였음.

2. 연구방법

- 문헌연구 : 청소년의 연령범주, 청소년정책의 영역, 행정체계상의 청소년정책 고유영역 등을 검토하여 청소년정책 총괄조정을 개념화함.
- 양적분석 : 2011 청소년 시행계획(중앙행정기관)의 정책자료(질적자료)를 통해 정부부처별 청소년정책 추진현황을 본 연구의 영역구분에 맞게 분석함.
- 설문조사 : 청소년(중, 고, 대 및 위기청소년 각 500명), 학부모(초, 중, 고 각 500명)을 대상으로 청소년정책에 대한 수요를 조사함
- 국내외 사례조사 : 총괄조정정책인 국가인적자원개발정책과 여성정책 사례, 청소년행정의 부문화 수준이 다른 유럽 4개국을 선정하여 총괄조정방안에 필요한 시사점을 도출함.
- 세미나/워크숍 등 전문가 자문회의 : 총괄조정방안 등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청취함.

3. 주요결과

1) 청소년정책 영역의 구분

- 청소년정책영역을 OECD, UN, World Bank, EU의 구분을 종합하여 청소년교육, 고용, 건강, 여가활동, 국제활동, 참여, 사회통합, 가족지원, 위기청소년지원, 유해환경 단속 등 10개 영역으로 구분함.

2) 부처별 청소년정책 추진현황 분석

- 정부조직법 상 청소년을 정책대상으로 하고 있는 부처는 여가부, 복지부 등 2개 부처이며 학교교육을 포함하면 3개 부처임. 직제규정 상당수 부처가 청소년업무를 규정하고 있어 여성가족부와 업무의 중복이 발생하고 있음.
- 부처별 청소년 관련 예산규모를 살펴본 결과 교과부, 고용부, 여가부, 복지부, 농림부, 문화부, 국토부 순으로 많았음(이상은 1,000억 원 이상).
- 부처가 중점적으로 예산투자를 하고 있는 정책영역을 보면 여가부, 교과부, 통일부, 농림부, 복지부, 국토부는 사회통합·위기지원에 대한 예산 투입이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교육에 투자하였음. 국방부·행안부, 지경부, 환경부, 국민권익위원회는 교육에 대해 가장 많이 예산투자를 하였음. 이 외에 법무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유해환경 관련 사업에, 외교부는 국제 활동, 문화부는 여가활동, 고용부는 고용지원 등 부처 기능에 부합하는 예산투입이 가장 많았음.
- 부처별 사업전달체계를 보면 공공전달체계가 강했으며 통일부, 고용부, 농림부, 복지부는 타 부처에 비해 민간기관·단체를 통한 청소년사업 전달체계가 강했음.
- 총괄조정이 필요한 정책영역의 우선순위와 상대 부처를 도출한 결과 사회통합·위기청소년지원·청소년교육·청소년유해환경 단속이 개입부처 수와 예산규모가 커서 총괄조정의 필요가 가장 컸음. 다음으로는 여가활동, 고용, 건강·가족지원의 순으로 총괄조정의 필요성이 컸음. 정책영역별로 총괄조정 상대 부처를 도출한 결과, 청소년교육은 교과부, 복지부, 고용부, 청소년고용은 고용부, 지경부, 청소년건강은 복지부, 청소년여가활동은 문화부, 국제활동은 교과부, 청소년사회통합은 교과부, 복지부, 가족지원은 문화부, 위기청소년지원은 교과부, 청소년유해환경

정단속은 교과부, 복지부로 나타났음.

- 청소년 연령집단별 예산투입현황을 분석한 결과, 청소년예산은 대학생, 중·고생, 초·중·고생, 초등생 순으로 예산투입이 많았음. 정책영역별로 보았을 때 모든 연령집단에서 사회통합과 위기지원이 가장 강조되었으며 차이가 있다면 초·중·고생에게는 여가활동이, 대학생에게는 고용이 그 다음으로 강조되었음.
- 청소년유형별·정책영역별 예산투입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일반청소년에 대해서는 고용과 교육, 여가활동, 국제 활동 순으로, 위기청소년에 대해서는 위기지원, 교육, 고용, 여가활동 순으로 예산이 투입되고 있어 위기청소년에 대해서는 일반청소년에 비해 고용보다 위기지원에 예산투입이 많았으며 여가활동이 가장 후순위였고 국제 활동에 대한 예산투입은 없었음. 청소년의 위기유형별로 예산투입현황을 분석한 결과, 빈곤 등 여러 가지 요인으로 가정이 취약한 청소년, 가출·비행 등 위기청소년, 탈북·다문화 청소년, 장애청소년, 미혼부모 청소년 순으로 예산투입이 이루어졌음.

3) 청소년정책에 대한 청소년과 학부모의 수요조사결과

- 청소년에 대한 이미지는 청소년들에 비해 학부모들이 부정적 이미지를 더 강하게 갖고 있음.
- 청소년정책대상으로서 주요 연령집단에 대해 학부모들은 중학생, 고등학생, 초등학교 저학년 순으로 중시하며 청소년들은 고등학생을 가장 중시하였음.
- 청소년의 당면과제는 학교폭력근절, 가출·폭력·학업중단·성매매 등 위기청소년 지원,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소년지원, 인터넷 중독 등 청소년 정신건강 문제 예방 및 치료, 청소년 일자리 개발 및 직업역량 강화, 다양한 청소년활동 기회 제공, 주5일제 수업에 따른 토요 방과후 활동지원 순으로 응답함. 세대로 볼 때는 청소년들은 부모보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소년 지원, 청소년 일자리 개발 및 직업역량 강화를 강조하고 있다면 부모들은 청소년보다 가출·폭력·학업중단·성매매 등 위기청소년 지원과 인터넷 중독 등 청소년 정신건강 문제 예방 및 치료를 강조함.
- 청소년 정책영역의 중요도에 대해서는 청소년과 부모의 전체적으로는 위기청소년지원(5.91), 청소년유해환경단속(5.83), 청소년사회통합(5.62), 가족지원(5.49), 청소년교육(5.37), 청소년여가활동(5.35), 청소년고용(5.27), 청소년건강(5.21), 청소년국제활동(4.94), 청소년참여(4.80)의 순으로 응답하였으며 부모들은 청소년들보다 청소년고용을 제외한 모든 정책영역에서

중요성을 더 높게 인식하고 있었음. 순위별로 볼 때 청소년들은 부모세대 보다 위기청소년지원을 중시하였다면 부모세대는 유해환경 단속을 중시하였음.

4) 청소년정책에 대한 수요분석 결과와 정책추진 현황 비교

○ 청소년정책영역에 대한 수요조사 결과와 예산투입 순위를 비교한 결과 정책영역별로 중요도 순위와 정책영역별 예산투입현황 순위 간 격차가 가장 큰 것은 유해환경 영역이었음. 학부모와 청소년들은 청소년 유해환경 단속정책영역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나 실제 예산투입은 타 정책영역에 비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음. 이 외에 수요조사결과 중요도에 비해 예산투입 순위가 떨어지는 정책영역은 가족지원영역, 건강영역, 위기청소년지원영역이었음. 반면 수요조사결과 중요도에 비해 예산투입 순위가 가장 높은 정책영역은 고용영역이었음. 정책영역별 수요와 추진현황 간의 격차가 큰 유해환경단속, 가족지원 영역과 건강, 위기청소년지원영역은 시급히 정책적 지원이 강화되어야 하며 청소년고용이나 사회통합, 청소년 교육영역에 대해서는 사회적 수요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정책내용을 전환하도록 조정할 필요가 있음.

○ 세부 정책사업 수요의 중요도와 예산투입현황 비교하면 성범죄방지,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소년 등 지원, 정신건강증진, 청소년 안전 및 기본권 보호, 위기청소년에 대한 위기 예방교육 및 치료·재활, 위기청소년·장애청소년 지원, 청소년에 대한 술·담배 판매 금지, 미혼부모 청소년 지원, 청소년 유해업소 감시·단속 등에 대한 수요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남. 이외 부모교육, 다양한 진로탐색을 위한 교육활동, 청소년 유해매체 심의 강화, 일반청소년에 대한 문제행동 예방 및 안전교육, 가족상담 등도 정책적 수요가 높았음. 이렇게 정책수요가 높은 사업이지만 예산투입이 작은 사업은 정신건강증진, 청소년에 대한 부모교육, 가족상담 등이었음. 역으로 예산투입순위가 높은 사업 중에 중요도 순위가 현격히 낮은 사업은 기초학력보장을 위한 지원사업, 생활비 및 용돈 등 경제적 지원, 지역사회안전망 구축, 청소년문화예술교육 및 문화체험 지원 등이었음.

5) 국내외 정책사례와 시사점

○ 국내외 정책사례를 분석한 결과, 국가인적자원개발정책은 법적·형식적 제도는 잘 구비하였지만

수평적 업무분담구조와 타 분야에 대한 정책역량의 미흡으로 인해 실패한 정책으로, 성주류화정책은 지속적인 역량의 투입으로 점진적 발전을 해나가는 정책으로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음.

- 해외 4개국의 총괄조정 특징을 살펴보면 스웨덴은 통합평등부 장관이 정부유관기관에 지침서를 하달하여 청소년관련통계와 지표산출을 의무화함으로써 청소년에 대한 정보관리를 하고 있다. 청소년생활의 전 영역을 알 수 있는 광범위한 정보를 수집하고 있었음. 핀란드의 경우, 중앙부처간 협력은 공식적 제도보다는 부처 간 협의를 통해 비교적 유연하게 이루어지고 있었음. 독일은 청소년정책 고유영역, 즉 부문화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진 국가로서 청소년정책총괄조정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음. 영국의 경우, 청소년정책의 부문화 수준이 가장 낮은 국가로 정부평가전담기관의 평가를 통해 청소년정책의 총괄조정을 촉진하고 있었음.

- 국내의 사례로부터 정부 각 부처별 관장업무에 대해 수평적 분담 구조가 필요하며 총괄조정 대상 정책예산을 명확히 구분하기 위한 기준이 마련되어야 하고 총괄조정 부처는 해당 정책에 대한 전문성과 창의적 의제 설정 능력이 필요하며 청소년정책분석영향평가제 도입과 각 부처의 정책통계로 청소년 분리통계(청소년과 기타 세대를 구분하여 볼 수 있는 세대별 분리통계), 청소년지표(또는 청소년 육성 지표, 삶의 질 지표)를 확정, 지속적으로 산출하여야함에 대해 시사점을 얻었음.

6) 한국의 청소년정책의 특징과 방향성 모색

- 수요조사결과 한국의 청소년상은 긍정성과 부정성이 혼재하는 상태임. 청소년정책 대상으로서 중고생과 초등학교 고학년이 집중대상이며 한국의 청소년정책은 유럽 4개국에 비해 정책대상의 연령범주가 넓고 청소년정책의 부문화 수준도 넓은 편임. 정부조직은 유럽국가와 달리 부처 간 경직성과 폐쇄성을 가져 협의조정에 의한 연성적 수단으로는 총괄조정이 불가능할 것으로 예견되었음.

4. 정책제언

○ 청소년정책영향분석평가제 도입

- 청소년정책영향분석평가제 도입을 위해서는 청소년정책영향을 볼 수 있는 평가지표를 개발하고 시범운영을 통해 이의 타당성과 실효성을 검토함. 또한 이를 위해 청소년기본법을 개정함.
- 청소년영향분석평가제의 본격적 실시에 앞서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와 연계하여 활용하거나 정부업무평가와 연계시키는 것이 필요함.

○ 범부처 청소년예산체계 확립

- 청소년예산의 개념 및 범주를 확정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고 시행계획 제출 시 동일한 기준에 따라 청소년예산 및 사업을 제출하게 하며 청소년총예산 및 부처별 청소년예산규모를 산출하여 매년 일정기준 이상의 부처별 청소년예산을 확보하도록 촉진함. 또한 부처별 청소년예산 확보비율과 그에 준하는 사업계획 및 집행과정, 성과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함.

○ 청소년지표 개발·청소년통계의 산출 및 관리

- 청소년업무 주부부처로서 관계기관에 지표산출 지침을 내려 청소년의 삶을 다면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영역을 지표로 구체화하여야 함. 현재 청소년백서와 통계청이 제공하는 통계는 청소년의 삶을 다면적으로 이해하기에는 부족하므로 스웨덴의 지표를 참조하여 청소년고용, 범죄, 주거, 교육, 여가, 빈곤, 건강, 진로 등 청소년생활의 전 영역을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지표를 개발함.

○ 청소년정책 총괄조정계획 수립

- 청소년정책 총괄조정 우선순위 영역 및 상대부처 설정 등 청소년정책 총괄조정계획 수립
- 청소년과 학부모 등 정책수요자가 필요로 하는 정책과 실제 각 부처가 추진하는 정책이 반드시 일치하지 않음. 정책수요와 국가정책의 정합성을 높이기 위해 향후 정부부처가 추진하는 청소년정책은 정기적인 학부모·청소년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사업우선순위를 설정하고 이에 따라 예산을 확보·배분해야 함.
- 사업 우선순위 설정을 위해 정기적 수요조사가 필요함. 2012년 수요조사결과 청소년건강영역의 청소년 정신건강 증진, 가족지원 영역의 부모교육 및 가족상담, 술·담배 판매 금지,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 등 유해환경 규제를 위한 예산확보 노력이 필요함.

○ 부처별 청소년정책 업무분담체계 확립

- 청소년 정책 및 업무의 총괄·조정을 위해 행정 각부의 직제규정을 재검토하고 직제규정에 청소년 업무를 추가하거나 제외할 경우에는 주무 부처인 여성가족부와 협의를 거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청소년정책영역별로 소관부처가 어느 정도 구분되어 있으나 부처마다 정책 환경과 정책내용이 달라 청소년정책에 대한 합의된 인식이 없이는 청소년정책을 일관된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는 데 어려움이 발생함. 정부 각 부처가 추진할 수 있는 청소년정책의 범위와 기준을 제시함.

○ 청소년정책 총괄조정기구 강화

‘청소년정책 관계기관 협의회’를 ‘청소년정책조정위원회’로 강화하여 정책우선순위를 검토하도록 함. 현행 청소년정책 관계기관 실무협의회를 규정하고 있는 청소년기본법 시행령 제4조에서는 협의회 기능을 “협의회에 상정할 안전에 대한 사전검토 및 조정, 협의에서 위임한 사항의 처리, 협의회의 효율적 운영지원”만을 제시하고 있는데 동 시행령 동 조항을 개정하여 ‘(가칭)청소년정책조정위원회’의 기능에 “부처별 청소년정책 영역의 우선순위 검토”를 추가함.

목 차

I.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3
2. 연구내용	4
3. 연구절차	6
4. 연구방법	7
II. 청소년정책 총괄조정의 이론화	15
1. 청소년정책의 개념	17
2. 청소년정책 총괄조정의 개념	33
III. 범부처 청소년 관련 관장사무 및 정책추진현황 분석	47
1. 정부조직법과 직제규정을 통한 행정각부 청소년 관장사무 현황 및 문제점 ·	49
2. 범부처 청소년정책 추진현황 및 문제점	76
3. 부처별 청소년정책 추진현황에 대한 종합	112
IV. 설문분석 결과	117
1. 응답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119
2. 청소년에 대한 이미지	120
3. 청소년정책 대상 연령의 우선순위	128
4. 청소년정책의 당면과제	130
5. 청소년 정책영역의 중요도	135
6. 청소년 정책사업의 중요도	141

V. 총괄조정 관련 국내외 정책사례 분석	173
1. 사례선정 개요 및 분석틀	175
2. 국내사례	176
3. 해외사례	202
 VI. 요약 및 결론 : 청소년정책 총괄조정기능 강화방안	 233
1. 연구결과 요약	235
2. 청소년정책 총괄조정기능 강화방안	241
 참고문헌	 257
 부 록	 267
1. 범부처 청소년정책 추진사업 현황	269
2. 설문지	282

표 목차

〈표 I-1〉 위기청소년 표본 구성	10
〈표 II-1〉 유럽국가 청소년정책의 형태와 분류	18
〈표 II-2〉 유럽과 아시아 주요 국가의 청소년정책의 연령 범위	19
〈표 II-3〉 UN 청소년정책 영역과 주요내용	21
〈표 II-4〉 EU 청소년정책 영역과 주요내용	23
〈표 II-5〉 OECD 청소년정책 영역과 주요내용	25
〈표 II-6〉 World Bank 청소년정책 영역과 주요 내용	27
〈표 II-7〉 국제기구의 청소년정책 영역 비교	28
〈표 II-8〉 국제기준에 의거한 청소년정책 영역의 분류	30
〈표 II-9〉 아동·청소년 연령별 취약성과 정책수요 및 주요 정책영역	32
〈표 II-10〉 정책수단 종류 및 유형	36
〈표 II-11〉 관계법령에 나타난 정책 총괄조정수단 현황	38
〈표 II-12〉 관계법령에 나타난 정책 총괄조정수단 분석	46
〈표 III-1〉 정부조직법 상 행정 각 부의 관장사무	50
〈표 III-2〉 기획재정부 관장사무	52
〈표 III-3〉 교육과학기술부 관장사무	53
〈표 III-4〉 외교통상부 관장사무	56
〈표 III-5〉 통일부 관장사무	57
〈표 III-6〉 법무부 관장사무	57
〈표 III-7〉 국방부 관장사무	59
〈표 III-8〉 행정안전부 관장사무	60
〈표 III-9〉 문화체육관광부 관장사무	61
〈표 III-10〉 농림수산물식품부 관장사무	62
〈표 III-11〉 지식경제부 관장사무	63
〈표 III-12〉 보건복지부 관장사무	64
〈표 III-13〉 환경부 관장사무	67

〈표 Ⅲ-14〉 고용노동부 관장사무	68
〈표 Ⅲ-15〉 여성가족부 관장사무	68
〈표 Ⅲ-16〉 국토해양부 관장사무	72
〈표 Ⅲ-17〉 방송통신위원회 관장사무	73
〈표 Ⅲ-18〉 정부조직법 및 직제규정 상 청소년업무 규정여부 및 업무내용	74
〈표 Ⅲ-19〉 부처별 청소년 사업 수 및 예산	77
〈표 Ⅲ-20〉 청소년정책 영역별 사업 수 및 예산	79
〈표 Ⅲ-21〉 주요 부처 청소년정책 영역별 사업 수 및 예산현황	81
〈표 Ⅲ-22〉 부처별 예산투자 상위 정책영역 현황	84
〈표 Ⅲ-23〉 청소년정책 영역별 사업예산 상위 부처	87
〈표 Ⅲ-24〉 청소년정책 영역별 정책사업 사업 수 및 예산액, 예산순위	89
〈표 Ⅲ-25〉 사업대상별 청소년 사업 수 및 예산	93
〈표 Ⅲ-26〉 청소년 연령집단별 사업 수 및 예산	93
〈표 Ⅲ-27〉 부처별 · 청소년 연령집단별 사업 수 및 예산현황	95
〈표 Ⅲ-28〉 청소년 연령집단별 · 정책영역별 사업 수 및 예산현황	97
〈표 Ⅲ-29〉 연령집단별 청소년정책 영역의 예산 순위	99
〈표 Ⅲ-30〉 청소년 유형별 사업 수 및 예산	100
〈표 Ⅲ-31〉 청소년 위기유형별 사업 수 및 예산	100
〈표 Ⅲ-32〉 부처별 청소년 유형별 사업 수 및 예산	102
〈표 Ⅲ-33〉 부처별 · 위기유형별 사업 수 및 예산	105
〈표 Ⅲ-34〉 청소년 위기유형별 사업예산 상위 부처	106
〈표 Ⅲ-35〉 청소년 유형별 · 정책영역별 사업 수 및 예산현황	107
〈표 Ⅲ-36〉 부처별 · 전달체계별 사업 수 및 예산	110
〈표 Ⅲ-37〉 부처별 청소년정책 추진 현황 종합	113
〈표 Ⅲ-38〉 연령집단별 청소년정책 영역의 예산 순위	115
〈표 Ⅲ-39〉 청소년유형별 · 정책영역별 예산투입 현황 순위	116

〈표 IV-1〉 응답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119
〈표 IV-2〉 청소년상에 대한 인식차이 분석: 청소년과 부모	123
〈표 IV-3〉 청소년상에 대한 인식차이 분석: 학교급별(중, 고, 대)	125
〈표 IV-4〉 청소년상에 대한 인식차이 분석: 일반청소년과 위기청소년	127
〈표 IV-5〉 청소년정책의 연령집단에 대한 정책적 우선순위	129
〈표 IV-6〉 청소년정책의 당면과제(우선순위)	130
〈표 IV-7〉 청소년정책의 당면과제에 대한 인식차이 분석: 청소년과 부모	131
〈표 IV-8〉 청소년정책의 당면과제에 대한 인식차이 분석: 학교급별(중, 고, 대) ..	133
〈표 IV-9〉 청소년정책의 당면과제에 대한 인식차이 분석: 일반청소년과 위기청소년	135
〈표 IV-10〉 청소년 정책영역의 중요도	136
〈표 IV-11〉 청소년 정책영역의 중요도 인식차이 분석: 청소년과 부모	137
〈표 IV-12〉 청소년 정책영역의 중요도 인식차이 분석: 학교급별(중, 고, 대) ·	139
〈표 IV-13〉 청소년 정책영역의 중요도 인식차이 분석: 일반청소년과 위기 청소년	140
〈표 IV-14〉 청소년정책사업별 중요도: 순위별	144
〈표 IV-15〉 청소년교육영역의 정책사업별 중요도: 청소년과 부모	145
〈표 IV-16〉 청소년교육영역의 정책사업별 중요도: 학교급별(중, 고, 대)	146
〈표 IV-17〉 청소년교육영역의 정책사업별 중요도: 일반청소년과 위기청소년 ·	147
〈표 IV-18〉 청소년고용영역의 정책사업별 중요도: 청소년과 부모	148
〈표 IV-19〉 청소년고용영역의 정책사업별 중요도: 학교급별(중, 고, 대)	149
〈표 IV-20〉 청소년고용영역의 정책사업별 중요도: 일반청소년과 위기청소년	149
〈표 IV-21〉 청소년건강영역의 정책사업별 중요도: 청소년과 부모	150
〈표 IV-22〉 청소년건강영역의 정책사업별 중요도: 학교급별(중, 고, 대)	151
〈표 IV-23〉 청소년건강영역의 정책사업별 중요도: 일반청소년과 위기청소년 ·	151
〈표 IV-24〉 청소년여가활동영역의 정책사업별 중요도: 청소년과 부모	152

〈표 IV-25〉 청소년여가활동영역의 정책사업별 중요도: 학교급별(중, 고, 대)	153
〈표 IV-26〉 청소년여가활동영역의 정책사업별 중요도: 일반청소년과 위기 청소년	154
〈표 IV-27〉 청소년국제활동영역의 정책사업별 중요도: 청소년과 부모	155
〈표 IV-28〉 청소년국제활동영역의 정책사업별 중요도: 학교급별(중, 고, 대)	155
〈표 IV-29〉 청소년국제활동영역의 정책사업별 중요도: 일반청소년과 위기 청소년	156
〈표 IV-30〉 청소년참여영역의 정책사업별 중요도: 청소년과 부모	157
〈표 IV-31〉 청소년참여영역의 정책사업별 중요도: 학교급별(중, 고, 대)	157
〈표 IV-32〉 청소년참여영역의 정책사업별 중요도: 일반청소년과 위기청소년	158
〈표 IV-33〉 청소년사회통합영역의 정책사업별 중요도: 청소년과 부모	159
〈표 IV-34〉 청소년사회통합영역의 정책사업별 중요도: 학교급별(중, 고, 대)	160
〈표 IV-35〉 청소년사회통합영역의 정책사업별 중요도: 일반청소년과 위기 청소년	160
〈표 IV-36〉 청소년가족지원영역의 정책사업별 중요도: 청소년과 부모	161
〈표 IV-37〉 청소년가족지원영역의 정책사업별 중요도: 학교급별(중, 고, 대)	162
〈표 IV-38〉 청소년가족지원영역의 정책사업별 중요도: 일반청소년과 위기 청소년	162
〈표 IV-39〉 위기청소년 지원영역의 정책사업별 중요도: 청소년과 부모	163
〈표 IV-40〉 위기청소년 지원영역 정책사업별 중요도: 학교급별(중, 고, 대)	164
〈표 IV-41〉 위기청소년 지원영역의 정책사업별 중요도: 일반청소년과 위기청소년	165
〈표 IV-42〉 청소년유해환경단속영역의 정책사업별 중요도: 청소년과 부모	166
〈표 IV-43〉 청소년유해환경단속영역의 정책사업별 중요도: 학교급별(중, 고, 대)	167

〈표 IV-44〉 청소년유해환경단속영역의 정책사업별 중요도:	
일반청소년과 위기청소년	167
〈표 IV-45〉 위기청소년 대상 청소년정책사업의 중요성: 위기청소년	169
〈표 IV-46〉 대학생 대상 청소년정책사업의 중요성: 성별	170
〈표 IV-47〉 대학생 대상 청소년정책사업의 중요성: 대학유형별	171
〈표 IV-48〉 대학생 대상 청소년정책사업의 중요성: 경제수준별	172
〈표 V-1〉 국가인적자원개발정책에 동원된 총괄조정수단	178
〈표 V-2〉 교육인적자원부 이외 부처 설립대학 (2006년)	181
〈표 V-3〉 HRD 예산체제 및 규모(2006)	183
〈표 V-4〉 HRD 부처별 예산(2006)	185
〈표 V-5〉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정책 및 적용기관	189
〈표 V-6〉 성인지 예산분석도구 및 주요 내용	193
〈표 V-7〉 연도별, 기관유형별 성별영향평가 평균 참여과제 수 변화	196
〈표 V-8〉 성별영향평가의 연도별, 기관유형별, 직급별 교육실적	196
〈표 V-9〉 스웨덴 청소년정책 대상의 연령범주	202
〈표 V-10〉 스웨덴의 청소년정책 주무부처 및 관련법령	203
〈표 V-11〉 스웨덴 청소년정책의 영역	205
〈표 V-12〉 스웨덴의 청소년정책에 대한 통계 및 각종 지표 제출기관과 자료	206
〈표 V-13〉 핀란드 청소년정책 대상의 연령범주	207
〈표 V-14〉 핀란드 정부 차원 청소년 기구 및 청소년 정책사업	210
〈표 V-15〉 청소년단체의 사업과 활동내용	212
〈표 V-16〉 정책영역별 핀란드 지자체의 청소년정책사업	213
〈표 V-17〉 독일 청소년정책 대상의 연령범주	215
〈표 V-18〉 독일의 청소년정책 관계법령 및 정책문서	216
〈표 V-19〉 독일 주무 행정부처의 청소년정책 영역과 사업내용	217
〈표 V-20〉 독일 주무부처 외 청소년정책의 수행체계	218

〈표 V-21〉 독일 청소년정책의 총괄조정 현황	219
〈표 V-22〉 영국 청소년정책 대상의 연령범주	220
〈표 V-23〉 영국의 청소년정책 주무행정부처와 관련 정책	222
〈표 V-24〉 영국 교육부의 청소년 관련 정책 개요	223
〈표 V-25〉 정책 평가 결과	225
〈표 V-26〉 4개국 청소년정책과 총괄조정의 특성 비교	226
〈표 VI-1〉 청소년정책영향분석평가와 관련된 청소년기본법 시안	243
〈표 VI-2〉 청소년 정책영역별 부처별 업무분담(안)	250
〈표 VI-3〉 청소년정책조정위원회로의 격상을 위한 청소년 기본법(시행령 포함) 개정안	252
〈표 VI-4〉 우선순위 검토기능 추가를 위한 청소년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254
〈표 VI-5〉 정책실행 로드맵	255

그림 목차

【그림 I-1】 연구절차	7
【그림 I-2】 청소년정책 수요조사 설문지 개발절차	11
【그림 III-1】 부처별 청소년 사업 수	77
【그림 III-2】 부처별 청소년 사업 예산	78
【그림 III-3】 청소년정책 영역별 사업 수	79
【그림 III-4】 청소년정책 영역별 사업 예산	80
【그림 III-5】 주요 부처 청소년정책 영역별 사업예산 현황	86
【그림 III-6】 청소년 정책영역별 정책사업 예산 순위(상위 20위권)	92
【그림 III-7】 청소년 연령집단별 사업 수 비중(N=144)	94
【그림 III-8】 청소년 연령집단별 사업예산 현황	94
【그림 III-9】 부처별 · 청소년 연령집단별 사업 예산현황	96
【그림 III-10】 청소년 연령집단별 · 정책영역별 사업예산 현황	98
【그림 III-11】 청소년 위기유형별 사업 수 비중(N=51)	101
【그림 III-12】 청소년 위기유형별 사업 예산	101
【그림 III-13】 부처별 청소년유형별 사업예산 현황	103
【그림 III-14】 부처별 청소년유형별 사업예산 격차	103
【그림 III-15】 부처별 위기유형별 사업예산	106
【그림 III-16】 청소년 유형별 · 정책영역별 사업예산	108
【그림 III-17】 전달체계별 사업 수 비중	109
【그림 III-18】 전달체계별 사업예산 비중	109
【그림 III-19】 부처별 · 전달체계별 예산 현황	111
【그림 III-20】 총괄조정 우선순위 정책영역과 상대부처	115
【그림 IV-1】 청소년에 대한 이미지: 청소년과 부모 전체(4점 만점)	121
【그림 IV-2】 청소년상에 대한 인식차이 분석: 청소년과 부모	123
【그림 IV-3】 청소년상에 대한 인식차이 분석: 학교급별(중, 고, 대)	125
【그림 IV-4】 청소년상에 대한 인식차이 분석: 일반청소년과 위기청소년	127

【그림 IV-5】 청소년정책의 연령집단에 대한 세대별 중요성 인식정도	128
【그림 IV-6】 청소년정책의 당면과제에 대한 인식차이 분석: 청소년과 부모 ...	131
【그림 IV-7】 청소년정책의 당면과제에 대한 인식차이 분석: 학교급별(중, 고, 대)	133
【그림 IV-8】 청소년정책의 당면과제에 대한 인식차이 분석: 일반청소년과 위기청소년	134
【그림 IV-9】 청소년 정책영역의 중요도: 총괄	135
【그림 IV-10】 청소년 정책영역의 중요도 인식차이 분석: 청소년과 부모	137
【그림 IV-11】 청소년 정책영역의 중요도 인식차이 분석: 학교급별(중, 고, 대) .. 138	
【그림 IV-12】 청소년 정책영역의 중요도 인식차이 분석: 일반청소년과 위기청소년	140
【그림 IV-13】 청소년정책사업의 중요도: 전체	143
【그림 IV-14】 위기청소년 대상 정책사업의 중요성 (위기청소년)	168
【그림 IV-15】 대학생 대상 정책사업의 중요성 (대학생)	169
【그림 V-1】 NHRD 총괄조정에 의한 교육과 노동시장 연계	177
【그림 V-2】 여성정책 범위 및 소관부처	188
【그림 V-3】 핀란드 교육문화부 청소년부서	208
【그림 V-4】 청소년의 재정책정에 따른 청소년 정책 및 사업 단체들	209
【그림 V-5】 청소년 정책 운영 구조	214
【그림 V-6】 독일 청소년정책 주무 행정부서	216
【그림 VI-1】 청소년 정책영역별 중요도와 예산투입 순위 비교	237
【그림 VI-2】 청소년 정책사업 중요도 순위와 예산투입 순위 비교	238
【그림 VI-3】 총괄조정 우선순위 정책영역과 상대부처	247

제 1 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내용
3. 연구절차
4. 연구방법

제 1 장 *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청소년정책은 대상중심정책이다. 정부조직은 일반적으로 교육, 복지, 고용 등 기능 중심으로 조직되어 있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많은 정책들이 여러 부처에 산재해 있다. 중앙행정기관의 청소년정책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1년 현재 35개 중앙행정기관(15부 2처 18청) 중 27개 기관에서 255개 청소년 관련 사업을 추진 중(여성가족부, 2011d: 56)에 있다. 각 중앙행정기관에서는 부처마다의 시각과 전망 하에 독자적으로 청소년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다. 「청소년기본법」에 따라 각 부처는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을 청소년정책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에 제출하고 있다(청소년기본법 및 시행령:[시행 2012.2.1]).

그러나 각 부처가 독자적으로 수립하여 실시하고 있는 이러한 정책들에 대해 청소년집단의 필요에 부합하고 있는 것인지, 정책의 중복이나 사각지대는 없는지, 정책적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청소년 친화적 방법으로 실시되고 있는지를 검토한 적은 없다.

청소년기본법 상 청소년업무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에 청소년정책 총괄조정 기능이 부여되어 있지만 그 필요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기능을 작동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1993년부터 4차례에 걸쳐 입안·시행된 청소년정책 기본계획을 검토한 결과에 따르면 여러 청소년집단의 다양한 이해와 요구를 반영할 수 있는 범부처 차원의 종합대책의 성격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것이다(여성가족부, 2010: 131-132). 여러 부처에 산재한 청소년사업의 연계·협력을 통한 시너지 효과 창출 및 총괄조정 기능이 취약하였으며 교육·복지·노동 등 청소년에게 필요한 범 부처 사업을 연계, 총괄조정하여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려는 노력이 없었다는 것이다(여성가족부, 2011c: 76-81).

교육경쟁의 강화와 사교육의 범람, 맞벌이 가정 증대에 따른 방과 후 보호의 문제, 청소년 폭력과 자살, 중독 등 청소년의 건강과 안전문제, 사회양극화·글로벌화에 따른 청소년의 주변화, 청년실업

* 이 장은 윤철경 선임연구위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집필하였음.

등 성인기 이행의 문제 등 청소년집단의 다양한 요구를 어느 한 부처의 정책만으로 대응하기는 어렵다. 청소년들이 당면하고 있는 다양한 사회적 문제에 대해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정책적 대응을 위해서 현재 유명무실화 되어 있는 청소년정책 총괄조정 기능을 살려내야 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청소년정책 총괄조정 기능을 실재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탐구하였다.

첫째, 청소년정책에서 총괄조정 필요성과 의미는 무엇인가? 이를 위해 청소년정책 대상의 연령범주와 정책영역, 연령별 정책수요 등 청소년정책에 대한 개념화와 더불어 청소년정책 총괄조정의 이론화 작업을 하였다.

둘째, 무엇을 총괄조정해야 하는가? 정부 각 부처는 어떠한 청소년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정부조직법 및 직제규정 등은 이를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가? 또한 청소년정책의 실질적 수요자인 청소년과 학부모는 청소년정책에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가?

이를 위해 각 부처 청소년사업 추진현황을 정책영역별, 연령별로 과제 수와 예산을 분석하고 이것이 정부조직법 상의 업무분장과 어느 정도 일치하고 있는지를 검토하였다. 또한 청소년과 학부모가 원하는 청소년정책 대상의 우선순위, 청소년 정책영역 및 정책과제의 우선순위, 연령별·청소년 집단별 정책수요 등을 토대로 무엇을 총괄·조정해야 할지를 분석하였다.

셋째, 어떻게 총괄조정해야 하는가? 이를 위해 청소년정책 총괄조정 수단 현황과 문제점을 진단하고 국내외 정책사례 분석을 통해 효과적인 총괄조정수단을 탐색하였다.

넷째, 실효성 있는 청소년정책 총괄조정방안은 무엇인가? 이상의 연구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총괄조정이 필요한 청소년정책 영역의 우선순위와 실효성 있는 총괄조정 수단을 제시하였다.

2. 연구내용

1) 청소년정책 총괄조정의 이론화

청소년정책의 총괄조정이 무엇인가에 대한 탐색은 되어 있지 않다. 이것은 한 사회가 정의하고 있는 청소년정책의 범주가 어떠하며 행정체계가 이를 어떻게 다루고 있는가와 관련이 깊다.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정책 총괄조정의 이론적 틀을 구축하기 위해 먼저 국제기준에서 청소년정책의

개념을 고찰하였다. 즉, 정책대상으로서의 청소년 연령범주, 청소년정책의 영역, 행정체계 상의 청소년정책의 고유영역, 청소년 연령과 주요 정책영역 등에 대해 국제기구 자료를 기초로 검토하였다.

둘째, 청소년정책 총괄조정을 개념화하기 위해 행정학적 관점, 청소년정책의 특성, 법적·제도적 관점에서 총괄조정의 의미와 필요성, 총괄조정 내용과 정책수단 등을 고찰하였다.

2) 범부처 청소년정책 추진현황 및 문제점 분석

중앙행정기관의 청소년정책 추진현황을 분석하였다. 먼저 정부조직법과 직제규정 분석을 통해 행정각부의 관장사무와 문제점을 고찰하였다. 또한 청소년정책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가 수합하는 2011년 시행계획 자료를 기초로 각 부처가 추진하고 있는 청소년정책 현황을 분석하였다. 각 부처 사업과제와 예산을 본 연구의 분류기준에 따라 정책영역별, 사업대상 집단 및 연령별로 분류하였으며 이러한 작업을 토대로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3) 청소년과 학부모의 청소년정책에 대한 수요 분석

청소년정책의 최종 수요자는 청소년과 학부모이다. 정책은 수요자의 사회적 필요를 반영하여 수립될 때 정책적 실효성을 가질 수 있으며 주요 정책으로서 확장, 발전되어 갈 수 있다. 이러한 수요에 기초하지 않은 정책은 주변화되어 국민적 관심사에서 멀어지기 십상이다. 그러면 청소년과 학부모 입장에서 청소년정책에 긴히 반영되기를 원하는 것은 어떤 의제들인가? 청소년 주무부처의 고유 정책영역은 청소년과 학부모집단의 이러한 정책적 욕구를 담아내기에 충분한가? 이에 대한 응답은 청소년정책의 우선적 사회적 과제와 추진방안에 대한 정책 타당화의 근거가 될 것이다.

청소년정책의 형성과정에 청소년 및 학부모의 참여를 중시하는 것은 이러한 수요자 집단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함이다.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과 학부모들이 필요로 하는 청소년 정책의제들이 어떠한 영역의 것들인지를 파악하여 청소년정책 영역의 우선순위를 규명해내고자 하였다.

즉, UN, EU 등 국제기구에서 제시하는 청소년정책 영역의 범주에서 한국사회 청소년과 학부모들이 긴히 필요로 하는 정책영역은 무엇인가? 각 정책영역의 범주 하에 구체적으로 필요로 하는 정책과제는 어떠한 것들인가? 어떠한 연령집단 및 청소년집단에 대한 정책을 우선시 하고 있는가? 등을 분석하여 청소년정책 총괄조정의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4) 국내외 총괄조정 정책사례 분석

총괄조정에 대한 시사점을 찾기 위해 국내외 정책사례를 분석하였다. 국내사례로는 대상중심 정책인 여성정책과 국가의제로 부상했었던 국가인적자원개발정책을 선정하였다. 전자는 꾸준히 발전되어 온 반면, 후자는 소멸 위기에 처해 있다는 점에서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

외국의 사례로는 행정체계상 청소년정책의 부문화 수준이 다른 3개의 국가, 독일, 핀란드, 영국의 사례를 선정하였다. 독일은 청소년정책 영역의 규모가 비교적 큰 사회이며 핀란드는 소규모, 영국은 청소년부문이 없이 분산되어 있는 국가의 사례로서 이러한 국가에서 청소년정책을 어떻게 총괄조정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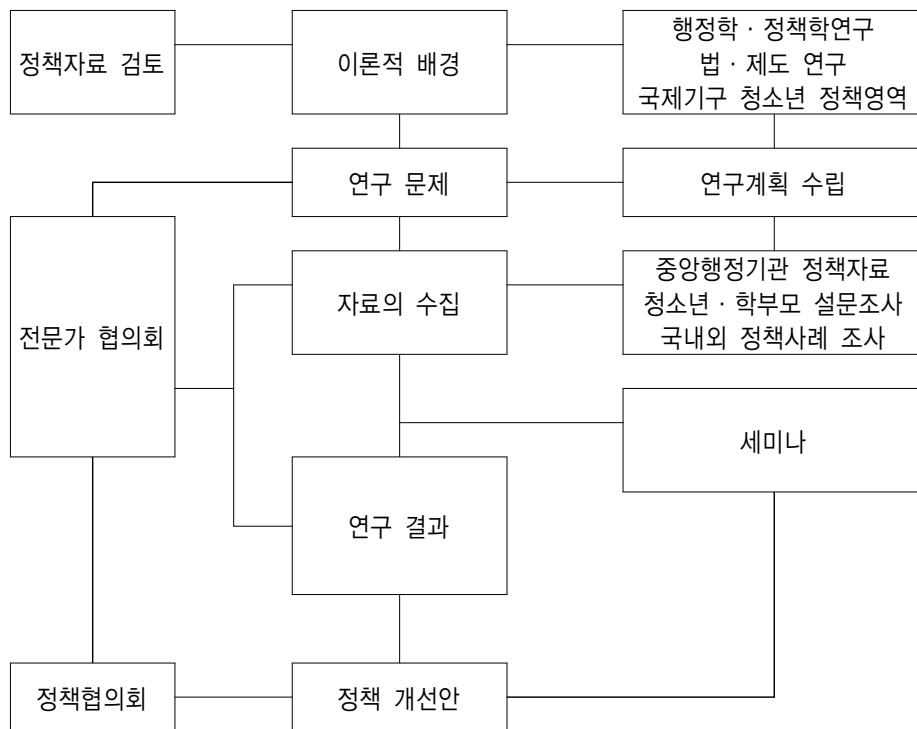
5) 청소년정책 총괄조정방안 도출

이상의 연구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중앙정부 차원에서 청소년정책 총괄조정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여건, 총괄조정 영역의 우선순위와 실효성 있는 정책수단이 무엇인지를 논의하였다.

청소년정책 총괄조정 방안으로 ① 청소년정책의 개념적 범주 확장을 위한 법 개정, ② 청소년정책조정위원회 등 총괄조정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조직 개편, ③ 각 부처 청소년 정책의제 발굴과 청소년정책 시행계획에 대한 점검 및 평가체계 강화, ④ 부처별 청소년정책 영역의 우선순위 검토 ⑤ 각 부처 청소년정책 정보 제공을 통한 게이트웨이 운영 등을 검토하였다.

3. 연구절차

[그림 I-1]은 전체 연구수행절차를 나타낸 것이다.



【그림 I-1】 연구절차

4. 연구방법

1) 문헌연구

문헌연구는 다음과 같이 네 가지 측면에서 실시되었다.

- ① 청소년정책 총괄조정에 대한 이론적 모형을 수립하기 위해 청소년정책의 개념, 총괄조정
개념 등에 대한 행정학·정책학 연구물에 대한 탐색이 이루어졌다.
- ② 총괄조정 관련 법·제도에 대한 문헌 연구가 이루어졌다.
- ③ 2011년 중앙행정기관의 청소년사업 계획 및 추진실적 자료를 본 연구의 분석틀에 따라 분류하여
코딩한 후 양적 분석을 수행하였다.

- ④ 총괄조정 정책사례를 분석하기 위해 여성정책·인적자원개발정책 등에 대한 문헌자료를 수집, 분석하였고 독일, 영국, 핀란드 등 외국청소년 정책 자료를 수집하여 검토하였다.

2) 전문가협의회

학계전문가(청소년학계, 행정학계 등), 관계부처 공무원(교과부, 여가부) 등 15인으로 전문가협의회를 구성하여 총 3회의 전문가협의회를 실시하여 연구의 방향 설정, 설문조사 도구 개발 및 검토를 하였다. 또한 청소년정책 총괄조정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총 3회의 전문가협의회를 더 실시하였다.

3) 양적 연구

(1) 설문조사 개요

① 설문조사의 목적

조사목적은 청소년정책 수요자의 욕구를 파악하여 청소년 정책영역 및 사업과제의 우선순위를 분석하여 청소년정책 총괄조정의 방향 설정에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

② 설문조사 대상

조사대상 모집단은 다음의 7개 집단이다.

첫째, 전국의 중2, 고2, 대학교 2학년생 등 3개 집단

둘째, 전국의 청소년쉼터에 거주하는 위기 청소년 집단

셋째, 전국의 초·중·고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 3개 집단

③ 조사대상별 표집방법 및 표본 수

㉠ 중·고등학생 표집방법 및 표본 수

2011년 학생 수를 기준으로 5개 권역별, 교급·학교유형별 층화집락 할당표집을 실시하였다. 5개 권역은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경상권(대구, 부산, 울산, 경북, 경남), 충청권(대전, 충북, 충남), 전라권(광주, 전북, 전남), 강원·제주권(강원, 제주)이며 학교급은 중학교와 고등학교로, 학교유형은 고등학교의 경우 일반계고, 전문계고로 분류하였다.

㉠ 대학생 표집방법 및 표본 수

먼저 성, 전공계열을 고려하여 학교 당 조사할 학생 수를 결정하였다. 성(①남, ②여), 전공계열(①인문/사회/교육 계열, ②공학/자연/의약 계열, ③예체능 계열)을 고려하여 일반대는 12명, 전문대는 6명을 학교별 조사인원으로 설정한 후 2011년 16개 시도별 일반대 및 전문대 학생 수 비율에 맞추어 조사대상 학교 수를 결정하였다. 16개 시도별로 일반대 및 전문대 각각 최소 1개 이상씩 추출되도록 하여 지역별 누락이 없도록 하였으며 16개 시도별로 전공계열이 모두 있는 학교 위주로 선정하였다.

㉡ 학부모 표집방법 및 표본 수

먼저, 2011년 학생 수를 기준으로 학교급(초/중/고교), 지역(16개 시도)별 층화 후 ‘단순비례배분’에 따라 조사 대상 학부모 수를 결정하였다. 표본은 한국리서치의 마스터 샘플(Master Sample)에서 추출하였다. 한국리서치의 마스터샘플은 전국 251,347명의 자발적인 조사 참여 의향을 지닌 응답자 Pool로서 이름, 성별, 학력, 가구 및 휴대폰 전화번호, 직업, E-mail 주소 등 개인정보와 더불어 자녀 수, 자녀 생년/월, 자녀 성별, 가구소득, 주택형태 등 가구정보가 포함되어 있다.

㉢ 위기청소년 표집방법 및 표본 수

위기청소년은 전국 84개 쉼터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되 조사에 협조하겠다고 신청한 기관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쉼터마다 규모가 달라 해당 쉼터에서 조사 가능한 인원 수 만큼 표본을 할당하였다. 위기청소년의 표본 구성은 <표 I-1>과 같다.

표 I-1 위기청소년 표본 구성

지역	위기청소년	
	컴퓨터 수(개)	청소년 수(명)
서울	6	64
부산	2	21
대구	2	18
인천	4	69
광주	-	-
대전	4	59
울산	3	18
경기	12	120
강원	1	7
충북	1	9
충남	1	21
전북	2	28
전남	2	19
경북	3	15
경남	3	25
제주	1	7
합계	47	500

④ 조사방법 및 조사기관

조사대상별로 조사방법에 차이가 있다. 중학생과 고등학생조사는 면접원의 방문조사로 실시되었으며 학급별로 자기기입식 조사로 실시되었다. 대학생 조사는 면접원이 해당 학교를 방문하여 개인별 자기기입식 조사로 실시되었다. 학부모조사는 학교를 통해 조사할 때 회수율이 낮은 점, 조사시간이 많이 걸리는 등의 문제 때문에 CAWI(Computer Aided Web, Interview)¹⁾를 실시하였다. 이상의 중학생과 고등학생, 학부모 대상 조사는 (주)한국리서치가 담당하였다.

위기청소년은 한국청소년쉼터협의회가 담당하였으며 해당 쉼터 실무자의 협조 하에 자기기입식 조사로 실시되었다.

⑤ 설문조사 기간

중·고등학생 설문조사 기간은 2012년 5월 24일 ~ 2012년 7월 20일까지 2개월에 걸쳐 이루어진다.

1) 설문지를 미리 추출된 응답자에게 이메일로 보내고, 인터넷을 이용하여 응답 받는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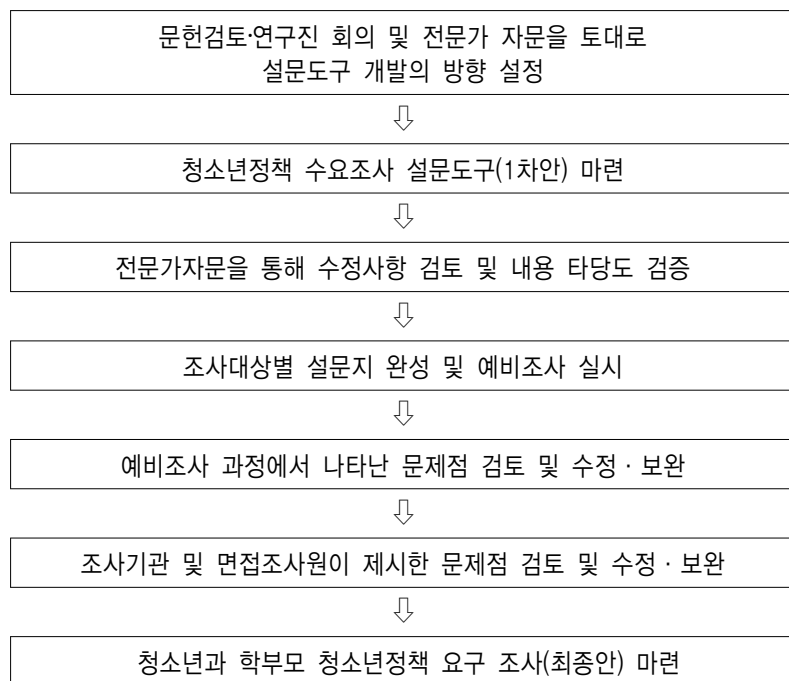
위기 청소년과 학부모 대상 조사는 6월 1일부터 7월 15일까지 1.5개월 동안 실시되었다.

(2) 설문조사도구

① 설문조사도구의 개발

조사대상 집단에 따라 총 4종의 설문조사 도구를 개발하였다. 중·고생용을 기본 설문문항으로 개발한 후 조사대상 집단의 특성을 반영한 문항 수정과 더불어 문항 추가가 이루어졌다.

설문지 개발과정은 먼저 연구진이 설문지 초안을 개발한 후 2차례의 전문가자문을 통해 수정·보완하였다.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학부모 등 조사대상별로 2명씩 선정하여 예비면접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를 반영하여 수정·보완하였다. 이후 조사기관과 논의하며 나타난 문제, 면접조사원 교육과정에서 나타난 문제 등을 반영, 수정·보완한 후 최종설문지를 확정하였다. 설문지 개발과정을 도식화하면 [그림 I-2]와 같다.



【그림 I-2】 청소년정책 수요조사 설문지 개발절차

② 설문조사 내용

구분	하위영역	질문문항	문항수	비고
청소년에 대한 의견 (33문항)	청소년에 대한 이미지	1. 청소년의 발전가능성 2. 청소년의 권리의식과 책임감 3. 불리한 상황에서 청소년의 용감함과 정의로움 4. 청소년의 예의정도 5. 새로운 일에 대한 도전정신 6. 어디로 튈지 몰라 무서움 7. 자기중심성과 이기적 정도 8. 청소년의 충동성 & 문제일으킴 정도 9. 창의적 문제접근 방식 10. 특정분야에 대한 뛰어난 자질과 몰입경향	10	중고생 심터청소년 대학생 학부모
	청소년정책의 연령대(우선순위 & 중요성 정도)	1. 초등 저학년(9-10세) 2. 초등 고학년(11-13세) 3. 중학생(14-16세) 4. 고등학생(17-19세) 5. 대학생(20-24세) 6. 부모로부터 자립시까지(25세-)	6	중고생 심터청소년 대학생 학부모
	인간관계 & 고민거리에 대한 스트레스 정도	1. 인간관계 스트레스 (부모관계, 동성친구 관계, 선후배관계, 이성친구 관계, 선생님과의 관계) 2. 고민거리 스트레스(학업문제, 진로문제, 가정형편, 외모, 정신건강)	10	중고생 심터청소년 대학생
	우리나라 청소년정책이 해결해야 할 과제	1. 학교폭력 근절 2. 주5일제에 따른 토요일 방과후 활동 지원 3. 청소년 일자리 개발 및 직업역량 강화, 취업창업 4. 위기청소년 지원(가출, 폭력, 학업중단, 성매매 등) 5. 다양한 청소년활동 지원(문화, 예술, 스포츠 등) 6. 청소년 정신건강 문제예방 및 치료(게임중독 등) 7.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소년에 대한 지원	7	중고생 심터청소년 대학생 학부모
청소년 정책에 대한 의견 (56/62)	정책영역의 중요성 정도	청소년교육, 청소년고용, 청소년건강, 청소년여가활동, 청소년국제활동, 청소년참여, 청소년사회통합, 가족지원, 위기청소년지원, 청소년유해환경단속	10	중고생 심터청소년 대학생 학부모
	청소년 교육영역 주요사업별 중요성 정도	1. 주5일제에 따른 토요일 방과후 학교 2.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지원 3. 공동체 의식을 높이기 위한 인성교육 · 시민교육 4. 창의적 체험활동 5. 다양한 진로탐색을 위한 교육활동 6. 문제행동 예방 및 안전교육	6	중고생 심터청소년 대학생 학부모
	청소년고용영역 주요사업별 중요성 정도	1. 청년(청소년)일자리 개발 2. 청년(청소년) 창업 및 취업지원 3. 일자리와 연계된 직업훈련 프로그램 강화 4. 청소년 아르바이트 보호	4	중고생 심터청소년 대학생 학부모
	청소년건강영역 주요사업별	1. 청소년 수면권 보장 2. 건강한 음식제공	3	중고생 심터청소년

구분	하위영역	질문문항	문항수	비고
	중요성 정도	3. 정신건강 증진		대학생 학부모
	청소년여가영역 주요사업별 중요성 정도	1. 청소년단체 및 동아리 활동 지원 2. 국제청소년성취포상제 3. 청소년자기도전포상제 4. 청소년문화예술교육 및 문화체험 지원 5. 다양한 스포츠활동 지원 6. 청소년 자원봉사활동	6	중고생 심터청소년 대학생 학부모
	청소년국제활동 주요사업별 중요성 정도	1. 청소년국제교류(국가간 교류) 2. 글로벌 청년리더 양성(해외취업, 해외인턴, 해외자봉) 3. 다양한 해외체험 활동(조사연수, 국제회의 참가 등) 4. 국제교육(문화다양성, 국제이해 등)	4	중고생 심터청소년 대학생 학부모
	청소년참여영역 주요사업별 중요성 정도	1. 학교규칙 제정에 참여 2. 청소년시설 운영에 참여 3. 지자체 청소년정책 결정에 참여 4. 청소년특별회의에서 청소년정책 제안	4	중고생 심터청소년 대학생 학부모
	청소년사회통합 주요사업별 중요성 정도	1. 경제적 어려움, 소년소녀가장, 조손한부모 가정 지원 2. 탈북·다문화 청소년 지원 3. 장애청소년 지원 4. 위기청소년 지원(가출, 비행, 성매매, 학업중단, 중독) 5. 미혼(부)모 청소년 지원	5	중고생 심터청소년 대학생 학부모
	청소년가족지원 주요사업별 중요성 정도	1. 부모교육 2. 가족상담 3. 가족단위 여가 및 문화프로그램 지원 4. 청소년 대상 예비부모교육	4	중고생 심터청소년 대학생 학부모
	위기청소년지원 주요사업별 중요성 정도	1.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 2. 인터넷(게임)중독 예방 및 치료·재활 3. 주거, 교육, 자립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 제공 4. 생활비 및 용돈 등 경제적 지원 5. 위기에방(폭력, 범죄, 성)교육 및 치료·재활	5	중고생 심터청소년 대학생 학부모
	유해환경단속 주요사업별 중요성 정도	1. 청소년 유해업소 감시·단속 2. 청소년대상 술·담배 판매 금지 3. 청소년유해매체 심의 강화 4. 청소년대상 성범죄 방지 5. 청소년안전 및 기본권 보호를 위한 규제	5	중고생 심터청소년 대학생 학부모
	위 기 청 소 년 대 상 정책항목별 중요성 정도	1. 경제적 지원(생활비, 용돈 등 일상생활 관련) 2. 장학금 등 학비지원 3. 주거지원(임대주택, 전세지원 등) 4. 정서적 후원자 지원(상담, 멘토링 등) 5. 교육지원(검정고시, 대안학교 등) 6. 직업훈련지원(직업훈련수당, 직업전문학교, 학원비 등) 7. 취업지원(청소년일자리개발 및 취업정보제공 등)	6	심터청소년
	후 기 청 소 년 대 상 정책항목별	1. 학자금 지원(장학금, 등록금, 학자금 대출) 2. 주거지원(기숙사, 임대주택/전세임대 지원)	6	대학생

구분	하위영역	질문문항	문항수	비고
	중요성 정도	3. 상담지원(상담, 심리 정서적 지원 등) 4. 문화예술 향유 기회지원(공연관람 할인 등) 5. 대학생 지원 사업에 대한 정보제공 6. 대학생 글로벌 역량강화 지원(해외봉사, 국제교류 등)		
배경질문 (7/10)		1. 공통: 성별, 가족구성원 현황, 부·모의 학력수준, 부·모의 현재 직업유무 여부, 학업성적, 가정경제수준, 거주지역 2. 대학생 : 학교유형, 전공계열, 학년, 현재거주지역	7 (10)	중고생 심터청소년 대학생 학부모

4) 사례조사

국내외 총괄조정 정책사례를 선정하여 조사하였다. 조사방법은 국내정책의 경우 문헌연구와 해당정책의 수립에 참여했던 전문가의 집필과 토론을 통해, 국외정책은 해당국 전문가의 집필과 관련기관에 대한 면접조사를 통해 이루어졌다.

5) 기타 연구방법

청소년정책 총괄조정은 청소년계 뿐만 아니라 교육, 노동, 복지 등 여러 관련분야의 관계자가 함께 논의하여야 할 사안이다. 따라서 연구과정에서 이러한 관련분야 전문가의 공동의 논의를 위해 2회에 걸쳐 세미나를 실시하였다.

또한 정책안의 실현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해 관계부처 공무원 등이 참여하는 정책협의회를 개최하였다.

제 2 장

청소년정책 총괄조정의 이론화

1. 청소년정책의 개념
2. 청소년정책 총괄조정의 개념

제 2 장 청소년정책 총괄조정의 이론화*

1. 청소년정책의 개념

청소년정책의 총괄조정은 그 사회의 청소년정책의 개념, 즉 청소년정책의 범주를 그 사회가 어떻게 규정하고 있느냐와 깊은 상관성을 갖는다. 즉, 청소년정책의 대상 연령은 어떻게 정의되고 있으며 이들에게 청소년정책을 통해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영역, 핵심적 서비스는 무엇이고 이를 수행하기 위한 행정체계를 어떻게 구축하고 있느냐와 상관이 있다.

1)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관점 : 문제아 대 자원¹⁾

청소년을 바라보는 시각은 크게 두 가지다. 청소년을 문제아로 보는 시각과 자원으로 보는 시각이다. 문제아로 보는 접근방식은 젊은이들을 상처받기 쉬운 집단, 잠재적 위험에서 보호되어야 하는 그룹으로 생각한다. 즉 사회적 심리적 발달을 위한 장애물을 제거하기 위해 지원받아야 할 대상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다. 청소년을 주로 미성년자(법적 미성년자가 아니라 사회적인 미성년자)로 인식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성인쪽 보다는 아동쪽에 가깝게 인식하여 젊은이를 잠재적인 문제아, 위험한 존재 혹은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로부터 보호해야 하는 사람들로 여긴다. 문제아로서의 청소년의 이미지는 경제위기나 정치적으로 불안정한 시기에 강조되는데, 이 시기에는 사회나 미디어에서도 청소년은 ‘위험한’, ‘일탈한’, ‘범죄적인’, ‘폭력적인’ 등의 모습으로 그려진다.

반면 자원으로 이해하는 관점은 청소년을 좁은 의미의 성인 단계에 들어서는 집단으로 이해하여 인적·사회적 자원으로 본다. 따라서 성인으로 보는 관점을 기초로 청소년 정책을 수립하는 국가들에서는 대체로 청소년을 문제라기보다는 자원으로 간주하여 이들을 위해 적절한 발달 환경만 보장한다면 스스로를 잘 꾸려 나갈 수 있는 사회집단으로 여긴다. 전통적으로 자원으로서의 청소년의 이미지는

* 이 장은 윤철경 선임연구위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과 강현주 연구위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공동집필하였음.

1) 이 부분은 윤철경 선임연구위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집필하였음.

사회적으로 안정되고 경제적으로도 풍요로운 시대에 우세하다(윤철경 · 정희옥, 2001: 35-42).

청소년을 자원으로 보느냐, 문제로 보느냐는 그 사회 청소년정책의 특성을 규정한다. 유럽국가의 청소년정책을 <표 II-1>과 같이 4개로 모형화한 Wallace & Bendit(2009: 445)의 분석은 이를 잘 보여주고 있다.

표 II-1 유럽국가 청소년정책의 형태와 분류

정책 모델	해당 국가	정책 이념			정책대상		전담부처
		청소년을 보는 사회의 시각	청소년 정책의 주요 목표	주요 청소년 문제	주요 정책대상	주요 정책 대상의 연령 그룹	청소년정책 담당 부처
보편적 모델	덴마크 핀란드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자원으로서의 청소년	•자율성 •독립성 •개발 •정치참여	•청소년의 참여	•모든 청소년	13/15세 ~ 25세	관련부처가 아예 없거나, 여러 부처에서 청소년정책을 담당
지역사회 기반 모델	아일랜드 영국	•문제로서의 청소년	•사회문제의 예방 •정치참여	•청소년기의 연장 •사회적 배제 •청소년의 참여	•취약계층 청소년	초등학교 ~ 25세	관련부처가 아예 없거나, 여러 부처에서 청소년정책을 담당
보호 모델	호주 벨기에 프랑스 독일 리히텐슈타인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소중한 청소년 •자원으로서의 청소년 •문제로서의 청소년	•통합 •사회문제의 예방 •정치참여	•청소년의 참여 •사회적 배제	•모든 청소년 •취약계층 청소년	0세 ~ 25/30세	청소년정책 전담부서 존재
집중 모델	그리스 이탈리아 포르투갈 스페인	•문제로서의 청소년 •자원으로서의 청소년	•자율성 •독립성 •통합 •정치참여	•청소년기의 연장 •사회적 배제	•청소년을 정책별로 분화함	15세 ~ 25/30세	청소년정책 전담부서 존재

* 인용: Wallace & Bendit (2009); 박선영 (2012). 영국의 청소년정책과 총괄조정 현황.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세미나 자료집 (12-s27): 청소년정책 총괄조정 현황 및 관련정책 동향 분석 pp.157-158에서 재인용.

핀란드 등 북유럽 국가는 청소년을 자원으로 보는 나라로 분류되었다. 청소년을 자원으로 보는 나라에서는 모든 청소년을 대상으로 그들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고 청소년의 개발과 참여를

중시한다. 영국은 청소년을 문제로 접근하는 대표적인 나라이다. 영국은 사회문제의 예방과 참여에 정책적 관심이 집중되어 있으며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한 청소년정책을 펼친다.

독일 등 유럽의 대륙 국가들은 청소년을 자원으로 보는 동시에 보호해야 할 대상으로 보고 있다. 모든 청소년을 소중한 자원으로 보고 보호와 육성에 힘쓴다. 동시에 취약계층 청소년의 사회통합을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다양한 정책을 펼치기 위해 청소년행정이 발달하여 청소년정책의 부문화가 비교적 크게 발달한 국가이기도 하다.

스페인 등 지중해에 접해 있는 남유럽 국가들 역시 청소년을 문제와 자원으로 복합적으로 인식하고 있는데 청소년 특성별로 분화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2) 정책대상으로서의 청소년의 연령 범주²⁾

국가별 청소년정책 대상의 연령 범주를 볼 때 ㉠ 출생 후부터 25세 또는 30세 까지로 하는 국가, ㉡ 초등학교 저학년부터 25세까지로 하는 국가, ㉢ 11/13세에서 25세까지로 하는 국가, ㉣ 중등교육 끝부터 25세 또는 30세로 하는 국가들이 있다(윤철경 · 정희옥, 2001: 29-30).

표 II-2 유럽과 아시아 주요 국가의 청소년정책의 연령 범위

청소년정책 대상으로서 청소년 연령 범주	해당 국가	
	유럽 국가	아시아 국가
0세(출생) ~ 25세 내지 30세	오스트리아, 독일, 핀란드	일본(0-30세)
초등학교 저학년 ~ 25세	아일랜드,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한국(9-24세)
11세 내지 13세 ~ 25세	프랑스, 노르웨이, 영국	인도(13-35세)
중등교육 말 ~ 25세 내지 30세	덴마크, 스페인, 이태리, 포르투갈, 스웨덴	호주(15-30세), 뉴질랜드(15-24세), 싱가포르(15-29세), 필리핀(15-30세)

* 인용: IARD, 2001, p.57; ESCAP, 1999, p.46.; 이광호 (2009). 청소년정책 이해의 핵심 코드와 한국 사회 청소년정책의 내재적 특성에 관한 연구 청소년복지연구, 11(4), p.137에서 재인용.

〈표 II-2〉에 따르면 독일, 핀란드, 일본은 출생부터 자립(취업)까지 모두를 청소년정책의 연령범주로 보고 연령 통합적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그런가 하면 아일랜드나 한국은 초등학교 시기부터

2) 이 부분은 윤철경 선임연구위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집필하였음.

자립까지를 영국과 프랑스는 중등학교 시기부터 자립까지를 연령범위로 설정하고 있다. 스웨덴, 필리핀, 싱가포르 등은 중등교육 후기부터 20대 후반까지 청소년의 자립 시기에 중점을 두고 있다.

출생부터를 청소년정책의 연령범위로 설정하고 있는 국가들은 아동정책과 청소년정책을 통합적으로 실시하고 있지만 그 이후의 어느 시기부터를 청소년정책의 연령범위로 설정하고 있는 국가들에서는 아동정책과 청소년정책이 별도로 이루어지고 있다. 국제기구인 UN은 오랜 기간 동안 아동과 청소년의 연령을 14세를 기준으로 구분하여 14세까지는 아동, 15세부터 24세까지는 청소년으로 구분하여 정책을 수행하고 있다³⁾. 한국은 청소년의 연령을 9세에서 24세, 아동의 연령을 0세에서 17세로 구분하고 있으며 아동과 청소년의 연령이 중첩된 상태에서 서로 다른 부처에서 별도로 아동정책과 청소년정책을 수행하고 있다. 아동정책과 청소년 정책의 생애주기적 연계를 위한 총괄조정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⁴⁾.

3) 청소년정책의 영역 구분⁵⁾

청소년정책의 영역을 범주화하는 것은 청소년정책 총괄조정 기능을 확정하는 데 가장 중요한 일이다. 국가마다 무엇을 청소년정책 영역으로 설정하고 있는가에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국제기준에서 정의하는 청소년정책 영역을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대표적인 국제기구로 UN, EU, OECD, World Bank를 선정하고 해당 기구에서 발표한 대표적인 공식 문서 중 가장 최근의 것을 기초로 하였다. UN의 경우 ‘WPAY(World Programme of Action for Youth)’, EU의 경우 ‘EU 청소년전략(EU Youth Strategy)’, OECD의 경우 ‘OECD Work on Education(2011-2012)’, World Bank의 경우 ‘World Development Report 2007’이었다.

3) 1989년에 제정된 UN의 국제아동권리협약은 아동의 연령을 18세미만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15세에서 18세 사이 연령집단을 아동으로 볼 것인지, 청소년으로 볼 것인지 혼란을 야기했다는 비판과 더불어 18세에서 24세 회원을 포함하고 있는 학생연합이나 청소년단체들을 배제함으로써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다 (윤철경 외, 2003: pp.19-20).

4) 청소년기본법 제2장은 청소년 육성정책 총괄·조정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제9조는 “청소년육성정책은 여성가족부장관이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이를 총괄·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아동복지법은 “아동의 권리증진과 건강한 출생 및 성장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정책을 수립하고 관계부처의 의견을 조정하며, 그 정책의 이행을 감독하고 평가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아동정책조정위원회를 둔다.”고 하여, 아동정책의 수립과 관계부처의 의견 조정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두 법이 정의하는 ‘아동’과 ‘청소년’의 범위는 상이하다. 아동복지법에서 말하는 아동은 “18세 미만의 자”를 말하며, 청소년기본법에서 말하는 청소년은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자”를 말한다. 즉, 9세 이상 18세 미만의 대상자는 중복되어 있으며 9세 미만의 대상자는 청소년정책에서 법적으로 연령적 연계가 없다.

5) 이 부분은 강현주 부연구위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집필하였으며 윤철경 선임연구위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수정·보완 하였음.

(1) UN의 청소년 정책영역

WPAY(World Programme of Action for Youth)는 각 국가별 청소년 분야 정책집행의 틀(Frame)을 제공하고 실질적인 가이드라인(Guideline)이 되고 있다. 시작 단계인 1995년에는 10개 영역이 채택되었으나 이후 10년 동안 프로그램 실행에 대한 결과를 평가한 후 5개 영역을 추가하여 현재는 교육, 고용, 기아와 빈곤, 건강, 환경, 약물남용, 청소년비행(범죄), 여가활동, 소녀와 여자청소년, 참여, 세계화, 정보와 통신기술, HIV/AIDS, 무력충돌(Amed Conflict), 세대 간 이슈 등 총 15개 영역이 공식화되었다. 정책영역별 주요내용은 <표 II-3>과 같다.

표 II-3 UN 청소년정책 영역과 주요내용

연번	정책영역	주요 정책내용
1	교육	• 청소년의 기본교육, 기술훈련, 문해능력 높이기 • 다양한 사회의 다양한 문화적 유산과 시대적 흐름을 반영한 청소년 교육프로그램 개발하기 • 상호존중과 이해증진, 평화·응집력·관용에 대한 가치존중, 타인의 권리와 다양성 존중하는 교육프로그램 개발하기 • 직업과 전문적 훈련 • 인권교육증진 • 청소년 근로자와 리더 훈련위한 기반 구축하기
2	고용	• 자기고용의 기회(seed money, grant 증대) • 특정청소년 집단을 위한 고용기회 확대 • 청소년 자원봉사조직의 서비스 • 기술변화(하이테크놀로지산업)에 따른 새로운 고용기회창출
3	기아와 빈곤	• 농업분야를 청소년에게 매력적으로 만들기 • 청소년에 의한 농업수입증대를 위한 기술훈련하기 • 청소년을 위한 랜드그란트 제공 • 식량생산과 보급에 있어 도시와 농촌 청소년간의 협력
4	건강	• 기초건강 서비스 제공 • 건강교육의 개발 • 건강서비스 증진, 성과 생식에 관련된 건강교육프로그램 확대 • 청소년의 HIV와 AIDS 감염 예방을 위한 보호 서비스 제공 • 청결과 위생 프로그램 확대하기 • 열악한 건강행위에서 비롯되는 질병예방하기 • 청소년 성폭행 근절 • 청소년 영향실조와의 전쟁

5	환경	• 환경교육을 교육과 훈련 프로그램으로 통합하기 • 환경문제에 대한 정보를 국제적으로 청소년들에게 파급하고 친환경적인 기술을 사용하도록 홍보하기 • 환경보호, 보존, 개선에 대한 청소년 참여 강화하기 • 청소년에게 환경이슈를 알리기 위한 수단으로 미디어 활용하기
6	약물남용	• 약물수요 감소 프로그램에 대한 청소년과 청소년조직의 참여 유도 • 의약품의 합리적 사용에 대해 의료, 약학계 학생 훈련 • 청소년 약물남용과 의존, 알콜, 흡연 치료와 재활 프로그램 개발 • 사법제도와 감호체계 안에서 청소년들이 약물의존과 중독에 노출되지 않도록 보호하기
7	청소년 비행	• 예방조치를 최우선으로 하기 • 폭력예방 • 회복서비스,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
8	여가활동	• 여가활동은 청소년정책과 프로그램을 종합적으로 통합하는 영역 • 교육 프로그램의 하나로써 여가활동(정례적 학교커리큘럼 안에 포함) • 도시계획과 농촌개발 모두에 있어서 청소년 여가활동 고려하기 • 미디어 활용, 사회통합, 관용, 비폭력행동에 대한 청소년 인식과 이해 증진
9	여자 청소년과 젊은 여성	• 차별철폐 • 교육에서의 여자청소년과 여성의 차별철폐 • 건강에서의 여자청소년과 여성의 차별철폐 • 고용에서의 여자청소년과 여성의 차별철폐 • 폭력(모든 폭력으로부터 여자청소년과 여성을 보호하는 법률 만들기)
10	참여	• 청소년 의사결정의 참여기회 증대를 위해 정보접근성 높이기 • 청소년 권리, 책임, 참여증진 위한 기회강화, 장애물 제거지원 • 재정적, 교육적, 기술적 지원을 통해 청소년단체 강화하기 • 국가정책의 수립, 시행, 평가에 대한 청소년 역할 중요시하기 • 국가적, 지역적, 국제적 협력을 강화하고 청소년 조직간의 교류 확대 • 각종 국제대회, 포럼, 행사 등에 국가별 대표 청소년 참여 독려하기
11	세계화	• 청소년들 세계화로 인한 효과 관리하도록 지원하기 • 세계화의 맥락에서 기술개발과 청소년고용 증진하기 • 청소년에게 나타나는 세계화의 효과를 추적하기 위한 점검체계 마련
12	정보통신 기술	• 모든 청소년에게 유용한 정보통신기술 마련하기 • 정보통신기술의 사용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훈련하기 • 정보통신기술의 부정적인 측면으로부터 청소년 보호하기 • 장애나 취약계층에 대한 정보통신기술 사용을 증진시키기 • 통합적 정보사회 건설을 위한 핵심멤버로서 청소년의 역량강화하기
13	HIV/AIDS	• HIV/AIDS 예방, 보호, 치료에 대한 인식 확대하기 • 성불평등(여자청소년의 높은 감염위험)과 HIV/AIDS 에 대한 교육지원 • 취약청소년 보호를 위한 법적 도구와 입법화 작업
14	무력충돌	• 18세 이하 청소년들 직접적인 무력충돌 하지 않도록 보호하기 • 전투에 참여하지 않은 청소년들과 통합 지원하기 • 평화와 안정유지를 위해 청소년의 적극적 참여 보장하기
15	세대간 이슈들	• 가족기능강화하기 • 젊은 여성의 역량강화 • 세대간(구세대와 신세대) 결속력 강화하기

* 출처: UN (2012), World Programme of Action for Youth, www.un.org/en/development/desa (2012, 5, 8) 내용을 정리함.

(2) EU 청소년 정책영역

유럽연합에서의 청소년에 관한 주요정책은 행정부에 해당하는 유럽연합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의 EU Youth Strategy (2010-2018)에 잘 나타나 있다. 매년 발간되는 EU 백서(White Paper)에서도 일부 청소년정책이 포함되나 여기에는 유럽연합의 모든 정책을 다루고 그들 중 매년 쟁점화된 이슈만을 제시하기 때문에 청소년정책 전반을 살펴보기는 어렵다.

‘EU 청소년 전략(EU Youth Strategy, 2010-2018)’은 청소년 분야의 유럽협력을 위한 새로운 프레임으로서 향후 10년 간의 유럽 청소년정책의 핵심사항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EU는 <표 II-4>와 같이 청소년정책 영역으로 교육과 훈련, 고용과 기업가정신, 건강과 안녕, 참여, 자원봉사활동, 사회적 통합, 청소년과 세계, 창조와 문화 등 8개 영역을 제시하고 있다.

정책영역별 주요내용은 <표 II-4>와 같다.

표 II-4 EU 청소년정책 영역과 주요내용

연번	정책영역	주요 정책내용
1	교육과 훈련	• 청소년에 대한 전 범위에서의 수준 높은 교육과 훈련에 대한 접근성과 평생교육의 기회 동등하게 보장하기 • 청소년에 대해 증가하는 비공식교육의 기회, 교육과 훈련, 노동시장과의 연계 향상시키기, 학교중도탈락을 낮추기 • 학습자중심교육, 교수-학생간 관계강화, 신기술, 학습자이동, 비공식학습과 교육기관의 유연성에 대한 인식 높이기
2	고용과 기업가 정신	• 고용전략 속에 청소년의 관심사 포함하기 • 노동시장 수요에서 구직에 필요한 기술에 투자하기 • 서비스 상담과 경력 개발하기 • 유럽국내 이동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국경장벽을 낮추고 청소년 해외활동과 노동의 기회 늘리기 • 노동시장에서의 청소년 기회확대 위해 질적 훈련 강화 • 아동보호에 주목하고 전문가로서의 삶과 개인적 삶 간의 조화 속에서 파트너들 간의 책임감 갖게 하기 • 청년사업을 위한 네트워크와 구조 지원, 멘토링 지원, 자금조성, 교육을 통해 청소년들의 사업가정신 지지하기

3	건강과 안녕	• 청소년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중요성 인식, 청소년 건강의 중요성 이해 • 청소년 건강은 노동시장, 사회통합 등 다양한 사회문제와 관련 • 다양한 건강문제는 아동, 청소년기에 유발되므로 이 시기 건강관리중요 • 청소년 건강의 적극적 개념으로 설정 • 청소년건강증진 프로그램 실시 • 청소년은 환경, 소비 관련 건강문제에 특히 취약하므로 유럽의 환경과 건강전략, 소비자 정책전략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임 • 근로환경에서의 청소년건강에 큰 관심을 둬(청소년의 상해의 50% 이상이 근로환경에서 발생)
4	참여	• 높은 실업률, 빈곤, 인구학적 변화, 낮은 교육 성취율, 선거에서의 낮은 참여율, 정치적 선택과 결정에 있어 청소년 참여는 그들이 직접적 관심문제에 정책적 지지를 표명할 방법, 적극적 참여문화 형성이 필요 • 참여를 위해 세대 간의 대화 중요 • 참여형태도 장기적으로 한 곳에 소속되는 것에서 정치정당, 조직, 사회적 네트워킹, 임시 조직 등으로 다양화 • 청소년참여에서 협조를 위해 강한 법적 기반을 가진 조직을 둔다. • 청소년의 나이와 성숙도에 따라 관심과 문제가 다르게 고려되어야 한다. • 각계각층의 사회에 대의민주주의가 실현되도록 청소년 참여를 지원. • 유럽청소년들에게 적극적 시민정신 함양을 위해 실행프로그램 형성. 청소년들이 지역적, 국가적, 전 유럽적 수준에서 청소년의 민주적인 참여가 많아지도록 격려
5	자원봉사 활동	•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국가 간 협력을 중시 • 자원봉사를 통해 청소년들에게 다른 나라를 알고 이해할 기회를 준다. • 국경을 넘는 자원봉사에 대한 인식 높이기 • 국경을 넘는 자원봉사에 대한 기회 증가시키기 • 자기사정도구의 개발을 통한 질 높이기 • 유로패스, 청소년패스같은 수단을 통해 자원봉사활동의 학습효과 이해 • 청소년 근로자와 청소년조직내의 청소년들 간의 국가간 이동성 높이기 • 기회가 적은 청소년들에 대한 특별한 관심 기울이기
6	사회통합	• 통합을 위해 청소년노동의 중요성 인식. 청소년을 통합수단으로 중심에 두기 • 공동체 응집력을 증진하고, 사회적 배제를 감소시키고 청소년 교육, 고용, 사회적 통합간의 상호 연계를 위해 횡단적 접근을 적용하라. • 모든 청소년을 위한 상호문화적 인식과 역량개발 지원하기 • 노숙, 주택, 경제적 배제문제 다루기 • 교통, 건강, 사회서비스 등 질적인 서비스 접근성 높이기 • 청소년가족을 위한 지원 늘리기 • '빈곤과 사회적 배제와의 전쟁을 위한 유럽의 해'에 대한 계획, 전달체계, 평가에 있어서 청소년과 청소년 조직 개입시키기

7	청소년과 세계	• 기후변화, 유엔 새천년 개발계획, 인권 등 이슈화되는 문제들과 전지구적 정책결정과 수행에 참여하고 기여할 수 있도록 청소년을 고무시킨다. • 청소년들을 유럽 밖의 지역에 대해서도 협력할 수 있도록 격려하기. • 제3세계 국가에 대해서도 청소년들이 관심 갖도록 격려하기 • 인권, 지속적 발전과 같은 세계적 이슈에 대한 청소년들의 인식 증대시키기 • 세계적 이슈에 대한 정책결정자들과 의견교류 기회제공하기 • 대화, 훈련코스, 교류, 미팅 등을 통해 전 세계 청소년들 간의 상호이해증진 • 녹색자원봉사, 소비와 생산에 있어서의 녹색소비 등에 청소년참여를 독려하기 • 유럽 밖 지역에서도 창업, 고용, 교육, 자원봉사의 기회 늘리기 • 타 국 청소년들과 교류, 협력할 수 있도록 청소년들을 적극적으로 강화하기 • 거주국가나 해외에서 청소년들이 개발활동에 참여하도록 격려하기
8	창조성과 문화	• 청소년의 행복과 안녕을 위한 핵심영역으로 창조와 문화를 설정 • 창조와 문화는 가장 장기적인 교육프로젝트의 하나 • 청소년이 재능과 창조적 기술을 개발할 수 있도록 문화적 체험기회 확대하기 • 청소년의 창의성 향상을 위한 신기술 개발, 문화에 대한 특별훈련을 증대 • 청년 근로자 위한 새로운 미디어, 문화적 역량 높이기 • 문화, 창의적 영역과 청소년조직과 청소년근로자 사이의 파트너십 향상

* 출처: European Commission (2012), EU Youth Strategy.

<http://europa.eu/about-eu/institutions-bodies/european-commission> (2012.5.18) 내용을 정리함.

(3) OECD의 청소년 정책영역

OECD는 본래 경제협력을 통한 회원국 간 공동발전을 도모하려는 목적으로 설립된 기구지만 경제개발을 위해서는 인적자원의 개발이 중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교육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OECD 교육국에서 제시하는 교육정책에는 초기 아동교육과 보호, 학교, 초기교육을 넘어 직업으로 이전, 고등교육, 성인교육, 성과와 이익과 효과, 공평과 평등과 기회, 혁신과 지식과 관리 등 8개 영역이 있는데 이를 통해 청소년정책을 살펴볼 수 있다. 정책영역별 주요내용은 <표 II-5>와 같다.

표 II-5 OECD 청소년정책 영역과 주요내용

연번	정책영역	주요 정책내용
1	초기 아동교육과 보호	• 전 생애의 사회, 경제, 교육적 발달에 대한 강력한 기반을 형성하는 단계인 아동기 교육과 보호에 있어서 공평한 접근성 보장하기 • 평생교육 기반을 구축, 폭넓은 교육과 가족에 대한 사회적 욕구를 지원하기 위해 초기 아동교육과 보호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2	학교교육	• 학생들을 최상으로 준비시키기 위해 교수법과 학교시설 개선하기

3	기초교육에서 직업교육으로의 이행	• 일반교육의 확대를 통해 각 회원국 노동시장의 기술수준도 향상 • 건강서비스, 노인보호, 정보기술과 같은 많은 직업분야, 새로운 에너지 같은 부상하는 분야는 특정 훈련이 필요 • 직업교육과 훈련체계는 이들 기술을 제공하는데 큰 역할을 하고 기능적인 현대 경제의 욕구에 부응한다.
4	고등교육	• 접근성, 교육의 질, 연관성 향상시키기 • 고등교육은 경제위기 극복과 지속성장의 열쇠 • 국제적 환경에서 적응 가능한 국제 감각, 외국어, 다문화기술에 초점두기
5	성인교육	• 인적자원에 대한 인식과 이해 높이기 • 인적자본을 형성, 측정, 향상을 위한 노하우를 공유하기
6	교육의 성과와 이익, 회수	• 교육의 효과 이해하기 • 교육의 교실 밖 개인행복에, 사회에 대한 영향 이해, 측정, 평가하기
7	기회의 공평성과 평등	• 교육을 통해 모든 사람에 대한 평등한 성공기회 주기 • 성, 인종, 사회경제적 지위와 상관없이 다양한 환경과 특성, 관심을 가진 청소년들에게 잠재력 성취의 기회 공정하기 주기
8	혁신과 지식관리	• 전통적 목표와 새로운 방법을 조화시키기 • 컴퓨터, 인터넷, 네트워크 등 디지털 세대의 특성과 교육의 전통적 가치를 조화시키기

* 출처: OECD (2011), Work on Education(2011-2012), <http://www.oecd.org/document/> (2012.5.18)의 내용을 정리함.

(4) World Bank의 청소년 정책영역

World Bank는 교육, 보건, 영양 등 아동과 청소년의 개발에 영향을 미치는 투자의 중요성을 강조해왔다. 이를 위해 생애주기적 관점에서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정책적 개입을 강조하였다.

World Bank는 청소년정책의 필요성과 전략을 다음과 같은 배경 하에 강조하고 있다.

첫째, 빈곤을 감소시키고 경제성장을 이루기 위한 동력으로 청소년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청소년의 준비도를 강화하는 것이 정책입안자들의 관심사항이 되어야 한다.

둘째, 이를 위해 청소년들에게 기초교육 뿐 아니라 보다 수준 높은 교육의 기회를 확대해야 하고 자립하여 생활할 수 있는 기회의 확대, 자신의 삶에 대해 선택적 결정을 할 수 있는 의사결정자로서 역량을 개발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기회를 놓친 청소년들에게 제2의 기회를 제공하는 정책이 필요함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적 배경 하에 World Bank는 청소년들이 순조로운 이행을 필요로 하는 5개 정책영역으로 일과 생활을 위한 학습, 노동으로의 이행, 건강한 성장, 가족형성, 시민의식 형성을 제시하고 있다.

정책영역별 주요내용은 <표 II-6>과 같다.

표 II-6 World Bank 청소년정책 영역과 주요 내용

연번	정책영역	주요 정책내용
1	일과 생활을 위한 학습	• 일과 생활의 교육준비도 향상 • 초등학교 이후의 견고한 기반위한 준비도 향상 • 초등학교 이후 교육기회의 향상 • 청소년에 대한 더 나은 교육기회제공 • 제2의 기회제공(범죄, 약물, 질병, 수감자 등에 대한 새로운 기회부여)
2	노동	• 노동시장에서 청소년의 도전 • 노동시장에서의 청소년의 취약분야 발견 • 노동시장 기회확대 • 일터선택과 기술개발 • 취약계층 중 재통합위한 기반제공
3	건강한 성장	• 청소년 건강증진은 성장촉진, 빈곤, 케어지출 감소시킴 • 청소년 건강증진위한 공적 개입 필요 • 건강행위 위한 청소년 역량강화 • 건강한 선택을 가능케 하는 기회증가 • 불건강행위, 그에 결과에 대한 청소년 지원하기
4	가족형성	• 성장과 빈곤감소 위해 가족형성 준비필요 • 청소년의 부모되기 준비기회제공 • 청소년 결정력 강화하기(부모되기 역량강화) • 조기부모 지원
5	시민정신 훈련하기	• 청소년 참여증가 • 성인시민정신발달위한 수단개발 • 정치적 참여, 적극적 시민정신 위한 기회향상 • 정체성 획득과 소속감 • 합법적인 제2의 기회제공(청소년범죄자에 대한 회복적 사법, 처벌완화)

* 출처: World Bank (2012). World Development Report 2007: Development and the Next Generation.
<http://search.worldbank.org/> (2012.5.20) 내용을 정리함.

그리고 향후 청소년정책 과제로서 글로벌 사회에서 일어나는 청소년 이동 문제, 정보의 국제적 흐름과 같은 국제적 소통의 문제, 청소년정책이 국가정책 내에 일관된 통합성을 갖지 못하는 문제 등을 해결해야 할 과제로 제시하고 있다.

(5) 국제기구의 청소년정책 영역에 대한 종합

국제기구 청소년정책 영역은 국제기구의 특성을 반영한 차이점이 있기는 하지만 국제수준에서 청소년정책을 통해 추구하는 영역이 무엇인지를 도출하는데 매우 유용하다. 각 국제기구는 설립근거가 다르기 때문에 청소년정책의 영역이 기구의 설립근거에 따라 다르게 제시되었다고 생각할 때, 각

국제기구에서 제시한 청소년정책 영역과 사업을 국내 청소년정책에 비추어서 판단할 필요가 있다.

국제기구의 이와 같은 특성과 국내의 현실을 반영하고 각 영역에서 제시하는 사업의 공통성에 주목하여 재분류한 결과는 <표 II-7>과 같다.

표 II-7 국제기구의 청소년정책 영역 비교

	영역	UN	EU	OECD	World Bank
1	교육 (기초학력 지원/인성교육/시민교육)	○	○	○	○
2	고용/직업기술훈련	○	○	○	○
3	기아와 빈곤	○			
4	건강과 안녕 (관련교육 및 서비스)	○	○		○
5	환경	○			
6	약물남용	○			
7	청소년비행	○			
8	여가활동	○			
9	사회통합 (세대간 이슈/여자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	○	○	○	
10	참여/시민성	○	○	○	○
11	세계화/국제이동	○	○		
12	정보통신기술과 의사소통	○		○	
13	자원봉사활동		○		
14	무력충돌	○			
15	창조와 문화		○		
16	가족형성				○

* 인용: 조아미 (2012). 청소년정책 영역에 대한 고찰: 주요 국제기구를 중심으로(토론).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세미나 자료집 (12-s27): 청소년정책 총괄조정 현황 및 관련 정책 동향 분석, p.26.

<표 II-7>의 정책영역을 비교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 **교육, 고용, 건강, 참여, 사회통합**

3개 이상의 국제기구에서 공통적으로 제시하는 청소년정책 영역이다.

• **여가활동, 국제활동, 정보통신기술과 의사소통**

2개 국제기구에서 제시하는 청소년정책 영역이다. 국내 현실을 반영할 때 여가 활동, 국제 활동은

중요한 청소년정책 영역이나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에 따른 의사소통은 정보화 수준이 높은 한국에서
는 중요성이 떨어지는 영역이다.

• 약물남용, 청소년비행

국내 현실을 감안하여 모든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예방 교육적 차원의 활동은 교육영역에 포함시키
고, 위기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사업의 경우에는 **위기청소년지원 영역**에 포함시켰다.

• 자원봉사활동, 창조성과 문화

UN이 제시하는 여가활동의 개념에는 청소년정책에서 제공하는 활동 프로그램을 포함한다. 따라서
EU가 제시하는 자원봉사활동, 창조성과 문화는 **여가활동**에 통합될 수 있다.

• 가족형성

World Bank에서 제시하는 청소년정책 영역이다. World Bank는 청소년의 학습과 건강, 노동을
통해 건강한 가족을 형성하고 사회의 시민으로 이행되는 것을 청소년정책의 목표로 삼고 있다.
청소년의 경제사회적 독립이 지연되고 있는 한국현실을 고려할 때 향후 중요하게 부각될 정책영역으
로 판단된다. 그러나 현재 한국에서 가족의 이슈는 급격한 사회변화로 인한 세대 간 갈등과
소통의 문제, 가족해체의 문제 등이 당면과제이다. 따라서 가족형성의 영역은 **가족지원영역**에
포함시켜 다루고자 한다.

• 기아와 빈곤, 환경, 무력충돌

기아와 빈곤, 환경, 무력충돌 등은 전 세계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UN에서는 중요한 영역이지만
국내현실에 비추어 볼 때 글로벌 이슈로 이해된다. 따라서 이 영역은 시민교육 영역에 속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어 **교육** 영역에 포함시켜 다루고자 한다.

4개 국제기구의 정책영역을 이상과 같이 재분류하면 <표 II-8>과 같이 9개 영역으로 통합된다.
여기에 국내 청소년정책에서 주요한 영역을 차지하는 청소년 유해환경규제 등 청소년보호정책을
추가하면 총 10개 영역을 청소년정책 영역으로 확정지을 수 있다.

표 II-8 국제기준에 의거한 청소년정책 영역의 분류

	정책영역	정책영역의 의미
1	교육	기초학력을 지원하는 교육, 인권과 상호존중, 시민성을 향상시키는 교육
2	고용	청소년의 자활을 위한 교육훈련 및 고용기회 제공, 청소년의 사업가 정신 함양 교육 등
3	건강	기초건강서비스, 건강교육 프로그램 제공, 청소년의 HIV/AIDS 감염률 줄이기
4	여가활동	자원봉사활동 등 청소년정책과 연계된 다양한 프로그램의 여가활동으로 통합, 청소년의 문화체험과 창조성 증진, 뉴미디어, 지역개발 등의 환경 변화에 따른 청소년 여가 활동 기회 증진 등
5	국제활동	세계화에 따른 청소년 국제이동 기회 제공 및 글로벌 이슈에 대한 관심 제고
6	참여	권리와 책임에 대한 교육으로서 참여를 강조하고 있으며 국가 청소년 정책 및 계획에 대한 참여 강조
7	사회통합	여성청소년, 빈곤, 학업중단 등 사회적으로 배제되기 쉬운 청소년에 대한 지원
8	가족	청소년이 가족을 형성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예비부모 교육 및 의사결정능력 향상, 빈곤에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
9	위기청소년 지원	폭력, 약물 중독, 가출, 범죄 등 위기에 노출된 청소년들에 대한 교육과 지원
10	유해환경규제	청소년에게 유해한 물건, 행위, 매체 등이 확산되지 않도록, 청소년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사회환경을 규제

4) 국가행정체계에서의 청소년정책의 부문화 : 청소년정책의 고유영역⁶⁾

국제기구는 여러 국가의 청소년정책을 포괄함에 따라 폭 넓은 의미의 청소년정책 영역의 범주를 설정하고 있다. 그러나 청소년정책을 직접 추진하는 국가수준에서는 사회마다 차이가 있다. 국가마다 행정체계에서 청소년정책을 부문화하고 있는 정도가 다르다. 국가행정체계에서 청소년부문이 잘 발달된 국가란 청소년정책의 입법화와 청소년장관 등 내각에 전담부처 등이 조직되어 있는 경우이다. 청소년부문이 잘 발달되지 않은 국가란 청소년정책이 교육, 문화, 사회, 보건 등 전통적인 영역에 분산되어 있는 경우이다(윤철경·정희옥, 2001: 33).

청소년정책의 부문화 과정에서는 청소년들이 살아가는 일상생활의 모든 영역을 -교육, 노동, 복지, 문화, 건강, 비행과 범죄 등- 부문화하기 어렵기 때문에 일부 특정 영역을 선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개별 국가가 어떤 영역을 청소년부문으로 선정하였는지는 사회적 필요에 따라 역사적으로 변화하면서 청소년정책의 개념과 의미를 결정하게 된다(이광호, 2009: 132).

6) 이 부분은 윤철경 선임연구위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집필하였음.

IARD(2001)에서는 청소년정책의 부문화 정도에 따라 개별 국가를 ① 상당한 규모로 청소년정책을 부문화한 국가(독일, 오스트리아, 스페인, 그리스, 포르투갈), ② 소규모로 청소년정책을 부문화하고 많은 부문이 교육, 고용, 도시계획 등 전통적 영역에 분산되어 있는 국가(프랑스, 네덜란드, 핀란드, 아일랜드, 벨기에, 스웨덴, 노르웨이), ③ 특별한 청소년부문이 없는 국가(영국, 이탈리아, 덴마크, 아이슬란드)로 유형화하고 있다(IARD, 2001: 윤철경·정희욱, 2001: 33에서 재인용).

청소년의 부문화가 상당한 규모로 발전되어 있는 국가의 경우 청소년 행정전달체계를 통한 청소년정책의 총괄조정이 활발할 것으로 예측된다. 소규모로 청소년정책의 부문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 어떻게 기타 영역의 정책을 총괄조정하고 있는지, 청소년정책이 분산되어 있는 국가의 경우, 어떠한 방식으로 청소년정책을 총괄조정하는지를 고찰해 볼 필요가 있다. 한국의 경우, 청소년정책을 소규모로 부문화하고 있는 국가에 속한다. 청소년정책 영역의 범주가 좁은 국가에 속하기 때문에 청소년정책의 총괄조정에 대한 탐구가 더욱 필요하다.

5) 청소년의 연령과 주요 정책영역⁷⁾

청소년의 연령별로 필요로 하는 정책내용이 다르다.

연령집단별로 특별히 취약한 부분이 있으며 이를 지원하기 위한 사회적 서비스가 필요하다. <표 II-9>는 World Bank가 제시한 연령집단별 취약성과 정책수요를 나타낸 것이다.

<표 II-9>에 의하면 영·유아기에는 양육과 건강, 모성보호, 인지·사회적 발달의 장애요인 제거 등 보건, 건강, 교육이 주요 영역이다. 학령기 아동에게는 가족적 자원의 제한으로 학교부적응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건, 영양, 교육 등의 학교나 지역기반 공공서비스 확충이 주요 영역이다. 중등학교 시기인 초기청소년기에는 중등교육 기회제공과 더불어 직업체험, 생활기술 습득 등을 위한 비형식적 교육 기회, 청소년중심의 재생산적 보건서비스, 스포츠 활동, 통합적인 지역사회기반 서비스 등이 강조되고 있다. 후기청소년기에는 학업중단 청소년을 위한 교육, 노동시장 이행 프로그램, 사회·정치·경제정책에 대한 청소년의 권한강화 등 교육, 노동, 참여 등이 강조되고 있다.

7) 이 부분은 윤철경 선임연구위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집필하였음.

표 II-9 아동·청소년 연령별 취약성과 정책수요 및 주요 정책영역

연령집단		취약성	투자기회	주요 부문 및 영역
영아 및 유아기 [0-5]	영아기 [0-3세]	· 양육 결핍, 모성감염, 영양결핍, 환경 독성물질에의 노출이 두 뇌와 기타 기관에 심각하고 돌이킬 수 없는 결과 초래	· 태아기, 분만기, 신생아 보호 · 아동보호[모유수유, 면역, 아동질병 관리] · 장애아동재활프로그램 · 여성 및 가정에 대한 대출지원· 교육	· 보건 · 수송, 농업 · 건강 · 교육 · 사회적 보호
	유아기 [4-5세]	· 기초적인 인지적·사회적 능력이 이 시기에 발생하나, 부족한 음식물 섭취, 질병 감염, 인지적 자극의 부족으로 인한 신체적·지적 성장 제한		
학령기 아동 [6-12]		· 가족자원의 제한, 성 편견, 사회적 기반 및 공공서비스의 부족은 학교 출석을 가로막아 아동 노동의 증가 초래	· 사회적 기반 수송시설 및 학교기반 시설 개선 · 교사 임용 및 훈련 · 학교 보건 및 영양 프로그램 · 여성 및 가정에 대한 대출지원	· 수송 · 교육 · 보건 및 영양 · 금융
초기 청소년기 [12-18]		· 중등교육기회의 부족 · 생애기술 개발의 부족 · 보건서비스 정보 및 접근기회 부족 · 노동시장에의 취업기회 부족	· 중등교육기회 · 직업체험기회 · 생애기능습득 기회 · 통합적인 지역사회기반 서비스 · 청소년 중심의 재생산적 보건서비스 · 취약청소년을 위한 지역사회 기반의 재활서비스 · 미성년자 법적 보호, 아동 및 청소년 가해자에 대한 법적 처벌	· 교육 · 비형식교육 및 사회개발 · 스포츠 활동 · 보건 · 사회적 보호 및 사회성 개발 · 청소년사법
후기 청소년기 [18-24]		· 청소년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의사결정 및 정책에의 참여 부족	· 형식교육 시스템에서 중도탈락 청소년을 위한 치료교육 · 청소년 보건서비스 · 적극적인 노동시장 프로그램 · 사회·경제·정치 시스템에서의 권한강화 및 참여 · 청소년과 함께하는 국가청소년정책 · 청소년의 법적 보호	· 교육 · 비형식교육 및 사회성개발 · 보건 · 노동 · 스포츠 · 청소년사법

*인용: 김경준 (2008), 아동·청소년 투자에 관한 생애주기적 접근, 미래세대 리포트, 제1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pp.9-10.

국제기구들이 제시하는 청소년정책의 영역은 청소년들의 연령별 발달과업에 따른 요구를 반영한 것으로 폭넓은 범주의 것이다. 넓은 의미의 포괄적 범주화는 청소년의 일상생활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즉시적 요구를 반영하기는 어렵지만 청소년정책에 대한 사회적 담론을 촉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2. 청소년정책 총괄조정의 개념⁸⁾

1) 청소년정책 총괄조정의 의미

정책의 총괄조정이란 정책(policy)과 총괄조정(colligation & coordination)이 결합된 용어로 여러 부처에 분산된 구체적 사업과 계획들을 공동의 목표달성을 위해 동시화(synchronization)시키는 행위라고 말할 수 있다. 바꾸어 말하면 정책이 추구하는 통합적 목적을 위해 정책 차이(policy gap)를 줄여나가는 과정이다.

총괄이 정책을 수행하는 다양한 부처의 수평적 범주(horizontal coverage)와 관련된다면, 조정(coordination)은 수직적 측면에서 공동으로 우선순위를 정렬시키는 것을 의미한다(Honadle and Cooper, 1989: 김동환, 2004: 16에서 재인용). 따라서 정책총괄조정은 다수 부처나 조직 및 다양한 정책참여자들과 관련되고 이들이 공동의 목적달성을 위해 정렬되는 상호의존적인 행위라고 말할 수 있다. 이는 계층제적으로 상위에 있는 부처나 조직에 의한 우월적 조정뿐만 아니라 동등한 수준의 조직들 간의 공동의사결정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노화준, 2003: 35).

청소년정책에 있어서 총괄조정은 정책 전달체계에서 주로 수평적 차원의 행정체계와 관련된다. 수평적 차원의 행정체계는 수평적 범주(horizontal coverage)와 수평적 조정(horizontal coordination)으로 구분될 수 있다. 수평적 범주는 청소년행정에서 다루고 있는 행정 분야의 범위와 폭, 즉 청소년정책에서 포괄하는 다양한 정책영역을 말한다.

수평적 조정이란 청소년행정에서 다른 행정부문과의 조정을 말한다. 청소년행정이 다른 부문을 가로지르는 조정을 얼마나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있는가의 문제와 관련된다.⁹⁾

2) 청소년정책 총괄조정의 필요성

먼저, 정책 일반에서 논의하는 총괄조정의 필요성을 살펴보겠다. 총괄조정이란 개념은 논리적으로 둘 이상의 주체를 상정하고 있고, 둘 이상의 주체들이 문제해결을 위한 대안이나 수단에 대해 이견을 보이거나 갈등을 벌이고 있음을 전제한다. 특히 정책에 있어서의 총괄조정은 결정자가 다수이고, 대안이 많으며, 가치갈등이 수반되고, 그 결과를 알 수 없는 문제들(ill-structured problem)로

8) 이 부분은 강현주 연구위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집필하였음.

9) 이광호 (2012),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전문가 자문회의(2012.2) 발표자료(미간행).

구성되기 때문에 더욱 어렵다(Dunn, 1981: 유종상·하민철, 2009: 6에서 재인용). 복수의 정책결정자들은 자신들의 대안이나 방식이 더 정당하다는 것을 나름의 타당한 논리적 근거를 바탕으로 주장하기 때문에 통합이 쉽지 않다. 이러한 난제인 정책조정이 꼭 필요한 것인가에 대한 논의도 있으나, 정책문제의 복잡성은 더 많은 기능적 분화와 전문화를 요구하고 정책영역 사이의 연계정도도 심화되어 향후 그 필요성은 더욱 증가될 것이라는 주장이 많다(Peters, 1998: 298). 따라서 정책 총괄조정의 과업을 피하기보다는 이것이 필요한 문제의 성격과 유형을 파악하고 이를 위한 효과적인 조정수단과 방법들을 모색하는 것이 현명할 것이다.

청소년 정책과 실천분야는 지난 20여 년간 헌법에 보장된 청소년의 기본적인 권리(교육받을 권리, 근로의 권리와 의무 및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복지향상 등)를 근원으로 하여 정책적으로나 제도적으로 하나의 독립된 영역으로 학교교육을 보완하며 발전해왔다(조영승, 2002). 청소년정책은 청소년에 관한 모든 공공의 정책을 의미하며, 궁극적으로 청소년이 미래사회의 주역으로서 현재의 권리와 행복이 유보되는 주변적 존재가 아니라, 현재의 사회구성원으로서 인간다운 권리와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사회적 주체로 인식하고 이를 지원하는 정책적 노력을 총칭한다(한국청소년개발원, 2003: 76).

이렇게 청소년정책은 청소년이라는 특정 대상을 중심으로 정책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여러 부처에서 수행되고 있다. 예를 들면, 청소년 학교교육은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청소년 육성정책은 여성가족부, 청소년 보건복지정책은 보건복지부, 청소년 고용정책은 고용노동부, 그 밖에도 국방부, 법무부, 환경부, 국가인권위원회 등 다수의 부처에 청소년관련 정책은 분산되어 추진되고 있다. 2011년 기준 여성가족부 청소년백서에 따르면 27개 부처에서 255개 청소년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여성가족부, 2011b: 411-414). 이는 청소년사업이 양적으로도 많고, 청소년활동영역이 청소년육성이라는 제한된 독립영역으로 형성되면서 포괄적인 청소년계획이 없이 부처별, 사업별로 산만하게 파편화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모습은 한국사회에서 청소년정책이 체계적이고 주도적으로 이루어지기 힘든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시사하는 것이기도 하다. 또한 분야별로 전문적인 정책수립과 집행이 가능하다는 장점도 있지만, 위기나 긴급을 요하는 사회적 지원이 필요한 경우, 여러 정책이 중복되어 행정낭비가 발생하거나 반대로 정책공백이 발생하는 경우 등에 대응이 어렵고, 부처 간 책임전가가 발생하는 등의 취약성도 있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따라서 '청소년'이라는 대상을 중심으로 범부처 차원의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이 요구되며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필요성이 논의될 수 있다.

첫째, 청소년정책은 '청소년'이라는 대상을 중심으로 한 정책인데 실제 한국의 행정부처들은 노동, 교육, 보건복지, 문화, 환경 등 기능별로 구분되어 있다. 따라서 여러 부처에서 이루어지는 정책들을 청소년이라는 대상을 중심으로 하나의 큰 그림 속에 재조합하는 총괄조정 기능이 필요하다.

둘째, 청소년정책의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다. 청소년정책이 고유한 영역으로서 사회문제의 해결에 기여하는 아젠다(Agenda)로서의 의미를 가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즉 청소년에 대한 관심과 중요성에 대한 인식은 최종 정책수혜자인 청소년과 그 부모의 욕구와 필요에 부응해야 하고 이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수혜자중심의 관점에서 문제해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 부처별 정책들이 상호 유기적, 종합적으로 검토될 필요가 있다.

셋째, 청소년정책은 인간의 생애주기상 특수한 시기를 대상으로 한 정책이다. 청소년의 성장은 연령과 발달단계에 따라 그 특성에 적합한 개별화된 지원도 필요하지만 성인기를 예측하고 각 단계들이 전인적 차원에서 연속적으로 이어지도록 할 때 더 큰 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 즉 청소년정책은 맥락적으로 이해하고 접근해야하며, 연속성과 종합성을 고려하여 추진되어야 한다.

3) 청소년정책 총괄조정 수단

(1) 정책수단의 개념 및 유형

정책수단이란 정책참여자들이 어떤 특정의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사용하는 모든 수단을 말한다(Doelen, 1989; 남기범, 2011: 155에서 재인용). 정책의 총괄조정수단을 고찰하기 위해서는 정책자체에 대한 수단을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다.

Peters(1999)를 비롯한 외국학자들은 정책을 실행하는 수단들로 법률, 서비스, 돈, 세금, 다른 경제적 수단, 설득 등을 제시하고 있다(남기범, 2011: 163). 임도빈(2004)은 통제의 효과가 얼마나 구체적으로 나타나느냐에 따라 직접적인 정책수단과 간접적인 정책수단으로 분류하기도 한다. 간접적인 수단으로는 인사, 조직, 정책평가 등이며, 직접적인 수단으로는 예산, 법률제정, 회의주재, 감사 등을 들 수 있다. 유종상과 하민철(2009)의 경우, 공식적 수단과 비공식적 수단으로 정책조정 수단을 분류한다. 공식적 수단은 헌법이나 법률에 근거한 공식적인 권한을 활용하는 것을 의미하며, 주로 예산권, 인사권, 조직권을 들 수 있다. 비공식적 수단은 회식, 단합대회와 같은 비공식적 접촉에 의한 조정을 의미한다(유종상 · 하민철, 2009: 10).

여기서 공식적 수단이란 임도빈(2004)이 정의한 직접적 수단과 유사하다. 법, 예산, 조직 또는

인사권 같은 정책수단을 공식적, 직접적, 하드웨어적인 것이라고 본다면, 공식적이기는 하나 연성적 성격을 띠는 정책계획 수립, 평가, 정보제공 등은 간접적 수단이 될 것이다.

법, 예산, 조직과 같은 직접적 정책수단을 확보하려면 상당한 노력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따라서 직접적 정책 수단을 확보하기 이전에 주무부처는 계획, 평가와 같은 연성적 시범사업을 시도하면서 이의 성과를 확산시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려는 선제적 노력을 한다.

표 II-10 정책수단 종류 및 유형

학 자	정책수단 종류 및 유형
Peters	법률, 서비스, 돈, 세금, 다른 경제적 수단, 설득(suasion)
Schneider & Ingram	권위적 도구, 장려도구, 권위와 제재, 역량형성도구, 학습도구
Levine, Peter, Thomson	법규, 서비스·재화 직접공급, 지불양도, 교부금, 외부계약, 대출, 보험
유종상 & 하민철	공식적 수단, 비공식적 수단
임도빈	직접적인 정책수단, 간접적인 정책수단

* 인용: 남기범 (2011). 현대정책학개론. 서울: 조영문화사. p.163에서 재인용.

(2) 정책수단의 실효성

공식적 수단은 헌법이나 법률에 근거한 공식적인 권한을 활용하는 것을 의미하며, 주로 예산권, 인사권, 조직권을 들 수 있다. 정책조정 권한을 행사하는 대표적인 기관으로 청와대, 즉 대통령실과 국무총리실을 예로 들 수 있는데, 이 중 청와대 대통령실의 경우 모든 권력의 원천을 활용할 수 있는 주체로서 가장 강력한 정책조정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볼 수 있으며, 그에 비해 국무총리실은 행정각부의 통할권(헌법 제86조)을 가지고는 있지만 앞서 언급한 예산권, 인사권, 조직권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인 조정력은 없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편 이와 같은 공식적 조정수단 외에 다양한 비공식적 수단들이 존재한다. 예를 들어 회식, 단합대회와 같은 비공식적 접촉에 의한 조정, 사적 인맥을 통한 조정, 통치자의 의지를 활용한 조정¹⁰⁾ 등이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Chrisholm(1989)는 정책조정에서 공식적 수단에 의한 조정은 실패하는 경우가 잦고 오히려 비공식적 연계에 의한 조정, 비공식적 규범이나 관례를 통한 조정이

10) 한국에서는 통치자의 의지가 매우 중요한 정책조정의 변수로 작용한다. 민감한 관료들은 최상의 정책을 찾기보다 상급자의 말에서 힌트를 얻어 상급자의 의지나 견해와 일치하는 정책을 탐색하는데 노력을 기울인다(김영평, 1991).

더 효과적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Jennings(1994), Jennings와 Ewalt(1998)도 정책조정에서 비공식적 수단의 중요성을 동일하게 강조하고 있다. 이들은 모두 정책조정은 공식적이고 계층제적인 명령과 통제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보다는 조직들 간의 자율적인 상호작용, 거래, 협상 등의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Jennings, 1994, Jennings & Ewalt, 1998: 유종상·하민철, 2009: 354에서 재인용). 한국에서도 정책갈등에 대한 총괄과 조정은 많은 경우 의도적으로 설계된 조정기구에 의해서보다는 오히려 비공식적 관례에 더 의존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김영평, 1991: 김영평·신신우, 1991에서 재인용). 정책분야 외에도 많은 갈등이 복잡하고 비공식적인 방식으로 해결되어 온 한국의 문화적 특성을 반영한 소위 ‘인격의 지배’를 통한 조정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그러나 비공식적 수단(전략)들이 중요한 기능을 하지만 공식적으로 주어진 권한을 바탕으로 할 때 활용이 가능하다는 점은 염두에 두어야 한다. 즉, 비공식적 수단들만 존재한다고 해서 그것이 효과성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태든 공식적 수단이 존재하고 그 수단을 근거로 정책조정 과제의 성격에 맞게 다양한 비공식적 수단(전략)들을 활용할 수 있다는 뜻이다.

요컨대 조정의 수단문제는 정책조정 주체가(심의회, 심의관, 조정관, 국무총리 등) 비공식 수단들을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는가가 더욱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3) 관계법령을 통해 본 총괄조정수단 현황

여러 부처에서 실시하고 있는 정책은 총괄조정의 필요성이 크다. 법적·제도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정책총괄조정 수단을 살펴보기 위해 관계법령을 분석하였다. 정책의 총괄·조정기능을 언급하고 있는 법령으로는 인적자원개발기본법, 여성발전기본법, 다문화가족지원법, 정부업무평가기본법, 청소년기본법, 자원봉사활동기본법, 문화예술교육기본법, 근로자 직업능력개발법¹¹⁾ 등이 있다. 이들 중 타 행정부처와의 협력이 상대적으로 많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인적자원개발기본법, 여성발전기본법, 다문화가족지원법, 정부업무평가기본법, 청소년기본법의 5개 법령에 대한 총괄조정수단 현황을 비교분석하고자 한다.

관계법령에서 추출한 정책총괄조정 수단 현황은 <표 II-11>과 같다. 법에 나타난 총괄조정 수단은 크게 계획수립, 조직, 인력, 평가 및 환류, 정보관리의 5개 영역으로 압축된다.

11)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은 사업주 단체와 근로자 단체 등 관련기관이나 단체와의 협력이 많이 요구된다.

정 책	1	2	3	4	5
	인적자원개발정책	여성정책	다문화가족지원정책	정부업무평가정책	청소년정책
관계 법령	인적자원개발기본법 (2002. 8.26 제정), 교과부 와 그 소속 직제 시행령, 시행규칙	여성발전기본법(1996.7.1 제정), 성별영향분석평가법(2011. 9.15 제정),여성가족부 직제에 관한 시행령, 시행규칙	다문화가족지원법 (2008.3.21 제정)	정부업무평가기본법 (2006.3.24 제정), 국무총리실 직제 시행령	청소년기본법(1991.12.31 제 정), 여성가족부 직제에 관한 시행 령, 시행규칙
	기본 계 획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 부장관은 5년 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인적자원 개발과 관련된 계획과 시 책 등을 종합하여 기본계 획안을 작성하고 국가인적 자원개발위원회에 제출(법 제5조 제2항)	-여성가족부장관은 여성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 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 야 한다 (여성발전기본법 제7조)	-여성가족부장관은 다문화 가족 지원을 위하여 5년 마다 다문화가족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 여야 한다(법 제3조의 2)	-국무총리는 정부업무평가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법 제8조).
①	계 획 수 립	시 행 계 획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 본계획에 의하여 연도별 시 행계획을 각각 수립·시행 하여야 한다(법 제14조).		

정 책	1 인적자원개발정책	2 여성정책	3 다문화가족지원정책	4 정부업무평가정책	5 청소년정책
어 원 회	-정부는 주요 인적자원개발정책을 조정하고 인적자원개발과 관련된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가인적자원위원회(위원장: 대통령, 부위원장: 과부장관, 30인 이내 구성)를 구성(법 제7조 제2항)	-여성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여성정책조정회의(의장: 국무총리, 부의장: 여가부장관, 위원: 기재부 장관 등 30인 이내)를 둔다(여성발전기본법 제11조 제1항, 시행령 10조)	-국무총리 소속으로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를 둔다(법 제3조의 4).	-국무총리 소속하에 정부업무평가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 위원: 행안부장관, 기재부장관, 국무총리실등 15인 이내)를 둔다.(법 제9조, 10조)	①청소년정책에 관한 관계기관간의 연계·조정과 상호협력을 위하여 여성가족부에 관계기관의 공무원 등으로 구성되는 청소년정책 관계기관 협의회(위원장: 여가부장관, 위원: 각 부처 차관 등 중앙행정기관장이 지명하는 자로 15인 이내)를 둔다(법 제10조).
실 무 위 원 회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미리 검토하고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법 7조 9항) -운영위원회(위원장: 인적자원개발정책 추진본부장, 위원: 중앙행정기관 고위 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등의 구성)법 시행령 8조 2항)		-정책위원회에서 심의·조정할 사항을 미리 검토하고 대통령령에 따라 위임된 사항을 다루기 위하여 정책위원회에 실무위원회(위원장: 여가부 차관, 위원: 각 부처공무원 등)를 둔다. (법 제3조의 4)	-자체평가 및 투쟁평가에 관한 안건을 미리 검토·조정하고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법 제10조 10항),	① 협의회에 상정할 안건에 대한 사전 검토 및 조정, 협의회에서 위임한 사항의 처리, 협의회의 효율적 운영 지원을 위하여 협의회에 청소년정책 관계기관 실무협의회(위원장:여가부차관, 위원: 일반직공무원 중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명을 둔다.(법 시행령 제4조)
사 무 조 직	- 위원회의 사무를 지원하고 인적자원개발 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교육과학기술부에 인적자원개발정책 추진부를 둔다(동 법 7조 8항)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국무총리실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국무총리가 지명하는 자가 된다(법 제10조 4항),	

② 조 직

정 책	1 인적자원개발정책	2 여성정책	3 다문화가족지원정책	4 정부업무평가정책	5 청소년정책
행 정 기 관	-교과부 인재정책실인재정책과장*은 인적자원개발 관련 법령 및 제도 운영·발전 사항을 분장한다. (교과부와 그 소속직제 시행규칙 제7조 12항)	-여성정책국 여성정책과장(1명)은 정책계획수립, 여성정책조정, 종합 등의 기능 담당(여성가족부 직제 시행규칙 제6조) -성별영향평가과장(1명)은 관련 계획수립,종합,조정,성인지예산지원 등의 기능 담당(여성가족부 직제 시행규칙 제6조)	-청소년가족정책실 다문화가족과장은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다문화가족지원정책 총괄(여성가족부 직제 시행규칙 제7조 11항)	-정책분석평가실장은 정부업무평가 제도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분장(국무총리실 직제 10조)	-청소년가족정책실 청소년정책과(1명)는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청소년정책의 협의·조정 총괄(여성가족부 직제에 관한 시행규칙 제7조 3항), -청소년보호과(1명)* ¹³⁾ 청소년보호에 관한 관계 부처간 조정·실태조사 및 연구개발(여성가족부 직제에 관한 시행규칙 제7조 7항)
③ 인 력	-중앙행정기관장,지자체장은 소속공무원 중 인적자원개발정책을 총괄하는 인적자원개발정책담당관을 지정 (법 제10조)	-중앙행정기관장은 그 기관의 여성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여성정책담당관을 지정(여성발전기본법 제12조 1항)			
④ 평 가 및 환 류	-위원회는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분야별 인적자원개발계획과 정책의 기획·조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한다 (법 제7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관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과정(權)에서 그 정책이 여성의 권익(權)을 미리 분석·평가하여야 한다 (여성발전기본법 제10조)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분석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석평가서를 작성하여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8조)			

정 책	1 인적자원개발정책	2 여성정책	3 다문화가족지원정책	4 정부업무평가정책	5 청소년정책
사 전 심 의 결 과 활 용	① 위원회는 심의한 결과 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게 알려주어야 한다. ②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인적자원개발 시책을 수립 하고 인적자원개발과 관련 된 예산을 편성·집행함에 있어서 위원회의 심의 결 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③기획재정부장은 위원회 의 심의결과를 반영하여 국가인적자원개발사업과 관련된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 (법 제7조의 2)	①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 치단체의 장은 분석평가의 결 과를 정책에 반영하여야 하고, 매년 그 결과를 여성가족부장 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분석 평가의 결과를 「국가재정 법」 및 「지방재정법」에 따 른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작성에 반영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성별 영향분석평가법 제9조)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 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인적자원개발사업 등에 대 하여 「정부업무평가 기본 법」 제14조에 따른 자체 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 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함. -위원회는 심층적인 평가 가 필요한 사업을 선정하 여 특정평가를 실시할 수 있음. (법 제9조)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여성의 지 위 향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 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 단체 소관 정책사업을 특정하 여 분석평가를 실시할 수 있 다.(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10 조)		-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장 이 자체평가의 결과를 조 직, 예산, 인사, 보수체제 에 연계, 반영하여 정책 시행 후 자체감사 결과를 수합 (법 제29조) -위원회는 자체평가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평가 의 부문별 총괄, 관련 중 앙행정기관의 부문별 자 체평가결과 확인, 점검 요청(법 제11조~제13조) -국무총리는 중앙행정기관	
사 후 평 가					

정 책	1 인적자원개발정책	2 여성정책	3 다문화가족지원정책	4 정부업무평가정책	5 청소년정책
				의 자체평가를 확인, 점검 후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재평가 실시(법 제17조)	
사 후 평 가 결 과 활 용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인적자원개발사업을 추진 시 자체평가의 결과 및 특정평가한 결과를 반영하여 인적자원개발에 대한 투자가 최대한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함(법 제8조)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분석평가의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여야 하고, 매년 그 결과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분석평가의 결과를 「국가재정법」 및 「지방재정법」에 따른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기금운용계획서의 작성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10조).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정책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11조) -분석평가 추진 실적 및 정책개선 실적을 점검하고 종합 분석한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연 1회 이상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12조).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평가결과를 조직·예산·인사 및 보수체계에 연계·반영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평가결과를 다음 연도의 예산요구시 반영하여야 한다(법 제28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평가의 결과에 따라 정책 등에 문제점이 발견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에 대한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당해 정책 등의 집행중단·축소 등 지체 시정조치를 하거나 이에 대하여 자체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법 제29조).	

정 책	1 인적자원개발정책	2 여성정책	3 다문화가족지원정책	4 정부업무평가정책	5 청소년정책
평 가 조 직	-인적자원개발 관련 연구 기관 등을 인적자원개발평가센터로 지정할 수 있음 (동 법 12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정책을 분석·평가하는 데에 필요한 지원을 하고 지문에 응하기 위하여 국공립 연구기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연구기관 또는 민간 연구기관을 정책의 분석·평가지원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여성발전기본법 제10조의 2,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17조). -분석평가 제도의 운영 및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장관 소속으로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위원장:여가부차관,위원:각부처 분석책임관)를 둔다(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13조, 시행령 10조).		①정부는 평가역량의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조직과 예산 등을 최대한 지원하여야 한다. ③정부는 평가와 관련된 기관에 대한 지원방안 및 평가에 관한 전문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법 제23조)	
평 가 인 편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기관의 분석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분석평가책임관을 지정하여야 한다(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14조)			

정 책	1 인적자원개발정책	2 여성정책	3 다문화가족지원정책	4 정부업무평가정책	5 청소년정책
⑤ 정보 관리	-인적자원개발에 관한 지 표를 개발하고, 개발된 지 표에 따른 관련 통계 등의 정보를 생산하며, 그 정보 등의 유통 및 활용을 촉진 시켜야 하며 ① 정보 등 의 수집·분석·가공 및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② 인적자원개발관련 정보망 의 구축 및 운영, ③ 정보 등의 생산 및 유통기관의 육성 등과 같은 시책을 추 진해야 함 (법 제11조)	-여성가족부장관은 효율적인 여 성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 하면 여성과 관련된 문제에 대 한 기초조사와 여론조사를 실시 하여야 한다. -여성가족부장관은 정보체계를 구축하여 여성 관련 정보를 제 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 다. (여성발전기본법 제13조)	①여성가족부장관은 다문화 가족의 현황 및 실태를 파악하고 다문화가족 지 원을 위한 정책수립에 활 용하기 위하여 3년마다 다문화가족에 대한 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 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 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 여 관계 공공기관 또는 관련 법인·단체에 대하 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 다.(법 제4조)		

* 출처: 청소년기본법, 인적자원개발기본법, 여성발전기본법, 성별영향분석평가법, 다문화가족지원법, 정부업무평가기본법, 헌법, 정부조직법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main.htm> 2012.5.27) 에서 관련 법령을 참고로 작성함.

- 12) 교과부 직제에 관한 법령에는 명시되어 있으나 실제 교과부 업무분장에는 전담인원이 없음(<http://www.mogel.go.kr/> 참조)
13) 청소년보호 업무와 관련하여 청소년보호 종합대책 수립시 범부처적 차원의 협의 및 조정이 필요

먼저, 분석대상이 된 5개 정책 모두 계획수립(기본계획, 시행계획)을 수단으로 하고 있다¹⁴⁾.

둘째, 조직을 볼 때 5개 정책 모두 의사결정을 논의할 ‘위원회’(국가인적자원위원회, 여성정책조정위원회,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 정부업무평가위원회, 청소년정책관계기관협의회)를 두고 있으며, 실무조직으로 실무위원회를 두고 있다(여성정책의 경우에는 실무위원회는 없음). 이에 더해 인적자원개발정책과 정부업무평가정책의 경우는 실무처리를 위한 사무조직으로 추진본부, 간사를 두고 있다. 총괄조정의 실효성이 있으려면 이를 추진할 행정기관에 담당 부서가 조직되어 있어야 한다. 5개 정책 모두 담당부서(인재정책과, 여성정책과, 성별영향평가과, 다문화가족과, 정책분석평가실, 청소년정책과, 청소년보호과 등)는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해당 업무를 전담할 인원이 배치되어 있느냐는 법 규정과는 또 다른 문제이다. 여성정책과 정부업무평가정책 외에는 실제 인력배치가 취약하다. 교과부 인재정책과의 경우 실제로 담당인력이 아예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이와 관련하여 해당 정책의 총괄조정을 수행할 공무원 인력을 배치하도록 지정하고 있는 정책은 인적자원개발정책과 여성정책 뿐이다.

넷째, 평가 및 환류를 총괄조정수단으로 확보하고 있는 것은 인적자원개발정책과 여성정책, 정부업무평가정책이다. 정부업무평가정책은 정책의 특성이 평가라는 점에서 당연한 것이며 사후평가만을 시행하고 있다. 인적자원개발정책과 여성정책은 사전심의 및 결과활용, 사후평가 및 결과활용을 수단으로 확보하고 있다. 즉 사전심의 후 심의결과를 해당 부처에 알려줘 그것을 해당부처의 예산편성 시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특정 업무를 선정하여 사후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를 해당 부처에 알려주면 인적자원개발정책의 경우에는 ‘그 결과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반면, 여성정책은 ‘해당 부처에서 정책에 반영한 결과를 여성가족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정책개선 실적을 국무회의,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성별영향평가법 제12조), 여성정책의 경우 더 강력한 총괄조정수단을 확보하고 있다. 3개 정책 모두 평가를 수행할 평가조직을 지정할 수 있다고 법령에 규정하고 있는데 정부업무평가정책의 경우, 조직과 예산 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다. 여성정책의 경우, 평가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여성정책의 경우에는 해당 부처의 분석평가를 위한 분석평가책임관, 즉 평가인력을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섯째, 정보관리면에서는 인적자원개발정책, 여성정책, 다문화가족지원정책이 이를 규정하고 있다. 인적자원개발 지표에 따른 통계 등의 정보생산, 정보망 운영, 여성에 관한 기초조사, 여론조사, 여성관련 정보제공을 위한 노력, 다문화가족의 현황 및 실태에 재한 조사와 결과 공표 등을 규정하고

14) 정부업무평가정책은 시행계획까지는 수립하고 있지 않았다.

있다. 여성가족부의 성별통계 생산은 이러한 정보관리에 대한 정책적 노력의 소산으로 보인다.

표 II-12 **관계법령에 나타난 정책 총괄조정수단 분석**

구 분		1 인적자원개발 정책	2 여성 정책	3 다문화가족지 원정책	4 정부업무평가 정책	5 청소년정책
① 계획 수립	기본계획	○	○	○	○	○
	시행계획	○	○	○		○
② 조 직	위원회	○	○	○	○	○
	실무위원회	○		○	○	○
	사무조직	○			○	
③ 행정기관		○	○	○	○	○
④ 인 력		○	○			
⑤ 평가 및 환류	사전심의	○	○			
	사전심의 결과활용	○	○			
	사후평가	○	○		○	
	사후평가 결과활용	○	○		○	
	평가조직	○	○		○	
	평가인력		○			
⑥ 정보관리		○	○	○		

5개 법령의 정책총괄조정 수단을 비교하여 <표 II-12>로 나타내었다. <표 II-12>에 따르면 인적자원개발정책은 통해 가장 강력하고 다양한 총괄조정수단들을 구비하고 있다. 여성정책은 조직면에서 실무위원회와 사무조직은 없지만 이 외에는 다양한 총괄조정수단을 법적으로 확보하고 있다. 다음으로 정부업무평가정책은 시행계획과 사전심의는 없지만 사후평가 및 평가를 위한 조직을 정책수단으로 구비하고 있다. 청소년기본법은 타 법령에 비해 계획과 위원회만 구비하고 있을 뿐 법적, 제도적으로 규정된 정책수단이 매우 취약함을 알 수 있다.

제 3 장

범부처 청소년 관련 관장사무 및 정책추진현황 분석

1. 정부조직법과 직제규정을 통한
행정각부 청소년 관장사무 현황
및 문제점
2. 범부처 청소년정책 추진현황 및
문제점
3. 부처별 청소년정책 추진현황에
대한 종합

제 3 장

법부처 청소년 관련 관장사무 및 정책추진현황 분석*

1. 정부조직법과 직제규정을 통한 행정각부 청소년 관장사무 현황 및 문제점¹⁾

1) 부·청 별 관장사무

헌법은 “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여 청소년정책을 국가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헌법 제34조 4항).

청소년정책은 정부기관에 의해 어떻게 수립되고 실시되고 있는가? 이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기본법이 정부조직법이다. 정부조직법은 ‘국가행정사무의 체계적이고 능률적인 수행을 위하여 국가행정기관의 설치·조직과 직무범위의 대강’을 정한 법률이다. 현행 정부조직법은 2011년 7월 25일 개정되어, 2011년 10월 26일 시행되고 있는 법률이다(법 제1조).

이에 행정 각 부의 직제규정을 분석·검토하여, 청소년 관련 업무를 분석하고자 한다.

중앙행정기관은 원칙적으로 부·처 및 청으로 되어 있다(제2조 2항). 현재 행정부는 15개이며, 정부조직법은 각 부 및 소속 처·청의 관장사무를 <표 Ⅲ-1>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제23조~제37조).

* 이 장의 1절은 박병식 교수(동국대학교 법학과), 2절과 3절은 윤철경 선임연구위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집필하였음.

1) 이 부분은 박병식 교수(동국대학교 법학과)이 집필하였음. 박병식 (2012), 법부처 청소년정책 추진현황 분석,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세미나 자료집(12-s27): 청소년정책 총괄조정 현황 및 관련정책 동향 분석, pp.31-73에 게재된 원고를 보완한 것임.

표 III-1 정부조직법 상 행정 각 부의 관장사무

No.	부	관장사무	청 및 관장사무	
1	기획재정부 (제23조)	중장기 국가발전전략수립, 경제·재정정책의 수립·총괄·조정, 예산·기금의 편성·집행·성과관리, 화폐·외환·국고·정부회계·내국세제·관세·국제금융, 공공기관 관리, 경제협력·국유재산·민간투자 및 국가채무에 관한 사무	국세청	내국세의 부과·감면 및 징수에 관한 사무
			관세청	관세의 부과·감면 및 징수와 수출입물품의 통관 및 밀수출입단속에 관한 사무
			조달청	정부가 행하는 물자(군수품을 제외)의 구매·공급 및 관리에 관한 사무와 정부의 주요시설공사계약에 관한 사무
			통계청	통계의 기준설정과 인구조사 및 각종 통계에 관한 사무
2	교육과학기술부 (제24조)	인적자원개발정책, 학교교육·평생교육, 학술에 관한 사무와 기초과학 정책·연구개발, 원자력 연구·개발·생산·이용, 과학기술인력양성 그 밖에 과학기술진흥에 관한 사무		
3	외교통상부 (제25조)	외교, 외국과의 통상교섭 및 통상교섭에 관한 총괄·조정, 국제관계 업무에 관한 조정, 조약 기타 국제협정, 재외국민의 보호·지원, 재외동포정책의 수립, 국제정세의 조사·분석에 관한 사무		
4	통일부 (제26조)	통일 및 남북대화·교류·협력에 관한 정책의 수립, 통일교육 기타 통일에 관한 사무		
5	법무부 (제27조)	검찰·행형·인권옹호·출입국관리 그 밖에 법무에 관한 사무	검찰청	검사에 관한 사무 (검찰청의 조직·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6	국방부 (제28조)	국방에 관련된 군정 및 군령과 그 밖에 군사에 관한 사무	병무청	징집·소집 그 밖에 병무행정에 관한 사무
			방위사업청	방위력 개선사업, 군수물자 조달 및 방위산업 육성에 관한 사무
7	행정안전부 (제29조)	국무회의의 서무, 법령 및 조약의 공포, 정부조직과 정원, 공무원의 인사·윤리·복무·연금, 상훈, 정부혁신, 행정능률, 전자정부 및 정보보호, 정부청사의 관리, 지방자치제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지원·재정·세제, 낙후지역 등 지원, 지방자치단체 간 분쟁조정, 선거, 국민투표, 안전관리정책 및 비상대비·민방위·재난관리 제도에 관한 사무	경찰청	치안에 관한 사무 (경찰청의 조직·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소방방재청	소방, 방재, 민방위 운영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무

No.	부	관장사무	청 및 관장사무	
8	문화체육관광부 (제30조)	문화·예술·영상·광고·출판·간행물·체육·관광에 관한 사무와 국정에 대한 홍보 및 정부발표에 관한 사무	문화재청	문화재에 관한 사무
9	농림수산물식품부 (제31조)	농산·수산·축산·식량·농지·수리, 식품산업진흥, 농어촌 개발 및 농수산물 유통에 관한 사무	농촌진흥청	농촌진흥에 관한 사무
			산림청	산림에 관한 사무
10	지식경제부 (제32조)	상업·무역·공업, 외국인 투자, 정보통신산업, 산업기술 연구개발정책, 에너지·지하자원, 우편·우편환 및 우편대체에 관한 사무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에 관한 사무
			특허청	특허·실용신안·디자인 및 상표에 관한 사무와 이에 대한 심사·심판사무
11	보건복지부 (제33조)	보건위생·방역·의정(醫政)·약정(藥政)·생활보호·자활지원·사회보장·아동(영·유아 보육을 포함한다)·노인 및 장애인에 관한 사무	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에 관한 사무
12	환경부 (제34조)	자연환경, 생활환경의 보전 및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사무	기상청	기상에 관한 사무
13	고용노동부 (제35조)	고용정책의 총괄,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훈련, 근로조건의 기준, 근로자의 복지후생, 노사관계의 조정, 산업안전보건, 산업재해보상보험과 그 밖에 고용과 노동에 관한 사무		
14	여성가족부 (제36조)	여성정책의 기획·종합, 여성의 권익증진 등 지위향상, 청소년 및 가족(다문화가족과 건강가정사업을 위한 아동업무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무		
15	국토해양부 (제37조)	국토종합계획의 수립·조정, 국토 및 수자원의 보전·이용 및 개발, 도시·도로 및 주택의 건설, 해안·하천·항만 및 간척, 육운·해운·철도 및 항공, 해양환경, 해양조사, 해양자원개발, 해양과학기술연구·개발 및 해양안전심판에 관한 사무	해양경찰청	해양에서의 경찰 및 오염방제에 관한 사무

〈표 Ⅲ-1〉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대상으로서의 아동·청소년 관련 업무를 직접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부는 여성가족부(청소년 및 다문화가족과 건강가정사업을 위한 아동업무)와 보건복지부(아동

(영·유아 보육 포함) 2개 부이며, 여기에 유아·학교청소년을 포함할 경우에 교육과학기술부(학교교육)를 포함하여 3개 부이다.

한편, 청소년 관련 업무를 직제에 전혀 규정하고 있지 않은 부처는 국방부, 환경부, 국토해양부, 그리고 국세청·관세청·조달청, 산림청, 기상청, 해양경찰청이 있다.

2) 행정 각 부의 청소년 관련 업무

(1) 기획재정부

표 III-2 기획재정부 관장사무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기획재정부령 제256호, 2012.1.31, 일부개정] 제13조(정책조정국) ⑥ 사회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2.1.31> 3. 장애인·여성·아동·노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시책의 협의·조정 제19조(복권위원회사무처) ④ 발행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8. 복권의 최종구매자와 청소년의 보호 및 사행성 억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국세청	해당사항 없음
관세청	해당사항 없음
조달청	해당사항 없음
통계청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기획재정부령 제258호, 2012.2.10, 일부개정] 제4조(사회통계국) ③ 사회통계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5. 고령자·여성 및 청소년통계의 작성 및 분석

기획재정부의 관장업무 중에는 정책조정국 사회정책과장이 아동 등 취약계층을 위한 시책의 협의·조정을 담당하도록 되어 있으며, 복권위원회사무처 발행관리과장이 청소년의 보호 및 사행성 억제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담당하도록 되어 있다(기획재정부직제시행규칙 제13조).

그리고 기획재정부의 외청인 통계청의 직제에도 사회통계국 사회통계기획과장의 업무로 청소년통계의 작성 및 분석이 포함되어 있다(통계청직제시행규칙 제4조).

(2) 교육과학기술부

표 III-3 교육과학기술부 관장사무

교육과학기술부	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23730호, 2012.4.17, 일부개정]
	제13조(학교지원국)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초·중등학교 교육 제도 개선 총괄 2. 자율형 공립·사립 고등학교, 자율학교의 제도 개선 및 운영 지원 3. 대안학교, 특성화중학교 및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제도 개선 및 운영 지원 7. 교과학습 방법 및 평가 개선 지원 7의2. 창의적 체험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8. 초·중등학교 통일교육 및 통일대비 교육정책의 수립 9. 학교 폭력(성폭력을 포함한다) 예방 종합 대책의 수립·추진
	제14조(교육복지국)
교육과학기술부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초·중등학교 학생복지정책의 총괄 및 관련 법령의 제정·개정 2. 교육소외 계층·지역에 대한 교육지원계획의 수립 5. 북한이탈·다문화가정 등의 학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 6. 학생 건강증진 및 학교보건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8. 학교급식 기본정책 및 영양관리에 관한 사항 9. 학교체육 활성화를 위한 시책의 수립 10. 학교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11. 학생 생활문화 선진화 정책 수립 및 학생 생활지도에 관한 사항 12. 학생안전통합시스템의 구축·운영 13. 학교부적응 예방 종합 대책의 수립·추진 15. 장애학생 의무교육에 관한 사항 16. 장애인의 고등교육·평생교육지원 및 장애학생 통합교육·장애이해교육계획의 수립·추진
	제15조(교육정보통계국)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4. 기초학력 미달학생 지원에 관한 사항
	제16조(연구개발정책실)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46. 영재교육진흥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추진 47. 초·중등 과학기술교육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시행 48. 수학·과학 교과별 교육과정의 기본정책 수립 49. 과학고등학교 및 과학중점학교 제도 개선 및 운영 지원
교육과학기술부	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직제 시행규칙
	[교육과학기술부령 제148호, 2012.5.30, 일부개정]
	제7조(인재정책실)
	⑥ 유아교육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3. 유치원 방과후 과정 운영 지원

4. 영유아 기본학습능력발달 교육지원 수립 · 추진
5. 국 · 공 · 사립유치원 설립 및 운영 지원
8. 유치원 급식 · 안전 관련 제도 개선
- ⑧ 창의인성교육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1.10.26>
 11. 문화 · 예술 · 스포츠 분야 등의 영재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
- ⑩ 영어교육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6. 초·중고 영어 교육과정 및 교과용도서에 관한 기본정책 수립 · 운영
 9. 방학 중 영어캠프, 화상강의 지원 등 영어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 수립 · 운영
- ⑬ 진로교육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진로교육 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 조정 및 관련 법령 · 제도 개선
 2. 초 · 중등학생 진로교육 촉진 및 지원
 3. 대상별 · 학교단계별 진로교육 매뉴얼 및 프로그램 개발 지원
 4. 창의적 체험활동 활성화 및 진로체험프로그램 확대 운영 지원
 6. 진로정보센터 및 진로상담사이트 운영 지원
 7. 진로교육 관련 전문기관과의 협력체제 구축
 8. 진로교육지표 체계화 및 진로교육 관련 통계에 관한 사항
 9. 직업교육에 관한 기본정책 수립 및 관련 법령 · 제도 개선
 10. 고등학교 단계 직업교육 촉진 및 일반 고등학교 직업과정 운영 · 지원
 11. 고등학교 직업교육 선진화 정책 총괄 및 시 · 도별 시행 지원
- ⑭ 직업교육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1.10.26>
 1. 특성화고 지원 정책의 수립 · 추진 및 관련 법령 제 · 개정
 2. 특성화고 장학금 지원 및 특성화고 해외인턴십에 관한 사항
 3. 특성화고 운영체제 개편 지원 및 제도 개선
 4. 거점 특성화고 육성 및 소규모 특성화고 등의 통폐합에 관한 사항
 5. 특성화고 취업기능강화사업 추진계획 수립 · 추진
 6. 특성화고 산업체 현장실습 계획 수립 · 추진
 10. 특성화고 직업기초능력 함양 및 연구학교 운영에 관한 사항
 11.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마이스터고) 육성 및 관련 법령 제 · 개정
 13.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졸업생 인증제에 관한 사항

제8조(학교지원국)

- ⑤ 학교폭력근절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학교폭력(성폭력을 포함한다) 예방 종합 대책의 수립 · 추진
 2. 학교폭력의 근절을 위한 조사 · 연구 · 교육 및 지도
 3. 피해학생에 대한 치료 · 재활 등의 지원
 4. 학교폭력 관련 행정기관 및 교육기관 상호 간의 협조 · 지원
 5. 학교폭력대책위원회의 구성 · 운영
 6. 학교폭력 대응 매뉴얼 개발 · 보급
 7. 학생안전강화학교 운영 지원
 8. 안전한 학교를 위한 학생 보호 대책의 수립 · 추진
 9. 창의적 체험활동 교육과정 운영
 10. 창의적 체험활동 지원 및 범부처 연계 체험활동에 관한 사항
 11. 창의체험자원지도(CRM) 개발 및 운영

제9조(교육복지국)

- ④ 교육복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초 · 중등학교 학생복지정책의 총괄
 4. 교육소외 계층 및 지역에 대한 교육지원계획의 수립

5. 교육복지 지원을 위한 정책의 전달체계 구축
7. 농어촌교육 지원 시책사업의 수립·추진
8. 학업을 중단한 학생 등에 대한 교육 지원
9. 초·중등학교 저소득층 학생에 대한 학비 지원
10. 고등학교 입학자격 및 졸업학력 검정고시제도에 관한 사항
11. 북한이탈·다문화가정 등의 학생교육 지원
12. 학생·학부모의 다문화 이해 제고를 위한 정책 수립·추진
13. 농어촌 전원학교 육성·지원
14. 농어촌 연중 돌봄학교 육성·지원
- ⑤ 학생건강안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학생 건강증진·학교보건 및 학교급식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2. 학생 건강검사 제도 개선 및 실태조사
 3. 학생비만 및 약물 오·남용 예방 대책
 4. 학교 전염병 및 학생 만성질환 예방
 5. 건강증진학교 운영
 6. 학생자살예방, 정신건강관리 등 학생정신건강서비스 지원
 7. 학교 성교육 및 학교 안전교육 기본정책의 수립·추진
 10. 학교급식의 영양관리 및 위생·안전관리
 11. 저소득층 및 농산어촌지역 학교급식비 지원
 12. 어린이 식품안전 보호구역 운영
 13. 학교 식중독 예방대책 수립 및 지원
 14. 학교급식 환경 개선 및 학교 내 환경위생 개선
 16. 학교 환경위생정화구역제도의 운영·개선
 24. 학생 건강체력평가제도에 관한 사항
 26. 학교 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제도에 관한 사항
 27.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운영
- ⑥ 학생자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학교문화 및 학생 생활문화 선진화 정책 수립
 2. 인성교육실천 우수학교 운영 지원
 3. 학생언어문화 개선사업 및 나라사랑 교육 추진
 4.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운영 지원
 6. 전문상담교사 관련 기본계획 수립·추진
 9. 학생 인권보호 및 권리신장에 관한 중장기 기본정책 수립·추진
 10. 학생 인권조례에 관한 사항
 14. 위기학생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추진
 17. 위기학생 장기위탁교육 지원 및 평가
 24. 초·중등 학생의 자치역량 강화 및 학생자치활동 활성화를 위한 기본정책 수립·시행
 25. 학생 간 상담 및 학생 간 중재 활동 지원
- ⑦ 특수교육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4. 장애영아교육 지원
 5.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의 장애학생 의무교육 지원
 10. 장애학생 학업성취도 평가
 12. 장애학생 진로 및 직업교육 지원

제11조(연구개발정책실)

- ⑭ 과기인재기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21. 청소년 대상 과학 문화 확산 및 이해 증진 활동 지원

교육과학기술부 직제규정은 영·유아와 초·중·고등학생과 관련된 교육, 진로, 체험, 건강, 안전, 급식, 학교폭력(성폭력) 등 여러 분야에 걸쳐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그 대상도 소외계층과 북한이탈 및 다문화가정, 학교부적응학생, 위기학생, 장애학생, 영재학생 등 다양하다.

교육과학기술부의 직제시행규칙은 연구개발정책실 과기인재기반과장의 업무로 ‘청소년 대상 과학 문화 확산 및 이해 증진 활동 지원’을 규정하여, 학생이 아니라 ‘청소년’이라는 단어를 유일하게 사용하고 있다.

(3) 외교통상부

표 III-4 외교통상부 관장사무

외교통상부	외교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외교통상부령 제126호, 2012.1.20. 일부개정] 제20조(문화외교국) ⑥ 문화교류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2. 청소년 국제교류협력 조정 및 지원

외교통상부 직제의 청소년 관련업무로는 문화외교국 문화교류협력과장의 업무로 ‘청소년 국제교류 협력의 조정 및 지원’이 포함되어 있다.

(4) 통일부

통일부 직제규정에는 정세분석국 경제사회분석과장의 업무로서 ‘북한 청소년 분야의 실태조사 및 분석·평가’가 포함되어 있으며, 교류협력국 사회문화교류과장의 업무로서 ‘청소년 분야의 교류협력 관련 정책의 수립·추진’이 포함되어 있다.

통일부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통일부령 제66호, 2012.2.17, 일부개정] 제7조(정세분석국) ⑤ 경제사회분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1. 북한의 보건·의료·영양·여성·청소년 분야의 실태조사 및 분석·평가 제8조(교류협력국) ⑤ 사회문화교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남북한 간 사회·교육·학술·언론·관광·방송·노동·문화·예술·출판·종교·체육·청소년·여성분야 등의 교류협력과 관련된 정책의 수립·추진

(5) 법무부

법무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23675호, 2012.3.26, 일부개정] 제11조(범죄예방정책국) ②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6. 범죄예방, 비행 청소년 선도·교화 및 법교육 관련 민간단체 등에 대한 활동 지원 및 업무 지도에 관한 사항 12. 청소년 비행 관련 원인·실태 분석, 정책연구개발 및 종합대책의 수립·시행 15. 보호소년등의 분류심사·상담조사 등 청소년 비행 진단·예방에 관한 사항 16. 일반학교 부적응학생 등의 특별교육 및 청소년 적성검사의 운영 등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에 관한 사항 21. 법교육 관련 교육과정·교육내용 연구 및 교재·프로그램의 개발·보급 제35조(소년원의 직무) ② 소년분류심사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의 업무를 수행하는 소년원은 법원소년부로부터 위탁한 소년을 수용·보호하고 이들의 분류심사, 인성교육, 상담조사 및 일반 중·고등학교 부적응 학생 등에 대한 특별교육, 청소년 적성검사실 운영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제39조의2(청소년 비행예방센터) ② 청소년 비행예방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1. 법원이 의뢰한 상담조사 3.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을 받은 자 중 학교부적응 학생 등에 대한 교육 4. 검사가 기소유예처분을 한 자 및 학교장 등이 의뢰한 소년에 대한 특별교육 5.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을 받은 자의 보호자에 대한 교육 6. 청소년에 대한 법 교육 7. 청소년비행 관련 자원봉사자 전문교육 및 연구·개발 등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법무부령 제768호, 2012.3.30, 일부개정] 제7조(범죄예방정책국)

	④ 법질서선진화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법 교육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법 교육 관계 법령의 입안 및 제도의 조사·연구 3. 법 교육 관련 학교교육과정·교육내용 연구 및 교재·프로그램 개발·보급 11. 비행청소년 선도·교화 관련 민간단체의 활동 지원 ⑤ 보호법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9. 청소년 비행 관련 원인·실태분석, 정책연구개발 및 종합대책의 수립·시행 ⑥ 소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소년보호행정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소년보호행정 관계 법령의 입안 및 제도에 관한 조사·연구 5. 소년법에 따른 보호소년·위탁소년(이하 이 항에서 "보호소년 등"이라 한다) 및 소년원·소년분류심사원 소속 공무원의 의류·급식에 관한 사항 6. 보호소년등의 보건위생·의료 및 약제에 관한 사항 7. 소년원의 초·중·고등학교 특성화교육과정 운영 및 학사관리·직업능력개발훈련에 관한 사항 8. 보호소년등의 생활지도·특별활동 및 교육행사에 관한 사항 9. 보호소년등의 분류심사·상담조사 등 청소년 비행진단·예방에 관한 사항 10. 일반학교 부적응 학생 등의 대안교육 및 청소년심리상담실의 운영 등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에 관한 사항 제21조의2(청소년비행예방센터) ⑤ 교육운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법원이 의뢰한 상담조사 2. 검사가 기소처분을 하기 전 의뢰한 처분전조사 3.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을 받은 자 중 학교부적응 학생 등에 대한 교육 4. 검사가 기소유예처분을 한 자 및 학교장 등이 의뢰한 소년에 대한 대안교육 5.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을 받은 자의 보호자에 대한 교육 6. 청소년에 대한 법 교육 7. 청소년비행 관련 자원봉사자 전문교육 등 ⑥ 연구개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청소년의 비행예방 및 비행청소년 건전육성을 위한 정책 및 프로그램 연구·개발 2. 소년보호행정 정책추진을 위한 조사·연구 ⑦ 분류보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분류보호과를 두지 아니하는 소년원에서는 교무과장이 이를 분장한다. 1. 보호소년등의 환경조사·심리검사·정신의학적 진단 기타 분류조사 2. 보호소년등의 분류·수용·처우심사·이송·퇴원 및 가퇴원 신청 3. 위탁소년의 입원·퇴원·분류심사·면회·서신 및 생활지도 7. 상담조사, 일반학교 부적응학생 등의 대안교육 및 청소년심리상담실 운영 9. 위탁소년의 입원·출원·감호 및 호송 10. 위탁소년의 심성순화·행동관찰 및 생활지도 11. 위탁소년의 면회·서신 기타 처우
검찰청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23715호, 2012.4.10. 일부개정] 제7조(대검찰청 형사부에 둘 과와 그 분장사무) ③ 형사2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소년·여성·성폭력·가정폭력·환경·보건사건에 대한 검찰사무의 지휘·감독에 관한 사항 6. 여성보호·청소년 선도 등 사회적 약자의 보호에 관한 사항

법무부의 청소년 관련 업무로는 범죄예방정책국의 청소년 선도·교화 및 법교육, 청소년비행 관련 원인·실태 분석, 정책연구개발 및 종합대책의 수립·시행, 청소년 적성검사실의 운영 등 청소년의 건전 육성 업무가 있으며, 비행청소년예방센터의 업무로는 청소년에 대한 법 교육, 청소년비행 관련 자원봉사자 전문교육 및 연구·개발 등이 규정되어 있다.

한편, 검찰청의 청소년 관련 업무로는 대검찰청 형사부 형사2과장의 ‘소년사건에 대한 검찰사무의 지휘·감독’과 ‘청소년 선도’ 등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다.

(6) 국방부

표 III-7 국방부 관장사무

국방부	해당사항 없음

국방부의 직제규정에는 청소년 관련업무가 전혀 규정되어 있지 않다.

(7)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의 직제규정에는 청소년이 아니라 ‘어린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어린이 보호구역, 등하교길 안전, 어린이 놀이시설 등 ‘안전’과 관련된 업무를 규정하고 있다.

한편, 경찰청의 직제규정에는 생활안전국의 업무로 소년비행방지에 관한 업무, 소년범죄의 수사지도, 소년에 대한 범죄의 예방에 관한 업무, 실종아동(「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실종아동 등을 말한다)등과 관련된 업무의 총괄, 아동학대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업무, 성폭력·성매매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업무, 실종아동 찾기에 관한 업무를 규정하고 있다. 이 업무는 여성청소년과장(여성청소년계장)이 담당하지만, 지방경찰청에 따라서는 생활질서과장이 담당하기도 한다.

또한, 소방방재청의 청소년 관련 업무에는 소방정책국의 어린이·청소년 대상 소방안전 교육·훈련·홍보 프로그램의 개발·운영이 있다.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제291호, 2012.4.6, 일부개정] 제15조(재난안전실) ⑦ 안전개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7.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개선사업의 추진 8. 어린이 보호구역, 도시공원 및 놀이터 등 우범지역에 대한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10. 등하교길 안전을 위한 보행안전 지도사업의 실시 11. 어린이 안전을 위한 홍보 및 행사에 관한 사항 22.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법령·제도의 정비 및 관리 강화
경찰청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23544호, 2012.1.25, 일부개정] 제11조(생활안전국) ②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6. 풍속·성매매 사범에 관한 지도 및 단속 10. 소년비행방지에 관한 업무 11. 소년범죄의 수사지도 12. 여성·소년에 대한 범죄의 예방에 관한 업무 13. 가출인 및 실종아동등(「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실종아동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관련된 업무의 총괄 13의2.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업무 14. 성폭력·성매매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업무 15. 실종아동 등 찾기에 관한 업무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제275호, 2012.1.25, 일부개정] 제8조(생활안전국에 두는 과) ⑤ 여성청소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2. 여성·소년에 대한 범죄의 예방에 관한 업무 3. 가출인 및 실종아동등(「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실종아동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 관련 업무 총괄 3의2. 가정폭력·아동학대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업무 4. 성폭력·성매매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업무 7. 청소년비행방지에 관한 업무 8. 청소년범죄의 수사지도 및 비행소년의 보호지도
소방방재청	소방방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제250호, 2011.10.25, 일부개정] 제7조(소방정책국) ⑧ 119생활안전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8. 한국119소년단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9. 영유아·어린이·청소년에 대한 소방안전 관련 교육·훈련·홍보 프로그램의 개발·운영

(8)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 직제규정에는 청소년 체육활동, 어린이박물관,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에 관한 업무가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음악·비디오물·게임물 등 청소년 유해매체물에 관하여는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다.

한편, 문화재청 직제는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의 체험 프로그램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표 III-9 문화체육관광부 관장사무

문화체육 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23810호, 2012.5.23, 일부개정] 제17조(체육국) ②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5. 청소년 및 학생의 체육활동 육성·지원 제34조(교육문화교류단) ② 교육문화교류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1. 이동박물관 및 어린이박물관의 기획·운영 제47조(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① 어린이 및 청소년에 특화된 도서관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중앙도서관장 소속하에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이하 "어린이청소년도서관"이라 한다)을 둔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117호, 2012.5.23, 일부개정] 제9조(문화콘텐츠산업실) ⑤ 게임콘텐츠산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1. 게임 이용자의 권익 보호 및 게임물 분쟁조정에 관한 사항 15. 게임물등급위원회와 관련된 업무 제13조(체육국) ③ 체육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2. 청소년 체육활동 및 학생선수 육성·지원 제30조(자료관리부) ③ 자료수집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0.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등에 대한 자료 운영 지원 및 관리 제31조(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④ 기획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어린이청소년도서관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시행 2. 어린이청소년도서관의 조사 및 연구 3. 국내외 어린이청소년도서관간의 교류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 아동사서 육성을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5. 어린이청소년 독서진흥에 관한 사항 7. 어린이청소년 관련 서지의 발간 및 보급 8. 국내 어린이청소년도서관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⑤ 정보서비스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어린이청소년도서관 운영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2. 어린이청소년 관련 각종 정보원의 개발 및 연구 4. 어린이청소년도서관 개인문고의 설치 및 운영 7. 어린이청소년 분야 장서확충계획의 수립 및 시행 7의2.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에서 구입한 국내외 도서관자료의 등록·분류·목록 등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어린이청소년도서관의 정보화에 관한 사항
문화재청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88호, 2011.7.4, 일부개정] 제14조(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⑥ 전시홍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6. 어린이체험관 등 체험프로그램 개발·운영

(9) 농림수산물식품부

표 III-10 농림수산물식품부 관장사무

농림수산물식품부	농림수산물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농림수산물식품부령 제265호, 2012.3.26, 일부개정] 제8조(농어촌정책국) ⑥ 농어촌사회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3. 농어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 등에 관한 사항 8. 농어촌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사항 12. 농어촌 학생 장학사업에 관한 사항
농촌진흥청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23813호, 2012.5.23, 일부개정] 제11조(농촌지원국) ②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5. 농촌청소년 및 농업전문인력 육성계획수립 및 활동 지원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농림수산물식품부령 제279호, 2012.6.1, 일부개정] 제8조(농촌지원국) ⑦ 역량개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3. 농촌청소년·농업전문인력 육성계획 수립 및 활동 지원
산림청	해당사항 없음

농림수산물식품부의 청소년 관련 업무에는 농어업인 자녀의 학자금 지원, 농어촌 다문화가족 지원, 농어촌 학생 장학사업이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농촌진흥청의 직제 규정에는 농촌청소년 육성에 관한 업무가 들어있다. 산림청의 직제규정에

는 청소년 관련 업무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10) 지식경제부

표 III-11 지식경제부 관장사무

지식경제부	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23763호, 2012.5.1, 일부개정] 제20조(제품안전정책국)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3. 어린이·고령자 등 안전취약계층의 제품안전에 관한 대책의 수립·추진 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지식경제부령 제249호, 2012.5.1, 일부개정] 제15조(제품안전정책국) ⑥ 생활제품안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2. 어린이·고령자·장애인용 제품의 안전관리대책의 수립·추진 4. 안전인증대상공산품,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 안전·품질표시대상공산품 및 어린이보호포장대상공산품의 지정에 관한 사항 12. 아동정책조정위원회 등 공산품 안전 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업무협조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지식경제부령 제251호, 2012.5.23, 일부개정] 제9조(벤처창업국) ⑤ 창업진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4. 청소년 및 대학생 등 청년창업 활성화에 관한 사항 ③ 창업성장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9. 지역 청소년 등의 기업가정신 함양 및 창업분위기 고양에 관한 사항 13. 지역 청소년·대학생 및 창업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창업 등 교육에 관한 사항
특허청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23209호, 2011.10.10, 타법개정] 제25조(국제지식재산연수원의 직무)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이하 "연수원"이라 한다)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7. 초·중·고·대학·대학원 등 각급학교의 교수, 교사 및 학생에 대한 교육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지식경제부령 제199호, 2011.8.31, 일부개정] 제18조(국제지식재산연수원) ⑤ 창의발명교육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학생발명 교육과정 운영계획의 수립 및 운영 5. 학생발명교육진흥을 위한 시책의 수립·시행 6. 학생발명교육사업에 대한 한국발명진흥회 등 유관단체와 협력에 관한 사항 7. 창의력이 뛰어난 발명영재의 발굴·육성을 위한 시책의 수립·시행

지식경제부의 청소년 관련 업무에는 어린이 대상 제품안전 대책, 어린이 보호 포장대상 공산품의 지정에 관하여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중소기업청의 직제 규정에는 청소년 및 대학생의 창업에 관한 업무가 포함되어 있다. 특허청의 직제 규정에는 학생발명교육사업과 발명영재의 발굴·육성 업무가 포함되어 있다.

(11) 보건복지부

표 Ⅲ-12 보건복지부 관장사무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23764호, 2012.5.1, 일부개정] 제3조(직무) 보건복지부는 보건위생·방역·의정·약정·기초생활보장·자활지원 및 사회보장, 인구·출산·보육·아동·노인 및 장애인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제15조(장애인정책국)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9. 의료재활 및 장애아동 재활치료 지원에 관한 사항 제16조(저출산고령사회정책실)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9. 아동복지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조정 및 아동정책조정위원회 운영 10. 빈곤아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 아동발달계좌(CDA), 결식아동 지원 등 빈곤아동 지원에 관한 사항 11. 아동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12. 아동권리증진, 아동학대 예방·보호 및 아동권리 관련 국제협약에 관한 사항 13. 아동의 안전 및 실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14. 입양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시행 및 국제협약, 아동의 입양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한 사항 15. 아동양육시설, 지역아동센터, 그룹홈 등 아동복지시설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16. 아동의 가정위탁, 소년소녀가정 등 가정보호에 관한 사항 17. 어린이날, 어린이 주간, 아동 총회 등 아동행사에 관한 사항 18. 아동 관련 법인 및 단체에 관한 사항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122호, 2012.5.1, 일부개정] 제7조(기획조정실) ⑦ 보건복지콜센터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3. 위기가정, 아동학대, 노인학대, 자살, 응급의료 등 긴급지원 관련 상담 및 담당 기관의 연계 제8조(보건의료정책실) ⑥ 식품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3.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및 어린이 기호식품의 안전·영양 정책에 관한 사항 ⑭ 공공의료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6. 신생아 중환자실·어린이병원·노인보건의료센터·전문질환센터의 건립 지원 및 기능 강화에 관한 사항 제12조(장애인정책국) ⑤ 장애인자립기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5.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 운영에 관한 사항
 16. 장애아동 특별보호연금에 관한 사항
 - ⑥ 장애인서비스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8. 장애아동 및 장애인가족 지원에 관한 사항
 10. 장애아동 돌봄 및 발달재활서비스에 관한 사항
- 제13조(저출산고령사회정책실)
- ④ 출산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9. 여성·어린이 건강정책 종합 및 조정
 - ⑤ 아동복지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아동복지에 관한 정책 총괄 및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2. 아동복지법령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3. 아동정책조정위원회에 관한 사항
 4. 아동복지서비스 조사·연구·홍보 및 통계에 관한 사항
 5. 아동복지관련 업무의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협의·조정
 6. 빈곤아동종합대책의 수립 및 조정
 7. 가정위탁, 소년소녀가장에 관한 사항
 8. 아동복지시설, 그룹홈 등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9. 입양특례법령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10. 국내외 입양 제도개선 및 활성화 종합대책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 10의2. 국내외 입양 실태조사·연구·홍보 및 통계에 관한 사항
 - 10의3.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에 관한 사항
 11. 아동발달지원계좌에 관한 사항
 12. 아동관련 법인 및 단체에 관한 사항
 14. 아동여성보호 종합대책 등 추진에 관한 사항
 - ⑥ 아동권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아동권리증진 및 인권보호에 관한 사항
 2. 아동권리 관련 국제협약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3.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사항
 4. 아동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5. 결식아동 급식에 관한 사항
 6. 실종아동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
 7.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령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8. 아동에 대한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
 9. 지역아동센터, 방과 후 돌봄서비스에 관한 사항
 10. 아동복지교사 파견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1. 어린이날, 어린이 주간 등 아동행사에 관한 사항
 12. 아동안전지킴이 등 아동안전에 관한 사항
 - ⑬ 보육기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공립어린이집 등 어린이집의 확충 및 지원계획 수립
 2.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의 설치·인가 기준의 수립 및 관리
 3. 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 지원
 4. 어린이집의 기능 보강 등 환경개선 지원
 5. 국공립어린이집 등 어린이집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
 6. 어린이집에 대한 지도·점검
 7. 어린이집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8. 보육아동의 건강·영양·안전 등의 관리
 12. 부모협동어린이집의 활성화

제17조(소아청소년진료소)

	① 국립서울병원에 소아청소년진료소를 둔다. 제25조(질병예방센터) ⑥ 건강영양조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2. 청소년 건강영양조사 기획 및 시행 3. 소아청소년 성장발달조사 및 성장도표 제정 및 보급에 관한 사항
식품의약품 안전청	식품의약품안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23449호, 2011.12.30, 일부개정] 제19조(식품안전국)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38.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39.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및 우수판매업소 지정제도의 운영 및 관리 42. 어린이 기호식품의 품질인증 기준의 제정·개정 등 관리 및 어린이 건강친화기업 지정제도의 운영 43.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업소·판매업소 관리제도의 운영 및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 관리원의 지정, 교육 총괄 44. 단체급식 영양 관리 및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의 설치·운영 식품의약품안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102호, 2012.2.3, 일부개정] 제6조(식품안전국) ⑧ 영양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7. 어린이 기호식품 등의 영양성분 표시제도 정책 수립 및 운영 18. 어린이 기호식품 등의 영양성분 표시기준 및 방법에 관한 규정의 제정·개정 및 운영 ⑨ 식생활안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관련 법령 및 고시의 제정·개정 및 제도개선 3.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관련 법령 및 고시의 제정·개정 및 제도개선 총괄·조정 3.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및 우수판매업소 지정제도 운영 및 관리 6. 어린이 기호식품 및 건강친화기업 지정제도 운영 7. 어린이 기호식품의 품질인증기준 제정·개정 및 제도 운영 8.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관리제도 운영 9.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 지정 및 교육 12.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 제18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⑤ 식품안전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2.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⑧ 영양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7. 어린이 기호식품 등의 영양성분 표시제도 정책 수립 및 운영 18. 어린이 기호식품 등의 영양성분 표시기준 및 방법에 관한 규정의 제정·개정 및 운영 ⑨ 식생활안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관련 법령 및 고시의 제정·개정 및 제도개선 총괄·조정 3.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및 우수판매업소 지정제도 운영 및 관리 6. 어린이 기호식품 및 건강친화기업 지정제도 운영 7. 어린이 기호식품의 품질인증기준 제정·개정 및 제도 운영 8.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관리제도 운영 9.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 지정 및 교육 12.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

보건복지부의 업무는 기본적으로 ‘아동’과 관련된 업무를 망라하고 있다고 해도 좋다. 여기에서 말하는 아동에는 장애아동, 빈곤아동, 소년소녀가장, 결식아동이 모두 포함된다. 아동 대상 업무에는 아동복지, 재활치료, 아동발달, 건강관리, 권리증진, 아동안전·실종, 가정위탁, 입양, 아동행사, 아동학대, 식품안전, 방과후 돌봄 등 영역이 대단히 광범위하다.

보건복지부의 업무에는 어린이날, 어린이 기호식품, 어린이병원, 어린이집 등 ‘어린이’ 관련업무도 포함되어 있으며, 질병치료 영역에는 소아청소년진료소와 소아청소년 성장발달조사 업무처럼 ‘청소년’ 업무도 포함되어 있다.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직제 규정에는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어린이 기호식품, 어린이 급식관리 업무가 포함되어 있다.

(12) 환경부

표 Ⅲ-13 환경부 관장사무

환경부	해당사항 없음 (환경교육에 관한 조문은 있으나, 청소년·어린이·아동에 특화된 업무 분장은 없음)
기상청	해당사항 없음

환경부 직제규정에는 아동·청소년에 특화된 업무가 분장되어 있지 않다.

유치원, 초중등학교 및 대학교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학교환경교육을 위해 독립적으로 환경교육진흥법을 제정하고 있는 데 비해, 환경부가 청소년·어린이·아동에 특화된 환경교육에 관한 업무를 분장하고 있지 않은 점은 의외라고 할 수 있다.

(13)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의 청소년 관련업무로는 청소년의 직업진로지도, 전문계 고교의 취업 지원, 청소년의 직업 진로지도, 직장체험 프로그램 등이 있다.

표 Ⅲ-14

고용노동부 관장사무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23209호, 2011.10.10, 타법개정] 제10조(고용정책실)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4. 청소년의 직업진로지도, 대학 및 전문계 고교의 취업 지원 등 청년고용 관련 정책의 총괄·조정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고용노동부령 제45호, 2012.1.19, 일부개정] 제6조(고용정책실) ⑩ 청년고용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4. 청소년의 건전한 직업관 형성을 위한 직업진로지도 등의 개발·확산 및 홍보·교육 7. 대학 및 전문계고교의 취업·직업진로지도 활성화 지원 8. 청소년 직장체험 프로그램 등 청소년 취업지원제도의 운영·관리

(14) 여성가족부

표 Ⅲ-15

여성가족부 관장사무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 직제 [대통령령 제23209호, 2011.10.10, 타법개정] 제2조(직무) 여성가족부는 여성정책의 기획·종합, 여성의 권익증진 등 지위향상, 가족과 다문화가족정책의 수립·조정·지원, 건강가정사업을 위한 아동업무 및 청소년의 육성·복지·보호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제9조(청소년가족정책실)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청소년정책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청소년정책의 협의·조정 2. 청소년의 달 등 청소년과 관련된 각종 행사 및 포상에 관한 사항 3. 청소년지도사·청소년상담사 등 청소년지도자에 대한 자격검정·연수 및 양성에 관한 사항 4. 청소년단체 및 법인에 대한 지도·감독과 지원 5. 청소년에 대한 우대·권리증진 및 인권보호에 관한 사항 6. 청소년 정책참여 활성화 및 참여기구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7. 청소년 관련 시설의 설치·지원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8. 청소년의 수련활동 및 문화·예술체험활동 등 청소년 활동진흥에 관한 사항 9. 학교교육·평생교육 등과 연계한 청소년의 역량개발 및 향상에 관한 사항 10. 청소년의 국제교류 및 국제적 역량 강화 지원에 관한 사항 11. 교포청소년 및 남·북 청소년 교류활동 지원 12. 청소년복지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조정 및 지원 13. 가출 등 위기청소년을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 등 보호·지원 14. 폭력·학대·비행 등과 관련된 청소년에 대한 예방, 상담, 치료 및 법률적 지원 등에 관한 사항

15. 특별지원청소년의 지원 등 청소년의 자립·자활 지원에 관한 사항
16. 청소년의 사회진출 및 취업·창업 지원에 관한 사항
17. 청소년보호에 관한 계획의 수립·시행
18. 청소년보호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19. 매체물·업소·약물·물건 등의 청소년 유해성 심의·결정 등에 대한 사항
20. 청소년 유해환경에 대한 점검, 단속, 규제 및 개선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21. 인터넷 중독 등 매체의 역기능 피해의 예방·치료 및 재활 지원
35. 다문화가족의 자녀 양육 지원에 관한 사항

제10조(권익증진국)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여성·청소년 등의 폭력 피해 예방 및 피해자 보호사업의 총괄·조정
2. 여성·청소년 등 폭력피해자 보호 관련 전달체계의 구축·운영 및 평가
4. 여성·청소년 등 폭력피해자 구제에 관한 사항
5. 성폭력·가정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계획의 수립·시행
6. 성폭력·가정폭력 가해자 교정 및 피해자의 치료·자립 등의 지원
7.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상담소의 지원·육성
8. 여성·아동청소년 성폭력 통합지원센터 및 중앙지원단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9.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계획의 수립·시행
1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 및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재범방지를 위한 대책의 수립·시행
13.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등록·공개·열람 및 고지제도의 운영
- 13의2.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의 운영 및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14. 성범죄 가해·피해 아동청소년 치료 및 재활 지원에 관한 사항
15.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및 성희롱(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포함한다) 예방을 위한 교육 및 대국민 홍보에 관한 사항

여성가족부 직제 시행규칙

[여성가족부령 제17호, 2011.7.22, 일부개정]

제2조(대변인)

③ 홍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대변인을 보좌한다.

1. 여성·가족·청소년 관련 주요정책에 관한 홍보계획의 수립·조정

제5조(기획조정실)

③ 기획재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1. 여성·가족·청소년 관련 주요 정책에 대한 계획의 수립·조정 및 총괄
2. 여성·가족·청소년 관련 정책의 중장기 비전 및 전략 개발

⑤ 법무감사정보화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12. 여성·가족·청소년 관련 정보화 계획의 수립 및 평가
17. 여성·가족·청소년 정책 관련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⑥ 국제협력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1. 여성·가족·청소년 관련 국제협력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국제교류 업무의 총괄
2. 여성·가족·청소년 분야의 국제협력 사업
3. 여성·가족·청소년 분야의 국제기구·국제회의 및 외국 정부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4. 여성·가족·청소년 정책 관련 국제협약의 이행 평가
9. 여성·가족·청소년 관련 해외 자료의 수집·보급

제7조(청소년가족정책실)

③ 청소년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청소년정책에 관한 중장기 기본계획의 수립 및 조정
2.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청소년정책의 협의·조정 총괄
3. 청소년정책 관련 법령의 관리·운영

4. 청소년정책관계기관협의회의 운영
5. 청소년정책 전담 기구·공무원 등 전달체계에 관한 사항
6. 관계 기관 청소년정책의 평가 및 지원에 관한 사항
7. 청소년의 달 등 청소년 관련 행사 및 포상에 관한 사항
8. 청소년 정책 관련 조사·연구 및 제도개선
9. 청소년 관련 통계의 유지 및 백서 등의 발간
10. 청소년 관련 산하기관 및 법인 관리 총괄
11. 청소년 관련 기관·단체 종사자의 교육·훈련
12. 청소년지도자 자질향상에 관한 사항
13. 청소년 인권 보호 등 청소년 권리증진에 관한 사항
14. 청소년 특별회의 및 참여위원회 등 청소년 정책참여기구 구성·운영 지원
15. 청소년 정책참여 활성화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16. 청소년 우대정책의 수립 및 교육·홍보
17. 청소년증의 발급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④ 청소년활동진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청소년 활동진흥, 역량개발 및 국제교류에 관한 계획의 수립·시행
 2.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및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의 설치·운영 지원
 3. 청소년수련 프로그램·사업의 개발·보급 및 평가
 4. 청소년수련활동 인증제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5. 청소년의 수련활동 및 문화·예술체험 활성화에 관한 사항
 6. 청소년 축제 및 동아리 발굴·지원에 관한 사항
 7. 청소년 활동정보 제공·지원
 8. 청소년 자원봉사 활동에 관한 사항
 9. 청소년지도사의 자격검정·연수 및 활동 지원
 10. 청소년수련지구의 지정·관리 및 조성에 관한 사항
 11. 청소년수련시설의 건립·운영 및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
 12. 국립청소년수련시설의 국유재산·물품의 취득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3. 학교교육·평생교육과 연계한 청소년 능력개발프로그램의 개발 및 시행
 14.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청소년공부방 등 방과 후 활동프로그램의 개발·지원
 15. 청소년의 국제교류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지원
 16. 청소년 관련 국제행사 개최 및 국제교류에 관한 사항
 17. 교포청소년 및 남북 청소년 교류활동 지원
 18. 청소년교류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19. 세계청소년축제 및 국제청소년 야영대회 개최에 관한 사항
 20. 소외계층 청소년의 해외연수 지원에 관한 사항
 21. 지방자치단체 및 청소년단체의 국제교류활동 협력·지원에 관한 사항
- ⑥ 청소년자립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청소년복지에 관한 정책의 총괄 및 계획의 수립·시행
 2. 청소년복지 관련 법령의 관리·운영
 3. 청소년복지서비스의 조사·연구 및 통계에 관한 사항
 4. 청소년복지시설의 운영·지원 및 청소년복지·지원업무 종사자의 교육·훈련
 5. 한국청소년상담원의 지도·감독
 6. 청소년상담사의 자격검정·연수 등에 관한 사항
 7. 청소년치료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8. 취약계층 청소년의 보호·상담·자립 등에 대한
 8. 취약계층 청소년의 보호·상담·자립 등에 대한 계획의 수립·조정 및 시행
 9. 가출·비취학·학업중단 등 청소년에 대한 보호 및 자립 지원에 관한 사항
 10. 북한이탈청소년 및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지원에 관한 사항

11. 청소년 비행·폭력 등의 예방 및 선도에 관한 사항
 12. 폭력, 학대 등에 노출된 청소년의 상담, 치료 및 법률 서비스 지원
 13. 위기 청소년을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종합대책의 수립·조정
 14. 청소년상담센터 등 청소년상담·구조 관련 기관·단체에 대한 지도·지원
 15. 청소년 전화·청소년 모바일 상담 및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의 운영
 16.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에 대한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17. 청소년의 사회진출 및 취업·창업 지원에 관한 사항
 - ⑦ 청소년보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청소년 보호 관련 업무의 총괄 및 계획의 수립·시행
 2. 청소년 보호 관련 법령의 관리·운영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3.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4. 청소년 보호 관계자 교육 등 청소년 보호 중앙점검단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5. 청소년 보호에 관한 관계 부처간 조정·실태조사 및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6. 청소년 보호와 관련된 기관·단체 협력 등에 관한 사항
 7. 청소년 보호 관련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제7조제8항제11호에 따른 교육 및 홍보는 제외한다)
 8. 청소년 유해업소, 유해 약물·물건, 유해행위 등 유해환경 개선에 관한 계획의 수립·시행
 10. 업소·약물·물건 등의 청소년 유해성 여부의 심의·결정 등에 관한 사항
 15. 청소년 유해 약물 남용 및 중독 청소년에 대한 예방·치료·재활 지원
 16. 청소년 유해약물·유해업소 등의 피해예방 및 보호 지원
 17.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의 운영 및 유해환경 개선 관련 시민단체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
 - ⑧ 청소년매체환경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청소년 유해매체환경 개선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2. 청소년 유해매체물에 대한 조사·연구 및 법·제도 개선 등에 관한 사항
 3. 매체물의 청소년 유해성 여부의 심의·결정 및 고시에 관한 사항
 4. 청소년 유해매체물에 대한 표시·포장·전시·진열 및 판매금지 등에 관한 사항
 5. 청소년 유해매체물에 대한 감시·단속 등의 대책 수립 및 시행
 6. 청소년 유해 외국매체물의 국내 유통 차단에 관한 사항
 7. 매체물에 대한 청소년 유해성 모니터링에 관한 사항
 8. 청소년 유해매체물 심의기관과의 업무협조에 관한 사항
 9. 청소년 유해매체환경 개선과 관련된 기관·단체 협력 등에 관한 사항
 10. 청소년 유해매체물의 자율규제 및 개선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11. 청소년 유해매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12. 청소년의 건전한 매체 활용능력증진 및 건전한 매체 문화 조성 등에 관한 사항
 13. 청소년 인터넷 중독 등 매체물 역기능 피해의 예방·치료 및 재활 지원 등에 관한 사항
 14. 청소년 유익매체물 제작·보급 등 지원에 관한 사항
 - ⑩ 가족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5. 청소년 한부모의 자립 지원에 관한 사항
 8. 한부모가족 아동양육 및 교육의 지원
- 제8조(권익증진국)
- ③ 권익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여성·청소년 등의 폭력피해 예방 및 피해자 보호사업의 총괄·조정
 2. 여성·청소년 등 폭력피해자 보호 관련 전달체계의 구축·운영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 여성·청소년 등의 폭력피해 예방을 위한 대국민 홍보에 관한 사항
 5. 여성·청소년 등의 폭력피해 예방을 위한 성인지 인권교육에 관한 사항
 6. 성폭력추방주간 운영 및 권익증진관련 유공자 포상에 관한 사항
 7. 여성·청소년 등 폭력피해자 보호 관련 실태조사 및 시설평가에 관한 사항
 - ④ 권익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계획의 수립·시행 2. 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관련 법령의 관리 및 제도개선 3. 여성·아동 성폭력 피해자 지원을 위한 통합지원센터 및 중앙지원단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⑤ 아동청소년성보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를 위한 시책의 수립·시행 2. 아동·청소년 성보호 관련 법령의 관리·운영 3. 아동·청소년 성보호 관련 실태에 관한 조사·연구 4.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신상정보의 등록·열람 및 공개에 관한 사항 4의2.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신상정보의 우편고지명령 집행에 관한 사항 4의3.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 운영 및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자 교육에 관한 사항 5.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재범방지대책의 수립·시행 6. 성범죄 가해·피해 아동·청소년의 치료·재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7. 아동·청소년 성보호 전문지도자의 양성·보급에 관한 사항 8. 청소년성문화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9. 아동·청소년의 성문화 개선 및 성보호의식 확산을 위한 대국민 교육에 관한 사항

여성가족부의 직제 규정에는 청소년의 육성·복지·보호에 관한 사무가 포함되어 있다. 청소년의 인권보호, 청소년 우대정책, 청소년 정책참여, 청소년 수련활동, 청소년 역량개발, 청소년 국제교류, 남북 청소년 교류, 청소년 창업·취업, 매체물·업소·약물·물건의 유해성 심의, 청소년 유해환경의 단속·규제, 인터넷 중독의 예방과 치료, 다문화가정 자녀양육,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 가해자 치료 및 피해자 보호, 가출위기 청소년 사회안전망 구축, 청소년 복지, 청소년 상담사·지도자에 관한 업무가 포함되어 있다.

(15) 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의 청소년 관련 업무에는 한국해양청소년연맹의 육성·지원과 어린이 등 교통약자의 권익신장 업무가 있다.

이에 비해 해양경찰청의 직제 규정에는 청소년 관련업무가 전무하다.

표 Ⅲ-16 국토해양부 관장사무

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23718호, 2012.4.10. 타법개정] 제25조(지방해양항만청) ⑦ 해양환경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9. 한국해양청소년연맹의 육성·지원 ⑩ 제주해양관리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0. 한국해양청소년연맹의 육성·지원 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국토해양부령 제456호, 2012.4.13. 타법개정] 제9조(교통정책실) ⑧ 교통안전복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2. 교통안전체험연구교육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업무 17. 장애인·고령자·어린이 등 교통약자의 권익신장에 관한 정책의 개발·추진
해양경찰청	해당사항 없음

(16) 기타 행정기관의 청소년 관련업무

표 III-17 방송통신위원회 관장사무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23824호, 2012.6.1. 일부개정] 제10조(방송통신융합정책실) ⑪ 방송진흥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1. 방송프로그램의 어린이·청소년 등 소외계층 보호정책의 수립 및 시행 ⑤ 통신이용제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5. 통신서비스 이용관련 청소년 보호에 관한 사항 제13조의2(네트워크정책국) ④ 개인정보보호윤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방송통신망에서 개인정보보호와 불법유해정보 유통방지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및 관련 법령의 제·개정 21. 방송통신망 상에서 청소년 보호

한편, 정부조직법은 행정기관으로서 “소관사무의 일부를 독립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위원회 등 합의제행정기관을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제5조). 이에 청소년 업무와 밀접하게 관련되고 있는 방송통신위원회의 관장업무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3) 정부조직법 및 직제규정 상의 문제점

표 3-18 정부조직법 및 직제규정 상 청소년업무 규정여부 및 업무내용

	부처명	정책대 상 규정	직제규 정	청소년 업무 내용
1	기획재정부		○	· 아동 등 취약계층을 위한 시책 협의·조정
	통계청		○	· 청소년통계작성 및 분석
2	교육과학기술부	○	○	· 영·유아와 초·중·고등학생과 관련된 교육, 진로, 체험, 건강, 안전, 급식, 학교폭력(성폭력), · 소외계층, 탈북·다문화, 학교부적응, 위기, 장애, 영재학생 등 지원 대상 규정
3	외교통상부		○	· 청소년국제교류협력의 조정 및 지원
4	통일부		○	· 청소년분야의 교류협력관련 정책 수립·추진
5	법무부		○	· 비행청소년 선도·교화, 법 교육, 청소년비행 관련 원인·실태 분석, 청소년비행예방 및 건전육성을 위한 정책, 일반 학교 부적응 학생의 건전육성 등
	검찰청		○	· 청소년 선도 등 보호
6	국방부			
7	행정안전부		○	· 어린이 보호구역, 등하교길 안전, 어린이 놀이시설 등 ‘안전’ 업무
	경찰청		○	· 소년비행방지에 관한 업무, 소년범죄의 수사지도, 소년에 대한 범죄의 예방에 관한 업무, 실종아동 등 관련된 업무의 총괄, 아동학대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업무, 성폭력·성매매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업무 등,
	소방재청		○	· 어린이·청소년 대상 소방안전 교육·훈련·홍보 프로그램의 개발·운영
8	문화체육 관광부		○	· 청소년 체육활동, 어린이박물관,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에 관한 업무
	문화재청		○	· 어린이 체험관 등 체험프로그램 개발·운영
9	농림수산 식품부		○	· 농어업인 자녀의 학자금 지원, 농어촌 다문화가족 지원, 농어촌 학생 장학사업
	농촌진흥청		○	· 농촌청소년 육성에 관한 업무
10	지식경제부		○	· 어린이 대상 제품안전 대책, 어린이 보호 포장대상 공산품의 지정,
	중소기업청		○	· 청소년 및 대학생의 창업에 관한 업무,
	특허청		○	· 학생발명교육사업과 발명영재의 발굴·육성 업무
11	보건복지부	○	○	· 장애아동, 빈곤아동, 소년소녀가장, 결식아동이 모두 포함된다. 아동 대상 업무에는 아동복지, 재활치료, 아동발달, 건강관리, 권리증진, 아동안전·실종, 가정위탁, 입양, 아동행사, 아동학대, 식품안전, 방과후

				돌봄 등 · 어린이날, 어린이 기호식품, 어린이병원, 어린이집 등 ‘어린이’ 관련업무, 소아청소년진료소와 소아청소년 성장발달조사 업무
	식품의약품안전청		○	·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어린이 기호식품, 어린이 급식관리 업무
12	환경부			
13	고용노동부		○	· 청소년의 직업진로지도, 전문계 고교의 취업 지원, 청소년의 직업진로지도, 직장체험 프로그램
14	여성가족부	○	○	· 청소년의 육성·복지·보호에 관한 사무 · 청소년의 인권보호, 청소년 우대정책, 청소년 정책참여, 청소년 수련활동, 청소년 역량개발, 청소년 국제교류, 남북 청소년 교류, 청소년 창업·취업, 매체물·업소·약물·물건의 유해성 심의, 청소년 유해환경의 단속·규제, 인터넷 중독의 예방과 치료, 다문화가정 자녀양육,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 가해자 치료 및 피해자 보호, 가출위기 청소년 사회안전망 구축, 청소년 복지, 청소년 상담사·지도자에 관한 업무
15	국토해양부			· 한국해양청소년연맹의 육성·지원, 해양경찰청
16	방송통신위원회		○	· 방송프로그램, 통신서비스 이용 관련, 방송통신망 상에서 어린이·청소년을 보호

정부조직법상 아동·청소년 관련 업무를 직접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부처는 여성가족부(청소년 및 다문화가족과 건강가정사업을 위한 아동업무)와 보건복지부(영·유아 보육을 포함한 아동 업무)의 2개 부이며, 여기에 유아·학교청소년을 포함시키면 교육과학기술부(학교교육)가 추가되어 총 3개 부처가 된다.

그런데 정부조직법에는 청소년 관련업무가 규정되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직제규정에서 청소년 관련 업무를 규정하고 있는 부처가 상당수에 달한다(다만, 기획재정부와 국방부, 환경부, 국토해양부를 비롯하여 국세청·관세청·조달청, 산림청, 기상청, 해양경찰청 등은 청소년 관련업무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

그리고 여성가족부의 관장사무에는 다른 부처의 관장사무와 관계가 밀접하거나 상호 중복되고 있는 업무가 적지 않다. 정부조직법은 여성가족부에 대하여 청소년의 육성·보호·복지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도록 하고 있으며, 여성가족부 직제규정에는 청소년의 인권보호, 청소년 우대정책, 청소년 정책참여, 청소년 수련활동, 청소년 역량개발, 청소년 국제교류, 남북 청소년 교류, 청소년 창업·취업, 매체물·업소·약물·물건의 유해성 심의, 청소년 유해환경의 단속·규제, 인터넷 중독의 예방과 치료, 다문화가정 자녀양육,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 가해자 치료 및 피해자 보호,

가출위기 청소년 사회안전망 구축, 청소년 복지, 청소년 상담사·지도자에 관한 업무가 포함되어 있다. 그런데 유해매체물은 문화체육관광부와 방송위원회, 인터넷 중독은 교육과학기술부와 행정안전부, 다문화 가정은 교육과학기술부와 보건복지부의 업무와 서로 중복되고 있는 것처럼, 부처 간에 유사한 사업들이 시행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2. 범부처 청소년정책 추진현황 및 문제점²⁾

1) 정책영역별 사업추진 현황

(1) 부처별 사업 규모 및 정책영역

〈표 Ⅲ-19〉는 2011년도 행정각부의 청소년 사업과제의 추진 현황을 과제의 수와 예산으로 재분류한 결과이다. 정부 각부의 청소년 관련 사업은 총 257개 사업에 약 2조원의 예산이 투입된 것으로 나타났다.³⁾ 사업과제 수로 볼 때 여성가족부(88개), 교육과학기술부(35개), 문화체육관광부(33개), 법무부(18개), 행정안전부(16개), 보건복지부(13개)의 순으로서, 외형적으로는 여성가족부가 청소년 관련 사업을 압도적으로 많이 수행하였다(〔그림 Ⅲ-1〕 참조).

2) 이 부분은 윤철경 선임연구위원이 집필하였음.

3) 여성가족부 2011년도 시행계획을 기초로 사업을 분류하였다. 본 자료를 통해 사업명, 사업내용, 예산, 사업대상집단, 사업 대상의 연령, 사업수행기관 등을 추출한 후 본 연구의 정책영역 및 사업분류, 사업대상집단 구분 및 연령 구분, 기관분류 기준에 따라 코딩하였음. 코딩과정에서 본 자료에 중복적으로 기재된 사업은 삭제하고 한 과제로 처리하였으며 동일 사업에서 사업내용과 대상이 다른 등 성격이 다른 경우, 분리하여 처리하였다. 분리가 불가능했던 경우에는 사업비중이 높은 쪽으로 처리하였음. 따라서 본 연구의 사업결과분석은 시행계획상의 분석결과와는 차이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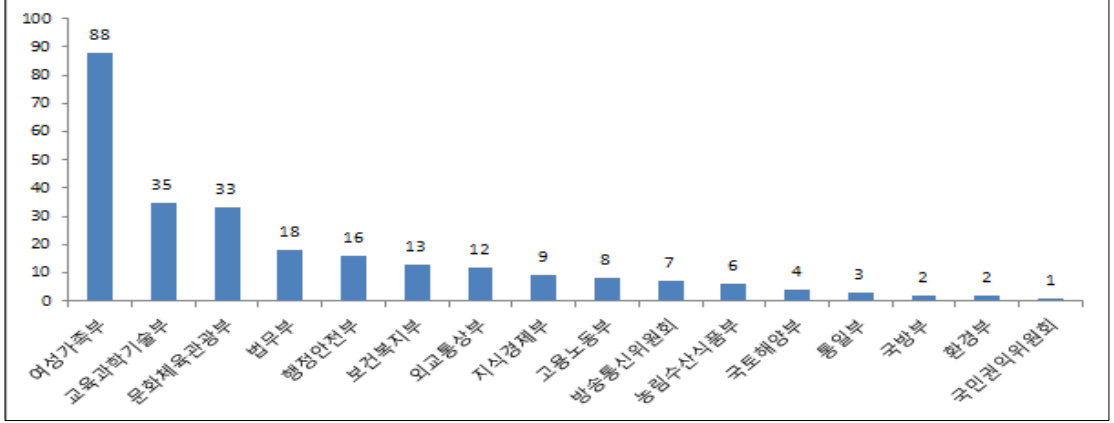
표 Ⅲ-19 부처별⁴⁾ 청소년 사업 수 및 예산

단위: 개, 백만원

부처	과제 수	예산
여성가족부	88	364,250
교육과학기술부	35	540,696
외교통상부	12	3,697
통일부	3	10,323
법무부	18	1,099
국방부	2	1,472
행정안전부	16	14,667
문화체육관광부	33	125,863
고용노동부	8	398,795
농림수산식품부	6	182,883
지식경제부	9	21,810
보건복지부	13	254,916
환경부	2	8,786
국토해양부	4	55,000
방송통신위원회	7	5,430
국민권익위원회	1	712
계	257	1,990,402

*출처: 여성가족부 (2011d), 제4차 청소년정책(수정·보안)기본계획 2011년도 시행계획: 중앙행정기관, 서울: 여성가족부.

단위: 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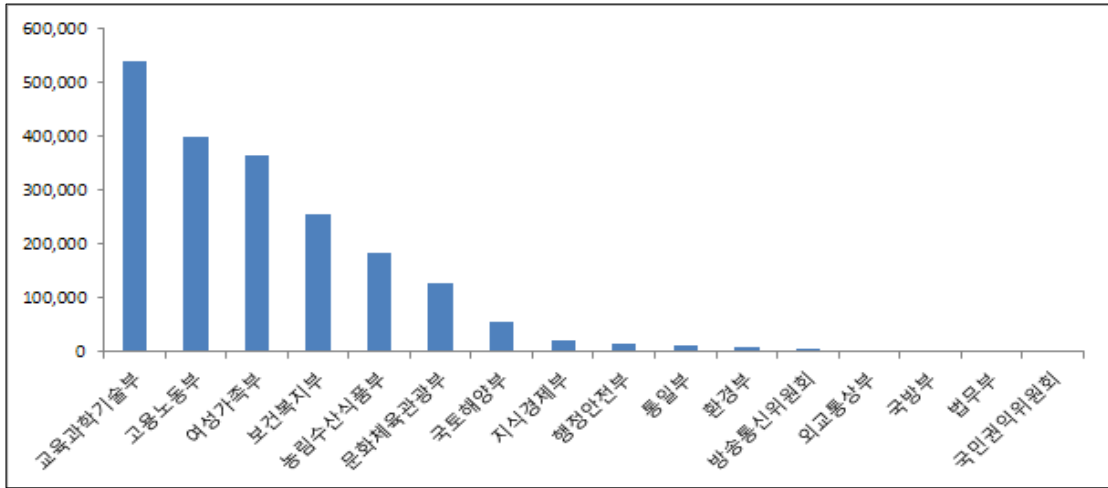


【그림 Ⅲ-1】 부처별 청소년 사업 수

*출처: 여성가족부 (2011d), 제4차 청소년정책(수정·보안)기본계획 2011년도 시행계획: 중앙행정기관, 서울: 여성가족부.

4) 부처 사업이란 정부조직법 상 각 부에서 관장한 사업을 의미하여 청의 사업은 별도로 분류하지 않고 관계 부처에 포함시켰다.

단위: 백만원



【그림 Ⅲ-2】 부처별 청소년 사업 예산

*출처: 여성가족부 (2011d). 제4차 청소년정책(수장·보안)기본계획 2011년도 시행계획: 중앙행정기관. 서울: 여성가족부.

[그림 Ⅲ-2]를 보면 부처별 청소년 사업예산은 교육과학기술부(5,406억 원), 고용노동부(3,988억 원), 여성가족부(3,642억 원), 보건복지부(2,549억 원), 농림수산식품부(1,828억 원), 문화관광부(1,258억 원)의 순이다. 정부부처 중 청소년관련예산이 1,000억 원 이상 되는 부처는 모두 6개 부처였다.

사업과제 수로는 6위권에 있으면서 예산규모는 그렇지 못한 부처로는 법무부와 행정안전부가 있었으며 반대로 예산면에서 6위권에 진입한 부처로는 고용노동부와 농림수산식품부가 있다.

법무부와 행정안전부는 사업과제 수는 많은 데 비해 왜 예산이 적은지, 고용노동부와 농림수산식품부는 어떤 사업에 예산을 집중하고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각 부처가 예산을 집중하고 있는 사업을 파악하기 위해 먼저 청소년정책 영역구분 기준에 따라 사업을 분류하였다.

〈표 Ⅲ-20〉에 의하면 청소년 교육(54개)이 가장 많고, 그 다음은 청소년 사회통합(51개), 위기청소년 지원(49개), 청소년 여가활동(43개), 청소년 유해환경 단속(39개)이 뒤를 잇고 있다 ([그림 Ⅲ-3]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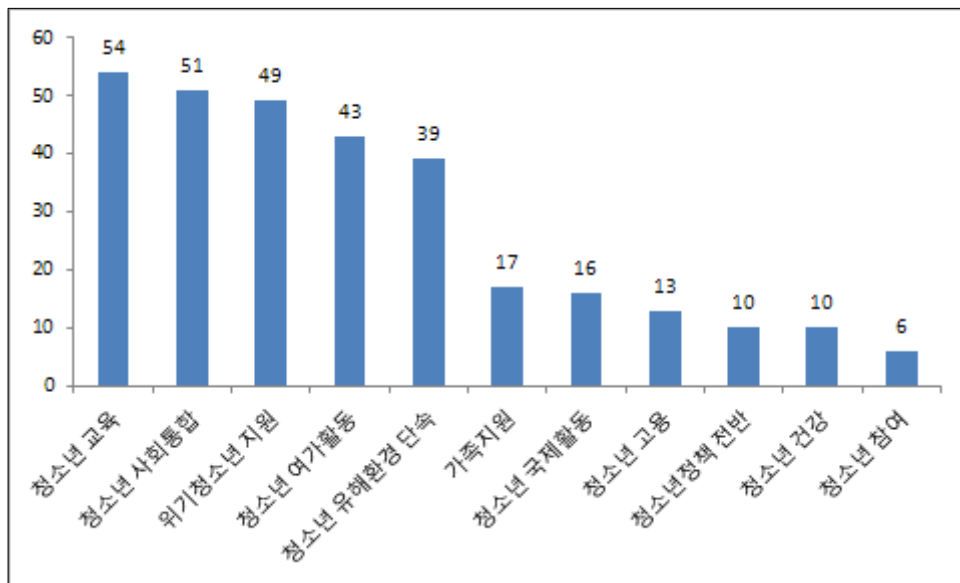
표 Ⅲ-20 청소년정책 영역별 사업 수 및 예산

단위:개, 백만원

정책영역	과제 수	예산
청소년 교육	54	381,410
청소년 고용	13	303,214
청소년 건강	10	7,296
청소년 여가활동	43	257,996
청소년 국제활동	16	10,010
청소년 참여	6	963
청소년 사회통합 ⁵⁾	51	1,088,014
가족지원	17	32,716
위기청소년 지원	49	862,712
청소년 유해환경 단속	39	133,603
청소년정책 전반	10	480
계	257	1,990,402

*출처: 여성가족부 (2011d). 제4차 청소년정책(수정·보안)기본계획 2011년도 시행계획: 중앙행정기관. 서울: 여성가족부.

단위: 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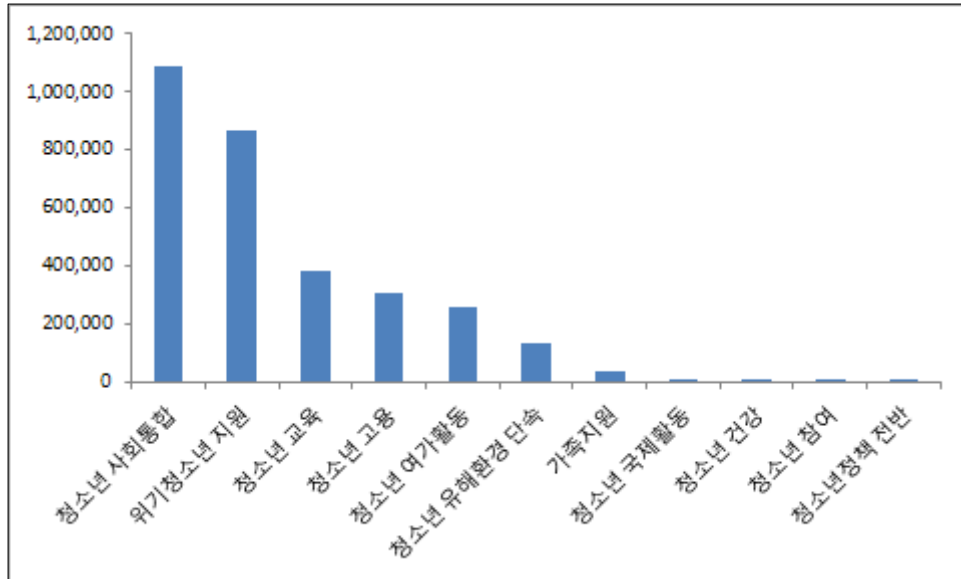


【그림 Ⅲ-3】 청소년정책 영역별 사업 수

*출처: 여성가족부 (2011d). 제4차 청소년정책(수정·보안)기본계획 2011년도 시행계획: 중앙행정기관. 서울: 여성가족부.

- 5) 청소년사회통합영역의 사업수 및 예산은 사업대상 분류 시 빈곤, 한부모·조손가정, 탈북·다문화, 장애, 학업중단, 가출·성매매 등 위기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것을 합산한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이 영역을 합계에 포함시키면 이중이 되어 계에는 포함시키지 않았다.

단위: 백만원



【그림 Ⅲ-4】 청소년정책 영역별 사업 예산

*출처: 여성가족부 (2011d). 제4차 청소년정책(수정·보안)기본계획 2011년도 시행계획: 중앙행정기관, 서울: 여성가족부.

한편, 사업예산별로는 청소년사회통합(1조 88억 원)이 가장 많고 그 다음은 위기청소년 지원(8,627억 원), 청소년 교육(3,814억 원), 청소년 고용(3,032억 원), 청소년 여가활동(2,579억 원)의 순이었다 ([그림 Ⅲ-4] 참조).

(2) 주요 부처 청소년정책 영역별 사업추진 현황

주요 부처들이 추진하는 사업을 정책영역별로 분류하였다. 여기서 주요 부처라 함은 과제 수 또는 예산으로 볼 때 비교적 청소년관련 사업을 많이 실시하고 있는 부처이다. 부처별 사업 분류 시 용이성 때문에 부·청을 별도로 분류하지 않고 청은 관계부처에 포함시켰다. 청소년사업 예산 규모가 상위 10위권인 부처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예산규모는 작지만 범죄청소년에 대한 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법무부를 포함시켜 총 11개 부처의 사업과제와 예산을 분류, 분석하였다. 주요 부처 사업을 분류, 분석한 결과는 <표 Ⅲ-21>과 같다.

표 Ⅲ-21 주요 부처 청소년정책 영역별 사업 수 및 예산현황

단위:개, 백만원(%)

정책 영역		주요 부처											부 처 수	
		여가부	교과부	통일부	법무부	행안부	문화부	고용부	농림부	지경부	복지부	국토부		합계
청소 년 교육	과제 수	9	13	－	3	5	5	1	1	7	3	－	47	9
	예산	35,957 (9.7)	5,275 (1.4)	－	0 (0.0)	7,771 (2.1)	4,105 (1.1)	98,835 (26.8)	8,847 (2.4)	20,610 (5.6)	187,452 (50.8)	－	368,852 (100.0)	
청소 년 고용	과제 수	2	－	－	3	－	－	7		1	－	－	13	4
	예산	2,054 (0.7)	－	－	0 (0.0)	－	－	299,960 (98.9)		1,200 (0.4)	－	－	303,214 (100.0)	
청소 년 건강	과제 수	2	3	－	－	－	－	－	1		4	－	10	4
	예산	0 (0.0)	325 (4.5)	－	－	－	－	－	3,230 (44.3)		3,741 (51.3)	－	7,296 (100.0)	
여가 활동	과제 수	17	1	－	－	1	21	－	2	－	－	1	43	5
	예산	155,539 (60.3)	0 (0.0)	－	－	176 (0.1)	86,547 (33.5)	－	14,384 (5.6)	－	－	1,350 (0.5)	257,996 (100.0)	
국제 활동	과제 수	3	1	－	－	－	－	－	－	－	－	－	4	2
	예산	5,013 (79.4)	1,300 (20.6)	－	－	－	－	－	－	－	－	－	6,313 (100.0)	
청소 년 참여	과제 수	5	1	－	－	－	－	－	－	－	－	－	6	2
	예산	963 (100.0)	0 (0.0)	－	－	－	－	－	－	－	－	－	963 (100.0)	
사회 통합	과제 수	17	4	3	8	1	9	1	2	－	5	1	51	10
	예산	169,775 (15.6)	333,618 (30.7)	10,323 (0.9)	0 (0.0)	4,662 (0.4)	56,089 (5.2)	61,167 (5.6)	156,422 (14.4)	－	242,307 (22.3)	53,650 (4.9)	1,088,014 (100.0)	
가족 지원	과제 수	9	1	－	3	1	3	－	－	－	－	－	17	5
	예산	0 (0.0)	0 (0.0)	－	40 (3.6)	0 (0.0)	32,676 (96.4)	－	－	－	－	－	32,716 (100.0)	
위기 지원	과제 수	23	9	3	5	1	1	－	2	－	4	1	49	9
	예산	160,150 (18.6)	420,756 (48.8)	10,323 (1.2)	0 (0.0)	4,662 (0.5)	1,500 (0.2)	－	156,422 (18.1)	－	55,248 (6.4)	53,650 (6.2)	862,712 (100.0)	
유해 환경 단속	과제 수	8	6	－	4	8	3	－	－	1	2	2	34	8
	예산	4,093 (3.2)	113,040 (87.1)	－	1,059 (0.8)	2,058 (1.6)	1,035 (0.8)	－	－	0 (0.0)	8,475 (6.5)	0 (0.0)	129,760 (100.0)	

청소년 전반	과제 수	10	-	-	-	-	-	-	-	-	-	-	10	1
	예산	480 (100.0)	-	-	-	-	-	-	-	-	-	-	480 (100.0)	

*출처: 여성가족부 (2011d). 제4차 청소년정책(수정·보안)기본계획 2011년도 시행계획: 중앙행정기관. 서울: 여성가족부.

① 부처별 중점 정책영역 현황 검토

먼저 여성가족부의 경우, 과제 수로는 위기지원(23개), 사회통합(17개), 여가활동(17개)이 상위 영역이었으며 예산면에서는 사회통합(1,697억 원), 위기지원(1,601억 원), 여가활동(1,555억 원)이 상위영역이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과제 수면에서는 청소년교육(13개), 위기청소년 지원(9개), 청소년 유해환경 단속(6개)이 상위영역이었으며 예산 면에서는 위기청소년지원정책(4,200억 원), 사회통합(3,336억 원), 청소년유해환경 단속정책(1,130억 원)이 상위영역이었다. 위기청소년지원 예산이 가장 많은 것은 저소득층에 대한 장학금 지원(3,313억 원) 등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었기 때문이다⁶⁾.

통일부의 경우, 사회통합에만 3개 과제에 103억 원이 투입되고 있었다.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탈북청소년 교육지원, 장학사업, 취업지원 사업(55억 원), 한겨레 중고등학교지원사업(11억 원), 하나둘 학교운영사업(36억 원)이었다.

법무부의 경우, 과제 수면에서는 사회통합(8개), 위기지원(5개), 유해환경단속(4개)가 상위영역이었으나 예산 면에서는 유해환경단속에 10억 원을 투입하고 있었고 가족지원에 4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전부였다. 사회통합이나 위기지원 사업에는 예산투입이 없었고 유해환경 단속과 가족지원에 약간의 재원을 투입하고 있었다. 대표적인 사업내용을 보면 성범죄자 신상공개 및 재범방지 사업비였고 가족지원영역 사업은 초등학생과 부모들이 함께 하는 캠프 지원 사업이었다. 범죄, 비행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선도 및 보호교정, 사회적응을 위한 사업, 비행예방을 위한 사업비 예산은 찾아볼 수 없어 법무부가 관련예산을 제출하지 않았거나 아니면 예산 책정 없이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부의 경우, 과제 수에서는 청소년 유해환경 단속(8개), 청소년 교육(5개)이 상위영역이었으며 예산은 청소년 교육(77억 원), 사회통합·위기청소년 지원(46억 원)과 더불어 청소년 유해환경 단속(20억 원)이 상위 영역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인 사업내용은 청소년교육영역에서는 안전사고

6) 구체적인 사업내용과 예산액에 대해서는 부록 1 '법부처 추진 청소년사업 현황' 참조.

등에 대한 교재개발·보급이었으며 위기지원 영역에서는 인터넷 중독 예방 및 상담사업이었다. 유해환경 관련사업으로는 지킴이 동아리나 아동안전 지킴이집 운영 지원, 전국의 시·군·구에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 지원, 성폭력 피해 아동 조사 전문가 참여 사업 등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 권리를 보호하는 사업이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경우, 과제 수에서는 청소년 여가활동(21개), 사회통합(9개), 청소년교육(5개) 영역이 상위영역이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예산 면에서도 청소년여가활동영역(865억 원)에 가장 많이 투자하고 있었으며 그 다음에 사회통합(560억 원), 가족지원(326억 원)에 투입하고 있었다. 대표적인 사업으로는 여가활동영역에서는 초등학교 스포츠강사 배치가 대표적이었고 사회통합영역에서는 저소득층 대상 문화 바우처(문화예술 프로그램 관람료 또는 구입비 지원), 스포츠 바우처 운영 등이었다. 가족영역에서는 절기별 세시민속행사, 야외캠핑장 조성 등 가족여가 확대사업이었다.

고용노동부는 청소년고용(7개 과제, 2,999억 원)과 청소년교육(1개 과제, 988억 원)이 주요 영역이었으며 그 중 사회통합 영역에는 1개 과제, 611억 원이 투입되고 있었다. 구체적인 사업으로는 청소년고용영역에서 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제 사업, 청소년교육영역에서 종합직업체험관을 통한 직업체험활동 인프라 확대, 취약계층·위기청소년을 위한 훈련 및 고용지원 프로그램이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청소년 교육, 청소년 건강, 청소년 여가활동, 사회통합, 위기지원 영역에서 한 두 개의 과제를 수행하고 있다. 예산과 관련하여서는 사회통합·위기지원(1,564억 원), 여가활동(143억 원)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사회통합영역으로는 농촌출신 대학생 학자금 융자와 영유아 양육비 지원이었으며 여가활동영역에서는 4-H 활동지원 등이었다.

지식경제부의 경우, 청소년 교육(7개), 청소년 고용(1개), 청소년 유해환경 단속(1개) 등 3개의 영역에서 사업을 수행하며 예산은 청소년 교육(206억 원), 고용영역(12억 원)에 투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청소년교육으로는 발명교육 인프라구축 및 운영, 교육용 로봇 시범사업, 비즈쿨 페스티벌, 비즈쿨 캠프, 청소년미래 상상기술 경진대회 등 다양한 진로탐색을 위한 교육활동에 집중되었으며 고용영역에서는 이공계 및 디자인계열 대학, 특성화고 학생을 대상으로 중소기업 현장연수를 실시하였으며 청소년연예인 권리보호를 위한 표준전속계약서 개정안 마련이었다.

보건복지부의 경우, 사회통합, 청소년 교육, 위기청소년 지원, 청소년 유해환경 단속, 청소년건강 등 5개 영역에서 총 18개 사업과제를 수행하고 있었다. 예산 면에서는 사회통합(2,423억 원), 청소년 교육(1,874억 원), 위기청소년 지원(552억 원) 순으로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었다. 보건복지부의 경우, 부처의 성격 상 사회통합과 위기지원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다는 점은 당연하게 여겨지나 청소년교육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었다. 청소년교육영역의 사업은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사업으

로 빈곤아동의 방과 후 보호 및 학습지원이었다.

국토해양부는 청소년 여가활동, 위기청소년 지원, 청소년 유해환경 단속 영역에서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사회통합·위기지원(536억 원), 여가활동(13억 원) 영역에 예산을 투입하고 있었다. 구체적인 사업으로는 사회통합·위기지원영역의 소년소녀가정에 대한 전세임대 지원사업과 청소년여가활동으로 해양교육시범학교 운영, 해양체험 프로그램, 한국해양소년단 연맹활동지원 사업 등이 있었다.

예산 투입 없는 사업을 하기보다 예산 투입을 하는 사업은 상대적으로 해당 부처의 적극적인 의지가 개입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예산 투입이 많은 정책영역은 해당 부처의 적극적인 정책의지가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다. 다음은 부처별로 예산투입 상위 정책영역을 종합함으로써 부처별 중점 정책영역을 살펴보고자 한다.

표 Ⅲ-22 부처별 예산투자 상위 정책영역 현황

정책영역	교육	고용	건강	여가	국제	참여	통합	가족	위기	유해 환경
여가부				○			◎		○	
교과부							○		◎	○
통일부							◎			
법무부								○		◎
행안부	◎						○		○	
문화부				◎			○	○		
고용부	○	◎					○			
농림부				○			◎		◎	
지경부	◎	○								○
복지부	○						◎		○	
국토부				○			◎		◎	

*1순위:◎, 2순위:○, 3순위:○

〈표 Ⅲ-22〉는 부처별로 예산투자를 많이 하는 사업영역을 비교하기 위해 1, 2, 3 순위 정책영역만을 나타낸 것이다. 여가부, 교과부, 농림부, 국토부, 통일부, 복지부는 사회통합·위기청소년 지원에 가장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있다면 행안부, 지경부, 복지부는 교육에 가장 많이 투자하고 있었다. 문화부는 여가활동지원에, 법무부는 유해환경 단속에, 고용부는 청소년고용지원에 가장 많은 예산을 투자 하고 있다.

국민의 문화예술체육활동 향유를 지원하는 문화부가 청소년여가활동 지원을 중점영역으로 하는

것이나 고용지원 업무를 관장하는 고용부가 청소년고용지원을 중점영역으로 하고 있는 것은 업무분장 상 당연한 일이다. 농어민 계층 자녀 지원과 농어촌 청소년 육성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농림부가 위기지원과 사회통합을 중점영역으로 하고 있는 것 또한 타당하다.

그러나 일반적, 보편적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사업을 많이 할 것으로 기대되는 여가부와 교과부에서 사회통합·위기지원 사업 비중이 더 높게 나타났다. 교과부의 경우, 모든 학생을 위한 진로, 체험, 건강, 문제행동 예방 및 안전 교육 등을 담당하고 있음에도 위기지원과 사회통합, 유해환경 단속 영역이 중점영역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교육은 어떻게 실현되고 있는지 검토가 필요하다. 여성가족부의 경우, 청소년업무의 주무부처로서 청소년 활동과 복지, 보호의 업무를 관장하고 있다. 모든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사업보다 위기 등 특정 청소년집단의 통합과 위기지원이 중점 영역으로 나타났다.

역으로 사회 통합적 청소년지원 사업을 많이 할 것으로 기대되는 복지부에서 청소년교육영역 비중 또한 높았다. 이는 방과 후 돌봄 사업인 지역아동센터 비중이 반영된 결과이다. 통일부는 탈북청소년의 적응지원에 예산을 투입하고 있었다. 부처 관장 업무로 규정되어 있는 청소년분야의 교류협력정책관련 예산은 나타나지 않아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청소년범죄예방, 범죄청소년 선도 및 보호·교정 등의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법무부에서 범죄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직접적인 사업비가 드러나지 않고 있어 이 사업이 어떻게 실현되고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행안부는 등하교길, 어린이놀이터 등 지역사회 안전업무 및 소년 비행방지, 성폭력·성매매 예방 및 방지 등과 더불어 소방안전교육 등의 업무를 관장하고 있으며, 행안부(소방방재청)의 교육영역사업은 안전교육교재의 개발·보급과 소방안전체험 등 안전교육이었다. 이는 교과부의 기능과 중복되고 있다. 또한 지식경제부에서 청소년교육과 고용에 사업비를 지출하고 있었는데 주로 진로탐색을 위한 교육활동이었다.

② 정책영역별 분산과 집중 현황: 총괄조정의 우선순위 정책영역 검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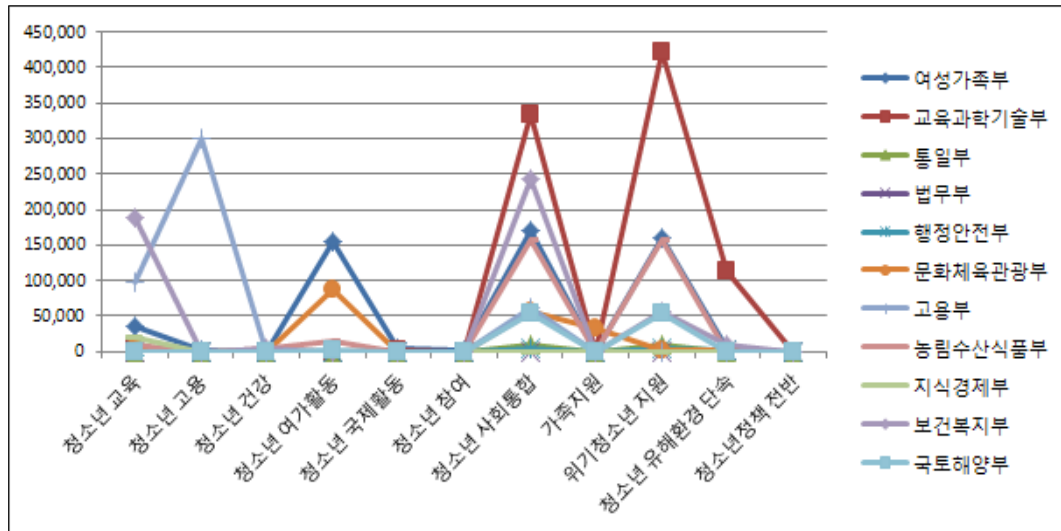
해당정책에 개입하고 있는 부처 수와 해당정책의 예산규모는 총괄조정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주요 요소이다. 개입 부처가 많을수록 정책 분산으로 성과를 내기 어렵기 때문에 정책의 효과와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총괄조정의 필요성이 높아지는 반면, 개입 부처 수가 적을수록 해당정책이 소수의 부처에 집중되기 때문에 정책성과를 진단하기 용이하고 총괄조정의 필요성도 낮아진다. 개입부처 수가 적을 때에는 상대적으로 해당 정책이 부처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정책성과를 진단하기

가 용이하다. 또한 예산투입도 정책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인데, 예산투입이 많은 정책일수록 정책의 중요도가 높고, 효율적인 정책성과 도출을 위해 총괄조정의 필요성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

〈표 Ⅲ-21〉을 보면 청소년사회통합(10개 부처)에 가장 많은 부처가 개입하고 있었고 이어서 청소년교육(9개 부처)과 위기청소년지원(9개 부처), 유해환경단속(8개 부처)의 순으로 개입 부처의 수가 나타났다. 총괄조정의 필요성이 상당히 큰 정책영역임을 알 수 있다

청소년 여가활동 영역은 5개 부처, 청소년 고용, 건강 영역에는 4개 부처, 청소년 국제활동, 참여 정책영역에는 2개 부처만이 개입하고 있다. 2개 부처만이 개입하고 있는 경우, 청소년업무 주무부처가 상대 부처간의 협의·조정만으로도 정책조정이 가능하다.

단위: 백만원



【그림 Ⅲ-5】 주요 부처 청소년정책 영역별 사업예산 현황

*출처: 여성가족부 (2011d), 제4차 청소년정책(수정·보안)기본계획 2011년도 시행계획: 중앙행정기관. 서울: 여성가족부.

【그림 Ⅲ-5】는 주요 부처 정책영역별 사업예산만을 나타낸 것이다. 정책영역별 개입부처 수와 예산규모를 비교할 수 있다. 사회통합, 위기청소년지원, 청소년교육영역은 다부처가 개입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예산규모가 매우 크다. 이에 비해 청소년유해환경단속은 다부처가 개입하고는 있지만 예산규모는 상대적으로 작은 편이다. 사업예산규모도 크고 다부처가 개입하고 있는 사회통합, 청소년교육, 위기청소년지원 및 유해환경단속영역은 각 부처가 어떠한 정책을 수행하고 있는 지에 대한 점검이 더 필요하며 다부처가 개입하고 있는 만큼 총괄조정의 필요성이 가장 높다.

청소년여가활동 영역은 5개 부처가 개입하고 있으며 예산 규모 또한 작지 않아 총괄조정 필요성이 역시 크다. 청소년고용은 고용노동부의 관련 예산규모가 매우 크다. 해당정책이 청소년에게 실효성 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청소년업무 주무부처와의 협의가 시급한 영역이다.

청소년 건강과 가족지원도 아직 예산규모는 크지 않으나 4, 5개 부처가 개입하고 있다. 청소년건강과 가족지원의 정책적 중요성이 부각될 때 경쟁적으로 이에 참여할 수 있다. 청소년 건강과 가족지원이 청소년에게 실효성있는 정책으로 입안, 실행될 수 있도록 각 부처의 사업을 점검하고 정책방향을 선도해 나갈 필요가 있다.

청소년 국제활동과 청소년참여는 개입부처 수도 작고 예산규모도 크지 않아 총괄조정 필요성이 가장 낮은 정책영역이며 청소년주무부처가 이에 대한 사업을 책임지고 집행할 필요가 있다.

③ 정책영역별 주요 부처 현황: 총괄조정 우선순위 부처 검토

총괄조정이 시급한 정책영역을 선정한 후 해당 영역의 주요 부처를 상대로 총괄조정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즉 해당 정책영역의 주요 부처가 누구인지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표 Ⅲ-23〉은 정책영역별 사업예산의 상위부처 즉, 정책영역별 중점 부처를 나타낸 것이다.

표 Ⅲ-23 청소년정책 영역별 사업예산 상위 부처

정책영역	여가부	교과부	법무부	행안부	문화부	고용부	농림부	지경부	복지부
청소년 교육	○					◎			◎
청소년 고용	○					◎		○	
청소년 건강		○					○		◎
청소년 여가활동	◎				○		○		
청소년 국제활동	◎	○							
청소년 참여	◎								
청소년 사회통합	○	◎							○
가족지원			○		◎				
위기청소년 지원	○	◎					○		
청소년 유해환경 단속	○	◎							○

*1순위:◎, 2순위:○, 3순위:○

청소년정책 주무부처인 여가부는 해당영역 청소년정책의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해당 정책영역에

관련된 주요 부처와 논의를 해야 한다. 청소년교육의 총괄조정을 위해서 교육 주무부처인 교과부 외에 복지부, 고용부 등과 중점적으로 협의해야 함을 알 수 있으며 청소년고용은 고용부, 지경부, 청소년건강은 복지부, 청소년여가활동은 문화부, 국제활동은 교과부, 청소년 사회통합은 교과부와 복지부, 가족지원은 문화부, 위기청소년지원은 교과부, 청소년유해환경 단속은 교과부, 복지부 등과 협의해야 함을 알 수 있다.

(3) 청소년정책사업 추진현황

각 부처에서 추진하고 있는 청소년정책 사업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파악하기 위해 세부영역을 설정하여 각 사업을 분류, 분석하였다. 사업분류의 세부영역 설정은 국제기준에서 정의하고 있는 해당 정책영역의 개념⁷⁾과 제5차 청소년기본계획(안)⁸⁾에서 제시하고 있는 사업과제(안)을 근거로 하였다.⁹⁾

〈표 Ⅲ-24〉는 이상의 분류기준에 따라 청소년정책 영역별로 세부 정책사업 과제 수와 예산을 나타낸 것이다. 정책영역별로 주요한 세부 정책사업을 살펴보고자 한다. 사업과제 수가 10개 이상(없을 경우, 과제 수가 가장 많은 것), 예산규모 전체 순위가 20위권에 드는 것을 중심으로 기술하고자 한다.

먼저 청소년교육 정책사업에서는 공동체 의식과 관련된 인성·시민교육(19개), 문제행동을 위한 예방 및 안전교육(18개), 진로탐색에 관한 교육(13개) 순으로 과제 수가 많았다. 그러나 예산은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지원 사업(2,184억 원), 진로탐색을 위한 교육활동(1,225억 원), 문제행동을 위한 예방 및 안전교육(174억 원)이 많았다.

청소년 고용 정책사업의 경우, 청년창업 및 취업지원영역(5개)이 과제 수가 가장 많았으나 사업예산은 청년(청소년) 일자리 개발(2,198억 원), 직업훈련 프로그램(611억 원), 창업 및 취업지원(217억 원) 순으로 컸다.

청소년 건강정책사업은 사업수와 예산이 빈약하다. 그 중 건강한 음식제공 사업(3개, 54억 원)의 과제 수와 예산이 큰 편이다.

7) 본 연구 제2장 청소년정책의 영역구분 참조.

8) 여성가족부 (2011c). 제5차청소년기본계획수립을 위한 연구. 서울: 여성가족부.

9) 이 분류 기준은 제4장에서 분석하고 있는 청소년정책사업 수요조사 결과와의 비교를 위해 동일한 분류기준을 갖고 이루어졌다. 실제 사업을 분류할 때 해당 영역에 포함시킬 수 없는 것, 즉 정책 전반에 걸치는 것 등을 위해 관련 정책 전반을 추가하였다.

청소년 여가활동 영역에서는 문화예술교육 및 문화체험 지원사업(18개 과제, 629억 원)이 세부 사업 중 과제 수와 예산이 많았으며 그 다음은 스포츠활동 지원사업(5개 과제, 419억 원)이었다. 이 영역에서는 청소년활동전반(12개 사업, 1,469억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예산규모 전체 6위를 차지해 가장 중요한 정책사업이었으며 이 외 청소년단체나 동아리 활동지원(3개 과제, 44억 원), 자원봉사활동지원(3개 사업, 13억 원) 등이 추진되고 있었다.

표 III-24 청소년정책 영역별 정책사업 과제 수, 예산액, 예산순위

정책영역	정책사업	과제 수 (개)	예 산	
			예산액 (백만원)	예산 순위
청소년 교육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지원(방과 후 학습, 학업부적응 예방 등)	2	218,476	4
	공동체 의식을 높이기 위한 인성·시민교육(고운 말 쓰기 등)	19	21,129	16
	창의적 체험활동	2	1,780	29
	다양한 진로탐색을 위한 교육활동	13	122,536	7
	문제행동 예방 및 안전 교육(폭력 및 약물 예방교육 등)	18	17,488	18
청소년 고용	청년(청소년)일자리 개발(직장체험 프로그램 및 인턴제 개발)	3	219,863	3
	청년(청소년) 창업 및 취업 지원(취업 상담 등)	5	21,776	15
	일자리와 연계된 직업훈련 프로그램 강화(직업전문학교 등)	3	61,167	11
	청소년 아르바이트 보호(아르바이트 피해 신고센터 운영 등)	2	408	37
청소년 건강	청소년 수면권 보장(밤 10시 이후 학원 수업 제한 등)	1	0	44
	건강한 음식 제공(학교 내 탄산음료·패스트푸드 판매 금지 등)	3	5,463	24
	정신건강 증진(스트레스, 우울, 불안 등 발견 및 치료)	2	1,175	32
	건강 전반	4	658	34
청소년 여가활동	청소년 단체 및 동아리 활동 지원	3	4,432	27
	국제청소년성취포상제(만 14세~25세 청소년 국제포상제도)	1	300	39
	청소년 자기도전 포상제(만 9세~13세 청소년 한국포상제도)	1	0	44
	청소년 문화예술교육 및 문화체험 지원(문화예술강사 지원 등)	18	62,944	10
	다양한 스포츠 활동 지원	5	41,945	13
	청소년 자원봉사활동	3	1,377	30
	청소년 활동 전반	12	146,998	6
청소년 국제활동	국가 간 교류 등 국제교류	6	5,340	25
	글로벌 청년리더 양성(해외취업, 해외인턴, 해외자원봉사)	1	1,300	31

	다양한 해외체험 활동(조사연구, 국제회의 참가 등)	1	2,778	28
	국제교육(문화다양성, 국제 이해 등)	8	592	35
청소년 참여	학교규칙 제정에 참여	1	0	44
	청소년시설 운영에 참여	1	286	40
	지방자치단체 청소년정책 결정에 참여(청소년참여위원회)	1	317	38
	정부와 전국청소년대표회의에서 청소년정책제안(청소년특별회의)	1	180	41
	참여활동 전반	2	180	41
청소년 사회통합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 소년소녀가장, 조손·한부모 가정 청소년	15	951,602	1
	탈북, 다문화 청소년	7	19,226	17
	장애 청소년	5	10,150	21
	가출, 비행, 성매매, 학업중단, 각종 중독 등 위기청소년	22	97,795	9
	미혼(부)모 청소년	2	9,240	22
가족지원	부모교육	5	0	44
	가족상담	3	0	44
	가족단위 여가 및 문화 프로그램 지원	8	32,716	14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예비부모 교육	1	0	44
위기청소년 지원	지역 사회 안전망 구축(상담지원센터, Wee Center 등)	13	152,992	5
	인터넷(게임) 중독 예방 및 치료·재활	5	12,398	19
	주거, 교육, 자립 지원 등 여러 가지 서비스 제공(청소년쉼터 등)	15	44,947	12
	생활비 및 용돈 등 경제적 지원(청소년 특별지원)	8	642,957	2
	위기 예방(폭력, 범죄, 성 등) 교육 및 치료·재활	5	8,926	23
	위기 지원 전반	3	490	36
청소년 유해환경 단속	청소년 유해업소 감시단속	4	140	43
	청소년에게 술담배 판매 금지	1	733	33
	청소년 유해매체 심의 강화	7	4,538	26
	청소년 대상 성 범죄 방지	14	117,246	8
	청소년 안전 및 기본권 보호를 위한 규제	13	10,946	20

*출처: 여성가족부 (2011d), 제4차 청소년정책(수정·보안)기본계획 2011년도 시행계획: 중앙행정기관, 서울: 여성가족부.

청소년 국제활동 영역은 문화다양성과 세계화에 대한 이해를 중심으로 하는 국제교육(8개)이 사업 수로는 가장 많았으나 예산은 국가 간 교류 등 국제교류(6개, 53억 원) 사업이 가장 많았다.

청소년 참여 영역은 세부 정책사업 과제 수도 적고 예산도 많지 않았으나 그 중 지방자치단체 청소년정책 참여(1개 과제, 3억 원) 예산이 가장 많은 편이다.

청소년 사회통합 영역에서는 과제 수로는 가출, 비행, 학업중단, 중독 등 위기청소년지원(22개)과

빈곤, 조손·한부모 가정 청소년을 지원하는 사업(15개)이 가장 많았다. 예산은 빈곤, 조손·한부모 등 어려운 가정 청소년지원 사업(9,516억 원)이 더 많았고 그 다음이 위기청소년지원사업(977억 원)이었다. 그런데 이 영역에서는 탈북·다문화청소년에 대한 지원(192억 원)으로 예산규모 전체 순위 17위에 들어와 총 3개의 정책 사업이 주요한 정책사업으로 자리매김 되었다.

가족지원 영역은 신생 정책영역이다. 부모교육, 가족상담, 가족단위 여가 및 문화프로그램 지원, 청소년 대상의 예비부모교육 4개 사업 분야로 구분하였다. 이 중 가족단위 여가 및 문화프로그램 지원(8개, 327억 원)이 가장 활성화되어 있는 편이다.

위기청소년지원 영역은 다른 정책영역에 비해 사업수도 많고 예산도 가장 많았다. 주거, 교육, 자립지원 등의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15개), 상담센터, Wee Center 등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한 사업(13개)의 과제 수가 많았다. 예산에 있어서는 생활비나 용돈 등 직접적, 경제적 지원사업(6,429억 원, 2위), 지역사회안전망사업(1,529억 원, 5위), 주거, 교육, 자립지원 등 서비스 제공사업(449억 원, 12위), 인터넷 중독 예방 및 치료재활(123억 원, 19위)이 주요한 영역이었다.

마지막으로 청소년 유해환경 단속영역에서는 청소년 성범죄방지 사업(14개)과 청소년 안전 및 기본권 보호를 위한 규제사업(13개)이 많았다. 예산은 청소년 성범죄방지 사업(1,172억 원, 8위), 청소년 안전 및 기본권 보호를 위한 규제사업(109억 원, 20위)이 많았다.

【그림 Ⅲ-6】은 청소년 정책영역별 정책사업 예산을 순위별로 나타낸 것이다. 예산규모가 가장 큰 순서대로 살펴보면 예산규모 2,000억 원을 넘는 대형 사업은 사회통합영역의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 소년소녀가장, 조손한부모 가정 청소년 지원사업이었다. 이어서 위기청소년 지원영역의 청소년 생활비 및 용돈 등 경제적 지원(청소년 특별지원), 청소년고용영역의 청년(청소년)일자리 개발, 청소년교육영역의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지원(방과 후 학습, 학업부적응 예방 등)사업이었다.

다음으로 1,000억 원에서 2,000억 원 미만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은 위기지원영역의 지역 사회 안전망 구축(상담지원센터, Wee Center 등)사업, 여가활동 영역의 청소년 활동 전반, 교육영역의 다양한 진로탐색을 위한 교육활동, 유해환경 단속영역의 청소년 대상 성 범죄 방지사업이었다.

200억 원 이상 1,000억 원 미만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은 사회통합영역에서 가출, 비행, 성매매, 학업중단, 각종 중독 등 위기청소년은 빈곤 청소년에 이어 두 번째로 집중투자되는 사업이었다. 여가활동영역의 청소년 문화예술교육 및 문화체험 지원, 고용영역의 일자리와 연계된 직업훈련 프로그램 강화(직업전문학교 등), 위기청소년지원 영역의 주거, 교육, 자립지원 등 여러 가지 서비스 제공, 여가활동영역의 다양한 스포츠 활동 지원, 가족단위 여가 및 문화 프로그램 지원, 청소년고용영역

의 청년(청소년) 창업 및 취업지원, 청소년교육영역의 공동체 의식을 높이기 위한 인성·시민교육 사업이었다.

100억 원대의 예산규모로 20위권에 속한 사업은 사회통합영역의 탈북, 다문화 청소년, 청소년교육 영역의 문제행동 예방 및 안전 교육(폭력 및 약물 예방교육, 성 교육, 미디어교육, 안전교육 등), 위기청소년지원영역의 인터넷(게임) 중독 예방 및 치료·재활, 청소년유해환경 단속 영역의 청소년 안전 및 기본권 보호를 위한 규제사업이었다.



【그림 Ⅲ-6】 청소년 정책영역별 정책사업 예산 순위(상위 20위권)

*출처: 여성가족부 (2011d). 제4차 청소년정책(수정·보안)기본계획 2011년도 시행계획: 중앙행정기관. 서울: 여성가족부.

2) 연령집단별 사업추진 현황

(1) 사업대상별 현황

표 Ⅲ-25 사업대상별 청소년 사업 수 및 예산

사업대상	과제 수		예산	
	개	퍼센트(%)	백만원	퍼센트(%)
청소년	144	56.0	1,425,192	71.6
성인관련자	48	18.7	139,805	7.0
사회환경 및 제도	65	25.3	425,404	21.4
계	257	100.0	1,990,402	100.0

*출처: 여성가족부 (2011d), 제4차 청소년정책(수정·보안)기본계획 2011년도 시행계획: 중앙행정기관, 서울: 여성가족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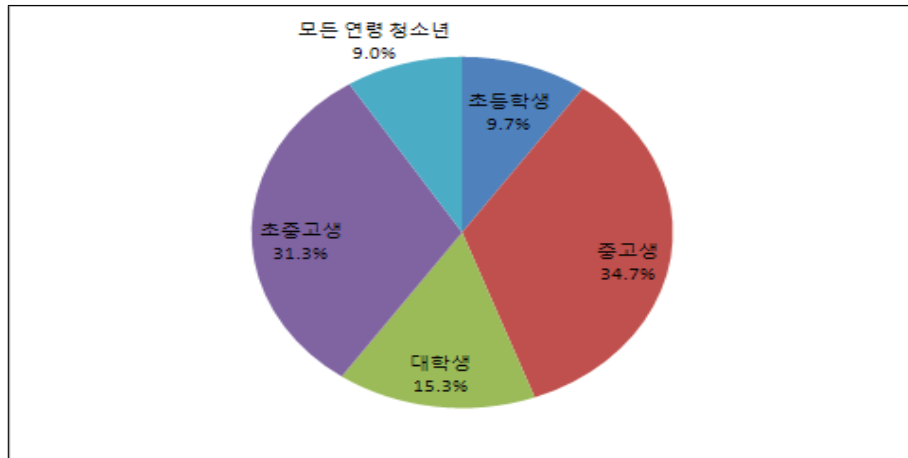
〈표 Ⅲ-25〉은 사업대상별 사업 수와 예산을 나타낸 것이다. 청소년 대상 사업이 144개(56.0%), 사회환경 및 제도 대상 사업은 65개(25.3%), 성인관련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48개(18.7%)로 청소년 대상 사업 과제 수가 절반을 조금 넘었다. 예산 면에서는 청소년 대상 사업예산이 전체 예산의 71.6%를 차지하고 있다.

(2) 청소년 연령집단별 현황

표 Ⅲ-26 청소년 연령집단별 사업 수 및 예산

청소년 연령집단	과제 수		예산	
	개	퍼센트(%)	백만원	퍼센트(%)
초등학생 (일부 사업 중학생 포함)	14	9.7	147,697	10.4
중고생	50	34.7	315,773	22.2
대학생 (일부 사업 중고생 포함)	22	15.3	665,505	46.7
초중고생	45	31.3	286,786	20.1
모든 연령 청소년 (초중고대학생)	13	9.0	9,429	0.6
계	144	100.0	1,425,192	100.0

*출처: 여성가족부 (2011d), 제4차 청소년정책(수정·보안)기본계획 2011년도 시행계획: 중앙행정기관, 서울: 여성가족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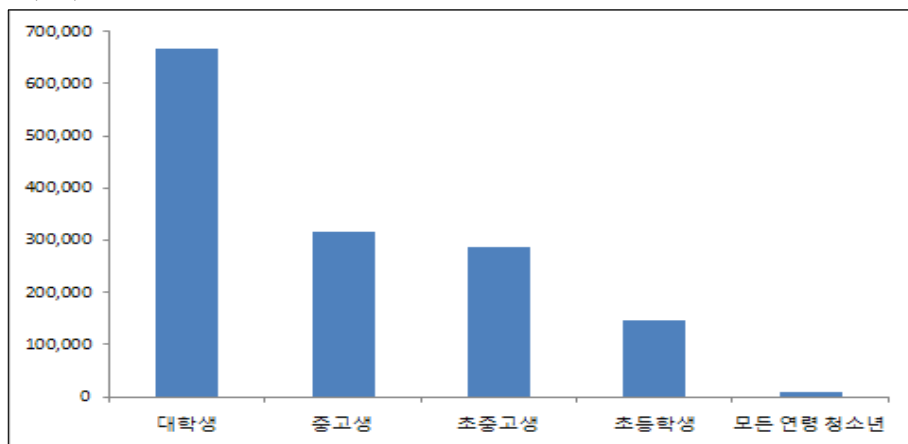


【그림 Ⅲ-7】 청소년 연령집단별 사업 수 비중(N=144)

*출처: 여성가족부 (2011d), 제4차 청소년정책(수정·보안)기본계획 2011년도 시행계획: 중앙행정기관, 서울: 여성가족부.

〈표 Ⅲ-26〉은 청소년 대상 사업 중에서 연령집단별로 사업 수와 예산을 파악한 것이다. 먼저 사업 과제 수를 보면, 중고생 대상 사업이 50개, 초중고생 대상 사업이 45개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총 144개 사업 중 66%가 초중고생(주로 중고생)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 뒤를 대학생(15.3%), 초등학생(9.7%)이 잇고 있으며 연령구분 없이 모든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도 9.0%를 차지하고 있다. 예산 면에서는 대학생 대상 사업이 전체 예산의 46.7%를 차지하였고, 그 다음은 중고생(22.2%), 초중고생(20.1%), 초등학생(10.4%), 모든 연령 청소년(0.6%) 순이다.

단위: 백만원



【그림 Ⅲ-8】 청소년 연령집단별 사업예산 현황

*출처: 여성가족부 (2011d), 제4차 청소년정책(수정·보안)기본계획 2011년도 시행계획: 중앙행정기관, 서울: 여성가족부.

【그림 Ⅲ-8】은 청소년 연령집단별 사업예산 현황을 나타낸 것이다. 대학생 연령집단의 사업예산이 가장 많았다. 대학생 대상 사업은 과제 수 비중에 비해 예산이 높게 나타났는데 그 이유는 교육과학기술부의 저소득층 대학생을 위한 장학금 지원 사업, 고용노동부의 취업지원(청년취업인턴제 등) 등 2개 사업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었기 때문이다.

표 Ⅲ-27 부처별 · 청소년 연령집단별 사업 수 및 예산현황

단위:개, 백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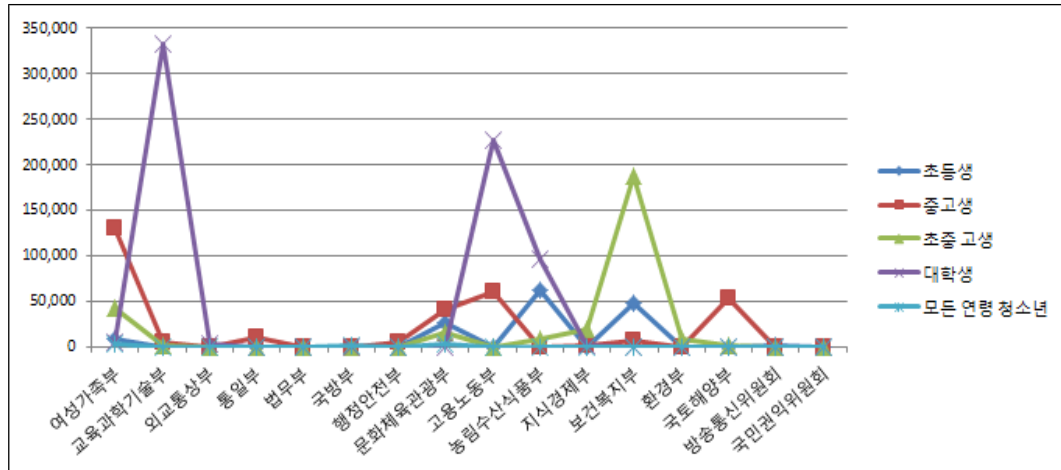
	과제 수					예산				
	초등 생	중고 생	초중 고생	대학 생	모든 연령 청소년	초등생	중고생	초중 고생	대학생	모든 연령 청소년
여성가족부	3	19	11	7	3	8,102	131,153	42,159	5,013	3,099
교육과학기술부	0	6	5	2	1	0	5,318	1,013	332,600	0
외교통상부	0	1	2	5	4	0	4	115	3,132	445
통일부	0	3	0	0	0	0	10,323	0	0	0
법무부	1	9	0	0	0	40	0	0	0	0
국방부	0	0	0	0	2	0	0	0	0	1,472
행정안전부	1	1	2	0	0	511	4,662	268	0	0
문화체육관광부	5	4	14	0	2	27,519	41,210	16,452	0	3,700
고용노동부	0	1	0	4	0	0	61,167	0	227,446	0
농림수산식품부	1	0	1	2	0	61,922	0	8,847	95,822	0
지식경제부	0	2	5	1	0	0	844	19,766	1,200	0
보건복지부	2	3	3	1	0	48,265	7,440	188,209	292	0
환경부	0	0	1	0	0	0	0	8,606	0	0
국토해양부	0	1	1	0	0	0	53,650	1,350	0	0
방송통신위원회	1	0	0	0	0	1,337	0	0	0	0
국민권익위원회	0	0	0	0	1	0	0	0	0	712

*출처: 여성가족부 (2011d), 제4차 청소년정책(수정·보안)기본계획 2011년도 시행계획: 중앙행정기관, 서울: 여성가족부.

〈표 Ⅲ-27〉는 부처별 · 연령집단별 과제 수 및 예산현황을 나타낸 것이다. 과제 수로 볼 때 여성가족부 사업은 중고생(19개)과 초중고생 대상(11개)이 많으며 그 다음이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사업(7개)이 많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초중고생 대상 사업(14개)이 많으며 그 다음이 초등학생 대상사업(5개)이다. 여성가족부에 비해 초등학생에 대한 사업비중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교육과학기술부 또한 중고생(6개), 초중고생(5개) 대상 사업이 많으며 지식경제부, 보건복지부 역시 마찬가지여서

여성가족부와 동일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 좀 다른 양상을 보이는 부처는 외교통상부, 고용노동부이다. 양 부처는 대학생 대상사업이 다른 연령집단보다 많다.

단위: 백만원



【그림 Ⅲ-9】 부처별 · 청소년 연령집단별 사업 예산현황

*출처: 여성가족부 (2011d). 제4차 청소년정책(수정·보안)기본계획 2011년도 시행계획: 중앙행정기관. 서울: 여성가족부.

예산으로 볼 때 부처가 집중 투자하는 연령집단이 누구인지를 보다 명료히 알 수 있다. 【그림 Ⅲ-9】는 부처별 · 청소년 연령집단별 사업 예산 현황을 나타낸 것이다. 교육과학기술부(3,326억 원), 고용노동부(2,274억 원)가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예산 비중이 현저히 높음을 알 수 있다. 농림수산식품부(958억 원)와 외교통상부(31억 원) 역시 대학생 대상 사업 예산이 가장 많았다.

그런가하면 여성가족부, 통일부, 국토해양부, 행정안전부의 경우 다른 연령대에 비해 중고생 대상 사업예산이 가장 많았다. 문화체육관광부 역시 예산상으로는 중고생 대상 사업예산(412억 원)이 많았으나 초등학생 대상 사업예산(275억 원)도 적지 않은 수준을 보여,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많음을 알 수 있다.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사업예산이 많은 부처는 농림수산식품부(619억 원), 보건복지부(482억 원), 문화체육관광부(275억 원)의 순이었다.

보건복지부는 초중고생(1,882억 원)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예산이 다른 연령집단에 비해 가장 많았으며 환경부, 지식경제부 역시 마찬가지였다. 법무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초등학생 대상 사업예산만 일부 있을 뿐 사업예산이 매우 적었으며 국방부와 국민권익위원회는 모든 연령 청소년 대상

사업예산이 일부 있을 뿐이었다.

부처별로 집중 투자하는 사업대상 연령집단을 요약하면 교육과학기술부, 고용노동부, 농림수산식품부, 외교통상부는 주로 대학생 집단에 예산을 투입하였으며 여성가족부, 통일부, 국토해양부, 행정안전부, 문화관광부, 지식경제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등 기타 부처는 초·중·고생(주로 중고생)을 중점 사업대상으로 하였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초·등학생에도 비교적 예산투자가 많았으며 법무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작은 예산이지만 초·등학생에 투자했다.

(3) 청소년 연령집단별 · 정책영역별 현황

표 Ⅲ-28 청소년 연령집단별 · 정책영역별 사업 수 및 예산현황

단위:개, 백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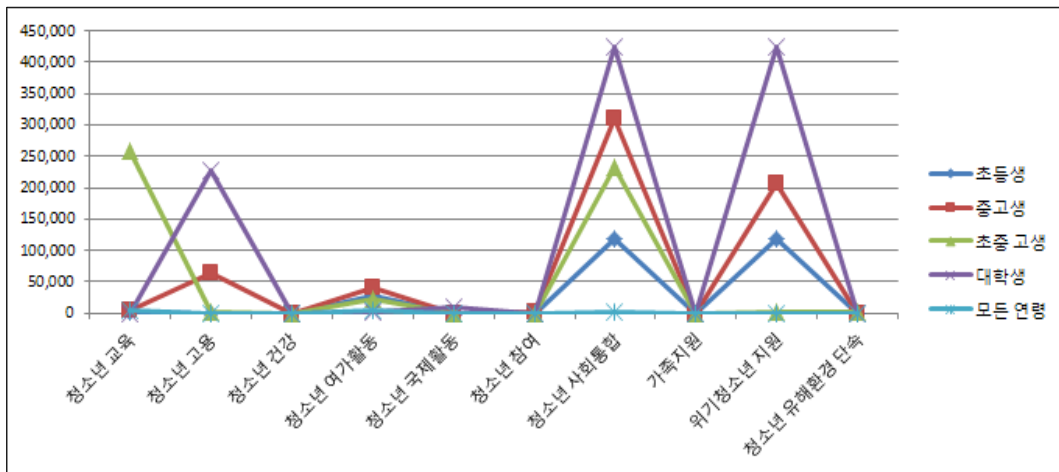
정책영역	과제 수					예산				
	초등 생	중고 생	초중 고생	대학 생	모든 연령	초등생	중고생	초중 고생	대학생	모든 연령
청소년 교육	1	6	21	1	4	1,337	3,844	259,734	292	5,019
청소년 고용	0	5	0	6	0	0	63,221	1,375	228,646	0
청소년 건강	0	1	4	0	0	0	458	0	0	0
청소년 여가활동	5	3	13	1	5	27,504	39,710	22,197	1,322	3,964
청소년 국제활동	0	1	2	9	4	0	4	115	9,445	445
청소년 참여	0	5	0	0	0	0	963	0	0	0
청소년 사회통합	7	35	6	2	1	119,303	310,293	231,751	425,800	865
가족지원	2	1	0	3	0	55	0	0	0	0
위기청소년 지원	5	27	4	2	0	118,289	207,572	2,649	425,800	0
청소년 유해환경 단속	1	1	1	0	0	511	0	715	0	0

*출처: 여성가족부 (2011d), 제4차 청소년정책(수정·보안)기본계획 2011년도 시행계획: 중앙행정기관, 서울: 여성가족부.

〈표 Ⅲ-28〉은 청소년 연령집단별 · 정책영역별 사업 수 및 예산 현황을 나타낸 것이다. 초·등학생과 중·고생을 분리하여 별도로 실시하는 사업의 경우 사회통합영역(초·등학생 7개, 중·고생 35개)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위기지원영역(초·등학생 5개, 중·고생 27개)이었다. 연령집단을 분리하지 않고 초·중·고생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의 경우 청소년교육(21개)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여가활동영역(13개)이었다. 대학생 연령집단 사업으로는 국제활동(9개)이 압도적이었다. 모든 연령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은 여가활동(5개)과 국제활동(4개)영역이었다. 과제 수로 본 연령집단별 정책영역 경향은

초등학생과 중고생으로 특화된 연령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는 사회통합, 위기지원 등 선별적 복지사업이 많은 반면, 초중고생의 연령구분 없이 하는 사업은 교육, 여가활동, 국제활동 등 보편적 영역의 사업이 많았다. 대학생 연령 집단을 대상으로 한 사업은 국제활동에 집중되었다.

단위: 백만원



【그림 Ⅲ-10】 청소년 연령집단별·정책영역별 사업예산 현황

*출처: 여성가족부 (2011d), 제4차 청소년정책(수정·보안)기본계획 2011년도 시행계획: 중앙행정기관. 서울: 여성가족부.

【그림 Ⅲ-10】은 청소년 연령집단별·정책영역별 사업예산을 나타낸 것이다. 초등생 대상 사업은 사회통합(1,193억 원)과 위기청소년지원(1,182억 원)이 많았으며 여가활동(275억 원)에 그 다음으로 집중되었다. 중고생 대상 정책은 사회통합(3,102억 원), 위기청소년영역(2,075억 원), 고용영역(632억 원), 여가활동영역(397억 원)의 순으로 나타났다.

초중고생 집단의 경우, 교육영역(2,597억 원), 사회통합영역(2,317억 원), 여가활동영역(221억 원), 위기청소년영역(26억 원)의 순으로 나타났다.

대학생 집단의 경우, 사업 수는 국제활동(9개)과 고용정책(6개)이 가장 많았으나 예산측면에서는 사회통합·위기청소년지원(4,258억 원)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고용영역(2,286억 원)이 많았다. 사회통합·위기청소년 지원사업이 가장 많은 것은 저소득층 대학생 학자금 지원사업의 예산규모가 워낙 크기 때문이며 고용지원사업은 예산규모도 크고 또 그 대상도 대학생 연령층을 주요 집단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모든 연령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사업은 교육, 여가활동, 사회통합, 국제활동의 순으로 예산이

많았다. 연령집단별로 주요 정책영역을 투입되는 예산순위를 기초로 정리하면 <표 Ⅲ-29>와 같다.

표 Ⅲ-29 **연령집단별 청소년정책 영역의 예산 순위**

연령집단	예산순위														
초등생	사회통합	〉	위기지원	〉	여가활동	〉	교육	〉	유해환경 단속	〉	가족지원				
중고생	사회통합	〉	위기지원	〉	고용	〉	여가활동	〉	교육	〉	참여활동	〉	건강	〉	국제활동
초중고생	교육	〉	사회통합	〉	여가활동	〉	위기지원	〉	고용	〉	유해환경 단속	〉	국제활동		
대학생	사회통합	〉	위기지원	〉	고용	〉	국제활동	〉	여가활동	〉	교육				
모든 연령	교육	〉	여가활동	〉	사회통합	〉	국제활동								

초등생, 중고생, 대학생 등 특정 연령집단에 집중된 사업은 사회통합이나 위기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예산투자가 많았고 초중고생, 모든 연령 등 연령구분 없이 실시되는 사업은 청소년교육영역에 대한 예산투입이 많았다. 청소년 교육정책은 대학생보다는 초, 중, 고생에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고용이나 국제활동 영역은 대학생에게 가장 비중 있는 영역이었고, 여가활동정책은 모든 초중고생을 핵심 대상으로 하고 있다. 청소년 건강이나 참여정책은 중고생만을 대상으로 하는 유일한 정책영역이며, 가족지원정책은 초등학생만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영역으로 나타났다. 반면 위기청소년 지원정책은 초, 중, 고, 대학생 모두에게 가장 비중 있는 정책으로 수행되고 있었다.

3) 청소년유형별 사업추진 현황

(1) 청소년유형별 현황

<표 Ⅲ-30>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사업 중 사업대상을 일반청소년과 위기청소년으로 분류하여 사업수와 예산을 나타낸 것이다. 청소년 유형별로 볼 때 일반청소년(93개)을 위한 과제는 전체 과제 수의 64.6%를 차지하고, 위기청소년(51개)은 35.4%를 차지한다. 그러나 예산에 있어서는 위기청소년을 위한 예산이 전체 예산의 76.3%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표 Ⅲ-30 청소년 유형별 사업 수 및 예산

청소년 유형	과제 수		예산	
	개	퍼센트(%)	단위: 백만원	퍼센트(%)
일반청소년	93	64.6	337,177	23.7
위기청소년	51	35.4	1,088,014	76.3
계	144	100.0	1,425,192	100.0

*출처: 여성가족부 (2011d), 제4차 청소년정책(수정·보안)기본계획 2011년도 시행계획: 중앙행정기관, 서울: 여성가족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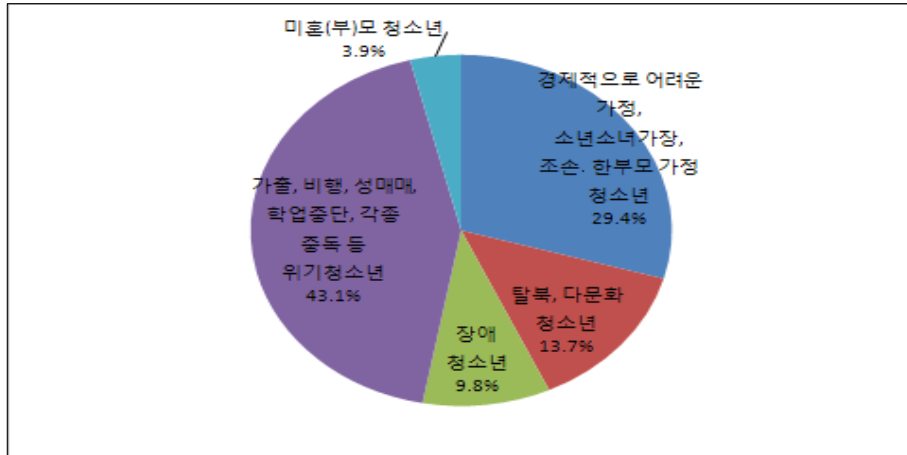
(2) 청소년 위기유형별 현황

〈표 Ⅲ-31〉은 위기청소년 대상 사업을 분류하면서 세부적으로 위기유형을 분류한 결과이다. 위기 청소년의 위기유형별 사업 추진현황을 보면 사업 수는 가출, 비행, 성매매, 학업중단, 중독 등 위기청소년 대상 사업(22개)이 43.1%를 차지하고 있었고 다음으로 빈곤 등 해체가정 청소년 대상 사업(15개) 29.4%, 탈북·다문화 청소년 대상 사업(7개) 13.7%, 장애청소년(5개) 9.8%, 미혼(부)모 청소년(2개) 3.9% 순으로 나타났다(〔그림 Ⅲ-11〕 참조).

표 Ⅲ-31 청소년 위기유형별 사업 수 및 예산

청소년 위기유형	과제 수		예산	
	개	퍼센트(%)	백만원	퍼센트(%)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 소년소녀가장, 조손·한부모 가정 청소년	15	29.4	951,602	87.5
탈북, 다문화 청소년	7	13.7	19,226	1.8
장애청소년	5	9.8	10,150	0.9
가출, 비행, 성매매, 학업중단, 각종 중독 등 위기청소년	22	43.1	97,795	9.0
미혼(부)모 청소년	2	3.9	9,240	0.8
계	51	100.0	1,088,014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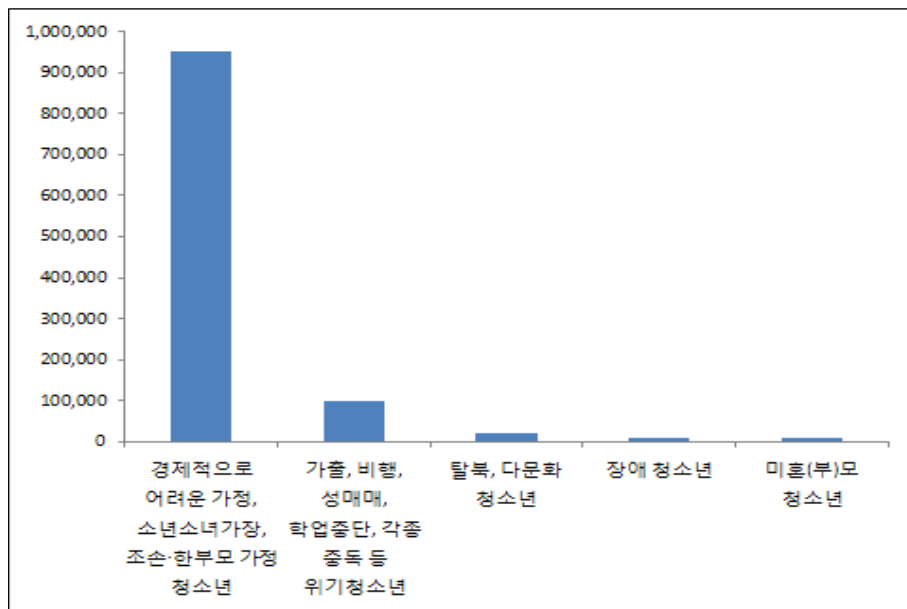
*출처: 여성가족부 (2011d), 제4차 청소년정책(수정·보안)기본계획 2011년도 시행계획: 중앙행정기관, 서울: 여성가족부.



【그림 Ⅲ-11】 청소년 위기유형별 사업 수 비중(N=51)

*출처: 여성가족부 (2011d). 제4차 청소년정책(수정·보안)기본계획 2011년도 시행계획: 중앙행정기관. 서울: 여성가족부.

단위: 백만원



【그림 Ⅲ-12】 청소년 위기유형별 사업 예산

*출처: 여성가족부 (2011d). 제4차 청소년정책(수정·보안)기본계획 2011년도 시행계획: 중앙행정기관. 서울: 여성가족부.

그러나 예산규모 상으로는 빈곤 등 해체가정 청소년에 대한 지원(9,516억 원)이 월등하게 높았다. 다음은 가출, 비행, 성매매, 학업중단, 중독 등 위기청소년에 대한 지원으로(977억 원) 나타났는데

이는 다양한 위기를 겪고 있는 청소년에 대한 교육프로그램 지원사업이 많기 때문이다. 이어 탈북·다문화 청소년에 대한 경제적 지원(192억 원)이 뒤를 잇고 있다(【그림 Ⅲ-12】 참조).

(3) 부처별·청소년 유형별 현황

표 Ⅲ-32 부처별 청소년 유형별 사업 수 및 예산

단위:개, 백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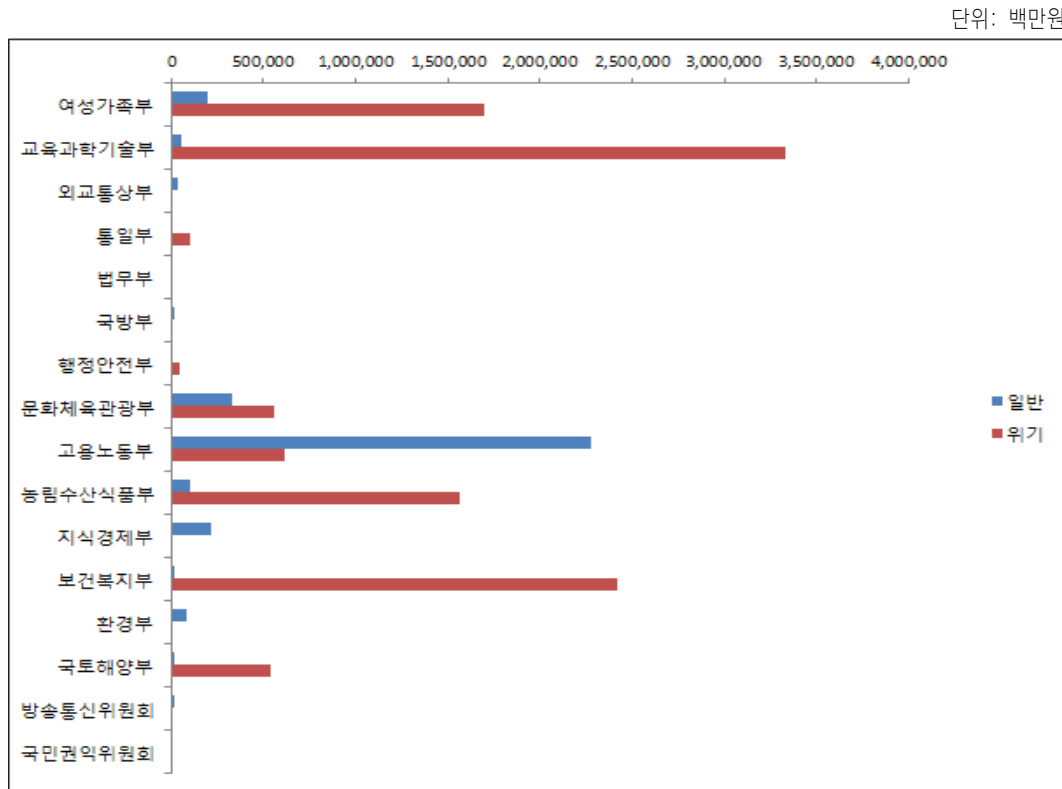
	과제 수		예산		A-B
	일반청소년	위기청소년	일반청소년(A)	위기청소년(B)	
여성가족부	2	17	19,751	169,775	-150,024
교육과학기술부	10	4	5,313	333,618	-328,305
외교통상부	12	0	3,697	0	3,697
통일부	0	3	0	10,323	-10,323
법무부	2	8	40	0	40
국방부	2	0	1,472	0	1,472
행정안전부	3	1	779	4,662	-3,883
문화체육관광부	16	9	32,793	56,089	-23,296
고용노동부	4	1	227,446	61,167	166,279
농림수산식품부	2	2	10,169	156,422	-146,253
지식경제부	8	0	21,810	0	21,810
보건복지부	4	5	1,900	242,307	-240,407
환경부	1	0	8,606	0	8,606
국토해양부	1	1	1,350	53,650	-52,300
방송통신위원회	1	0	1,337	0	1,337
국민권익위원회	1	0	712	0	712

* (+) 보편적, (-) 선별적

*출처: 여성가족부 (2011d), 제4차 청소년정책(수정·보안)기본계획 2011년도 시행계획: 중앙행정기관, 서울: 여성가족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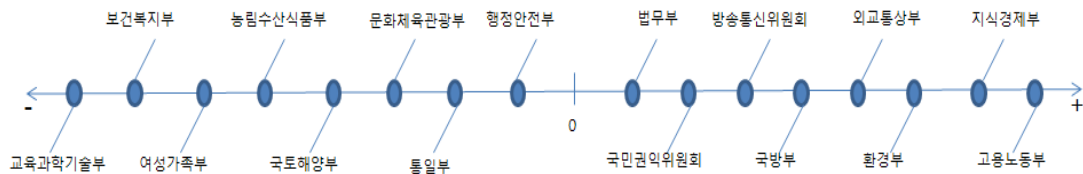
〈표 Ⅲ-32〉는 부처별로 일반청소년과 위기청소년을 구분하여 과제 수와 예산액을 나타낸 것이다. 일반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은 문화관광부의 사업(16개)이 가장 많았고 외교통상부(12개), 교육과학기술부(10개)가 그 뒤를 잇고 있었다. 그러나 예산에 있어서는 고용노동부(2,274억 원)가 청소년정책에 투입하는 예산이 가장 많았다. 이는 직업훈련과 청년인턴제사업과 관련하여 정부보조금 지급이 많기 때문이다. 이어 문화체육관광부(327억 원), 지식경제부(218억 원), 여성가족부(197억 원)의 순이었다.

위기청소년의 경우 사업 수에 있어서는 여성가족부(17개)가 가장 많고 문화체육관광부(9개), 법무부(8개), 보건복지부(5개)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예산측면에서는 교육과학기술부(3,336억 원)가 가장 많았다. 이것은 저소득 빈곤 가정 청소년에 대한 학자금 및 장학금 지원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기 때문이다. 이어서 보건복지부(2,423억 원), 여성가족부(1,697억 원)의 순이었다.



【그림 Ⅲ-13】 부처별 청소년유형별 사업예산 현황

*출처: 여성가족부 (2011d), 제4차 청소년정책(수정·보안)기본계획 2011년도 시행계획: 중앙행정기관. 서울: 여성가족부.



【그림 Ⅲ-14】 부처별 청소년유형별 사업예산 격차

【그림 Ⅲ-13】은 일반청소년과 위기청소년에 대한 각 부처별 투입 예산을 비교한 것이다. 【그림 Ⅲ-14】는 양 집단을 대상으로 한 사업 예산의 격차(표 Ⅲ-32 A-B) 값을 일직선상에서 표시한 것이다¹⁰⁾. (+) 값으로 갈수록 (0을 기준으로 오른쪽으로 갈수록) 일반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사업예산이 많은 부처, 보편적 투자를 많이 하는 부처이며 (-) 값으로 갈수록 (0을 기준으로 왼쪽으로 갈수록) 위기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사업이 많은 부처, 선별적 투자를 많이 하는 부처이다.

교과부와 복지부, 여가부, 농림부, 국토부, 문화부, 통일부, 행안부 순으로 위기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예산이 더 많다. 고용부, 지경부, 환경부, 외교부, 국방부, 방통위, 권익위, 법무부 순으로 일반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사업예산이 더 많다.

교과부, 여가부, 문화부 등이 청소년사업으로 일반청소년보다 위기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사업예산을 더 많이 투입하고 있다는 점은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다. 물론 본 연구에서 분석한 것은 해당 부처가 여성가족부에 제출한 사업성 예산 만이므로 이러한 제한점을 고려해야 한다.

법무부의 경우 위기청소년대상 사업은 모두 비예산으로 수행하고 있고 2011년도 시행계획 상 예산사업으로 추진한 것은 초등학생 대상 가족관계 상담 및 보호자와 함께 하는 캠프지원 사업이었기 때문에 보편적 투자 부처로 표시되었다.

(4) 부처별 · 청소년 위기유형별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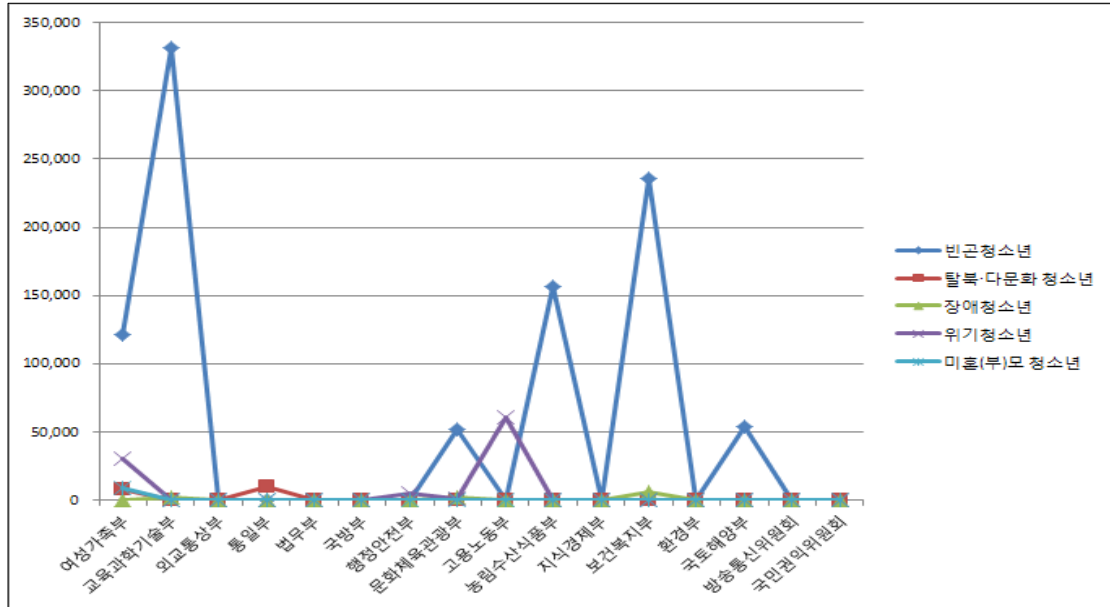
〈표 Ⅲ-33〉은 부처별 청소년 위기유형에 따른 사업 수와 예산을 나타낸 것이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 조손가정, 한부모 가정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부처는 문화체육관광부(4개), 보건복지부(4개)와 여성가족부(3개), 농수산식품부(2개), 교육과학기술부(1개), 국토해양부(1개) 등 총 6개 부처였다. 가출, 비행, 성매매, 학업중단 등 위기청소년을 대상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부처 역시 6개 부처였는데 여성가족부(10개)와 법무부(8개)에서 가장 많은 사업을 수행하고 있었고 교과부, 행안부, 문화부, 고용부에서는 각각 1개 과제 씩 수행하고 있었다.

탈북 · 다문화청소년에 대한 사업은 여가부(3개), 통일부(3개), 문화부(1개) 등 3개 부처였으며 장애청소년에 대한 사업은 교과부(1개), 문화부(3개), 복지부(1개) 등 3개 부처였다. 미혼부모 청소년에 대한 사업은 여가부(1개)와 교과부(1개) 등 2개 부처에서 실시하고 있었다.

10) 간격은 수치 차를 반영하기보다 순위 차를 반영함.

많았는데 이는 학교중도탈락, 가출청소년 등 학교밖 청소년에 대한 취업성공패키지사업 예산이 많았기 때문이다.

단위: 백만원



【그림 Ⅲ-15】 부처별 위기유형별 사업예산

*출처: 여성가족부 (2011d), 제4차 청소년정책(수정·보안)기본계획 2011년도 시행계획: 중앙행정기관, 서울: 여성가족부.

표 Ⅲ-34 청소년 위기유형별 사업예산 상위 부처

정책영역	여가부	교과부	통일부	행안부	문화부	고용부	농림부	복지부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 조손·한부모 가정 청소년		◎					○	◎
탈북·다문화 청소년	◎		◎		○			
장애청소년		◎			○			◎
가출, 비행, 성매매, 학업중단 등 위기청소년	◎			○		◎		
미혼(부)모 청소년	◎							

*1순위:◎, 2순위:◎, 3순위:○

〈표 Ⅲ-34〉는 청소년 위기유형별로 사업예산 투자를 많이 하는 상위 부처를 요약한 것이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소년에 대한 개입은 교과부, 복지부, 농림부 순으로, 탈북·다문화청소년에 대한 개입은

통일부, 여가부, 문화부 순으로, 장애청소년에 대한 개입은 복지부, 교과부, 문화부 순으로, 가출, 비행, 성매매, 학업중단 등 위기청소년에 대한 개입은 고용부, 여가부, 행안부 순으로 나타났다. 미혼(부)모 청소년에 대한 사업은 여성가족부에서만 실시되고 있었다.

(5) 청소년유형별 · 정책영역별 사업 현황

표 Ⅲ-35 청소년 유형별 · 정책영역별 사업 수 및 예산현황

단위:개, 백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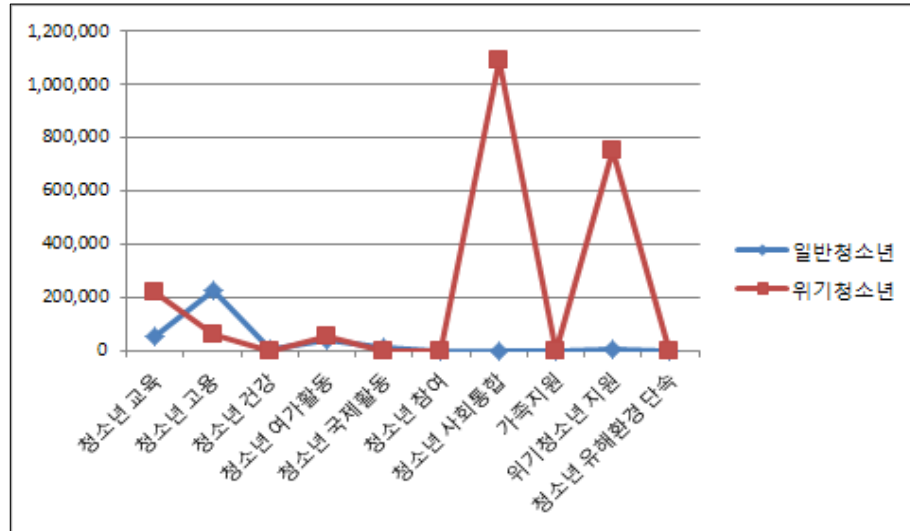
정책영역	과제 수		예산	
	일반청소년	위기청소년	일반청소년	위기청소년
청소년 교육	31	2	51,750	218,476
청소년 고용	6	5	228,646	63,221
청소년 건강	5	0	1,833	0
청소년 여가활동	19	8	40,109	54,589
청소년 국제활동	16	0	10,010	0
청소년 참여	5	0	963	0
청소년 사회통합	0	51	0	1,088,014
가족지원	6	0	55	0
위기청소년 지원	3	35	2,583	751,728
청소년 유해환경 단속	2	1	1,226	0

*출처: 여성가족부 (2011d), 제4차 청소년정책(수정·보안)기본계획 2011년도 시행계획: 중앙행정기관, 서울: 여성가족부.

〈표 Ⅲ-35〉는 청소년유형별 · 정책영역별 사업 수 및 예산 현황을 나타낸 것이다. 일반청소년 대상 사업은 사업과제 수는 청소년교육(31개), 여가활동(19개), 국제활동(16개), 고용 · 가족지원(6개), 건강 · 참여(5개), 위기지원(3개), 유해환경단속(2개) 순으로 나타났다. 위기청소년대상 사업은 사회통합에 전부 포함되어 있고 그 이외 정책영역을 살펴보면 위기지원(35개), 여가활동(8개), 고용(5개), 교육(2개), 유해환경단속(1개) 순이었다.

【그림 Ⅲ-16】은 청소년유형별 · 정책영역별 예산현황을 나타낸 것이다. 일반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사업예산은 청소년고용(2,286억 원), 청소년교육(517억 원), 여가활동(401억 원), 국제활동(100억 원) 순이었으며 그 다음은 위기지원(25억 원), 건강(18억 원), 유해환경 단속(12억 원), 참여(9억 원), 가족지원(5천만원)의 순이었다. 위기청소년을 위한 사업예산은 모두 사회통합영역(1조 880억 원), 교육(2,184억 원), 고용(632억 원), 여가활동(545억 원)의 순이었다¹¹⁾.

단위: 백만원



【그림 Ⅲ-16】 청소년 유형별 · 정책영역별 사업예산

*출처: 여성가족부 (2011d). 제4차 청소년정책(수정·보안)기본계획 2011년도 시행계획: 중앙행정기관, 서울: 여성가족부.

4) 부처별 사업전달체계 현황

(1) 전달체계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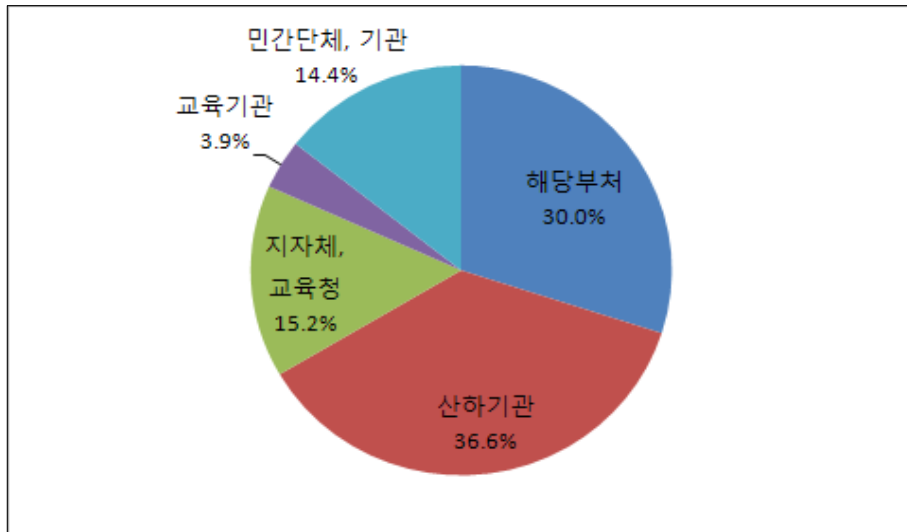
사업전달체계는 해당 부처 자체적으로 하는 경우, 해당 부처 산하 실행기관을 통해 실시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나 교육청 등 전달체계를 활용하는 경우, 교육기관(학교나 대학)을 활용하는 경우, 민간단체나 기관을 통해서 실행하는 경우로 분류하였다.

【그림 Ⅲ-17】은 과제 수 기준으로 사업전달체계 비중을 나타낸 것이다. 사업은 산하기관(36.6%)을 통하거나 해당 부처(30.0%)가 직접 수행하는 경우가 많았고, 지자체나 교육청(15.2%), 민간단체 · 기관(14.4%)을 통해 수행하는 경우가 그 다음이었다.

그러나 【그림 Ⅲ-18】 예산을 기준으로 사업전달체계별 비중을 볼 때 산하기관의 비중이 14.2%로 감소하는 대신 지자체나 교육청(26.6%), 민간단체나 기관(27.3%)의 비중은 늘어났다. 이는 해당 부처, 산하기관이 실행하는 과제는 비예산사업으로, 지자체 · 지방교육청, 민간단체 · 기관을 통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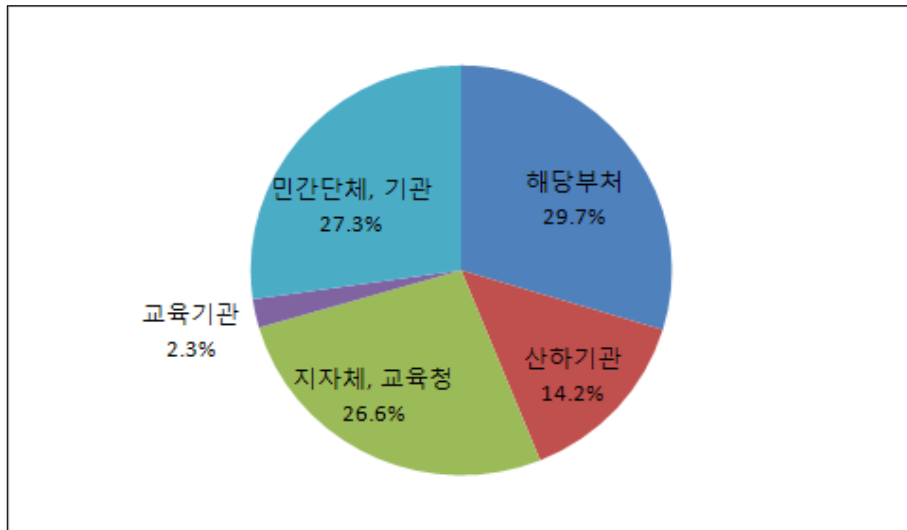
11) 위기지원영역 예산전액(7,510억원)은 사회통합영역(1조 880억원)에 포함되어 있다.

하는 과제는 예산사업으로 실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보인다. 청소년정책은 지자체나 교육청의 관심, 민간의 사업수행역량을 통해 발전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업전달체계의 발전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예산투입을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림 III-17】 전달체계별 사업 수 비중

*출처: 여성가족부 (2011d). 제4차 청소년정책(수정·보안)기본계획 2011년도 시행계획: 중앙행정기관. 서울: 여성가족부.



【그림 III-18】 전달체계별 사업예산 비중

*출처: 여성가족부 (2011d). 제4차 청소년정책(수정·보안)기본계획 2011년도 시행계획: 중앙행정기관. 서울: 여성가족부.

(2) 부처별 사업전달체계 현황

표 Ⅲ-36 부처별 · 전달체계별 사업 수 및 예산

단위:개, 백만원

	합계		과제 수					예 산					민간 단체 배분율 (B/A)
	과 제	예산 (A)	부처 자체	산하 기관	지자체 교육청	교육 기관	민간 단체	부처 자체	산하 기관	지자체 교육청	교육 기관	민간 단체 (B)	
여성가족부	88	364,250	19	41	11	0	17	23,015	52,379	260,250	0	28,606	7.9%
교육과학기술부	35	540,696	8	5	15	3	4	335,545	68,730	136,096	325	0	0.0%
외교통상부	12	3,697	6	5	0	1	0	557	1,885	0	1,255	0	0.0%
통일부	3	10,323	1	1	0	0	1	1,190	3,614	0	0	5,519	53.5%
법무부	18	1,099	4	14	0	0	0	1,059	40	0	0	0	0.0%
국방부	2	1,472	0	1	0	0	1	0	0	0	0	1,472	100.0%
행정안전부	16	14,667	12	0	3	1	0	7,119	0	7,540	8	0	0.0%
문화체육관광부	33	125,863	7	15	4	2	5	59,191	4,077	28,908	26,990	6,697	5.3%
고용노동부	8	398,795	2	2	0	2	2	99,243	72,106	0	15,166	212,280	53.2%
농림수산식품부	6	182,883	0	1	2	0	3	0	8,847	74,984	0	99,052	54.2%
지식경제부	9	21,810	2	6	1	0	0	1,200	15,610	5,000	0	0	0.0%
보건복지부	13	254,916	7	0	2	1	3	49,320	0	17,094	1,050	187,452	73.5%
환경부	2	8,786	2	0	0	0	0	8,786	0	0	0	0	0.0%
국토해양부	4	55,000	1	1	1	0	1	0	53,650	0	0	1,350	2.5%
방송통신위원회	7	5,430	5	2	0	0	0	3,843	1,587	0	0	0	0.0%
국민권익위원회	1	712	1	0	0	0	0	712	0	0	0	0	0.0%
계	257	1,990,402	77	94	39	10	37	590,780	282,525	529,873	44,794	542,429	27.3%
비율(%)	100.0	100.0	30.0	36.6	15.2	3.9	14.4	29.7	14.2	26.6	2.3	27.3	

*출처: 여성가족부 (2011d). 제4차 청소년정책(수정·보안)기본계획 2011년도 시행계획: 중앙행정기관. 서울: 여성가족부.

〈표 Ⅲ-36〉은 부처별 사업 전달체계 현황을 나타낸 것이다. 과제 수가 10개 이상 되는 7개 부처는 여성가족부(88개), 교육과학기술부(35개), 문화체육관광부(33개), 법무부(18개), 행정안전부(16개), 보건복지부(13개), 외교통상부(12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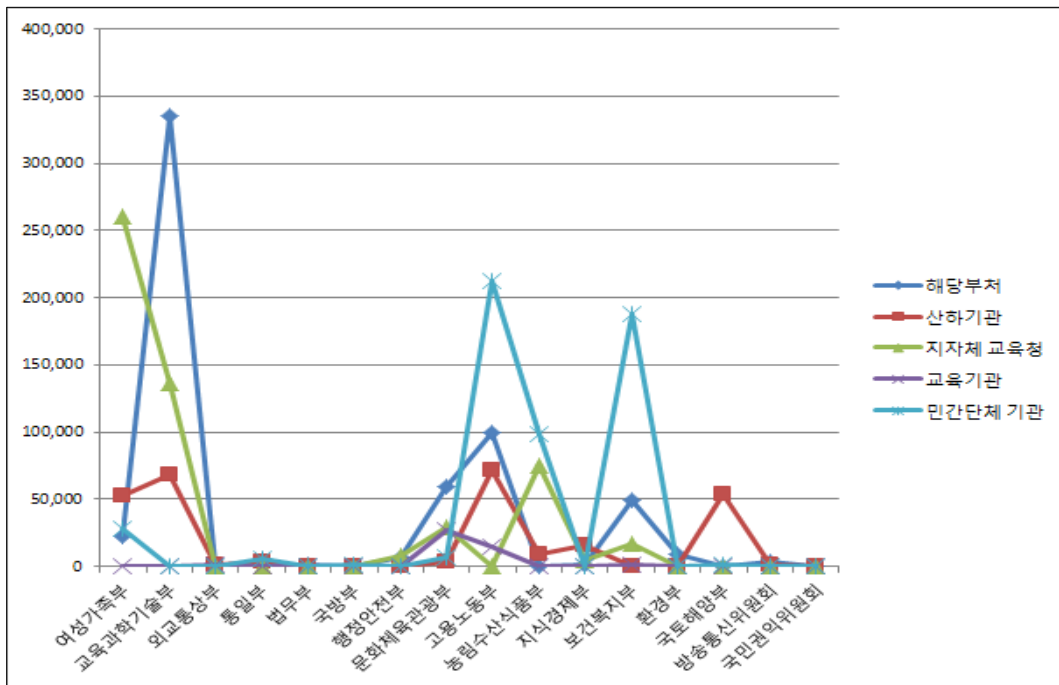
이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여성가족부는 대부분 산하 실행기관(41개)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았고, 다음으로 부처가 직접 수행(19개)하거나 민간단체나 기관(17개)을 통해 사업을 수행하고 있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교육청(15개)이 가장 많았고 부처 자체(8개), 산하기관(5개), 민간단체나 기관(4개)의 순으로 나타나 교육청과 해당부처가 가장 중요한 전달체계였다.

문화체육관광부의 경우 산하 실행기관(15개)이 가장 많았고 해당부처(7개), 민간단체나 기관(5개)이 사업을 운영하는 순으로 나타났다. 법무부는 전체 18개 과제 중 대부분의 과제를 산하기관(14개), 법무부 자체(4개)에서 수행하고 다른 전달체계는 활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해당부처(12개)가 대부분의 과제를 수행하였고, 지자체(3개), 교육기관(1개)의 순서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비교적 다양한 전달체계를 활용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해당부처(7개)에서 전체 과제의 절반 정도를 수행하였고, 이어서 민간단체나 기관(3개), 지자체(2개), 교육기관(1개)의 순으로 나타났다. 외교통상부는 전체 과제(12개) 중 대부분이 해당부처(6개)와 산하기관(5개)에서 수행되었고 나머지 1개 과제가 교육기관에서 수행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위: 백만원



【그림 Ⅲ-19】 부처별 · 전달체계별 예산 현황

*출처: 여성가족부 (2011d), 제4차 청소년정책(수정·보안)기본계획 2011년도 시행계획: 중앙행정기관. 서울: 여성가족부.

【그림 Ⅲ-19】는 사업예산을 기준으로 전달체계 현황을 살펴본 것이다. 사업예산이 1,000억 원 이상 되는 6개 부처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교육과학기술부의 경우 부처 자체적으로 사용하는 사업비 (3,355억 원)가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은 지방교육청(1,366억 원)에서 사용되는 예산이 많았고 이어서 산하 실행기관(687억 원)에서 사용되었으며, 민간기관 및 단체에서 사용되는 예산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로 고용노동부는 민간단체나 기관(2,122억 원)에서 사용되는 예산이 가장 많았고 이어서 부처 자체(992억 원), 산하 실행기관(721억 원) 순이었다. 여성가족부는 지자체 (2,602억 원)로 전달되는 예산이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이 산하 실행기관(523억 원), 민간단체·기관(286억 원) 순이었으며 나머지는 부처 자체(230억 원)적으로 집행하였다.

보건복지부의 경우 민간단체나 기관(1,874억 원)에서 가장 많은 예산이 사용되었고, 해당부처(493억 원), 지자체(170억 원), 교육기관(10억 원) 순이었다. 농림수산물식품부는 민간단체나 기관(990억 원)에서 가장 많은 예산이 사용되었으며 다음으로 지자체(749억 원), 산하기관(88억 원), 부처 자체와 교육기관을 통해 사용되는 예산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모든 종류의 전달체계를 활용하여 예산이 분산·집행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부처 자체(591억 원)에서 가장 많은 예산이 집행되었고 이어서 지자체(289억 원), 교육기관(269억 원), 민간단체(66억 원), 산하기관(40억 원)의 순으로 사용되었다.

요약하면, 교육과학기술부, 문화체육관광부, 법무부, 환경부 등은 부처 자체적으로 집행하는 예산액이 가장 높다. <표 Ⅲ-36> 부처별 예산집행에 있어 민간단체 배분율을 살펴보면 국방부, 복지부, 농림부, 통일부, 고용부는 전체 사업비의 50%이상을 민간단체에 배분하고 있어 청소년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민간단체 중심 사업전달체계를 갖고 있다. 민간청소년단체 지원 등 청소년정책 활성화를 추진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여가부의 민간 배분율이 7.9% 수준에 머문다는 것은 전달체계 상에 문제가 있음을 보여준다.

3. 부처별 청소년정책 추진현황에 대한 종합¹²⁾

1) 부처별 정책추진 현황

2011년 현재 35개 중앙행정기관(15부 2처 18청) 중 청소년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곳은 27개 기관이다. 정부조직법에 아동·청소년 관련 업무를 직접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곳은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2개 부처이며 유아와 학교청소년을 포함시키면 교육과학기술부까지 3개 부처이다.

그러나 정부조직법에는 규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직제규정에 청소년 관련 업무를 규정하고 있는

12) 이 부분은 윤철경 선임연구위원이 집필하였음.

부처가 상당수이다. 여성가족부의 관장사무 중에는 다른 부처의 관장사무와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것이 많다. 유해매체물에 대해서는 문화부와 방송위원회, 인터넷 중독에 대해서는 교과부와 행안부, 다문화가정에 대해서는 교과부와 복지부에서도 추진하고 있어 여성가족부와 중복이 되고 있다. 2011년도 제4차 청소년정책 시행계획(중앙행정기관)을 기초로 행정 각부가 추진하고 있는 청소년관련 정책을 분석하여 종합한 결과는 <표 Ⅲ-37>과 같다. <표 Ⅲ-37>에 의하면 청소년 관련 예산규모는 교과부, 고용부, 여가부, 복지부, 농림부, 문화부, 국토부 순으로 규모가 크다(이상은 1,000억 원 이상). 각 부처가 중점적으로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영역을 살펴보면, 여가부, 교과부, 통일부, 농림부, 복지부, 국토부 등이 사회통합·위기지원에 대한 예산 투입이 많은 부처이다. 사회통합

표 Ⅲ-37 부처별 청소년정책 추진 현황 종합

부처	예산 순위	영역별 예산투입 순위	주요 정책대상			전달체계 ¹³⁾ (민간단체 예산배분율)
			연령 집단	일반/ 위기	중점 위기유형	
여성가족부	3	사회통합 > 위기지원 > 여가활동	중고생	선별적	빈곤	공공전달체계
교육과학기술부	1	위기지원 > 사회통합 > 유해환경	대학생	선별적	빈곤	공공전달체계
외교통상부	13	국제 활동	대학생	보편적	-	공공전달체계
통일부	10	사회통합	중고생	선별적	탈북	민간전달체계
법무부	15	유해환경 > 가족지원	초등생	보편적	-	공공전달체계
국방부	14	교육	모든 연령	보편적	-	공공전달체계
행정안전부	9	교육 > 사회통합 > 위기지원	중고생	선별적	위기	공공전달체계
문화체육관광부	6	여가활동 > 사회통합 > 가족지원	중고생	선별적	빈곤	공공전달체계
고용노동부	2	고용 > 교육 > 사회통합	대학생	보편적	위기	민간전달체계
농림수산식품부	5	사회통합·위기지원 > 여가활동	대학생	선별적	빈곤	민간전달체계
지식경제부	8	교육 > 고용 > 유해환경	초중고생	보편적	-	공공전달체계
보건복지부	4	사회통합 > 교육 > 위기지원	초중고생	선별적	빈곤	민간전달체계
환경부	11	교육	초중고생	보편적	-	공공전달체계
국토해양부	7	사회통합·위기지원 > 여가활동	중고생	선별적	빈곤	공공전달체계
방송통신위원회	12	유해환경	초등생	보편적	-	공공전달체계
국민권익위원회	16	교육	모든 연령	보편적	-	공공전달체계

13) 민간단체에 배분한 예산이 50%를 넘을 때 민간전달체계로 분류하였고 그 이하는 공공전달체계가 더 강한 것으로 보았음.

다음으로는 교육에 대한 예산투입이 많다. 국방부·행안부, 지경부, 환경부, 국민권익위원회는 교육에 대한 투자를 가장 많이 하고 있다.

이 외에 법무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유해환경 관련 사업에, 외교부는 국제 활동, 문화부는 여가활동, 고용부는 고용지원에 가장 많은 예산이 투입된다.

연령집단별로 볼 때 교과부, 외교부, 고용부, 농림부는 대학생에, 여가부, 통일부, 행안부, 문화부, 국토부는 중고생에 중점적으로 투자하고 있으며 그 외 지경부, 복지부, 환경부 등은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많았다. 법무부와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초·중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있었다.

부처별 청소년유형에 대한 예산투자를 살펴볼 때 일반청소년에 대한 투자가 많은 부처는 외교부, 법무부, 국방부, 고용부, 지경부, 환경부, 방송위, 국민권익위원회이며 위기청소년에 대한 예산투자가 많은 부처는 여가부, 교과부, 통일부, 행안부, 문화부, 농림부, 복지부, 국토부이다.

이들 부처는 위기유형 청소년 중 빈곤 청소년에 가장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었으며 통일부는 탈북 청소년에, 행안부와 고용부는 위기청소년에 가장 많은 예산을 투입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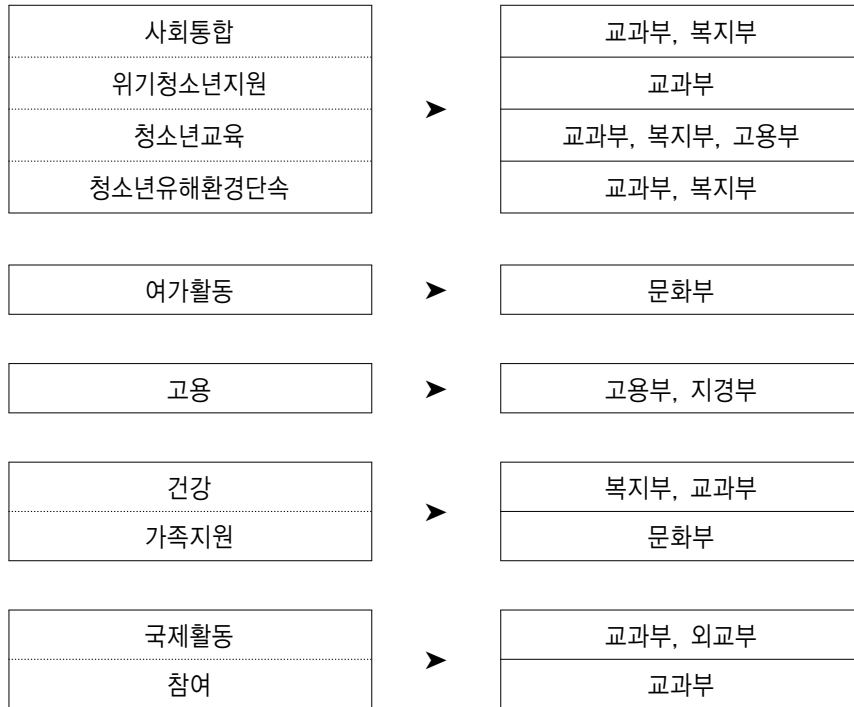
행정 각부의 사업전달체계는 서로 차이가 있다. 각 부처는 대체로 부처 산하기관이나 지자체를 통해, 아니면 부처 자체적으로 사업을 실시하는 공공전달체계를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통일부, 고용부, 농림부, 복지부는 타 부처에 비해 민간기관·단체에 사업예산을 배분하는 비율이 50%를 넘어 이들을 통한 청소년사업 전달체계가 강했다.

2) 총괄조정 우선순위 정책 영역 및 해당 부처

해당 정책영역에 대한 개입부처수와 예산규모를 고려하였을 때 총괄조정해야 할 정책영역의 우선순위는 【그림 Ⅲ-20】과 같다.

【그림 Ⅲ-20】은 총괄조정 우선순위 영역과 해당 영역의 정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부처를 나타낸 것이다. 위에 있는 정책영역일수록 개입부처 수가 많고 예산규모도 커서 총괄조정이 더 필요한 영역이다. 건강과 가족지원은 아직 예산규모는 작으나 사회적 수요의 급증으로 인해 정책확대가 요청되는 영역이다.

영역별 총괄조정 대상 부처를 보았을 때 교과부가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이 복지부이다. 청소년정책의 중점 영역이라 할 수 있는 여가활동(청소년활동)과 관련해서는 문화부, 국제활동과 관련해서는 외교부가 총괄조정을 위해 상대해야 할 부처임을 알 수 있다.



【그림 Ⅲ-20】 총괄조정 우선순위 정책영역과 상대부처

3) 연령집단별 · 정책영역별 예산투입 현황

표 Ⅲ-38 연령집단별 청소년정책 영역의 예산 순위

연령집단	예산투자 순위
초등생	사회통합 > 위기지원 > 여가활동 > 교육 > 유해환경 단속 > 가족지원
중고생	사회통합 > 위기지원 > 고용 > 여가활동 > 교육 > 참여활동 > 건강 > 국제활동
초중고생	교육 > 사회통합 > 여가활동 > 위기지원 > 고용 > 유해환경 단속 > 국제활동
대학생	사회통합 > 위기지원 > 고용 > 국제활동 > 여가활동 > 교육
모든 연령	교육 > 여가활동 > 사회통합 > 국제활동

〈표 Ⅲ-38〉은 연령집단별 예산이 투자되고 있는 순위이다. 초등생, 중고생, 대학생 등 특정

연령집단에 집중된 사업은 사회통합이나 위기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예산투자가 많았으며 초중고생, 모든 연령 등 연령구분 없이 모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사업은 청소년교육영역 사업이 많았다. 모든 연령집단에서 사회통합과 위기지원이 가장 강조되었다. 차이가 있다면 초중고생에게는 여가활동이, 대학생에게는 고용이 그 다음으로 강조되는 영역이었다.

4) 청소년유형별 · 정책영역별 예산투자 현황

표 Ⅲ-39 청소년유형별 · 정책영역별 예산투입 현황 순위

청소년유형	예산투입 순위			
일반청소년	고용	〉	교육	〉 여가활동 〉 국제활동
위기청소년	위기지원	〉	교육	〉 고용 〉 여가활동

〈표 Ⅲ-39〉 청소년 유형별 정책영역에 대한 예산투입 현황을 보면 일반청소년에 대해서는 고용과 교육, 여가활동, 국제활동 순으로 예산이 투입되고 있었다. 위기청소년에 대해서는 위기지원, 교육, 고용, 여가활동 순으로 나타나 일반청소년에 비해 고용보다 위기지원이 강조되었으며 여가활동이 가장 후순위였고 국제활동에 대한 예산투입은 없었다.

제 4 장

설문분석 결과

1. 응답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2. 청소년에 대한 이미지
3. 청소년정책 대상 연령의 우선순위
4. 청소년정책의 당면과제
5. 청소년 정책영역의 중요도
6. 청소년정책사업의 중요도

제 4 장 설문분석 결과*

1. 응답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는 중고생과 대학생, 위기청소년과 학부모 총 4개 집단, 3,705명이었다. 청소년은 중고생 1,107명(중학생 543명, 고등학생 564명), 대학생 598명, 위기청소년 500명으로 총 2,205명이었으며 학부모는 초등학생 학부모 673명, 중학생 학부모 409명, 고등학생 학부모 418명으로 총 1,500명이었다.

〈표 IV-1〉에 따르면 전체적으로 성별은 남자 51.3%, 여자 48.6%였으며 대학생의 경우 2·3년제 대학생이 29.3%, 4년제 대학이 70.7%이었고 전공계열은 인문·사회·교육계열이 32.9%, 이공·의학계열이 34.3%, 예·체능계열이 32.8%였다. 지역은 대도시 46.5%, 중소도시 34.9%, 읍면지역 18.4%였다. 응답자의 주관적 경제수준은 상 7.1%, 중 86.0%, 하 6.9%였다. 가족구성은 양부모가정이 81.3%, 한부모가정이 13.0%, 조손가정이 1.5%였고 기타가정이 4.1%였다. 부모의 직업(맞벌이 여부)를 조사한 결과 외벌이가 37.1%, 맞벌이가 62.9%로 나왔다. 아버지의 학력은 고등학교 졸업 이하 40.5%, 대학졸업 47.9%, 대학원졸업 11.6%, 어머니 학력은 고등학교 졸업 이하 54.7%, 대학졸업 41.7%, 대학원 졸업 3.6%이었다.

표 IV-1 응답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청소년						학부모		전체	
		중고생		대학생		위기청소년					
		N	%	N	%	N	%	N	%	N	%
성별	남	526	47.5	297	49.7	243	48.6	833	55.5	1899	51.3
	여	581	52.5	301	50.3	252	50.4	667	44.5	1801	48.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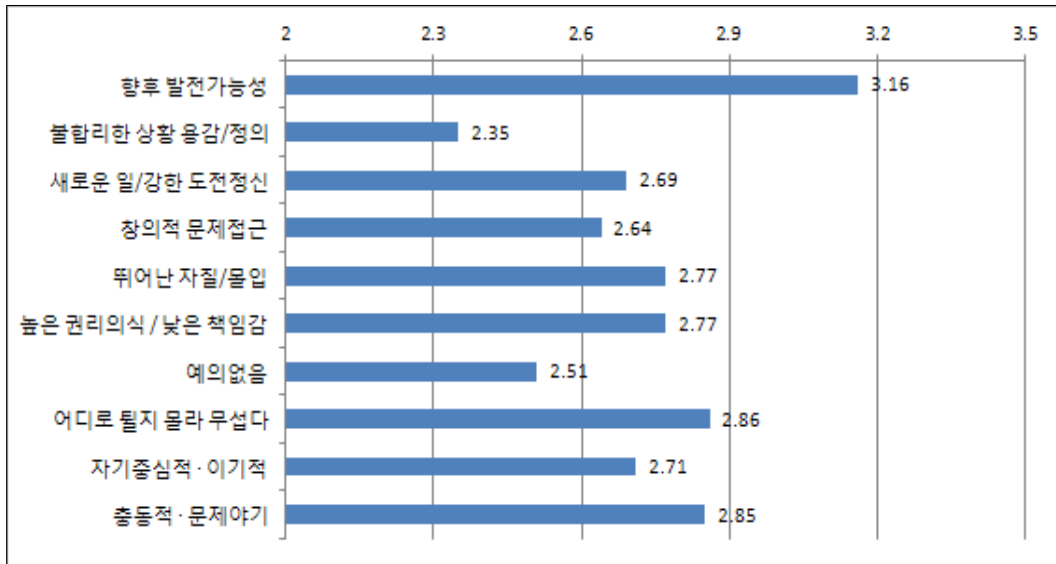
* 이 장은 김진호 교수(한국방송통신대학교 청소년교육과)가 집필하였음.

학교급		중학교	543	49.1	—	—	—	—	—	543	49.1	
		고등학교	564	50.9	—	—	—	—	—	564	50.9	
학교 유형	2·3년제	—	—	175	29.3	—	—	—	—	175	29.3	
	4년제	—	—	423	70.7	—	—	—	—	423	70.7	
전공	인문·사회·교육	—	—	197	32.9	—	—	—	—	197	32.9	
	이공·의학	—	—	205	34.3	—	—	—	—	205	34.3	
	예·체능	—	—	196	32.8	—	—	—	—	196	32.8	
지역	대도시	484	43.7	332	55.5	249	49.8	656	43.7	1721	46.5	
	중소도시	204	18.4	215	36.0	251	50.2	623	41.5	1293	34.9	
	읍면지역	419	37.9	40	6.7	0	0.0	221	14.7	680	18.4	
경제 수준	상	92	8.9	45	7.5	—	—	85	5.7	222	7.1	
	중	849	82.6	510	85.4	—	—	1329	88.6	2688	86.0	
	하	87	8.5	42	7.0	—	—	86	5.7	215	6.9	
가족 구성	양부모가정	953	86.1	538	90.3	164	32.9	1355	90.3	3010	81.3	
	한부모가정	119	10.7	37	6.2	197	39.5	130	8.7	483	13.0	
	조손가정	8	0.7	1	0.2	40	8.0	8	0.5	57	1.5	
	기타	27	2.4	20	3.4	98	19.6	7	0.5	152	4.1	
부모 직업	외벌이	316	33.6	157	29.3	42	38.9	588	42.4	1103	37.1	
	맞벌이	625	66.4	378	70.7	66	61.1	800	57.6	1869	62.9	
부 모 학 력	아 버 지	고졸 이하	421	49.5	282	53.1	167	73.9	115	14.0	985	40.5
		대학 졸업	350	41.1	209	39.4	44	19.5	562	68.3	1165	47.9
	어 머 니	대학원 졸업	80	9.4	40	7.5	15	6.6	146	17.7	281	11.6
		고졸 이하	514	59.3	372	69.4	139	73.9	206	31.2	1231	54.7
		대학 졸업	315	36.3	156	29.1	45	23.9	424	64.1	940	41.7
		대학원 졸업	38	4.4	8	1.5	4	2.1	31	4.7	81	3.6
자녀 학교급	초등학교	—	—	—	—	—	—	673	44.9	673	44.9	
	중학교	—	—	—	—	—	—	409	27.3	409	27.3	
	고등학교	—	—	—	—	—	—	418	27.9	418	27.9	
계		1107	100.0	598	100.0	500	100.0	1500	100.0	3705	100.0	

2. 청소년에 대한 이미지

【그림 IV-1】과 같이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이미지를 조사한 결과 긍정적 측면에 대한 동의정도는 “향후 큰 발전가능성”(3.16)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는 “특정분야에 대한 뛰어난 자질과 몰입”(2.77), “새로운 일에 대한 강한 도전정신”(2.69), “문제에 대한 창의적 접근”(2.64) “불합리한 상황에서 용감/정의”(2.35)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에 기초할 때 청소년과 부모 전체는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발전가능성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높은 긍정적 동의를 보이고 있지만(100점

만점 환산시 79점), 뛰어난 자질과 몰입, 새로운 일에 대한 강한 도전정신, 문제에 대한 창의적 접근에 대해서는 긍정적 동의정도가 높지 않으며(100점 만점 환산 시 각각 69.25점, 67.25점, 66.00점), 불합리한 상황에서의 용감하고 정의로운 이미지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가장 낮게 평가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100점 만점 환산시 58.75점).



【그림 IV-1】 청소년에 대한 이미지: 청소년과 부모 전체(4점 만점)

부정적인 측면에 대한 동의정도는 “어디로 튈지 몰라 무서움”(2.86)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는 “충동적이어서 문제야기”(2.85), “권리의식은 높지만 책임감 없음”(2.77),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2.71), “예의없음”(2.51)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에 기초할 때 청소년과 부모 전체는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부정적 이미지와 관련하여 “어디로 튈지 몰라 무서움”과 “충동적이어서 문제야기”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높은 동의를 보이고 있지만 100점 만점으로 환산시 각각 71.5점, 71.25점으로 높은 수준은 아니며, “권리의식은 높지만 책임감 없음”과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에 대해서는 100점 만점으로 환산시 각각 69.25점, 67.75점의 수준으로 동의하고 있어서 높지 않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예의 없음”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동의를 보이고 있지만, 100점 만점으로 환산시 62.75점의 수준이어서 다른 부정적 이미지에 비해 크게 낮은 점수는 아니라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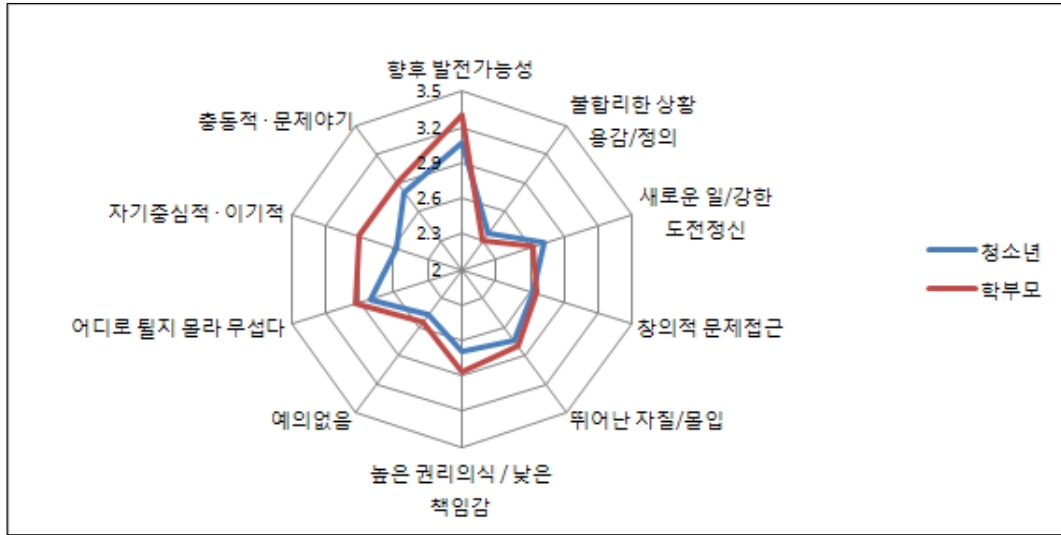
2.5점이 중간 값인데 전체적으로 한 두 문항을 제외하고는 2.5 이상으로 해당항목에 대해 동의하는 것으로 나왔다. 즉 한국의 청소년상은 긍정과 부정이 혼재된 특성을 나타내고 있으며 “향후 큰

발전가능성”다음으로는 “어디로 튈지 몰라 무서움”, “충동적이어서 문제야기”, “권리의식은 높지만 책임감 없음” 등 부정적 이미지에 대한 동의수준이 높게 나와 청소년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가 좀 더 강함을 알 수 있었다.

1) 세대별 차이

【그림 IV-2】, 〈표 IV-2〉와 같이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이미지에 대한 세대별 인식차이를 분석한 결과 긍정적 측면에 대한 동의정도는 청소년은 “향후 발전가능성”(3.07)에 대해서 가장 높게 평가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뛰어난 자질/몰입”(2.75), “새로운 일에 대한 강한 도전정신”(2.73), “문제에 대한 창의적 접근”(2.63), “불합리한 상황에서 용감/정의”(2.38)의 순으로 나타났다. 부모는 “향후 발전가능성”(3.30)에 대해서 가장 높게 평가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뛰어난 자질/몰입”(2.80), “문제에 대한 창의적 접근”(2.65), “새로운 일에 대한 강한 도전정신”(2.62), “불합리한 상황에서 용감/정의”(2.29)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그리고 청소년은 “불합리한 상황에서 용감/정의”와 “새로운 일에 대한 강한 도전정신” 영역에서 부모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부모들은 “향후 발전가능성”(3.30)과 “뛰어난 자질/몰입”(2.80)에서 청소년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부정적 측면에 세대별 인식차이는 청소년은 “어디로 튈지 몰라 무서움”(2.81)과 “충동적이어서 문제야기”(2.81)에 대해 가장 높게 평가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높은 권리의식과 낮은 책임감”(2.70),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2.58), “예의없음”(2.48)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부모는 “어디로 튈지 몰라 무서움”(2.94)에 대해 가장 높게 평가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충동적이어서 문제야기”(2.91),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2.91), “높은 권리의식과 낮은 책임감”(2.86), “예의없음”(2.55)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그리고 “어디로 튈지 몰라 무서움”,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 “충동적이어서 문제야기”, “높은 권리의식과 낮은 책임감”, “예의없음”의 모든 영역에서 부모들은 청소년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은 점수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에 기초할 때 부모는 청소년에 비해 우리나라 청소년의 이미지를 더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림 IV-2】 청소년상에 대한 인식차이 분석: 청소년과 부모

표 IV-2 청소년상에 대한 인식차이 분석: 청소년과 부모

	하부요인	청소년(n=2204)		부모(n=1500)		t값
		Mean	SD	Mean	SD	
긍 정 적	항후 발전가능성	3.07	.748	3.30	.651	-9.270*
	불합리한 상황에서 용감/정의	2.38	.731	2.29	.609	4.082*
	새로운 일에 대한 강한 도전정신	2.73	.752	2.62	.656	4.490*
	문제에 대한 창의적 접근	2.63	.742	2.65	.602	-1.033
	뛰어난 자질/몰입	2.75	.759	2.80	.627	-2.073*
부 정 적	높은 권리의식·낮은 책임감	2.70	.734	2.86	.627	-7.068*
	예의없음	2.48	.794	2.55	.623	-3.100*
	어디로 될지 몰라 무서움	2.81	.790	2.94	.657	-5.553*
	자기중심적·이기적	2.58	.759	2.91	.605	-14.699*
	충동적·문제야기	2.81	.721	2.91	.601	-4.46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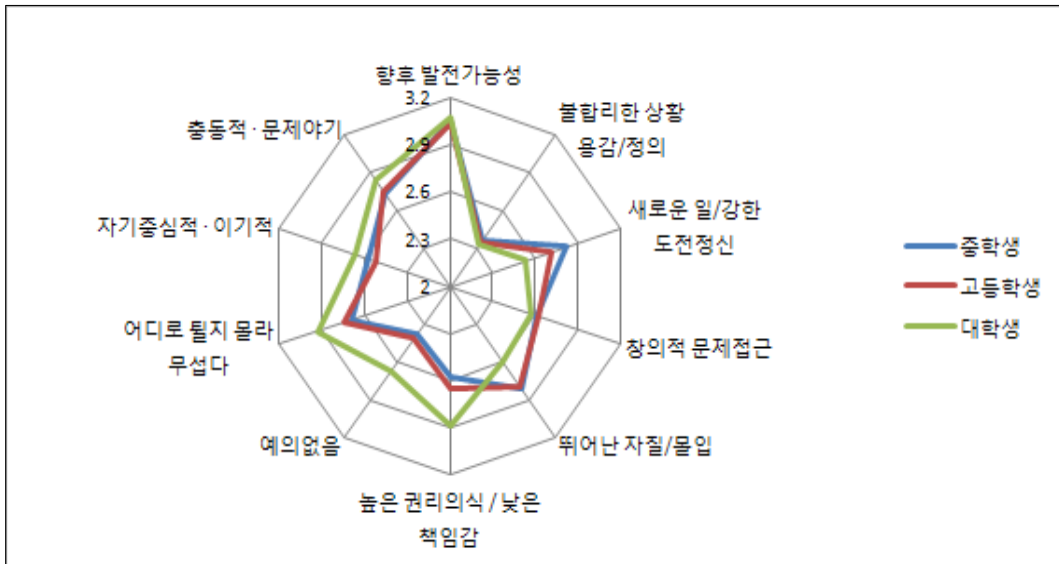
*p<.05

2) 학교급별 차이

【그림 IV-3】, <표 IV-3>과 같이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이미지에 대한 학교급별 차이를 분석한

결과 긍정적 측면에 대해서 중학생들은 “향후 발전가능성”(3.05)을 가장 높게 평가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새로운 일에 대한 강한 도전정신”(2.82), “뛰어난 자질/몰입”(2.81), “문제에 대한 창의적 접근”(2.61), “불합리한 상황에서 용감/정의”(2.36)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고등학생들은 “향후 발전가능성”(3.04)을 가장 높게 평가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뛰어난 자질/몰입”(2.80), “새로운 일에 대한 강한 도전정신”(2.72), “문제에 대한 창의적 접근”(2.62), “불합리한 상황에서 용감/정의”(2.34)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대학생들은 “향후 발전가능성”(3.08), “뛰어난 자질/몰입”(2.60), “문제에 대한 창의적 접근”(2.57), “새로운 일에 대한 강한 도전정신”(2.53), “불합리한 상황에서 용감/정의”(2.33)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그리고 대학생들은 “새로운 일에 대한 강한 도전정신”과 “뛰어난 자질/몰입”에서 중학생이나 고등학생보다 청소년들의 이미지를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정적 측면에 대해서 중학생들은 “어디로 튈지 몰라 무서움”(2.69)을 가장 높게 평가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높은 권리의식과 낮은 책임감”(2.58),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2.57), “충동적이어서 문제야기”(2.74), “예의없음”(2.38)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고등학생은 “어디로 튈지 몰라 무서움”(2.75)과 “충동적이어서 문제야기”(2.75)를 가장 높게 평가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높은 권리의식과 낮은 책임감”(2.66),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2.52), “예의없음”(2.41)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대학생은 “어디로 튈지 몰라 무서움”(2.93)을 가장 높게 평가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높은 권리의식과 낮은 책임감”(2.89), “충동적이어서 문제야기”(2.84), “예의 없음”(2.67),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2.66)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그리고 “높은 권리의식과 낮은 책임감”, “예의없음”, “어디로 튈지 몰라 무서움”에서 대학생들이 중학생과 고등학생보다 청소년들의 이미지를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에서는 대학생이 고등학생보다 청소년들의 이미지를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었으며, “충동적이어서 문제야기”에서는 대학생이 중학생보다 청소년들의 이미지를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IV-3】 청소년상에 대한 인식차이 분석: 학교급별(중, 고, 대)

표 IV-3 청소년상에 대한 인식차이 분석: 학교급별(중, 고, 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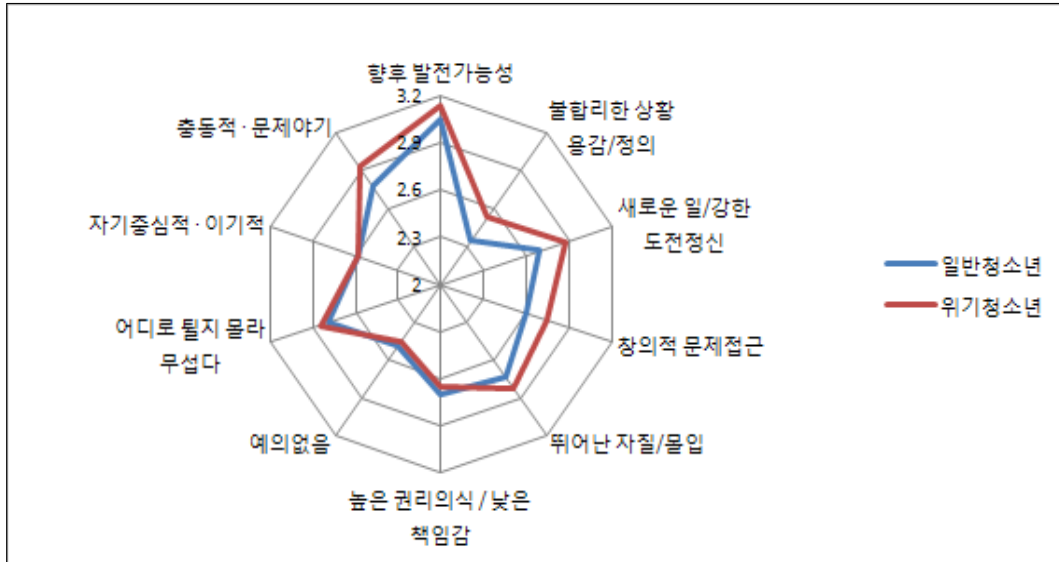
하부요인		중학생 (n=543)	고등학생 (n=564)	대학생 (n=598)	F값	Scheffe
		Mean(SD)	Mean(SD)	Mean(SD)		
긍정적	향후 발전가능성	3.05(.738)	3.04(.763)	3.08(.736)	3.27	-
	불합리한 상황에서 용감/정의	2.36(.683)	2.34(.696)	2.33(.725)	.251	-
	새로운 일에 대한 강한 도전정신	2.82(.724)	2.72(.701)	2.53(.740)	23.116*	대<중, 고
	문제에 대한 창의적 접근	2.61(.726)	2.62(.689)	2.57(.749)	.732	-
	뛰어난 자질/몰입	2.81(.744)	2.80(.740)	2.60(.738)	13.876*	대<중, 고
부정적	높은 권리의식 · 낮은 책임감	2.58(.735)	2.66(.665)	2.89(.739)	30.110*	대>중, 고
	예의없음	2.38(.780)	2.41(.752)	2.67(.779)	25.899*	대>중, 고
	어디로 튈지 몰라 무서움	2.69(.800)	2.75(.736)	2.93(.749)	14.797*	대>중, 고
	자기중심적 · 이기적	2.57(.775)	2.52(.719)	2.66(.715)	5.294*	대>고
	충동적 · 문제야기	2.74(.690)	2.75(.684)	2.84(.695)	4.111*	대>중

*p<.05

3) 일반청소년과 위기청소년의 차이

【그림 IV-4】, 〈표 IV-4〉와 같이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이미지에 대한 일반청소년과 위기청소년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긍정적 측면에 대해서 일반청소년들은 “향후발전가능성”(3.06)을 가장 높게 평가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새로운 일에 대한 강한 도전의식”(2.88), “뛰어난 자질/몰입”(2.82), “문제에 대한 창의적 접근”(2.74), “불합리한 상황에서 용감/정의”(2.53)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반면 위기청소년들은 “향후 발전가능성”(3.14)을 가장 높게 평가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새로운 일에 대한 강한 도전정신”(2.88), “뛰어난 자질/몰입”(2.82), “문제에 대한 창의적 접근”(2.74), “불합리한 상황에서 용감/정의”(2.53)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그리고 위기청소년들은 “향후 발전가능성”, “불합리한 상황에서 용감/정의”, “새로운 일에 대한 강한 도전정신”, “문제에 대한 창의적 접근”, “뛰어난 자질/몰입”의 모든 영역에서 일반청소년보다 청소년들의 이미지를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정적 측면에 대해서는 일반청소년들은 “어디로 튈지 몰라 무서움”(2.79)에 대해 가장 높게 평가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충동적이어서 문제야기”(2.78), “높은 권리의식과 낮은 책임감”(2.71),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2.58), “예의 없음”(2.49)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반면 위기청소년들은 “충동적이어서 문제야기”(2.93)를 가장 높게 평가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어디로 튈지 몰라 무서움”(2.85), “높은 권리의식과 낮은 책임감”(2.66),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2.58), “예의없음”(2.45)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그리고 위기청소년은 “충동적이어서 문제야기”에서 일반청소년 보다 청소년들의 이미지를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나머지 영역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전체적으로 위기청소년들은 일반청소년보다 청소년에 대해 더 긍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지만 “충동적이어서 문제야기”를 한다는 측면에 대해서만 일반청소년보다 부정적임을 알 수 있었다.



【그림 IV-4】 청소년상에 대한 인식차이 분석: 일반청소년과 위기청소년

표 IV-4 청소년상에 대한 인식차이 분석: 일반청소년과 위기청소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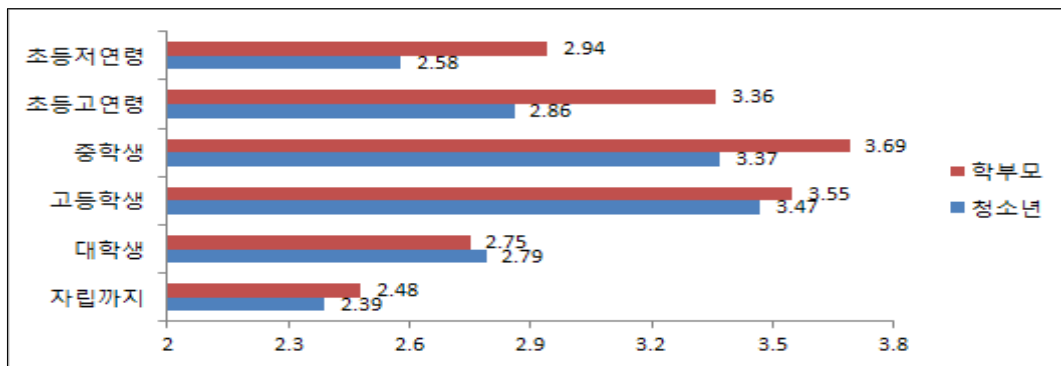
	하부요인	일반청소년(n=1705)		위기청소년(n=499)		t값
		Mean	SD	Mean	SD	
긍정	향후 발전가능성	3.06	.736	3.14	.785	-2.015*
	불합리한 상황에서 용감/정의	2.34	.702	2.53	.807	-4.777*
	새로운 일에 대한 강한 도전정신	2.69	.732	2.88	.801	-4.990*
	문제에 대한 창의적 접근	2.60	.722	2.74	.800	-3.385*
	뛰어난 자질/몰입	2.73	.746	2.82	.798	-2.302*
부정	높은 권리의식 · 낮은 책임감	2.71	.726	2.66	.758	1.477
	예의없음	2.49	.782	2.45	.834	1.046
	어디로 튈지 몰라 무서움	2.79	.768	2.85	.861	-1.412
	자기중심적 · 이기적	2.58	.738	2.58	.829	.136
	충동적 · 문제야기	2.78	.691	2.93	.804	-3.765*

*p<.05

3. 청소년정책 대상 연령의 우선순위

정부가 청소년정책을 실시할 때 가장 중요시해야 할 연령대에 대해 분석한 결과는 <표 IV-5>와 같이 나타났다. <표 IV-5>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청소년과 부모의 전체평균은 고등학교(3.50)와 중학교(3.50)가 가장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초등학교 고학년(3.06), 대학생(2.77), 초등학교 저학년(2.72), 나이 상관없이 부모로부터 자립할 때까지(2.43)의 순으로 나타났다.

세대별로는 청소년의 경우에는 고등학교(3.47)가 가장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중학교(3.37), 초등학교 고학년(3.36), 초등학교 저학년(2.94), 대학생(2.75), 나이상관 없이 부모로부터 자립할 때까지(2.39)의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부모는 중학교(3.69)를 가장 중요한 연령대로 응답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고등학교(3.55), 초등학교 고학년(3.36), 초등학교 저학년(2.94), 대학생(2.75), 나이 상관없이 부모로부터 자립할 때까지(2.48)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IV-5】 청소년정책의 연령집단에 대한 세대별 중요성 인식정도

학교급별 차이를 분석한 결과 중학생의 경우에는 중학생(3.54)이 1순위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고등학교(3.44), 초등학교 고학년(2.91), 대학생(2.55), 초등학교 저학년(2.30), 나이 상관 없이 부모로부터 자립할 때까지(2.13)의 순으로 나타났다.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고등학생(3.56)이 1순위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중학생(3.24), 대학생(2.83), 초등학교 고학년(2.75), 초등학교 저학년(2.49), 나이 상관없이 부모로부터 자립할 때까지(2.40)의 순으로 나타났다. 대학생의 경우에는 고등학생(3.49)이 1순위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중학생(3.40), 대학생(3.07), 초등학교 고학년(3.05), 초등학교 저학년(2.49), 나이 상관없이 부모로부터 자립할 때까지(2.64)의 순으로 나타나

고등학생과 우선순위가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청소년과 위기청소년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일반청소년의 경우에는 고등학교(3.50)가 1순위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중학교(3.39), 초등학교 고학년(2.84), 대학생(2.83), 초등학교 저학년(2.55), 나이 상관없이 부모로부터 자립할 때까지(2.40)의 순으로 나타났다. 위기청소년의 경우에도 고등학교(3.38)가 1순위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중학교(3.32), 초등학교 고학년(2.91), 대학생(2.66), 초등학교 저학년(2.66), 나이 상관없이 부모로부터 자립할 때까지(2.39)의 순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일반청소년과 위기청소년의 경우 청소년정책 연령집단의 우선순위에 대한 인식의 차이는 없다고 할 수 있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보면, 청소년과 부모는 정부 청소년정책 연령집단에 대한 우선순위를 중학생과 고등학생에 두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초등학교 고학년을 중요시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표 IV-5 청소년정책의 연령집단에 대한 정책적 우선순위

구 분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	6순위	
전체		고 ^{주1} (3.50) ^{주2}	중(3.50)	초고(3.06)	대(2.77)	초저(2.72)	자립까지(2.43)	
세대별	청소년	고(3.47)	중(3.37)	초고(2.86)	대(2.79)	초저(2.58)	자립까지(2.39)	
	부 모	중(3.69)	고(3.55)	초고(3.36)	초저(2.94)	대(2.75)	자립까지(2.48)	
청소년	학교 급별	중학생	중(3.54)	고(3.44)	초고(2.71)	대(2.55)	초저(2.30)	자립까지(2.13)
		고등학생	고(3.56)	중(3.24)	대(2.83)	초고(2.75)	초저(2.49)	자립까지(2.40)
		대학생	고(3.49)	중(3.40)	대(3.07)	초고(3.05)	초저(2.84)	자립까지(2.64)
	일반/ 위기	일반청소년	고(3.50)	중(3.39)	초고(2.84)	대(2.83)	초저(2.55)	자립까지(2.40)
		위기청소년	고(3.38)	중(3.32)	초고(2.91)	대(2.66)	초저(2.66)	자립까지(2.39)

※ 주1 : 초저(초등학교 저학년: 9~10세), 초고(초등학교 고학년: 11~13세), 중(중학생: 14~16세), 고(고등학생: 17~19세), 대(대학생: 20세~24세), 자립까지(나이에 상관없이 부모로부터 자립할때까지: ~25세 이상)를 의미함.

주2 : 괄호안의 점수는 평균점수임(4점 만점)

4. 청소년정책의 당면과제

우리나라 청소년정책이 해결해야 할 과제에 대해 조사한 결과는 <표 IV-6>과 같이 나타났다. <표 IV-6>에서 나타난바와 같이 청소년과 부모의 전체평균은 “학교폭력 근절”(3.55)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위기청소년지원”(3.47),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소년에 대한 지원”(3.35), “청소년 정신건강문제 예방치료”(3.19), “청소년 일자리 개발 및 직업역량 강화”(3.11), “다양한 청소년활동기회 제공”(3.09), “주5일제에 따른 토요 방과후활동지원”(2.66)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IV-6 청소년정책의 당면과제(우선순위)

구 분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	6순위	7순위
전체		A ^{주1} (3.55) ^{주2}	D(3.47)	G(3.35)	F(3.19)	C(3.11)	E(3.09)	B(2.66)
세대별	청소년	A(3.38)	G(3.35)	D(3.34)	C(3.11)	E(2.99)	F(2.94)	B(2.40)
	부 모	A(3.81)	D(3.66)	F(3.56)	G(3.35)	E(3.24)	C(3.10)	B(3.04)
청소년	학교 급별	중학생	A(3.43)	G(3.34)	D(3.28)	C(2.98)	E(2.93)	F(2.87)
		고등학생	G(3.35)	A(3.33)	D(3.25)	C(3.21)	E(3.12)	F(2.79)
		대학생	A(3.49)	D(3.44)	G(3.34)	F(3.12)	C(3.10)	E(3.00)
	일반/ 위기	일반청소년	A(3.42)	F(3.34)	D(3.33)	C(3.10)	E(3.02)	F(2.93)
		위기청소년	D(3.39)	G(3.37)	A(3.22)	C(3.16)	F(3.39)	E(2.9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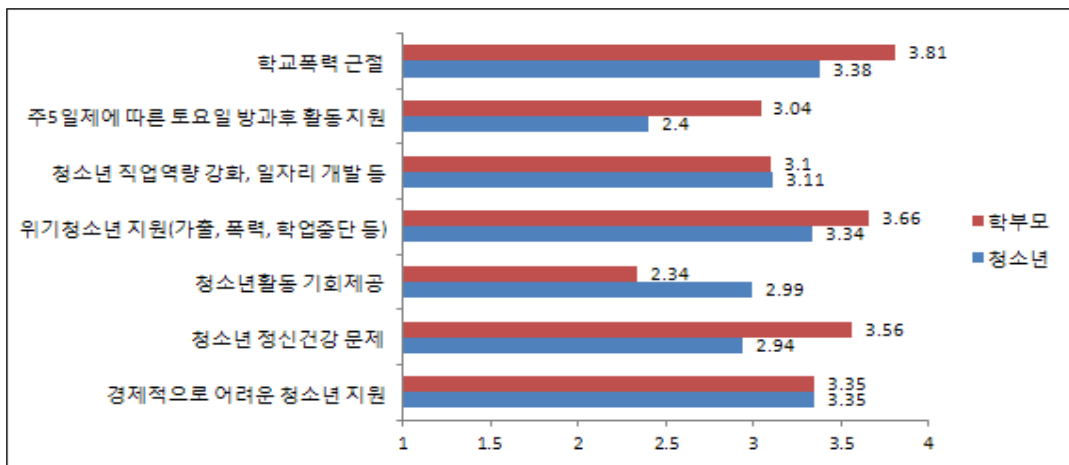
※ 주1 : A(학교폭력 근절), B(주5일제에 따른 토요일 방과후 활동 지원), C(청소년일자리 개발 및 직업역량 강화, 취업·창업지원), D(가출, 폭력, 학업중단, 성매매 등 위기청소년 지원), E(문화, 예술, 스포츠 등 다양한 청소년활동기회제공), F(인터넷 중독 등 청소년 정신건강 문제 예방 치료), G(경제적으로 어려운 청소년 지원)을 의미

주2 : 괄호안의 점수는 평균점수임(4점 만점)

1) 세대별 차이

【그림 IV-6】, <표 IV-7>과 같이 우리나라 청소년정책의 당면과제에 대한 세대별 중요성 인식정도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청소년의 경우에는 “학교폭력 근절”(3.38)이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소년지원”(3.35), “가출, 폭력, 학업중단 등 위기청소년 지원”(3.34), “청소년일자리 개발 및 직업역량 개발”(3.11), “다양한 청소년활동지원”(2.99), “인터넷중독 등 청소년정신건강 문제 예방치료”(2.94), “주5일제에 따른 토요 방과후활동지원”(2.40)의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부모의 경우에는 “학교폭력 근절”(3.81)이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가출·폭력·학업중단 등 위기청소년

지원”(3.66), “인터넷 중독 등 청소년 정신건강문제 예방치료”(3.56),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소년 지원”(3.35), “다양한 청소년활동 지원”(3.24), “청소년일자리개발 및 직업역량개발”(3.10), “주5일제에 따른 토요 방과후활동지원”(3.04)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학교폭력근절”, “주5일제에 따른 토요 방과후활동지원”, “가출·폭력·학업중단 등 위기청소년 지원”, “다양한 청소년활동지원”, “인터넷 중독 등 청소년 정신건강문제 예방치료”에서 부모가 청소년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청소년일자리개발 및 직업역량개발”,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소년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는 세대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IV-6】 청소년정책의 당면과제에 대한 인식차이 분석: 청소년과 부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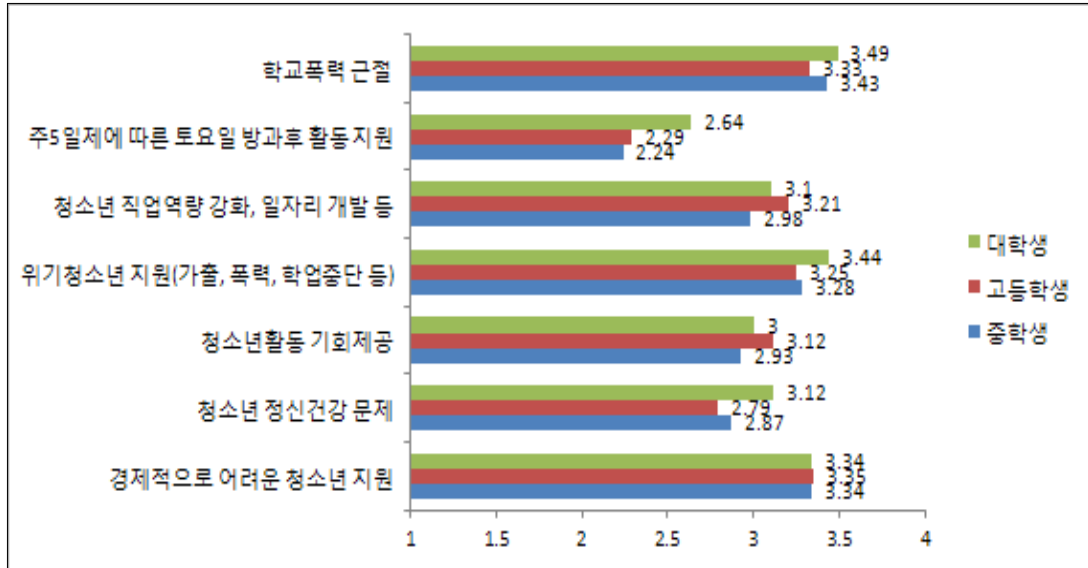
표 IV-7 청소년정책의 당면과제에 대한 인식차이 분석: 청소년과 부모

청소년정책의 당면과제	청소년(n=2188)		부모(n=1500)		t값
	Mean	SD	Mean	SD	
학교폭력 근절	3.38	.753	3.81	.432	-22.022*
주5일제에 따른 토요 방과후활동지원	2.40	.880	3.04	.735	-24.218*
청소년일자리개발 및 직업역량개발	3.11	.807	3.10	.747	.458
가출, 폭력, 학업중단 등 위기청소년 지원	3.34	.769	3.66	.535	-14.860*
다양한 청소년활동 지원(문화, 예술 등)	2.99	.839	3.24	.678	-9.622*
인터넷 중독 등 청소년 정신건강 문제	2.94	.805	3.56	.600	-27.088*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소년 지원	3.35	.659	3.35	.637	.037

*p<.05

2) 학교급별 차이

【그림 IV-7】, 〈표 IV-8〉과 같이 우리나라 청소년정책의 당면과제에 대한 학교급별 중요성 인식정도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중학생의 경우에는 “학교폭력근절”(3.43)이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소년지원”(3.34), “가출폭력·학업중단 등 위기청소년 지원”(3.28), “청소년일자리개발 및 직업역량개발”(2.98), “다양한 청소년활동지원”(2.87), “인터넷중독 등 청소년 정신건강 문제 예방치료”(2.87), “주5일제에 따른 토요 방과후활동지원”(2.24)의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소년지원”(3.35)이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학교폭력근절”(3.33), “가출폭력·학업중단 등 위기청소년 지원”(3.25), “청소년일자리개발 및 직업역량개발”(3.21), “다양한 청소년활동지원”(3.12), “주5일제에 따른 토요 방과후활동지원”(2.29)의 순으로 나타났다. 대학생의 경우에는 “학교폭력 근절”(3.49)이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가출폭력·학업중단 등 위기청소년 지원”(3.44),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소년지원”(3.34), “인터넷중독 등 청소년 정신건강문제 예방치료”(3.12), “청소년일자리개발 및 직업역량개발”(3.10), “다양한 청소년활동지원”(3.00), “주5일제에 따른 토요 방과후활동지원”(2.64)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학교폭력근절”에서 고등학생의 중요성 인식정도가 중학생이나 대학생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양한 청소년활동지원”에서는 반대로 고등학생의 중요성 인식정도가 중학생이나 대학생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5일제에 따른 토요 방과후활동지원”과 “가출폭력·학업중단 등 위기청소년 지원”, “인터넷중독 등 청소년 정신건강문제 예방치료”에서는 대학생의 중요성 인식정도가 중학생이나 고등학생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청소년일자리개발 및 직업역량개발”에서는 고등학생과 대학생이 중학생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IV-7】 청소년정책의 당면과제에 대한 인식차이 분석: 학교급별(중, 고, 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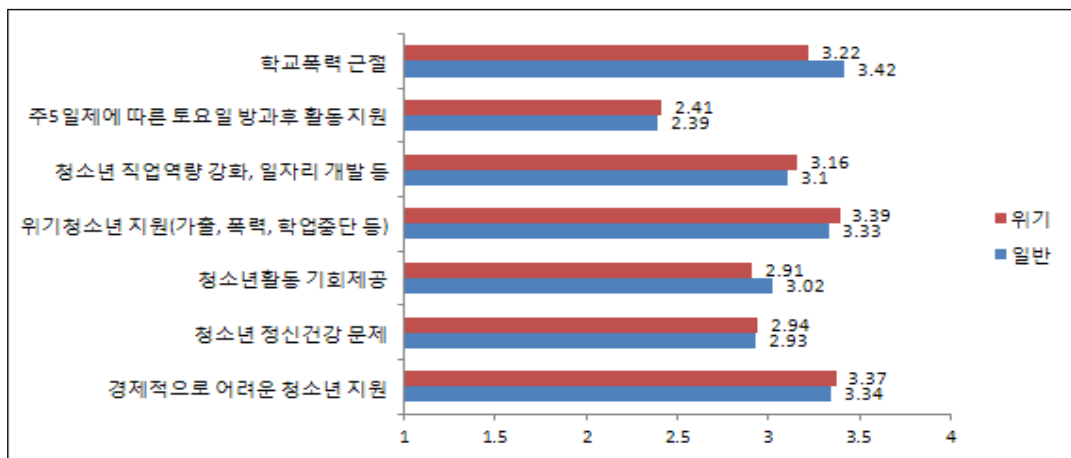
표 IV-8 청소년정책의 당면과제에 대한 인식차이 분석: 학교급별(중, 고, 대)

청소년정책의 당면과제	중학생 (n=541)	고등학생 (n=563)	대학생 (n=595)	F값	Scheffe
	Mean(SD)	Mean(SD)	Mean(SD)		
학교폭력 근절	3.43(.716)	3.33(.748)	3.49(.650)	7.524*	고<중, 대
주5일제에 따른 토요 방과후활동지원	2.24(.860)	2.29(.901)	2.64(.795)	37.930*	대>중, 고
청소년일자리개발 및 직업역량개발	2.98(.844)	3.21(.780)	3.10(.763)	11.402*	중<고, 대
가출, 폭력, 학업중단 등 위기청소년 지원	3.28(.756)	3.25(.798)	3.44(.685)	11.067*	대>중, 고
다양한 청소년활동 지원(문화, 예술 등)	2.93(.837)	3.12(.824)	3.00(.790)	8.253*	고>중, 대
인터넷 중독 등 청소년 정신건강 문제	2.87(.768)	2.79(.820)	3.12(.737)	29.219*	대>중, 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소년 지원	3.34(.648)	3.35(.656)	3.34(.684)	.035	-

*p<.05

3) 일반청소년과 위기청소년의 차이

【그림 IV-8】, 〈표 IV-9〉와 같이 우리나라 청소년정책의 당면과제에 대한 일반청소년과 위기청소년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일반청소년의 경우에는 “학교폭력근절”(3.42)이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소년지원”(3.34), “가출폭력·학업중단 등 위기청소년 지원”(3.33), “청소년일자리개발 및 직업역량개발”(3.10), “다양한 청소년활동지원”(3.02), “인터넷중독 등 청소년 정신건강 문제 예방치료”(2.93), “주5일제에 따른 토요 방과후활동지원”(2.39)의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위기청소년의 경우에는 “가출·폭력·학업중단 등 위기청소년 지원”(3.39)이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소년지원”(3.37), “학교폭력 근절”(3.22), “청소년일자리개발 및 직업역량개발”(3.16), “인터넷중독 등 청소년 정신건강문제 예방치료”(2.94), “주5일제에 따른 토요 방과후활동지원”(2.41)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학교폭력근절”과 “다양한 청소년활동 지원”에서 일반청소년의 중요성 인식정도가 위기청소년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주5일제에 따른 토요 방과후활동지원”, “청소년일자리개발 및 직업역량개발”, “가출폭력·학업중단 등 위기청소년 지원”, “인터넷중독 등 청소년 정신건강문제 예방치료”,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소년에 대한 지원”에서는 일반청소년과 위기청소년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IV-8】 청소년정책의 당면과제에 대한 인식차이 분석: 일반청소년과 위기청소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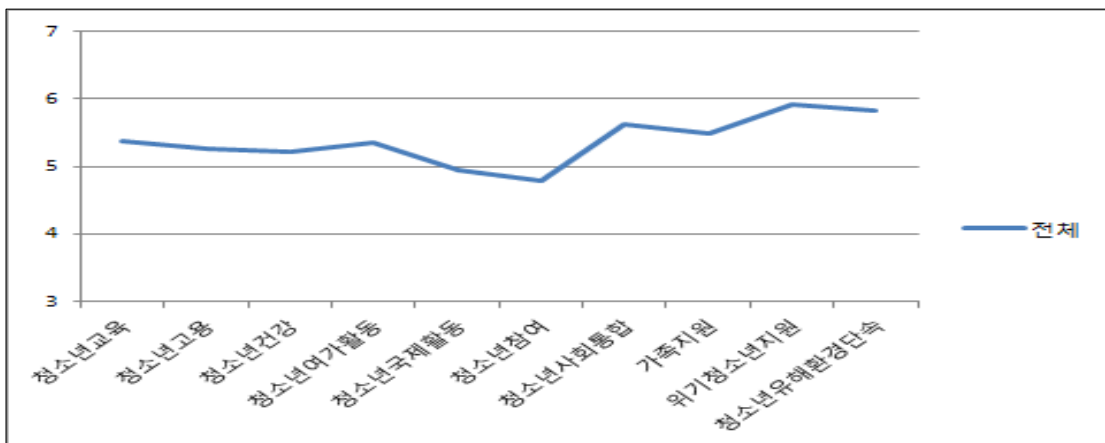
표 IV-9 청소년정책의 당면과제에 대한 인식차이 분석: 일반청소년과 위기청소년

청소년정책의 당면과제	일반청소년(n=1699)		위기청소년(n=489)		t값
	Mean	SD	Mean	SD	
학교폭력 근절	3.42	.707	3.22	.879	4.533*
주5일제에 따른 토요 방과후활동지원	2.39	.870	2.41	.912	-.324
청소년일자리개발 및 직업역량개발	3.10	.800	3.16	.830	-1.398
가출, 폭력, 학업중단 등 위기청소년 지원	3.33	.751	3.39	.829	-1.366
다양한 청소년활동 지원(문화, 예술 등)	3.02	.820	2.91	.896	2.34*
인터넷 중독 등 청소년 정신건강 문제	2.93	.788	2.94	.863	-.188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소년 지원	3.34	.663	3.37	.647	-.843

*p<.05

5. 청소년 정책영역의 중요도

청소년 정책영역의 중요도에 대한 조사결과는 【그림 IV-9】, <표 IV-10>과 같다. 청소년 정책영역의 중요도에 대한 청소년과 부모의 전체평균은 위기청소년지원(5.91)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청소년환경단속(5.83), 청소년사회통합(5.62), 가족지원(5.49), 청소년교육(5.37), 청소년 여가활동(5.35), 청소년고용(5.27), 청소년건강(5.21), 청소년국제활동(4.94), 청소년참여(4.80)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IV-9】 청소년 정책영역의 중요도: 총괄

표 IV-10 청소년 정책영역의 중요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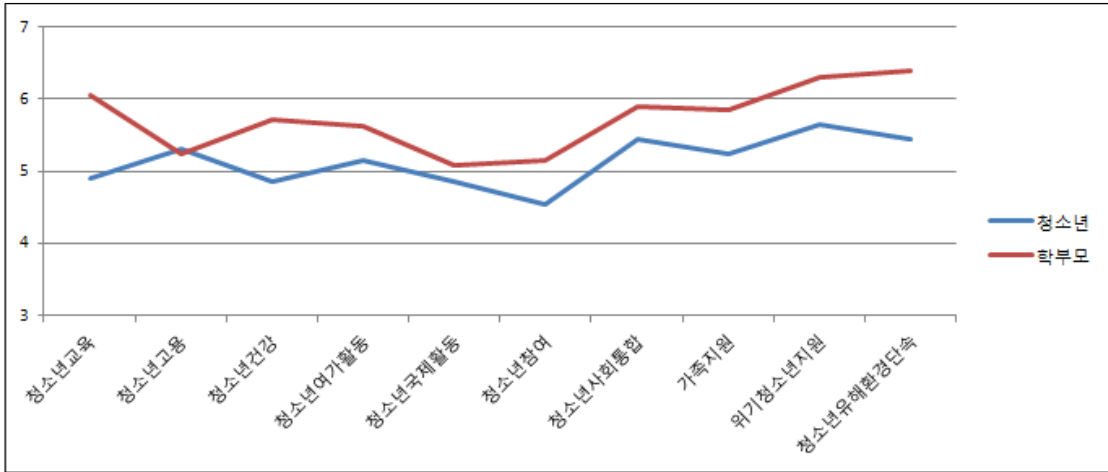
구분	전체	세대별		학교급별			일반/위기	
		청소년	부모	중	고	대	일반	위기
1순위	위기 ^{주1} (5.91) ^{주2}	위기(5.64)	유해(6.40)	위기(5.62)	고용(5.53)	유해(5.81)	위기(5.62)	위기(5.70)
2순위	유해(5.83)	유해(5.45)	위기(6.31)	유해(5.55)	위기(5.45)	위기(5.80)	유해(5.54)	통합(5.39)
3순위	통합(5.62)	통합(5.44)	교육(6.05)	통합(5.29)	통합(5.43)	통합(5.63)	통합(5.45)	고용(5.33)
4순위	가족(5.49)	고용(5.30)	통합(5.90)	여가(5.22)	여가(5.31)	가족(5.43)	고용(5.29)	가족(5.30)
5순위	교육(5.37)	가족(5.24)	가족(5.85)	고용(5.21)	유해(5.25)	교육(5.19)	여가(5.23)	유해(5.14)
6순위	여가(5.35)	여가(5.16)	건강(5.72)	가족(5.11)	가족(5.15)	여가(5.17)	가족(5.22)	여가(4.94)
7순위	고용(5.27)	교육(4.91)	여가(5.63)	건강(4.92)	국제(4.89)	고용(5.14)	교육(4.94)	건강(4.85)
8순위	건강(5.21)	건강(4.86)	고용(5.23)	국제(4.84)	교육(4.82)	국제(5.04)	국제(4.93)	교육(4.81)
9순위	국제(4.94)	국제(4.85)	참여(5.15)	교육(4.81)	건강(4.72)	건강(4.96)	건강(4.87)	국제(4.58)
10순위	참여(4.80)	참여(4.55)	국제(5.08)	참여(4.45)	참여(4.54)	참여(4.74)	참여(4.58)	참여(4.45)

※ 주1 : 교육(청소년교육), 고용(청소년고용), 건강(청소년건강), 여가(청소년여가활동), 국제(청소년국제활동), 참여(청소년참여), 통합(청소년사회통합), 가족(가족지원), 위기(위기청소년지원), 유해(청소년유해환경 단속)를 의미함

주2 : 괄호안의 점수는 평균점수임(7점 만점)

1) 세대별 차이

【그림 IV-10】, 〈표 IV-11〉과 같이 청소년 정책영역의 중요도에 대한 세대별 인식차이를 분석한 결과 청소년들은 위기청소년지원(5.64)을 가장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며, 그 다음으로 청소년유해환경단속(5.45), 청소년사회통합(5.44), 청소년고용(5.30), 가족지원(5.24), 청소년여가활동(5.16), 청소년교육(4.91), 청소년건강(4.86), 청소년국제활동(4.85), 청소년참여(4.55)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반면 부모는 청소년유해환경단속(6.40)이 가장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며, 그 다음으로 위기청소년지원(6.31), 청소년교육(6.05), 청소년사회통합(5.90), 가족지원(5.85), 청소년건강(5.72), 청소년여가활동(5.63), 청소년고용(5.23), 청소년참여(5.15), 청소년국제활동(5.08)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그리고 청소년고용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영역(청소년교육, 청소년건강, 청소년여가활동, 청소년국제활동, 청소년참여, 청소년사회통합, 가족지원, 위기청소년지원, 청소년유해환경단속)에서 부모의 중요성 인식정도가 청소년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IV-10】 청소년 정책영역의 중요도 인식차이 분석: 청소년과 부모

표 IV-11 청소년 정책영역의 중요도 인식차이 분석: 청소년과 부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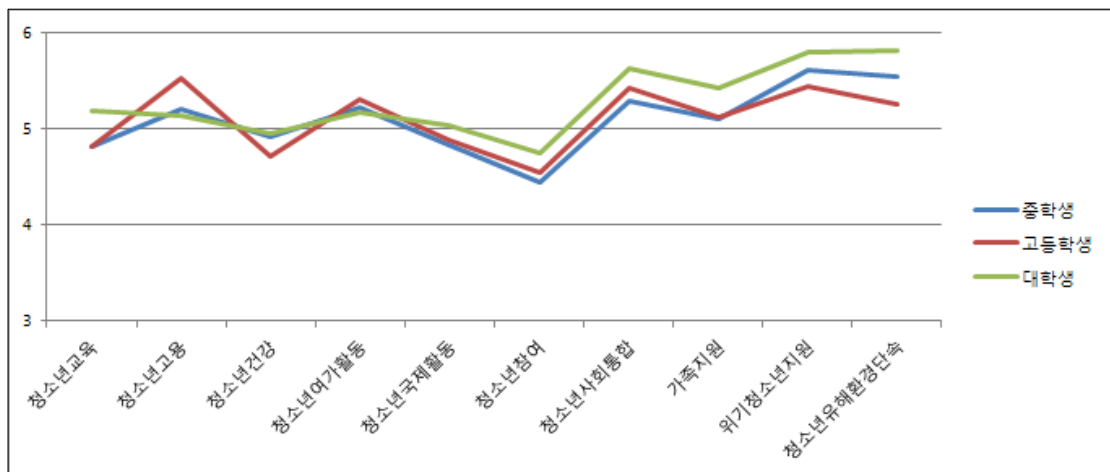
정책영역	청소년(n=2203)		부모(n=1500)		t값
	Mean	SD	Mean	SD	
청소년교육	4.91	1.374	6.05	.915	-30.129*
청소년고용	5.30	1.359	5.23	1.239	1.477
청소년건강	4.86	1.330	5.72	1.063	-21.681*
청소년여가활동	5.16	1.399	5.63	1.039	-11.650*
청소년국제활동	4.85	1.487	5.08	1.230	-5.107*
청소년참여	4.55	1.487	5.15	1.171	-14.015*
청소년사회통합	5.44	1.364	5.90	.955	-11.995*
가족지원	5.24	1.370	5.85	.954	-15.880*
위기청소년지원	5.64	1.388	6.31	.884	-17.963*
청소년유해환경단속	5.45	1.593	6.40	.851	-23.477*

*p<.05

2) 학교급별 차이

【그림 IV-11】. 〈표 IV-12〉와 같이 청소년 정책영역의 중요도에 대한 학교급별 차이를 분석한

결과 중학생은 위기청소년지원(5.62)이 가장 중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청소년유해환경 단속(5.55), 청소년사회통합(5.29), 청소년여가활동(5.22), 청소년고용(5.21), 가족지원(5.11), 청소년건강(4.92), 청소년국제활동(4.84), 청소년교육(4.81), 청소년참여(4.45)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반면 고등학생은 청소년고용(5.53)이 가장 중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위기청소년지원(5.45), 청소년사회통합(5.43), 청소년여가활동(5.31), 청소년유해환경단속(5.25), 가족지원(5.15), 청소년국제활동(4.89), 청소년교육(4.82), 청소년건강(4.72), 청소년참여(4.54)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대학생들은 청소년유해환경단속(5.81)을 가장 중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위기청소년지원(5.80), 청소년사회통합(5.63), 가족지원(5.43), 청소년교육(5.19), 청소년여가활동(5.17), 청소년고용(5.14), 청소년국제활동(5.04), 청소년건강(4.96), 청소년참여(4.74)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그리고 청소년교육, 청소년참여, 청소년사회통합, 가족지원 영역에서 대학生の 중요성 인식정도가 중학생이나 고등학생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고용영역에서는 고등학생의 점수가 중학생과 대학생의 점수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았으며, 반대로 청소년건강영역에서는 고등학생의 점수가 중학생과 고등학생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위기청소년지원영역에서는 대학생이 고등학생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았으며, 청소년유해환경단속에 대해서는 대학생이 중학생보다, 중학생이 고등학생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IV-11】 청소년 정책영역의 중요도 인식차이 분석: 학교급별(중, 고, 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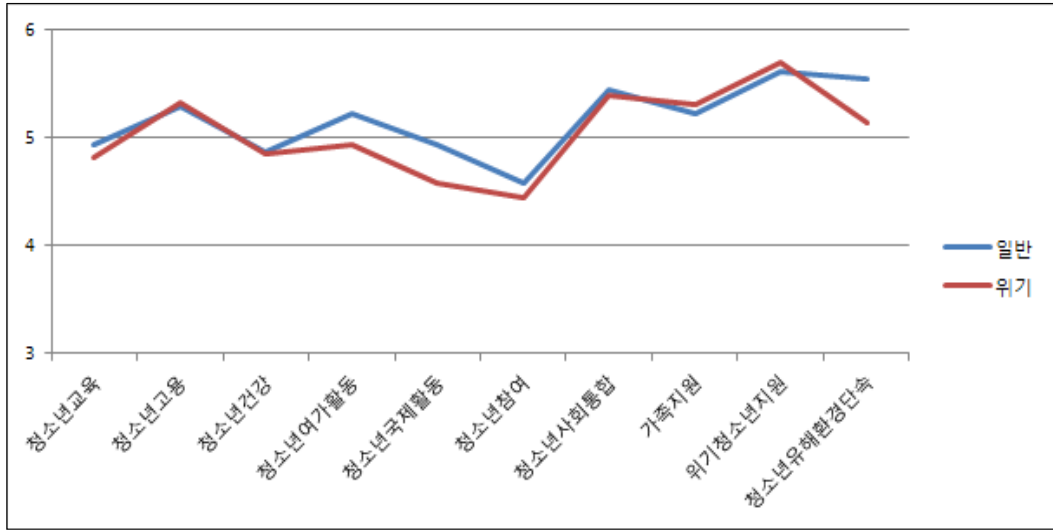
표 IV-12 청소년 정책영역의 중요도 인식차이 분석: 학교급별(중, 고, 대)

하부요인	중학생 (n=543)	고등학생 (n=563)	대학생 (n=598)	F값	Scheffe
	Mean(SD)	Mean(SD)	Mean(SD)		
청소년교육	4.81(1.297)	4.82(1.364)	5.19(1.223)	16.022*	대>중, 고
청소년고용	5.21(1.407)	5.53(1.289)	5.14(1.274)	14.022*	고>중, 대
청소년건강	4.92(1.288)	4.72(1.264)	4.96(1.301)	5.724*	고>중, 대
청소년여가활동	5.22(1.365)	5.31(1.331)	5.17(1.294)	1.516	-
청소년국제활동	4.84(1.428)	4.89(1.455)	5.04(1.357)	3.124*	-
청소년참여	4.45(1.380)	4.54(1.383)	4.74(1.299)	6.924*	대>중, 고
청소년사회통합	5.29(1.310)	5.43(1.312)	5.63(1.268)	9.694*	대>중, 고
가족지원	5.11(1.393)	5.12(1.210)	5.43(1.207)	11.757*	대>중, 고
위기청소년지원	5.62(1.368)	5.45(1.397)	5.80(1.255)	10.113*	대>고
청소년유해환경단속	5.55(1.584)	5.25(1.612)	5.81(1.276)	20.846*	대>중>고

*p<.05

3) 일반청소년과 위기청소년의 차이

【그림 IV-12】, 〈표 IV-13〉과 같이 청소년 정책영역의 중요도에 대한 일반청소년과 위기청소년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일반청소년들은 위기청소년지원(5.62)을 가장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며, 그 다음으로 청소년유해환경단속(5.54), 청소년사회통합(5.45), 청소년고용(5.29), 청소년여가활동(5.23), 가족지원(5.22), 청소년교육(4.94), 청소년국제활동(4.93), 청소년건강(4.87), 청소년참여(4.58)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위기청소년들은 위기청소년지원(5.70)을 가장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며, 그 다음으로 청소년사회통합(5.39), 청소년고용(5.33), 가족지원(5.30), 청소년유해환경단속(5.14), 청소년여가활동(4.94), 청소년건강(4.85), 청소년교육(4.81), 청소년국제활동(4.58), 청소년참여(4.45)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그리고 청소년여가활동, 청소년국제활동, 청소년유해환경단속 영역에서 일반청소년의 중요성 인식정도가 위기청소년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IV-12】 청소년 정책영역의 중요도 인식차이 분석: 일반청소년과 위기청소년

표 IV-13 청소년 정책영역의 중요도 인식차이 분석: 일반청소년과 위기청소년

하부요인	일반청소년(n=1704)		위기청소년(n=499)		t값
	Mean	SD	Mean	SD	
청소년교육	4.94	1.306	4.81	1.582	1.710
청소년고용	5.29	1.333	5.33	1.448	-.540
청소년건강	4.87	1.288	4.85	1.468	.170
청소년여가활동	5.23	1.330	4.94	1.594	3.745*
청소년국제활동	4.93	1.415	4.58	1.685	4.209*
청소년참여	4.58	1.358	4.45	1.658	1.672
청소년사회통합	5.45	1.303	5.39	1.557	.840
가족지원	5.22	1.304	5.30	1.574	-.935
위기청소년지원	5.62	1.346	5.70	1.522	-.935
청소년유해환경단속	5.54	1.510	5.14	1.815	4.543*

*p<.05

6. 청소년 정책사업의 중요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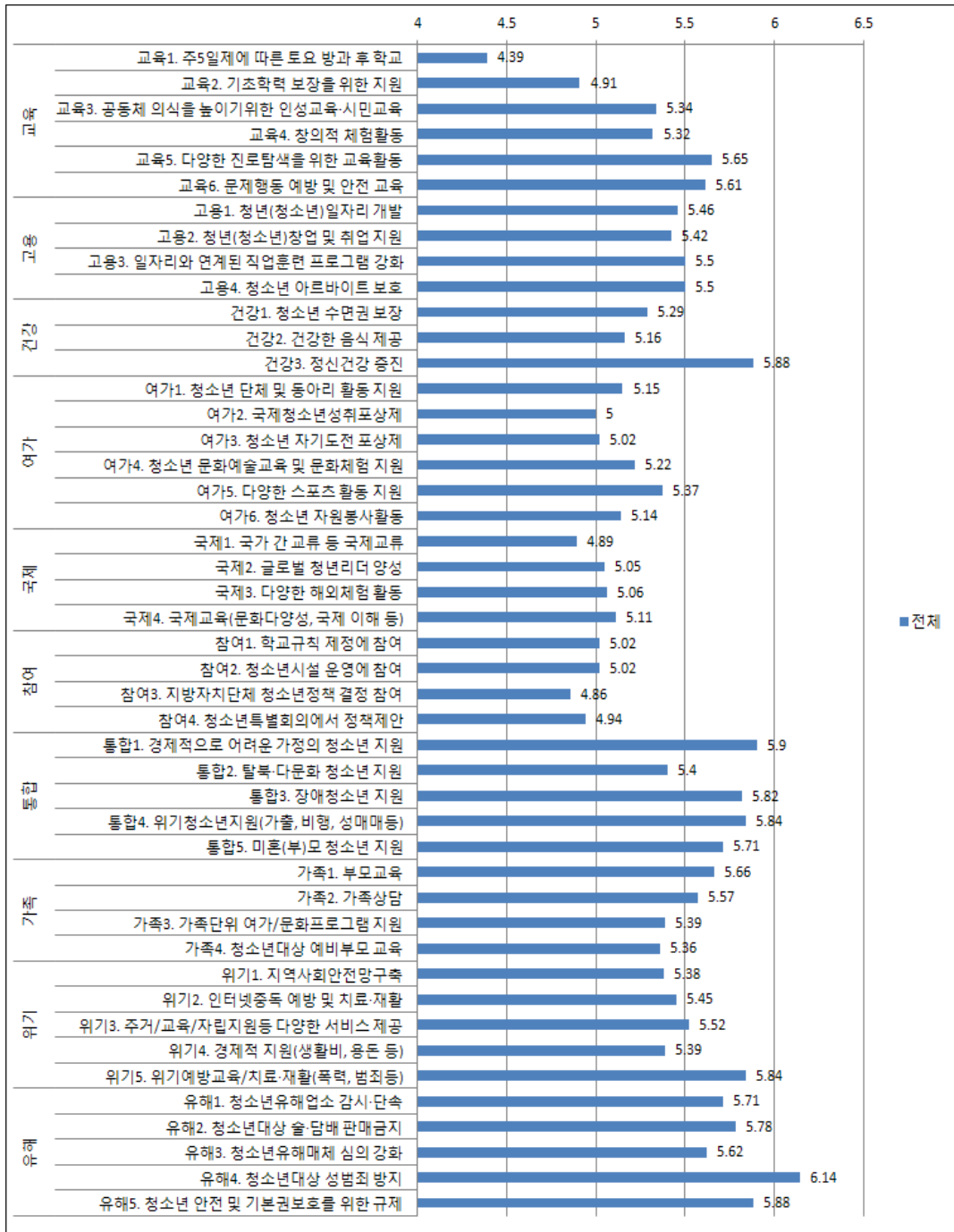
1) 사업전체

청소년정책 영역별 주요사업의 대한 중요성 인식정도를 조사결과는 다음【그림Ⅳ-13】,〈표Ⅳ-14〉와 같다. 청소년 정책영역별 주요사업에 대한 청소년과 부모의 전체평균을 살펴보면 전체 46개 사업 중에서 상위 10위권에 포함된 사업으로는 유해4(청소년대상 성범죄방지), 통합1(어려운 가정의 청소년지원), 건강3(정신건강증진), 유해5(청소년안전 및 기본권보호를 위한 규제), 위기5(위기예방교육 및 치료재활), 통합4(가출·비행, 성매매 등 위기청소년지원), 통합3(장애청소년지원), 유해2(청소년대상 술담배 판매금지), 통합5(미혼모청소년 지원), 유해1(청소년유해업소감시단속)의 순이었다. 그리고 전체 46개 사업의 평균점수인 5.38을 중심으로 평균점수보다 높은 사업을 살펴보면 주로 청소년유해환경단속, 청소년사회통합, 위기청소년지원, 청소년고용 영역의 사업들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기타 청소년건강, 청소년교육, 청소년가족 영역의 사업들이 일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앞에서 살펴본 청소년 정책영역의 중요도 조사결과와 비교해볼 때 중요하다고 판단된 정책영역들의 사업들이 평균 이상의 상위권에 포함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청소년고용의 경우에는 정책영역의 중요도에서 7순위로 다소 낮게 평가되었지만, 청소년정책사업별 중요도에서는 평균점수 이상의 영역에 모든 사업들이 포함되어 있어서 정책영역의 중요도에 대한 평가와 실제 정책사업의 중요도에 대한 평가 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청소년교육영역은 정책영역의 중요도에서 5순위(5.37)로 나타났지만, 실제로 평균점수인 5.38보다 높은 사업은 교육5(다양한 진로탐색을 위한 교육활동)와 교육6(문제행동예방 및 안전교육) 등 2개만 포함되어 있어서 정책영역의 중요도와 정책사업의 중요도 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대별로 청소년 정책영역별 주요사업의 중요도 순위를 살펴보면 청소년의 경우 상위 10위권에 포함된 사업으로는 유해4(청소년대상 성범죄방지), 통합1(어려운 가정의 청소년지원), 유해5(청소년안전 및 기본권보호를 위한 규제), 통합3(장애청소년지원), 통합5(미혼모청소년지원), 고용4(청소년 아르바이트 보호), 통합4(위기청소년지원), 건강3(정신건강지원), 위기5(위기예방교육 및 치료재활), 위기4(경제적지원)의 순이었다. 그리고 청소년응답자의 전체 46개 사업의 평균점수인 5.18보다 평균점수가 높은 사업을 살펴보면 청소년유해환경단속, 청소년사회통합, 청소년고용, 위기청소년지원, 가족지원 영역의 사업들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청소년 정책영역의

중요도 조사결과와 비교해 볼 때에도 청소년이 중요한 정책영역이라고 응답한 위기청소년지원, 청소년유해환경단속, 청소년사회통합, 청소년고용 영역의 사업들과 거의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부모의 경우에는 상위 10위권에 포함된 사업이 유해4(청소년대상 성범죄방지), 유해2(청소년대상 술담배 판매금지), 유해1(청소년유해업소 감시단속), 유해3(청소년유해매체심의강화), 건강3(정신건강 증진), 위기5(위גיע방교육 및 치료재활), 통합4(위기청소년지원), 교육6(문제행동예방 및 안전교육), 교육3(공동체의식 함양을 위한 인성교육/시민교육), 유해5(청소년안전 및 기본권보호를 위한 규제)의 순이었다. 그리고 부모 응답자의 전체 46개 사업의 평균점수인 5.68보다 평균점수가 높은 사업들을 살펴보면 청소년유해환경단속, 청소년사회통합, 청소년건강, 청소년교육, 위기청소년지원 영역의 사업들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청소년 정책영역의 중요도 조사결과와 비교해볼 때 부모들이 중요하다고 응답한 정책영역과 실제 청소년정책사업의 중요도 조사결과는 거의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청소년과 위기청소년으로 구분하여 청소년 정책영역별 주요사업의 중요도 순위를 살펴보면 일반청소년의 경우 상위 10위권에 포함된 사업은 유해4(청소년대상 성범죄방지), 유해5(청소년안전 및 기본권보호를 위한 규제), 통합1(어려운 가정의 청소년지원), 통합3(장애청소년지원), 건강3(정신건강 증진), 통합5(미혼모청소년지원), 위기5(위גיע방교육/치료재활), 통합4(위기청소년지원), 교육5(다양한 진로탐색을 위한 교육활동), 유해2(청소년대상 술담배 판매금지)의 순이었다. 그리고 일반청소년 응답자의 전체 46개사업의 평균점수인 5.20보다 평균점수가 높은 사업들을 살펴보면 주로 청소년유해환경단속, 청소년사회통합, 청소년고용, 가족지원, 위기청소년지원 영역의 사업들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청소년교육과 관련된 사업들(교육5, 교육6)이 일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청소년 정책영역의 중요도 조사결과와 비교해볼 때 일반청소년들이 중요하다고 응답한 정책영역과 거의 일치한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위기청소년의 경우에도 상위 10위권에 포함된 사업은 위기4(경제적지원), 통합4(위기청소년지원), 고용4(청소년아르바이트 보호), 통합5(미혼모청소년지원), 통합1(어려운가정 청소년지원), 위기5(위גיע방교육 및 치료/재활), 위기3(주거/교육/자립등 다양한 서비스 제공), 유해4(청소년대상 성범죄방지), 고용3(일자리연계 직업훈련프로그램 강화), 고용2(청소년창업/취업지원)의 순이었다. 그리고 위기청소년 응답자의 전체 46개 사업의 평균점수인 5.09보다 평균점수가 높은 사업들을 살펴보면 위기청소년지원, 청소년사회통합, 청소년고용, 가족지원 영역의 사업들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청소년 정책영역의 중요도 조사결과와 비교해 볼 때 위기청소년들이 중요하다고 응답한 정책영역과 거의 일치한다고 할 수 있다.



【그림 IV-13】 청소년정책사업의 중요도: 전체

표 IV-14

청소년정책사업별 중요도: 순위별

순위	전체	청소년	부모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일반청소년	위기청소년
1	유해-4 (6.14)	유해-4 (5.86)	유해-4 (6.56)	유해4 (5.82)	통합1 (5.79)	유해4 (6.22)	유해-4 (5.93)	위기-4 (5.87)
2	통합-1 (5.90)	통합-1 (5.76)	유해-2 (6.49)	유해5 (5.74)	유해4 (5.73)	유해5 (6.04)	유해-5 (5.79)	통합-4 (5.84)
3	건강-3 (5.88)	유해-5 (5.73)	유해-1 (6.40)	통합1 (5.63)	고용2 (5.67)	통합3 (5.96)	통합-1 (5.78)	고용-4 (5.78)
4	유해-5 (5.88)	통합-3 (5.66)	유해-3 (6.27)	건강3 (5.58)	고용1 (5.64)	유해2 (5.91)	통합-3 (5.70)	통합-5 (5.77)
5	위기-5 (5.84)	통합-5 (5.63)	건강-3 (6.27)	위기5 (5.55)	고용3 (5.62)	통합1 (5.90)	건강-3 (5.64)	통합-1 (5.70)
6	통합-4 (5.84)	고용-4 (5.62)	위기-5 (6.19)	통합4 (5.54)	통합3 (5.62)	가족1 (5.87)	통합-5 (5.59)	위기-5 (5.66)
7	통합-3 (5.82)	통합-4 (5.62)	통합-4 (6.18)	위기4 (5.52)	유해5 (5.57)	가족2 (5.84)	위기-5 (5.59)	위기-3 (5.62)
8	유해-2 (5.78)	건강-3 (5.61)	교육-6 (6.17)	유해2 (5.50)	교육5 (5.51)	건강3 (5.93)	통합-4 (5.55)	유해-4 (5.61)
9	통합-5 (5.71)	위기-5 (5.61)	교육-3 (6.14)	통합3 (5.49)	건강3 (5.50)	위기5 (5.81)	교육-5 (5.53)	고용-3 (5.57)
10	유해-1 (5.71)	위기-4 (5.53)	유해-5 (6.10)	통합5 (5.46)	통합5 (5.50)	유해1 (5.81)	유해-2 (5.52)	고용-2 (5.57)
11	가족-1 (5.66)	가족-1 (5.48)	통합-1 (6.10)	교육5 (5.39)	위기4 (5.42)	통합4 (5.80)	가족-1 (5.49)	고용-1 (5.55)
12	교육-5 (5.65)	고용-2 (5.47)	위기-2 (6.07)	고용1 (5.29)	위기5 (5.40)	통합5 (5.80)	고용-2 (5.44)	통합-3 (5.55)
13	유해-3 (5.62)	고용-3 (5.47)	통합-3 (6.05)	통합2 (5.29)	고용4 (5.39)	유해3 (5.76)	고용-3 (5.44)	건강-3 (5.52)
14	교육-6 (5.61)	교육-5 (5.46)	교육-5 (5.94)	고용2 (5.28)	통합4 (5.30)	교육5 (5.67)	위기-4 (5.43)	유해-5 (5.51)
15	가족-2 (5.57)	고용-1 (5.43)	가족-1 (5.92)	유해3 (5.27)	가족1 (5.30)	교육6 (5.55)	고용-1 (5.39)	가족-1 (5.48)
16	위기-3 (5.52)	가족-2 (5.37)	건강-1 (5.89)	위기3 (5.26)	여가5 (5.29)	가족3 (5.51)	가족-2 (5.37)	가족-2 (5.37)
17	고용-3 (5.50)	위기-3 (5.36)	가족-2 (5.86)	고용3 (5.25)	여가1 (5.18)	가족4 (5.46)	유해-1 (5.36)	여가-5 (5.26)
18	고용-4 (5.50)	유해-2 (5.30)	건강-2 (5.83)	가족1 (5.25)	통합2 (5.18)	고용3 (5.45)	고용-4 (5.31)	통합-2 (5.26)
19	고용-1 (5.46)	여가-5 (5.27)	위기-1 (5.81)	유해1 (5.24)	가족2 (5.17)	고용4 (5.42)	유해-3 (5.30)	가족-4 (5.25)
20	위기-2 (5.45)	통합-2 (5.26)	통합-5 (5.81)	여가5 (5.23)	위기3 (5.16)	위기3 (5.42)	위기-3 (5.28)	교육-5 (5.22)
21	고용-2 (5.42)	유해-1 (5.24)	위기-3 (5.76)	교육6 (5.22)	유해2 (5.11)	위기2 (5.40)	여가-5 (5.27)	가족-3 (5.20)
22	통합-2 (5.40)	교육-6 (5.23)	교육-4 (5.75)	건강1 (5.17)	국제3 (5.09)	교육3 (5.36)	통합-2 (5.25)	교육-6 (5.14)
23	가족-3 (5.39)	가족-3 (5.22)	가족-4 (5.67)	고용4 (5.11)	가족3 (5.09)	고용2 (5.36)	교육-6 (5.25)	위기-1 (5.10)
24	위기-4 (5.39)	유해-3 (5.17)	가족-3 (5.63)	가족2 (5.07)	여가4 (5.05)	교육4 (5.35)	가족-3 (5.23)	여가-6 (4.97)
25	위기-1 (5.38)	가족-4 (5.14)	고용-4 (5.62)	가족3 (5.07)	국제4 (5.03)	국제3 (5.35)	국제-3 (5.14)	여가-4 (4.96)
26	여가-5 (5.37)	위기-1 (5.08)	통합-2 (5.61)	참여1 (5.01)	참여1 (5.01)	위기4 (5.35)	국제-4 (5.11)	여가-3 (4.94)
27	가족-4 (5.36)	여가-4 (5.04)	교육-2 (5.56)	여가1 (5.00)	유해1 (5.01)	국제4 (5.31)	가족-4 (5.11)	위기-2 (4.91)
28	교육-3 (5.34)	국제-3 (5.04)	고용-3 (5.55)	위기2 (4.99)	국제2 (4.99)	통합2 (5.30)	여가-1 (5.09)	여가-2 (4.88)
29	교육-4 (5.32)	여가-1 (5.04)	여가-5 (5.53)	국제3 (4.97)	위기1 (4.99)	위기1 (5.29)	교육-4 (5.08)	여가-1 (4.87)
30	건강-1 (5.29)	위기-2 (5.03)	고용-1 (5.50)	국제4 (4.97)	교육6 (4.96)	여가5 (5.28)	위기-1 (5.07)	교육-4 (4.86)
31	여가-4 (5.22)	교육-4 (5.03)	여가-4 (5.49)	여가2 (4.94)	교육4 (4.95)	고용1 (5.26)	여가-4 (5.07)	참여-2 (4.86)
32	건강-2 (5.16)	국제-4 (5.03)	여가-6 (5.41)	국제2 (4.94)	여가2 (4.95)	국제2 (5.25)	국제-2 (5.07)	유해-1 (4.81)
33	여가-1 (5.15)	국제-2 (4.96)	고용-2 (5.36)	가족4 (4.94)	참여4 (4.94)	여가4 (5.21)	위기-2 (5.06)	참여-4 (4.78)
34	여가-6 (5.14)	여가-6 (4.96)	여가-1 (5.32)	위기1 (4.93)	여가6 (4.90)	여가6 (5.19)	참여-1 (5.02)	국제-4 (4.75)
35	국제-4 (5.11)	여가-2 (4.94)	교육-1 (5.29)	여가4 (4.92)	국제1 (4.90)	여가3 (5.08)	건강-1 (4.97)	유해-3 (4.73)
36	국제-3 (5.06)	참여-1 (4.93)	국제-4 (5.24)	교육4 (4.91)	가족4 (4.90)	여가1 (5.07)	여가-6 (4.96)	국제-3 (4.70)
37	국제-2 (5.05)	참여-2 (4.92)	국제-2 (5.19)	참여2 (4.88)	참여2 (4.89)	참여1 (5.04)	여가-2 (4.96)	교육-3 (4.69)
38	여가-3 (5.02)	여가-3 (4.92)	위기-4 (5.19)	여가3 (4.85)	참여3 (4.86)	참여2 (5.03)	참여-2 (4.93)	참여-1 (4.63)
39	참여-2 (5.02)	참여-4 (4.89)	여가-3 (5.16)	참여4 (4.81)	건강1 (4.84)	참여4 (5.01)	여가-3 (4.92)	건강-1 (4.60)
40	참여-1 (5.02)	건강-1 (4.88)	참여-2 (5.16)	참여3 (4.79)	여가3 (4.82)	건강2 (4.99)	참여-4 (4.92)	참여-3 (4.60)
41	여가-2 (5.00)	참여-3 (4.80)	참여-1 (5.15)	여가6 (4.77)	유해3 (4.82)	여가2 (4.99)	국제-1 (4.89)	국제-2 (4.58)
42	참여-4 (4.94)	국제-1 (4.78)	여가-2 (5.09)	국제1 (4.77)	위기2 (4.76)	국제1 (4.99)	참여-3 (4.85)	유해-2 (4.56)
43	교육-2 (4.91)	건강-3 (4.76)	국제-3 (5.08)	건강2 (4.70)	교육3 (4.56)	교육3 (4.91)	교육-3 (4.83)	건강-2 (4.52)
44	국제-1 (4.89)	건강-2 (4.70)	국제-1 (5.05)	교육3 (4.51)	건강2 (4.56)	건강1 (4.89)	건강-2 (4.75)	교육-2 (4.50)
45	참여-3 (4.86)	교육-2 (4.46)	참여-4 (5.01)	교육2 (4.07)	교육2 (4.27)	교육1 (4.22)	교육-2 (4.45)	국제-1 (4.41)
46	교육-1 (4.39)	교육-1 (3.77)	참여-3 (4.95)	교육1 (3.51)	교육1 (3.46)	교육2 (4.22)	교육-1 (3.74)	교육1(3.86)
전체 평균	5.38	5.18	5.68	5.10	5.10	5.39	5.20	5.09

2) 주요 집단별 청소년정책사업의 중요도

(1) 청소년교육영역

① 세대별 차이

〈표 IV-15〉와 같이 청소년교육영역 정책사업의 중요도에 대한 세대별 차이를 분석한 결과 청소년의 경우에는 진로탐색을 위한 교육활동(5.46)이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문제행동예방 및 안전교육(5.23), 창의적 체험활동(5.03), 공동체 의식 함양을 위한 인성교육(4.79), 기초학력보장지원(4.46), 주5일제에 따른 토요방과후학교(3.77)의 순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경우에는 문제행동예방 및 안전교육(6.17)이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공동체 의식함양을 위한 인성교육(6.14), 다양한 진로탐색을 위한 교육활동(5.94), 창의적 체험활동(5.75), 기초학력보장지원(5.56), 주5일제에 따른 토요방과후학교(5.29)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주5일제에 따른 토요방과후학교, 기초학력보장지원, 공동체 의식함양 인성교육, 창의적 체험활동, 다양한 진로탐색을 위한 교육활동, 문제행동예방 및 안전교육 등 모든 사업에서 부모의 중요성 인식정도가 청소년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15 청소년교육영역의 정책사업별 중요도: 청소년과 부모

정책사업	청소년(n=2202)		부모(n=1500)		t값
	Mean	SD	Mean	SD	
주5일제에 따른 토요 방과후 학교	3.77	1.697	5.29	1.181	-32.290*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지원	4.46	1.571	5.56	1.067	-25.268*
공동체 의식 함양을 위한 인성교육	4.79	1.544	6.14	.939	-32.842*
창의적 체험활동	5.03	1.447	5.75	.972	-18.140*
다양한 진로탐색을 위한 교육활동	5.46	1.410	5.94	.885	-12.606*
문제행동예방 및 안전교육	5.23	1.426	6.17	.890	-24.834*

*p<.05

② 학교급별 차이

〈표 IV-16〉과 같이 청소년교육영역 정책사업의 중요도에 대한 학교급별 차이를 분석한 결과

중학생의 경우에는 진로탐색을 위한 교육활동(5.39)이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문제행동예방 및 안전교육(5.22), 창의적 체험활동(4.91), 공동체의식 함양을 위한 인성교육(4.51), 기초학력보장지원(4.07), 주5일제에 따른 토요방과후학교(3.51)의 순으로 나타났다. 고등학생의 경우에도 진로탐색을 위한 교육활동(5.51)이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문제행동예방 및 안전교육(4.96), 창의적 체험활동(4.95), 공동체의식 함양을 위한 인성교육(4.56), 기초학력보장지원(4.27), 주5일제에 따른 토요방과후학교(3.46)의 순으로 나타났다. 대학생의 경우에도 진로탐색을 위한 교육활동(5.67)이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문제행동예방 및 안전교육(5.55), 공동체의식 함양을 위한 인성교육(5.36), 창의적 체험활동(5.35), 기초학력보장지원(4.22), 주5일제에 따른 토요방과후학교(4.22)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주5일제에 따른 토요방과후학교, 기초학력보장지원, 공동체의식함양을 위한 인성교육, 창의적체험활동에서 대학생의 중요성 인식정도가 중학생이나 고등학생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양한 진로탐색을 위한 교육활동에 대한 중요성 인식정도는 대학생이 중학생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16 청소년교육영역의 정책사업별 중요도: 학교급별(중, 고, 대)

정책사업	중학생 (n=542)	고등학생 (n=564)	대학생 (n=598)	F값	Scheffe
	Mean(SD)	Mean(SD)	Mean(SD)		
주5일제에 따른 토요 방과후 학교	3.51(1.710)	3.46(1.737)	4.22(1.424)	40.260*	대>중, 고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지원	4.07(1.573)	4.27(1.580)	4.22(1.424)	59.550*	대>중, 고
공동체의식 함양을 위한 인성교육	4.51(1.441)	4.56(1.587)	5.36(1.307)	63.066*	대>중, 고
창의적 체험활동	4.91(1.400)	4.95(1.447)	5.35(1.268)	17.971*	대>중, 고
다양한 진로탐색을 위한 교육활동	5.39(1.376)	5.51(1.416)	5.67(1.219)	6.504*	대>중
문제행동예방 및 안전교육	5.22(1.333)	4.96(1.426)	5.55(1.239)	28.632*	대>중>고

*p<.05

③ 일반청소년과 위기청소년의 차이

〈표 IV-17〉과 같이 청소년교육영역 정책사업의 중요도에 대한 일반청소년과 위기청소년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일반청소년의 경우에는 진로탐색을 위한 교육활동(5.53)이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문제행동예방 및 안전교육(5.25), 창의적 체험활동(5.08), 공동체의식 함양을 위한 인성교육(4.83),

표 IV-17 청소년교육영역의 정책사업별 중요도: 일반청소년과 위기청소년

*p<.05

① 세대별 차이

147

청소년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18 청소년고용영역의 정책사업별 중요도: 청소년과 부모

정책사업	청소년(n=2201)		부모(n=1500)		t값
	Mean	SD	Mean	SD	
청년(청소년) 일자리 개발	5.43	1.328	5.50	1.058	-1.716
청년(청소년) 창업 및 취업지원	5.47	1.287	5.36	1.096	2.727*
일자리연계 직업훈련프로그램 강화	5.47	1.280	5.55	1.025	-1.987*
청소년 아르바이트 보호	5.42	1.417	5.62	1.032	-5.104*

*p<.05

② 학교급별 차이

〈표 IV-19〉와 같이 청소년고용영역 정책사업의 중요도에 대한 학교급별 차이를 분석한 결과 중학생의 경우에는 청년(청소년)일자리개발(5.29)이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청년(청소년) 창업/취업지원(5.28), 일자리연계 직업훈련프로그램강화(5.25), 청소년아르바이트 보호(5.11)의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고등학생은 청년(청소년) 창업/취업지원(5.67)이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청년(청소년)일자리개발(5.64), 일자리연계 직업훈련프로그램강화(5.62), 청소년아르바이트 보호(5.39)의 순으로 나타났다. 대학생의 경우에는 일자리연계 직업훈련프로그램강화(5.42)가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청소년아르바이트 보호(5.42), 청년(청소년) 창업/취업지원(5.36), 청년(청소년)일자리개발(5.26)의 순으로 나타났다. 청년(청소년)일자리개발과 청년(청소년) 창업/취업지원에서는 고등학생의 중요성 인식정도가 중학생이나 대학생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자리연계 직업훈련프로그램강화와 청소년아르바이트보호에서는 중학생의 중요성 인식정도가 고등학생이나 대학생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19 청소년고용영역의 정책사업별 중요도: 학교급별(중, 고, 대)

정책사업	중학생 (n=542)	고등학생 (n=564)	대학생 (n=597)	F값	Scheffe
	Mean(SD)	Mean(SD)	Mean(SD)		
청년(청소년) 일자리 개발	5.29(1.379)	5.64(1.222)	5.26(1.194)	16.498*	고>중, 대
청년(청소년) 창업 및 취업지원	5.28(1.278)	5.67(1.207)	5.36(1.183)	16.024*	고>중, 대
일자리연계 직업훈련프로그램 강화	5.25(1.303)	5.62(1.231)	5.45(1.128)	12.672*	중<고, 대
청소년 아르바이트 보호	5.11(1.496)	5.39(1.460)	5.42(1.202)	8.163*	중<고, 대

*p<.05

③ 일반청소년과 위기청소년의 차이

〈표 IV-20〉과 같이 청소년고용영역 정책사업의 중요도에 대한 일반청소년과 위기청소년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일반청소년의 경우에는 청년(청소년) 창업/취업지원(5.44)과 일자리연계 직업훈련프로그램강화(5.44)가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청년(청소년)일자리개발, 청소년아르바이트보호(5.31)의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위기청소년의 경우에는 청소년아르바이트 보호(5.78)가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일자리연계 직업훈련프로그램강화(5.57), 청년(청소년) 창업/취업지원(5.57), 청년(청소년)일자리개발(5.55)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청년(청소년)일자리개발과 청소년아르바이트 보호에서 위기청소년의 중요성 인식정도가 일반청소년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20 청소년고용영역의 정책사업별 중요도: 일반청소년과 위기청소년

정책사업	일반청소년(n=1703)		위기청소년(n=498)		t값
	Mean	SD	Mean	SD	
청년(청소년) 일자리 개발	5.39	1.276	5.55	1.486	-2.155*
청년(청소년) 창업 및 취업지원	5.44	1.233	5.57	1.452	-1.831
일자리연계 직업훈련프로그램 강화	5.44	1.228	5.57	1.438	-1.744
청소년 아르바이트 보호	5.31	1.393	5.78	1.440	-6.458*

*p<.05

(3) 청소년건강영역

① 세대별 차이

〈표 IV-21〉과 같이 청소년건강영역 정책사업의 중요도에 대한 세대별 차이를 분석한 결과 청소년의 경우에는 정신건강증진(5.61), 청소년수면권 보장(4.88), 건강한 음식제공(4.70)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부모의 경우에는 정신건강증진(6.27), 청소년수면권 보장(5.89), 건강한 음식제공(5.83)순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청소년수면권 보장, 건강한 음식제공, 정신건강증진에서 부모의 중요성 인식정도가 청소년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21 청소년건강영역의 정책사업별 중요도: 청소년과 부모

정책사업	청소년(n=2200)		부모(n=1500)		t값
	Mean	SD	Mean	SD	
청소년 수면권 보장	4.88	1.848	5.89	1.125	-20.598*
건강한 음식 제공	4.70	1.782	5.83	1.089	-23.925*
정신건강 증진	5.61	1.364	6.27	.893	-17.789*

*p<.05

② 학교급별 차이

〈표 IV-22〉와 같이 청소년건강영역 정책사업의 중요도에 대한 학교급별 차이를 분석한 결과 중학생의 경우에는 정신건강증진(5.58), 청소년수면권 보장(5.17), 건강한 음식제공(4.70)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정신건강증진(5.50), 청소년수면권 보장(4.84), 건강한 음식제공(4.56)순으로, 대학생의 경우에는 정신건강(5.83), 건강한 음식제공(4.99), 청소년수면권보장(4.89)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청소년수면권 보장에서 중학생의 중요성 인식정도가 고등학생이나 대학생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았으며, 건강한 음식제공과 정신건강증진에서 대학생의 중요성 인식정도가 중학생이나 고등학생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22 청소년건강영역의 정책사업별 중요도: 학교급별(중, 고, 대)

정책사업	중학생 (n=542)	고등학생 (n=564)	대학생 (n=597)	F값	Scheffe
	Mean(SD)	Mean(SD)	Mean(SD)		
청소년 수면권 보장	5.17(1.878)	4.84(1.967)	4.89(1.589)	5.244*	중>고, 대
건강한 음식 제공	4.70(1.900)	4.56(1.852)	4.99(1.450)	9.371*	대>중, 고
정신건강 증진	5.58(1.342)	5.50(1.398)	5.83(1.147)	10.333*	대>중, 고

*p<.05

③ 일반청소년과 위기청소년의 차이

〈표 IV-23〉과 같이 청소년건강영역 정책사업의 중요도에 대한 일반청소년과 위기청소년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일반청소년의 경우에는 정신건강증진(5.64), 청소년수면권 보장(4.97), 건강한 음식제공(4.75)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부모의 경우에는 정신건강증진(5.52), 청소년수면권 보장(4.60), 건강한 음식제공(4.52) 순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청소년수면권 보장, 건강한 음식제공에서 일반청소년의 중요성 인식정도가 위기청소년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23 청소년건강영역의 정책사업별 중요도: 일반청소년과 위기청소년

정책사업	일반청소년(n=1703)		위기청소년(n=497)		t값
	Mean	SD	Mean	SD	
청소년 수면권 보장	4.97	1.818	4.60	1.920	3.759*
건강한 음식 제공	4.75	1.747	4.52	1.887	2.491*
정신건강 증진	5.64	1.304	5.52	1.549	1.641

*p<.05

(4) 청소년여가활동영역

① 세대별 차이

〈표 IV-24〉와 같이 청소년여가활동영역 정책사업의 중요도에 대한 세대별 차이를 분석한 결과 청소년의 경우에는 다양한 스포츠활동 지원(5.27)이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청소년문화예술교육/문화체험지원(5.04), 청소년단체/동아리활동 지원(5.04), 청소년자원봉사활동(4.96), 국제청소년성취포상제(4.94), 청소년자기도전포상제(4.92)의 순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경우에는 다양한 스포츠활동 지원(5.53)이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청소년문화예술교육/문화체험지원(5.49), 청소년자원봉사활동(5.41), 청소년단체/동아리활동 지원(5.32), 청소년자기도전포상제(5.16), 국제청소년성취포상제(5.09)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청소년단체활동/동아리활동지원, 국제청소년성취포상제, 청소년자기도전포상제, 청소년문화예술교육/문화체험지원, 다양한 스포츠활동 지원, 청소년자원봉사활동 등 모든 사업에서 부모의 중요성 인식정도가 청소년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24 청소년여가활동영역의 정책사업별 중요도: 청소년과 부모

정책사업	청소년(n=2199)		부모(n=1500)		t값
	Mean	SD	Mean	SD	
청소년단체 및 동아리활동 지원	5.04	1.397	5.32	1.077	-6.883*
국제청소년성취포상제	4.94	1.348	5.09	1.244	-3.309*
청소년자기도전포상제	4.92	1.361	5.16	1.235	-5.484*
청소년문화예술교육/문화체험지원	5.04	1.376	5.49	1.047	-11.192*
다양한 스포츠활동 지원	5.27	1.358	5.53	1.053	-6.551*
청소년자원봉사활동	4.96	1.449	5.41	1.107	-10.696*

*p<.05

② 학교급별 차이

〈표 IV-25〉와 같이 청소년여가활동영역 정책사업의 중요도에 대한 학교급별 차이를 분석한 결과 중학생의 경우에는 다양한 스포츠활동지원(5.23)이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청소년단체/동아리활동

동 지원(5.00), 국제청소년성취포상제(4.94), 청소년문화예술교육/문화체험지원(4.92), 청소년자기도전포상제(4.85), 청소년자원봉사활동(4.77)의 순으로 나타났다.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다양한 스포츠활동지원(5.29)이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청소년단체/동아리활동지원(5.18), 청소년문화예술교육/문화체험지원(5.05), 국제청소년성취포상제(4.95), 청소년자원봉사활동(4.90), 청소년자기도전포상제(4.82)의 순으로 나타났다. 대학생의 경우에는 다양한 스포츠활동지원(5.28), 청소년문화예술교육/문화체험지원(5.21), 청소년자원봉사활동(5.19), 청소년자기도전포상제(5.08), 청소년단체/동아리활동지원(5.07), 국제청소년성취포상제(4.99)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청소년자기도전포상제와 청소년자원봉사활동에서 대학생의 중요성 인식정도가 중학생이나 고등학생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았으며, 청소년문화예술교육/문화체험지원에서는 대학생의 중요성 인식정도가 중학생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25 청소년여가활동영역의 정책사업별 중요도: 학교급별(중, 고, 대)

정책사업	중학생 (n=542)	고등학생 (n=564)	대학생 (n=598)	F값	Scheffe
	Mean(SD)	Mean(SD)	Mean(SD)		
청소년단체 및 동아리활동 지원	5.00(1.455)	5.18(1.389)	5.07(1.141)	2.641	-
국제청소년성취포상제	4.94(1.319)	4.95(1.357)	4.99(1.172)	.243	-
청소년자기도전포상제	4.85(1.315)	4.82(1.392)	5.08(1.215)	6.799*	대>중, 고
청소년문화예술교육/문화체험지원	4.92(1.308)	5.05(1.381)	5.21(1.214)	6.778*	중<대
다양한 스포츠활동 지원	5.23(1.320)	5.29(1.372)	5.28(1.267)	.297	-
청소년자원봉사활동	4.77(1.426)	4.90(1.442)	5.19(1.263)	14.243*	대>중, 고

*p<.05

③ 일반청소년과 위기청소년의 차이

〈표 IV-26〉과 같이 청소년여가활동영역 정책사업의 중요도에 대한 일반청소년과 위기청소년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일반청소년의 경우 다양한 스포츠활동 지원(5.27)이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청소년단체/동아리활동지원(5.09), 청소년문화예술교육/문화체험지원(5.07), 국제청소년성취포상제(4.96), 청소년자원봉사활동(4.96), 청소년자기도전포상제(4.92)의 순으로 나타났다. 위기청소년의 경우에는 다양한 스포츠활동지원(5.26)이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청소년자원봉사활동(4.97),

청소년문화예술교육/문화체험지원(4.96), 청소년자기도전포상제(4.94), 국제청소년성취포상제(4.88), 청소년단체/동아리활동지원(4.87)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청소년단체/동아리활동지원에서 일반청소년의 중요성 인식정도가 위기청소년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26 청소년여가활동영역의 정책사업별 중요도: 일반청소년과 위기청소년

정책사업	일반청소년(n=1703)		위기청소년(n=496)		t값
	Mean	SD	Mean	SD	
청소년단체 및 동아리활동 지원	5.09	1.332	4.87	1.591	2.766*
국제청소년성취포상제	4.96	1.282	4.88	1.552	1.066
청소년자기도전포상제	4.92	1.312	4.94	1.516	-.181
청소년문화예술교육/문화체험지원	5.07	1.306	4.96	1.592	1.338
다양한 스포츠활동 지원	5.27	1.319	5.26	1.485	.101
청소년자원봉사활동	4.96	1.387	4.97	1.646	-.094

*p<.05

(5) 청소년국제활동영역

① 세대별 차이

〈표 IV-27〉과 같이 청소년국제활동영역 정책사업의 중요도에 대한 세대별 차이를 분석한 결과 청소년의 경우에는 다양한 해외체험활동(5.04), 국제교육(5.03), 글로벌 청년리더양성(4.96), 국가간 교류등 국제교류(4.78)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부모의 경우에는 국제교육(5.24), 글로벌 청년리더양성(5.19), 다양한 해외체험활동(5.08), 국가간교류등 국제교류(5.05)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국가간 교류등 국제교류, 글로벌 청년리더양성, 국제교육에서 부모의 중요성 인식정도가 청소년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27 청소년국제활동영역의 정책사업별 중요도: 청소년과 부모

정책사업	청소년(n=2200)		부모(n=1500)		t값
	Mean	SD	Mean	SD	
국가간교류 등 국제교류	4.78	1.439	5.05	1.213	-6.240*
글로벌 청년리더 양성	4.96	1.435	5.19	1.235	-5.292*
다양한 해외체험 활동	5.04	1.454	5.08	1.258	-.849
국제교육(문화다양성, 국제이해 등)	5.03	1.422	5.24	1.173	-4.983*

*p<.05

② 학교급별 차이

〈표 IV-28〉과 같이 청소년국제활동영역 정책사업의 중요도에 대한 학교급별 차이를 분석한 결과 중학생의 경우에는 다양한 해외체험활동(4.97), 국제교육(4.97), 글로벌 청년리더양성(4.94), 국가간 교류등 국제교류(4.77)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다양한 해외체험활동(5.09), 국제교육(5.03), 글로벌 청년리더양성(4.99), 국가간교류등 국제교류(4.90)의 순으로 나타났다. 대학생의 경우에는 다양한 해외체험활동(5.35), 국제교육(5.31), 글로벌 청년리더양성(5.25), 국가간 교류등 국제교류(4.99)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국가간교류등 국제교류에서는 중학생의 중요성 인식정도가 대학생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글로벌 청년리더양성, 다양한 해외체험활동, 국제교육에서는 대학생의 중요성 인식정도가 중학생이나 고등학생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28 청소년국제활동영역의 정책사업별 중요도: 학교급별(중, 고, 대)

정책사업	중학생 (n=542)	고등학생 (n=564)	대학생 (n=598)	F값	Scheffe
	Mean(SD)	Mean(SD)	Mean(SD)		
국가간교류 등 국제교류	4.77(1.411)	4.90(1.393)	4.99(1.259)	3.935*	중<대
글로벌 청년리더 양성	4.94(1.395)	4.99(1.400)	5.25(1.254)	9.056*	대>중, 고
다양한 해외체험 활동	4.97(1.408)	5.09(1.427)	5.35(1.260)	11.816*	대>중, 고
국제교육(문화다양성, 국제이해 등)	4.97(1.364)	5.03(1.426)	5.31(1.241)	10.357*	대>중, 고

*p<.05

③ 일반청소년과 위기청소년의 차이

〈표 IV-29〉와 같이 청소년국제활동영역 정책사업의 중요도에 대한 일반청소년과 위기청소년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일반청소년의 경우에는 다양한 해외체험활동(5.14), 국제교육(5.11), 글로벌 청년리더양성(5.07), 국가간교류등 국제교류(4.89)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위기청소년의 경우에는 국제교육(4.75), 다양한 해외체험활동(4.70), 글로벌 청년리더양성(4.58), 국가간교류등 국제교류(4.41)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국가간교류등 국제교류, 글로벌 청년리더양성, 다양한 해외체험활동, 국제교육등 모든 사업에서 일반청소년의 중요성 인식정도가 위기청소년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29 청소년국제활동영역의 정책사업별 중요도: 일반청소년과 위기청소년

정책사업	일반청소년(n=1704)		위기청소년(n=496)		t값
	Mean	SD	Mean	SD	
국가간교류 등 국제교류	4.89	1.536	4.41	1.641	5.971*
글로벌 청년리더 양성	5.07	1.355	4.58	1.627	6.020*
다양한 해외체험 활동	5.14	1.373	4.70	1.658	5.397*
국제교육(문화다양성, 국제이해 등)	5.11	1.351	4.75	1.641	4.522*

*p<.05

(6) 청소년참여영역

① 세대별 차이

〈표 IV-30〉과 같이 청소년참여영역 정책사업의 중요도에 대한 세대별 차이를 분석한 결과 청소년의 경우에는 학교규칙 제정에 참여(4.93), 청소년시설운영에 참여(4.92), 청소년특별회의에서 정책제안(4.89), 지방자치단체 청소년정책결정 참여(4.80)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부모의 경우에는 청소년시설 운영에 참여(5.16), 학교규칙 제정에 참여(5.15), 청소년특별회의에서 정책제안(5.01), 지방자치단체 청소년정책결정 참여(4.95)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학교규칙 제정에 참여, 청소년시설운영에 참여, 지방자치단체 청소년정책결정 참여, 청소년특별회의에서 정책제안 등 모든 사업에서 부모의 중요성 인식정도가 청소년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30 청소년참여영역의 정책사업별 중요도: 청소년과 부모

정책사업	청소년(n=2202)		부모(n=1500)		t값
	Mean	SD	Mean	SD	
학교규칙 제정에 참여	4.93	1.493	5.15	1.186	-5.086*
청소년시설 운영에 참여	4.92	1.345	5.16	1.115	-6.019*
지방자치단체 청소년정책결정 참여	4.80	1.364	4.95	1.192	-3.709*
청소년특별회의에서 정책제안	4.89	1.409	5.01	1.193	-2.724*

*p<.05

② 학교급별 차이

〈표 IV-31〉과 같이 청소년참여영역 정책사업의 중요도에 대한 학교급별 차이를 분석한 결과 중학생의 경우에는 학교규칙 제정에 참여(5.01), 청소년시설운영에 참여(4.88), 청소년특별회의에서 정책제안(4.81), 지방자치단체 청소년정책결정 참여(4.79)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학교규칙 제정에 참여(5.01), 청소년특별회의에서 정책제안(4.94), 청소년시설운영에 참여(4.89), 지방자치단체 청소년정책결정 참여(4.86)의 순으로 나타났다. 대학생의 경우에는 학교규칙 제정에 참여(5.04), 청소년시설운영에 참여(5.03), 청소년특별회의에서 정책제안(5.01), 지방자치단체 청소년정책결정 참여(4.91)의 순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학교규칙 제정에 참여, 청소년시설운영에 참여, 지방자치단체 청소년정책결정 참여, 청소년특별회의에서 정책제안 등 모든 사업에서 학교급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31 청소년참여영역의 정책사업별 중요도: 학교급별(중, 고, 대)

정책사업	중학생 (n=543)	고등학생 (n=564)	대학생 (n=598)	F값	Scheffe
	Mean(SD)	Mean(SD)	Mean(SD)		
학교규칙 제정에 참여	5.01(1.494)	5.01(1.454)	5.04(1.264)	.083	-
청소년시설 운영에 참여	4.88(1.289)	4.89(1.356)	5.03(1.176)	2.428	-
지방자치단체 청소년정책결정 참여	4.79(1.303)	4.86(1.381)	4.91(1.200)	1.205	-
청소년특별회의에서 정책제안	4.81(1.310)	4.94(1.428)	5.01(1.223)	3.083*	-

*p<.05

③ 일반청소년과 위기청소년의 차이

〈표 IV-32〉와 같이 청소년참여영역 정책사업의 중요도에 대한 일반청소년과 위기청소년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일반청소년의 경우에는 학교규칙 제정에 참여(5.02), 청소년시설운영에 참여(4.93), 청소년특별회의에서 정책제안(4.92), 지방자치단체 청소년정책결정 참여(4.85)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위기청소년의 경우에는 청소년시설운영에 참여(4.86), 청소년특별회의에서 정책제안(4.78), 학교규칙 제정에 참여(4.63), 지방자치단체 청소년정책결정 참여(4.60)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학교규칙 제정에 참여, 지방자치단체 청소년정책결정 참여에서 일반청소년의 중요성 인식정도가 위기청소년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32 청소년참여영역의 정책사업별 중요도: 일반청소년과 위기청소년

정책사업	일반청소년(n=1705)		위기청소년(n=497)		t값
	Mean	SD	Mean	SD	
학교규칙 제정에 참여	5.02	1.403	4.63	1.734	4.599*
청소년시설 운영에 참여	4.93	1.275	4.86	1.561	.932
지방자치단체 청소년정책결정 참여	4.85	1.295	4.60	1.565	3.321*
청소년특별회의에서 정책제안	4.92	1.323	4.78	1.670	1.790

*p<.05

(7) 청소년사회통합영역

① 세대별 차이

〈표 IV-33〉과 같이 청소년사회통합영역 정책사업의 중요도에 대한 세대별 차이를 분석한 결과 청소년의 경우에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의 청소년지원(5.76)이 가장 중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장애청소년지원(5.66), 미혼(부)모 청소년지원(5.63), 위기청소년지원(5.62), 탈북·다문화청소년 지원(5.26)의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부모의 경우에는 위기청소년지원(6.18)이 가장 중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소년지원(6.10), 장애청소년지원(6.05), 미혼(부)모 청소년지원(5.81), 탈북·다문화청소년 지원(5.61)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청소년사

회통합영역의 모든 사업에서 부모의 중요성 인식정도가 청소년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33 청소년사회통합영역의 정책사업별 중요도: 청소년과 부모

정책사업	청소년(n=2202)		부모(n=1500)		t값
	Mean	SD	Mean	SD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의 청소년 지원	5.76	1.285	6.10	.897	-9.380*
탈북·다문화 청소년 지원	5.26	1.418	5.61	1.107	-8.418*
장애청소년 지원	5.66	1.321	6.05	.930	-10.408*
위기청소년지원(가출, 비행, 성매매등)	5.62	1.408	6.18	.965	-14.293*
미혼(부)모 청소년 지원	5.63	1.357	5.81	1.017	-4.638*

*p<.05

② 학교급별 차이

〈표 IV-34〉와 같이 청소년사회통합영역 정책사업의 중요도에 대한 학교급별 차이를 분석한 결과 중학생의 경우에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의 청소년지원(5.63)이 가장 중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위기청소년지원(5.54), 장애청소년지원(5.49), 미혼(부)모 청소년지원(5.46), 탈북·다문화청소년 지원(5.29)의 순으로 나타났다.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의 청소년지원(5.79)이 가장 중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장애청소년지원(5.62), 미혼(부)모 청소년지원(5.50), 위기청소년지원(5.30), 탈북·다문화청소년 지원(5.18)의 순으로 나타났다. 대학생의 경우에는 장애청소년지원(5.96)이 가장 중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의 청소년지원(5.90), 미혼(부)모 청소년 지원(5.80), 위기청소년지원(5.80), 탈북·다문화청소년 지원(5.30)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의 청소년지원에 대한 대학생의 중요성 인식정도는 중학생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장애청소년지원과 미혼(부)모 청소년 지원에서는 대학생의 중요성 인식정도가 중학생이나 고등학생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위기청소년지원의 중요성 인식정도는 대학생이 중학생과 고등학생보다, 그리고 중학생이 고등학생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34 청소년사회통합영역의 정책사업별 중요도: 학교급별(중, 고, 대)

정책사업	중학생 (n=543)	고등학생 (n=564)	대학생 (n=598)	F값	Scheffe
	Mean(SD)	Mean(SD)	Mean(SD)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의 청소년 지원	5.63(1.260)	5.79(1.221)	5.90(1.125)	6.952*	중<대
탈북·다문화 청소년 지원	5.29(1.391)	5.18(1.411)	5.30(1.268)	1.365*	-
장애청소년 지원	5.49(1.380)	5.62(1.235)	5.96(1.066)	23.192*	대>중, 고
위기청소년지원(가출, 비행, 성매매등)	5.54(1.358)	5.30(1.507)	5.80(1.248)	18.982*	대>중, 고
미혼(부)모 청소년 지원	5.46(1.403)	5.50(1.358)	5.80(1.143)	12.044*	대>중, 고

*p<.05

③ 일반청소년과 위기청소년의 차이

〈표 IV-35〉와 같이 청소년사회통합영역 정책사업의 중요도에 대한 일반청소년과 위기청소년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일반청소년의 경우에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의 청소년지원(5.78)이 가장 중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미혼(부)모 청소년지원(5.59), 장애청소년지원(5.55), 위기청소년지원(5.55), 탈북·다문화청소년 지원(5.25)의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위기청소년의 경우에는 위기청소년지원(5.84)이 가장 중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미혼(부)모 청소년지원(5.77),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의 청소년지원(5.70), 장애청소년지원(5.26), 탈북·다문화청소년 지원(5.26)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장애청소년지원, 위기청소년지원, 미혼(부)모 청소년지원에서 위기청소년의 중요성 인식정도가 일반청소년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35 청소년사회통합영역의 정책사업별 중요도: 일반청소년과 위기청소년

정책사업	일반청소년(n=1705)		위기청소년(n=497)		t값
	Mean	SD	Mean	SD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의 청소년 지원	5.78	1.205	5.70	1.526	.972
탈북·다문화 청소년 지원	5.25	1.356	5.26	1.613	-.094
장애청소년 지원	5.70	1.245	5.55	1.387	1.978*
위기청소년지원(가출, 비행, 성매매등)	5.55	1.387	5.84	1.457	-4.018*
미혼(부)모 청소년 지원	5.59	1.310	5.77	1.499	-2.406*

*p<.05

프로그램지원, 청소년대상 예비부모교육 등 청소년가족지원영역의 모든 정책사업에서 대학생의 중요성 인식정도가 중학생이나 고등학생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37 청소년가족지원영역의 정책사업별 중요도: 학교급별(중, 고, 대)

정책사업	중학생 (n=542)	고등학생 (n=564)	대학생 (n=598)	F값	Scheffe
	Mean(SD)	Mean(SD)	Mean(SD)		
부모교육	5.25(1.429)	5.30(1.372)	5.87(1.130)	40.383*	대>중, 고
가족상담	5.07(1.487)	5.17(1.370)	5.84(1.058)	59.030*	대>중, 고
가족단위 여가/문화프로그램 지원	5.07(1.522)	5.09(1.418)	5.51(1.187)	19.212*	대>중, 고
청소년대상 예비부모 교육	4.94(1.469)	4.90(1.455)	5.46(1.188)	30.518*	대>중, 고

*p<.05

③ 일반청소년과 위기청소년의 차이

〈표 IV-38〉과 같이 청소년가족지원영역 정책사업의 중요도에 대한 일반청소년과 위기청소년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일반청소년의 경우에는 부모교육(5.49), 가족상담(5.37), 가족단위 여가/문화프로그램 지원(5.23), 청소년대상 예비부모교육(5.11)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위기청소년의 경우에는 부모교육(5.48), 가족상담(5.37), 청소년대상 예비부모교육(5.25), 가족단위 여가/문화프로그램 지원(5.20)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부모교육, 가족상담, 가족단위 여가/문화프로그램지원, 청소년 대상 예비부모교육 등 청소년가족지원영역의 모든 정책사업에서 일반청소년과 위기청소년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38 청소년가족지원영역의 정책사업별 중요도: 일반청소년과 위기청소년

정책사업	일반청소년(n=1704)		위기청소년(n=497)		t값
	Mean	SD	Mean	SD	
부모교육	5.49	1.342	5.48	1.595	.108
가족상담	5.37	1.354	5.37	1.613	.036
가족단위 여가/문화프로그램 지원	5.23	1.392	5.20	1.622	.358
청소년대상 예비부모 교육	5.11	1.395	5.25	1.643	-1.685

*p<.05

(9) 위기청소년 지원영역

① 세대별 차이

〈표 IV-39〉와 같이 위기청소년 지원영역 정책사업의 중요도에 대한 세대별 차이를 분석한 결과 청소년의 경우에는 위기예방교육/치료·재활(5.61)이 가장 중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경제적 지원(5.53), 주거/교육/자립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 제공(5.36), 지역사회안전망구축(5.08), 인터넷중독예방 및 치료·재활(5.03)의 순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경우에는 위기예방교육/치료·재활(6.19)이 가장 중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인터넷중독예방 및 치료·재활(6.07), 지역사회안전망구축(5.81), 주거/교육/자립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 제공(5.76), 경제적 지원(5.19)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지역사회안전망구축, 인터넷중독예방 및 치료·재활, 주거/교육/자립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 제공, 위기예방교육/치료·재활과 관련해서 부모의 중요성 인식정도가 청소년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경제적지원에서는 청소년의 중요성 인식정도가 부모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39 위기청소년 지원영역의 정책사업별 중요도: 청소년과 부모

정책사업	청소년(n=2201)		부모(n=1500)		t값
	Mean	SD	Mean	SD	
지역사회안전망구축	5.08	1.380	5.81	.998	-18.648*
인터넷중독 예방 및 치료·재활	5.03	1.402	6.07	1.010	-26.268*
주거/교육/자립지원등 다양한 서비스 제공	5.36	1.323	5.76	.987	-10.505*
경제적 지원(생활비, 용돈 등)	5.53	1.340	5.19	1.225	7.944*
위기예방교육/ 치료·재활(폭력, 범죄등)	5.61	1.347	6.19	.918	-15.619*

*p<.05

② 학교급별 차이

〈표 IV-40〉과 같이 위기청소년 지원영역 정책사업의 중요도에 대한 학교급별 차이를 분석한 결과 중학생의 경우에는 위기예방교육/치료·재활(5.55)이 가장 중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경제적 지원(5.52), 주거/교육/자립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 제공(5.26), 인터넷중독예방 및 치료·재

활(4.99), 지역사회안전망구축(4.93)의 순으로 나타났다.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경제적지원(5.42)이 가장 중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위기예방교육/치료·재활(5.40), 주거/교육/자립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 제공(5.16), 지역사회안전망구축(4.99), 인터넷중독예방 및 치료·재활(4.76)의 순으로 나타났다. 대학생의 경우에는 위기예방교육/치료·재활(5.81)이 가장 중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주거/교육/자립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 제공(5.42), 인터넷중독예방 및 치료·재활(5.40), 경제적지원(5.35), 지역사회안전망구축(5.29)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지역사회안전망구축의 중요성 인식정도는 대학생이 고등학생과 중학생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고등학생은 중학생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중독예방 및 치료·재활에 대해서는 대학생의 중요성 인식정도가 고등학생과 중학생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았으며, 중학생의 중요성 인식정도는 고등학생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주거/교육/자립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 제공과 관련해서는 대학생의 중요성 인식정도가 고등학생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위기예방교육/치료·재활과 관련해서는 대학생의 중요성 인식정도가 중학생과 고등학생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40 위기청소년 지원영역 정책사업별 중요도: 학교급별(중, 고, 대)

정책사업	중학생 (n=542)	고등학생 (n=564)	대학생 (n=598)	F값	Scheffe
	Mean(SD)	Mean(SD)	Mean(SD)		
지역사회안전망구축	4.93(1.298)	4.99(1.408)	5.29(1.219)	12.476*	대>고>중
인터넷중독 예방 및 치료·재활	4.99(1.344)	4.76(1.404)	5.40(1.173)	36.522*	대>중>고
주거/교육/자립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 제공	5.26(1.265)	5.16(1.374)	5.42(1.804)	6.722*	대>고
경제적 지원(생활비, 용돈 등)	5.52(1.283)	5.42(1.356)	5.35(1.255)	2.349	-
위기예방교육/ 치료·재활(목력, 범죄등)	5.55(1.280)	5.40(1.374)	5.81(1.193)	14.722*	대>중, 고

*p<.05

③ 일반청소년과 위기청소년의 차이

〈표 IV-41〉과 같이 위기청소년 지원영역 정책사업의 중요도에 대한 일반청소년과 위기청소년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일반청소년의 경우에는 위기예방교육/치료·재활(5.59)이 가장 중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경제적 지원(5.43), 주거/교육/자립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 제공(5.28),

지역사회안전망구축(5.07), 인터넷중독예방 및 치료·재활(5.06)의 순으로 나타났다. 위기청소년의 경우에는 경제적 지원(5.87)이 가장 중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위기에방교육/치료·재활(5.66), 주거/교육/자립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 제공(5.62), 지역사회안전망구축(5.10), 인터넷중독예방 및 치료·재활(4.91)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주거/교육/자립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 제공과 경제적 지원에서 위기청소년의 중요성 인식정도가 일반청소년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41 위기청소년 지원영역의 정책사업별 중요도: 일반청소년과 위기청소년

정책사업	일반청소년(n=1704)		위기청소년(n=497)		t값
	Mean	SD	Mean	SD	
지역사회안전망구축	5.07	1.318	5.10	1.575	-.362
인터넷중독 예방 및 치료·재활	5.06	1.335	4.91	1.607	1.864
주거/교육/자립지원등 다양한 서비스 제공	5.28	1.247	5.62	1.528	-4.437*
경제적 지원(생활비, 용돈 등)	5.43	1.299	5.87	1.421	-6.449*
위기에방교육/ 치료·재활(폭력, 범죄등)	5.59	1.293	5.66	1.519	-.841

*p<.05

(10) 청소년유해환경 단속영역

① 세대별 차이

〈표 IV-42〉와 같이 청소년유해환경 단속영역 정책사업의 중요도에 대한 세대별 차이를 분석한 결과 청소년의 경우에는 청소년대상 성범죄 방지(5.86)가 가장 중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청소년안전 및 기본권보호를 위한 규제(5.73), 청소년대상 술·담배 판매금지(5.30), 청소년유해업소 감시·단속(5.24), 청소년유해매체 심의 강화(5.17)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부모의 경우에는 청소년대상 성범죄 방지(6.56)가 가장 중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청소년대상 술·담배 판매금지(6.49), 청소년유해업소 감시·단속(6.40), 청소년유해매체 심의 강화(6.27), 청소년안전 및 기본권보호를 위한 규제(6.10)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그리고 청소년유해업소 감시·단속, 청소년대상 술·담배 판매금지, 청소년유해매체 심의 강화, 청소년대상 성범죄 방지, 청소년안전 및 기본권보호를 위한

규제 등 청소년유해환경 단속영역의 모든 정책사업에서 부모의 중요성 인식정도가 청소년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42 청소년유해환경단속영역의 정책사업별 중요도: 청소년과 부모

정책사업	청소년(n=2198)		부모(n=1500)		t값
	Mean	SD	Mean	SD	
청소년유해업소 감시·단속	5.24	1.683	6.40	.859	-27.654*
청소년대상 술·담배 판매금지	5.30	1.774	6.49	.824	-27.502*
청소년유해매체 심의 강화	5.17	1.726	6.27	.993	-24.525*
청소년대상 성범죄 방지	5.86	1.443	6.56	.759	-19.233*
청소년 안전 및 기본권보호를 위한 규제	5.73	1.460	6.10	.967	-9.374*

*p<.05

② 학교급별의 차이

〈표 IV-43〉과 같이 청소년유해환경 단속영역 정책사업의 중요도에 대한 학교급별 차이를 분석한 결과 중학생의 경우에는 청소년대상 성범죄 방지(5.82)가 가장 중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청소년안전 및 기본권보호를 위한 규제(5.74), 청소년대상 술·담배 판매금지(5.50), 청소년유해매체 심의 강화(5.27), 청소년유해업소 감시·단속(5.24)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청소년대상 성범죄 방지(5.73)가 가장 중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청소년안전 및 기본권보호를 위한 규제(5.57), 청소년대상 술·담배 판매금지(5.11), 청소년유해업소 감시·단속(5.01), 청소년유해매체 심의 강화(4.82)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대학생의 경우에는 청소년대상 성범죄 방지(6.22)가 가장 중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청소년안전 및 기본권보호를 위한 규제(6.04), 청소년대상 술·담배 판매금지(5.91), 청소년유해업소 감시·단속(5.81), 청소년유해매체 심의 강화(5.76)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그리고 청소년유해업소 감시·단속, 청소년대상 술·담배 판매금지, 청소년유해매체 심의 강화, 청소년대상 성범죄 방지, 청소년안전 및 기본권보호를 위한 규제 등 청소년유해환경 단속영역의 모든 정책사업에서 대학생의 중요성 인식정도는 중학생과 고등학생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았으며, 중학생의 중요성 인식정도는 고등학생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43 청소년유해환경단속영역의 정책사업별 중요도: 학교급별(중, 고, 대)

정책사업	중학생 (n=542)	고등학생 (n=562)	대학생 (n=598)	F값	Scheffe
	Mean(SD)	Mean(SD)	Mean(SD)		
청소년유해업소 감시·단속	5.24(1.651)	5.01(1.711)	5.81(1.243)	41.405*	대>중>고
청소년대상 술·담배 판매금지	5.50(1.654)	5.11(1.803)	5.91(1.249)	37.330*	대>중>고
청소년유해매체 심의 강화	5.27(1.606)	4.82(1.823)	5.76(1.332)	50.498*	대>중>고
청소년대상 성범죄 방지	5.82(1.407)	5.73(1.531)	6.22(1.051)	21.711*	대>중>고
청소년 안전 및 기본권보호를 위한 규제	5.74(1.452)	5.57(1.571)	6.04(1.027)	17.163*	대>중>고

*p<.05

③ 일반청소년과 위기청소년의 차이

〈표 IV-44〉와 같이 청소년유해환경 단속영역 정책사업의 중요도에 대한 일반청소년과 위기청소년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일반청소년의 경우에는 청소년대상 성범죄 방지(5.93)가 가장 중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청소년안전 및 기본권보호를 위한 규제(5.79), 청소년대상 술·담배 판매금지(5.52), 청소년유해업소 감시·단속(5.36), 청소년유해매체 심의 강화(5.30)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위기청소년의 경우에는 청소년대상 성범죄 방지(5.61)가 가장 중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청소년안전 및 기본권보호를 위한 규제(5.51), 청소년유해업소 감시·단속(4.81), 청소년유해매체 심의 강화(4.73), 청소년대상 술·담배 판매금지(4.56)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그리고 청소년유해업소 감시·단속, 청소년대상 술·담배 판매금지, 청소년유해매체 심의 강화, 청소년대상 성범죄 방지, 청소년안전 및 기본권보호를 위한 규제 등 청소년유해환경 단속영역의 모든 정책사업에서 일반청소년의 중요성 인식정도가 위기청소년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44 청소년유해환경단속영역의 정책사업별 중요도: 일반청소년과 위기청소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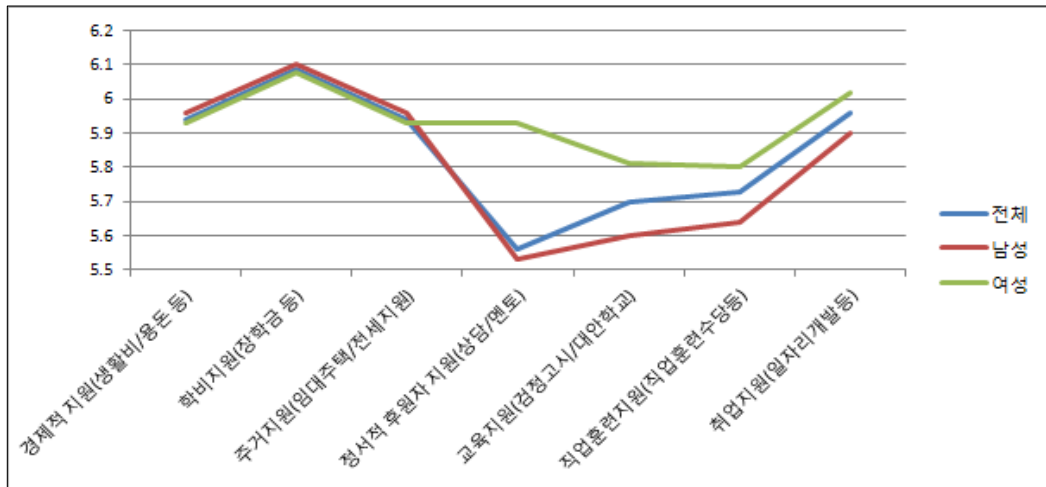
정책사업	일반청소년(n=1702)		위기청소년(n=496)		t값
	Mean	SD	Mean	SD	
청소년유해업소 감시·단속	5.36	1.578	4.81	1.942	5.845*
청소년대상 술·담배 판매금지	5.52	1.612	4.56	2.081	9.406*
청소년유해매체 심의 강화	5.30	1.640	4.73	1.931	5.918*
청소년대상 성범죄 방지	5.93	1.355	5.61	1.690	3.917*
청소년 안전 및 기본권보호를 위한 규제	5.79	1.375	5.51	1.703	3.350*

*p<.05

(11) 위기청소년과 대학생의 세부사업에 대한 수요

① 위기청소년 대상 정책사업의 중요성 (위기청소년)

【그림 IV-14】, <표 IV-45>와 같이 우리나라 청소년정책에서 특별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들을 위해 어떤 정책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위기청소년을 대상으로 질문한 결과 위기청소년들은 장학금 등 학비지원(6.09)이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일자리개발/취업정보제공 등 취업지원(5.96), 생활비/용돈 등 경제적 지원(5.94), 임대주택/전세지원 등 주거지원(5.94), 직업훈련 지원(5.73), 검정고시/대안학교 등 교육지원(5.70), 정서적 후원자 지원(5.56)의 순으로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그림 IV-14】 위기청소년 대상 정책사업의 중요성 (위기청소년)

위기청소년의 성별에 따른 차이를 분석한 결과 남성청소년의 경우에는 장학금 등 학비지원(6.10)이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생활비/용돈 등 경제적 지원(5.96), 임대주택/전세지원 등 주거지원(5.96), 일자리개발/취업정보제공 등 취업지원(5.90), 직업훈련지원(5.64), 검정고시/대안학교 등 교육지원(5.60), 정서적 후원자 지원(5.53)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여성청소년의 경우에는 장학금 등 학비지원(6.08)이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일자리개발/취업정보제공 등 취업지원(6.02), 생활비/용돈 등 경제적지원(5.93), 임대주택/전세지원 등 주거지원(5.93), 정서적 후원자 지원(5.93), 검정고시/대안학교 등 교육지원(5.81), 직업훈련지원(5.80)의 순으로 응답하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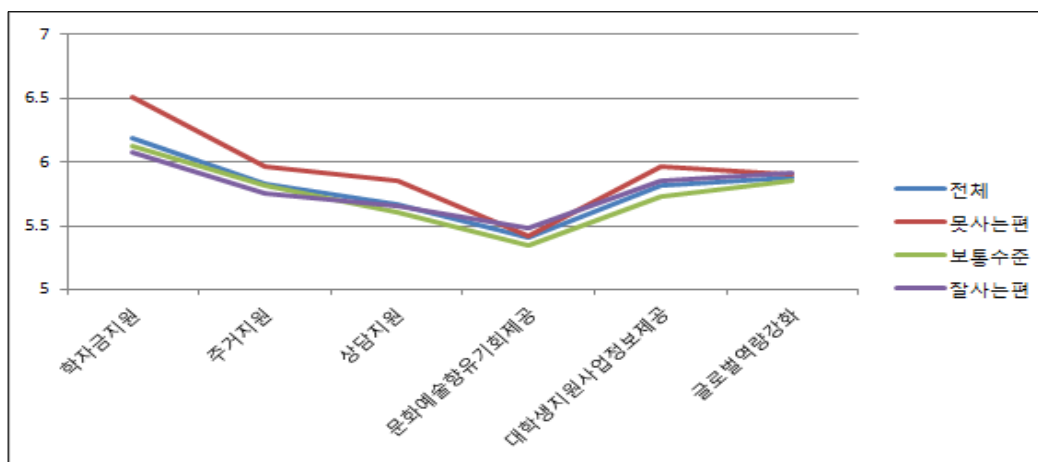
다. 하지만 위기청소년대상 정책사업의 중요성에 대해서 위기청소년의 성별에 따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45 위기청소년 대상 청소년정책사업의 중요성: 위기청소년

정책사업	남성(n=243)		여성(n=253)		전체	t값
	Mean	SD	Mean	SD		
경제적 지원(생활비/용돈)	5.96	1.412	5.93	1.313	5.94	.283
장학금 등 학비지원	6.10	1.283	6.08	1.229	6.09	.202
주거지원(임대주택/전세지원)	5.96	1.409	5.93	1.317	5.94	.250
정서적 후원자 지원(상담/멘토)	5.53	1.409	5.93	1.317	5.56	-.384
교육지원(검정고시/대안학교)	5.60	1.551	5.81	1.287	5.70	-1.682
직업훈련지원(직업훈련수당등)	5.64	1.577	5.80	1.363	5.73	-1.197
취업지원(일자리 개발/취업정보)	5.90	1.511	6.02	1.252	5.96	-.950

*p<.05

② 대학생 대상 정책사업의 중요성 (대학생)



【그림 IV-15】 대학생 대상 정책사업의 중요성 (대학생)

【그림 IV-15】와 같이 우리나라 청소년정책에서 대학생 등 후기청소년들을 위해 어떤 정책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질문한 결과 대학생들은 학자금지원(6.19)이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대학생 글로벌 역량강화 지원(5.88), 주거지원(5.83), 대학생 지원사업 정보제공(5.81), 상담지원(5.67), 문화예술향유기회 지원(5.41)의 순으로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표 IV-46〉과 같이 대학생 등 후기청소년 대상 정책사업의 필요성과 관련하여 대학생의 성별에 따른 차이를 분석한 결과 남성 대학생들은 학자금지원(6.16)이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주거지원(5.86), 대학생 글로벌역량강화 지원(5.79), 대학생지원사업 정보제공(5.77), 상담지원(5.66), 문화예술향유기회 지원(5.43)의 순으로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여성 대학생들은 학자금지원(6.21)이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대학생 글로벌역량강화 지원(5.96), 대학생지원사업 정보제공(5.85), 주거지원(5.80), 상담지원(5.69), 문화예술향유기회 지원(5.38)의 순으로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하지만 학자금지원, 주거지원, 상담지원, 문화예술 향유기회 지원, 대학생지원사업 정보제공, 대학생 글로벌역량강화 지원 등 모든 대학생 대상 정책사업의 중요성에 대해서 성별에 따른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46 대학생 대상 청소년정책사업의 중요성: 성별

정책사업	남성(n=297)		여성(n=301)		전체	t값
	Mean	SD	Mean	SD		
학자금 지원	6.16	1.027	6.21	1.004	6.19	-.614
주거지원	5.86	1.142	5.80	1.055	5.83	.644
상담지원	5.66	1.203	5.69	1.170	5.67	-.286
문화예술 향유 기회지원	5.43	1.319	5.38	1.277	5.41	.461
대학생지원사업 정보제공	5.77	1.238	5.85	1.058	5.81	-.843
대학생 글로벌 역량강화 지원	5.79	1.212	5.96	1.110	5.88	-1.741

*p<.05

〈표 IV-47〉과 같이 대학생 등 후기청소년 대상 정책사업의 필요성과 관련하여 대학유형별 차이를 분석한 결과 2-3년제 대학에 다니는 대학생의 경우에는 학자금지원(6.21)이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대학생 글로벌역량강화 지원(5.76), 주거지원(5.73), 대학생지원사업 정보제공(5.71), 상담지원(5.67), 문화예술향유기회 지원(5.25)의 순으로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4년제 대학에 다니는 대학생의 경우에도 학자금지원(6.18)이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대학생 글로벌역량강화 지원(5.93), 주거지원(5.87), 대학생지원사업 정보제공(5.86), 상담지원(5.68), 문화예술향유기회 지원(5.47)의 순으로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하지만 학자금지원, 주거지

원, 상담지원, 문화예술 향유기회 지원, 대학생지원사업 정보제공, 대학생 글로벌역량강화 지원 등 모든 대학생 대상 정책사업의 중요성에 대해서 대학유형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47 대학생 대상 청소년정책사업의 중요성: 대학유형별

정책사업	전문대(n=175)		4년제대학(n=423)		t값
	Mean	SD	Mean	SD	
학자금 지원	6.21	1.020	6.18	1.014	.374
주거지원	5.73	1.170	5.87	1.066	-1.351
상담지원	5.67	1.186	5.68	1.187	-.071
문화예술 향유 기회지원	5.25	1.391	5.47	1.252	-1.953
대학생지원사업 정보제공	5.71	1.226	5.86	1.117	-1.369
대학생 글로벌 역량강화 지원	5.76	1.164	5.93	1.161	-1.596

*p<.05

〈표 IV-48〉과 같이 대학생 등 후기청소년 대상 정책사업의 필요성과 관련하여 경제수준에 따른 차이를 분석한 결과 못사는편의 경우에는 학자금지원(6.51)이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주거지원(5.97), 대학생지원사업 정보제공(5.96), 대학생 글로벌역량강화 지원(5.90), 상담지원(5.85), 문화예술 향유기회 지원(5.42)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보통수준의 경우에도 학자금지원(6.12)이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대학생 글로벌 역량강화 지원(5.85), 주거지원(5.81), 대학생지원사업 정보제공(5.73), 상담지원(5.61), 문화예술 향유기회 지원(5.35)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잘사는편의 경우에도 학자금지원(6.07)이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대학생 글로벌역량강화 지원(5.92), 대학생지원사업 정보제공(5.85), 주거지원(5.76), 상담지원(5.66), 문화예술 향유기회 지원(5.66)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그리고 학자금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못사는편의 중요성 인식정도가 보통수준이나 잘사는편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48 대학생 대상 청소년정책사업의 중요성: 경제수준별

정책사업	못사는편 (n=125)	보통수준 (n=290)	잘사는편 (n=182)	F값	Scheffe
	Mean(SD)	Mean(SD)	Mean(SD)		
학자금 지원	6.51(.819)	6.12(.990)	6.07(1.130)	8.452*	하>중, 상
주거지원	5.97(1.092)	5.81(1.042)	5.76(1.188)	1.405	-
상담지원	5.85(1.238)	5.61(1.184)	5.66(1.148)	1.818	-
문화예술 향유 기회지원	5.42(1.381)	5.35(1.299)	5.48(1.238)	.623	-
대학생지원사업 정보제공	5.96(1.167)	5.73(1.136)	5.85(1.160)	1.833	-
대학생 글로벌 역량강화 지원	5.90(1.163)	5.85(1.164)	5.92(1.170)	.214	-

*p<.05

제 5 장

총괄조정 관련 국내외 정책사례 분석

1. 사례선정 개요 및 분석틀
2. 국내사례
3. 국외사례

제 5 장

총괄조정 관련 국내외 정책사례 분석*

1. 사례선정 개요 및 분석틀¹⁾

효과적인 청소년정책 총괄조정 수단을 파악하기 위해 기존의 국내외 정책사례를 분석했다. 국내사례로는 대상중심 정책으로 청소년정책과 유사한 성격을 갖고 있는 여성정책과 국가인적자원개발정책(National Human Resources Development Policy: NHRD)을 살펴보았다. 해외사례로는 청소년정책을 상당한 정도로 부문화하고 있는 국가로서 독일, 소규모로 부문화하고 있고 다른 정책에 많은 부문을 의존하고 있는 핀란드와 스웨덴, 청소년정책을 부문화하고 있지 않은 영국의 청소년정책 사례를 검토했다. 국내외 정책사례 분석을 통해 총괄조정 노력과 수단, 그 성과를 검토하여 한국청소년정책의 총괄조정 기능을 위한 시사점을 찾고자 한다.

국내정책과 국외정책 사례는 자료의 접근성에 차이가 있고 분석하고자 하는 사항이 달라서 분석틀을 달리하였다.

먼저, 국내사례의 경우 분석틀은 다음과 같다.

- 해당정책(여성정책 및 인적자원개발정책)의 목표와 총괄조정의 필요성
- 해당정책(여성정책 및 인적자원개발정책)의 총괄조정의 내용
- 해당정책(여성정책 및 인적자원개발정책)에서 동원된 총괄조정 수단
- 해당정책(여성정책 및 인적자원개발정책)의 총괄조정 성과 평가
- 해당정책(여성정책 및 인적자원개발정책) 사례가 주는 시사점

* 이 장은 정봉근 교수(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김둘순 연구위원(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성별영향평가 통계센터), 최연혁 교수(스웨덴 쇠데르튀른대학교 정치학과), 이동섭 선생(핀란드 탐페레대학교 박사과정), 박철웅 교수(백석대학교 사회복지학부), 박선영 교수(동서대학교 사회복지학부)가 집필하였으며 강현주 부연구위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수정·보완하여 전체적인 통일성을 꾀하였음.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2). 청소년정책 총괄조정 현황 및 관련 정책 동향 분석 세미나자료집 (12-s27).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1) 이 부분은 윤철경 선임연구위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집필하였음.

둘째, 국외사례의 분석틀은 다음과 같다.

- 해당국의 청소년정책의 의미:

여기에서는 ① 청소년정책 대상이 되는 연령범주, ② 청소년정책 주무 행정부처와 청소년정책과 관련된 주요 법령, 계획, 정책문서 등을 검토하며 ③ 청소년정책 주무 행정부처가 담당하는 정책영역과 사업내용이 무엇인 지를 살펴보고 그 나라의 청소년정책의 특성을 규명한다.

- 해당국의 주무부처 외 청소년관련 정책의 수행체계

- 청소년정책 총괄조정 사례

- 한국에 주는 시사점

여기에서는 해당국의 청소년정책 및 총괄조정 관련 특징을 요약하고 한국에 주는 시사점을 살펴본다.

2. 국내사례

1) 국가인적자원개발정책 사례²⁾

(1) 정책목표 및 총괄조정의 필요성

지식기반 사회의 도래와 더불어 세계 각국은 국가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제고를 위해 인적자원의 중요성에 주목하게 되었으며 노동시장의 수요와 인적자원의 양성 및 효율적인 배분이 중요한 사회적 과제로 대두되었다. 종전의 양적 관점에 치우친 인적자원개발정책은 인력수급 등에서 문제를 초래해 왔으며 관련 업무가 부처별로 산재해 있어 비효율과 낭비를 초래하는 부분이 있었다. 이 때문에 교육관련 부처와 노동부처의 협력과 조화가 매우 중요한 사안으로 대두되게 되었다.

우리나라에서도 2001년 교육과학기술부를 교육인적자원부로 개편하고 국가인적자원개발정책을 추진하게 되었다(교육과학기술부, 2000). 국가인적자원개발 기본계획에 나타난 국가인적자원개발정책의 목표는 경쟁력 있는 국민, 서로 신뢰하는 사회의 지향과 인적자원분야의 국가 경쟁력 세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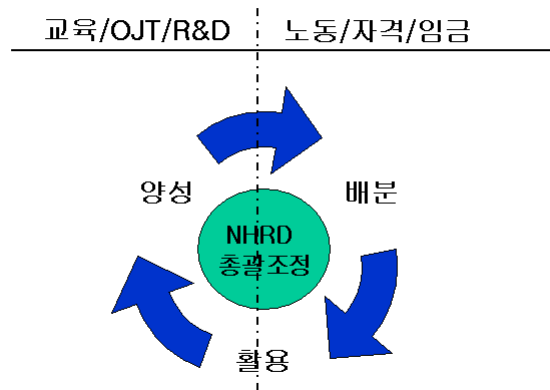
2) 이 부분은 정봉근 교수(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가 집필하였음. 정봉근 (2012). 국민의 정부 국가인적자원개발 정책 분석.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세미나자료집(12-s27): 청소년정책 총괄조정 현황 및 관련정책 동향 분석. pp.79-98에 게재되었음.

10위권 진입으로 되어있다(교육과학기술부, 2000b: 백성준, 2006: 48에서 재인용). 지식기반사회의 인력수요에 부합하는 효율적인 인적자원 양성 및 관리체계를 구축하지 않고서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국가인적자원개발정책은 교육 분야 뿐 아니라 경제, 과학, 기술, 노동, 복지 등 다양한 분야를 연결하여 인적자원의 양성 및 배분, 활용을 연결시키는 시스템적 정합성을 갖추기 위한 것이었다.

(2) 총괄조정의 내용

국가인적자원정책은 인적자원의 양성, 배분 및 관리정책이다. 국가인적자원정책의 핵심 요소는 【그림 V-1】과 같다.



【그림 V-1】 NHRD 총괄·조정에 의한 교육과 노동시장 연계

* 인용: 정봉근 (2012), 국민의 정부 국가인적자원개발 정책 분석,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세미나자료집(12-s27): 청소년정책 총괄조정 현황 및 관련정책 동향 분석, p. 86.

국가인적자원개발정책에 대한 총괄조정の内容은 첫째, 인적자원양성기능에 포함되는 교육과 훈련, R&D 분야이다. 인적자원양성영역에 속하는 학교교육과 고등교육을 포함한 인적자원 양성 전담구조가 총괄조정의 대상이다. 둘째, 인적자원의 양성이 노동시장의 수요에 맞게 훈련된 자격을 부여받고 노동시장에 배치되어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즉, 교육과 노동시장의 연계성을 강화하여 인적자원의 양성, 배분, 활용이 밀접하게 연계·순환될 수 있도록 하는데 있다.

정부는 이를 위해 국가인적자원위원회를 두고 있으며 이 기구를 통해 각 부처별로 이루어지는 주요 인적자원개발정책을 조정하고 관련 예산의 효율적 운영 등을 심의하였다. 첨단 분야의 인적자원개

발, 법률, 의료, 경영 등 전문서비스 분야의 인적자원개발, 여성인적자원개발, 직업교육 및 직업훈련 정책, 산학협력 활성화, 군 인적자원개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부문의 인력활용, 장애인, 고령자 및 준 고령자 등 취약계층의 인적자원개발, 지역인적자원개발, 인적자원개발과 관련된 예산 등의 투자확대방안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 교육인적자원부가 정책주도권을 갖고 부처별 정책을 총괄조정한다(교육인적자원부, 2006).

(3) 총괄조정 수단

표 V-1 국가인적자원개발정책에 동원된 총괄조정수단

총괄조정 수단	구체적 내용
관계법령	인적자원개발기본법
계획수립	국가인적자원개발 기본계획, 시행계획
조직	국가인적자원위원회, 교육인적자원 부총리
회의	인적자원개발회의, 실무조정회의, 전문위원회, 지역혁신협의회
인력	인적자원개발책임관 지정(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평가 및 환류	기본계획 수립 및 분야별 정책 기획·조정·평가에 대한 심의 인적자원개발 추진실적의 평가, 예산투자실적 분석 등
정보관리	인적자원개발지표 및 통계 생산

* 인용: 인적자원개발기본법 (2002.8.26 제정).

인적자원개발정책의 대표적인 총괄조정수단은 교육인적자원 부총리제, 인적자원개발회의 설치 및 운영, 지역인적자원개발체제의 3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개별부처의 입장을 넘어 국익 차원에서 인적자원정책을 체계적으로 기획, 총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인적자원 부총리제를 도입하였다. 이어 교육 부총리의 권한을 보다 구체화하고 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인적자원개발기본법」을 제정하였으며, 인적자원관련 장관회의체인 「인적자원개발 회의」를 두어 인적자원개발과 관련된 국가의 주요 정책을 심의, 확정함으로써 동 회의체가 국가인적자원개발에 있어 주요한 운영체제(O/S)로서 기능하도록 하였다. 이에 앞서 각 부처의 국장급으로 구성되는 실무조정회의를 두어 부처의 안건을 실무적으로 사전에 검토, 조율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여기에는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되는 전문위원회의 전문적인 검토도 거치도록 하고 있다(백성준, 2006: 57).

이러한 제도적 기반 위에 국가수준에서 인적자원정책을 종합적으로 개발하고 활용하기 위해 「국가 인적자원개발기본계획」을 수립, 추진하도록 하였다. 또한 지역별로는 ‘지역혁신협의회’를 구성하여 그 소위원회로 ‘RHRD 분과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토록 하였다.

그 밖에 국가인력수급 중장기계획(계획수립), 인적자원개발추진실적의 평가(정책평가), 인적자원 개발 관련 투자실적분석(예산)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였다.

(4) 국가인적자원개발정책의 총괄조정 성과 평가

국가인적자원개발정책은 제2장에 살펴보았던 바와 같이 다른 정책분야에 비해 총괄조정을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들을 잘 구비한 편이었다. 그러나 범부처 차원에서 관련정책들을 상호 유기적으로 연계·조정·통합하지 못하고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실패한 정책으로 평가되었으며 폐기될 상황에 놓여 있다. 그 원인이 무엇인지 파악해 보고자 한다.

① 교육인적자원부에 집중된 총괄조정체계의 구조적 문제

총괄조정대상인 인적자원양성기능이 교육인적자원부에 집중되어 있었기 때문에 총괄조정에 어려움이 있었다. 교육인적자원부총리는 자신의 정책을 자신이 조정해야 한다는 논리적, 현실적 모순상황에 봉착하였고 인적자원의 양성에 해당하는 학교교육이 교육인적자원부 소관업무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타 부처의 역할이 없어 총괄조정의 필요가 별로 없었다. 타 부처와의 수평적, 지방자치단체와의 수직적 업무분담이 없이는 총괄조정이 필요하지 않았다.

가. 학교교육

학교교육부문의 경우, 초중등교육은 16개 시도의 지방자치단체와 수직적 분담이 있을 뿐 교육인적자원부 외 타 부처와의 수평적 분담이 거의 존재하지 않았다. 인적자원의 핵심적 양성영역인 학교교육이 교육인적자원부에 의해 전담되고 있는 체제가 인적자원개발회의의 활성화를 어렵게 만드는 중요한 구조적 요인이었다³⁾.

3) 이에 비해, 경제부총리의 경우는 국가경제정책을 구성하는 중요한 영역들인 재정, 예산, 산업, 노동, 정보, 교통, 건설, 농업, 수산 등이 각 부처에 분담되어있어 총괄조정의 실제적 필요성을 기대할 수 있다. 과학기술부총리의 경우도 과학기술과 관련된 사업과 예산이 교육인적자원부, 산업자원부, 국방부, 보건복지부, 농수산부 등에 상당한 비중과 책임으로 분담되어있어

인적자원의 양성기능에 관한 수직적 분담은 중등이하 교육단계에서는 지방교육자치제도에 의해 교육인적자원부와 시도의 교육청간 위임 및 이양의 구조로 이루어져있다. NHRD 정책의 도입을 계기로 중등이하 공교육에 있어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책무에 대한 구분과 한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었다. 그러나 교육감과 교육위원을 선거로 선출하는 교육자치가 실시되고 있지만 지방교육관련 행정과 재정법령은 임명제 당시의 기본적인 체제와 내용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다.

지방교육자치 체제에서 공교육으로서의 중등이하 교육에 대해 국가의 책임과 권한은 형평성과 수월성의 확보에 있고 지방정부들의 책임과 권한은 교육기회와 내용의 제공에 있다. 이러한 원칙에 따라 교육권력구조를 재편할 필요가 있었다. 중앙정부의 기능은 전국단위에서 중등이하 교육의 형평성과 수월성을 확보하기 위한 재정권과 이에 수반된 정책의 기획권한이 핵심이다. 지방정부들이 수행한 교육기회 제공과 교육과정의 성과에 대한 중앙정부의 분석과 평가권은 이를 위한 필수적 보조기능으로 확보된다.

인적자원 양성기능으로서의 중등이하 교육부문의 수평적 분담은 민간영역과 타 중앙부처에 의해 이루어져야한다. 먼저 민간부문을 보면 중등이하 사립학교는 소유권 이외에는 교육과정, 교사, 시설, 학생선발, 학교운영 등에서 공립학교와 동일한 법령의 구속을 받는 구조이다. 그러므로 중등사립학교의 자치와 자율 확보를 위해서는 사학 관련 교육법제를 다시 제정할 필요가 있었다. 또한 중학교의 1/4, 고교의 1/2에 달하는 사립학교 중에서 사학재정결함보조금의 수령 규모를 기준으로 자율과 통제의 혼합 매트릭스에 의한 3~4개의 사학 유형을 도입할 수 있었을 것이다.⁴⁾

타 중앙부처의 중등이하 교육부문에 대한 분담구조는 일반계와 실업계 및 특수목적계로 나뉜다. 일반계의 경우 지방자치 영역에서 일반행정과 교육행정이 수렴되는 추세에 비추어 지방정부들을 담당하는 행정자치부의 역할이 있다. 실업계의 경우 지식기반경제의 도래에 따른 중등교육에서의 통합교과화 추세와 직업교육의 축소 추세에 비추어볼 때 노동부 등 노동시장과 연관된 부처의 역할은 줄어들 수 있다. 그러나 중등단계에서의 과학과 예체능 등의 분야에서는 관련 중앙부처와의 분담 구조를 형성하여 고급 인력 양성의 권한과 책임을 확대하는 방향을 추구하였어야 한다.

나. 고등교육

고등교육에 있어서는 <표 V-2>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교육인적자원부 외에 산업자원부, 노동부,

국가과학기술정책 총괄조정, 틀을 내걸고 총괄조정 필요성과 실효성을 부각시킬 수 있는 구조임을 알 수 있다.

4) 정진곤(2001)은 중학교의무교육확대를 계기로 유럽과 일본의 예를 참고하여 중등사학의 유형을 완전한 독립형, 제한된 선발전과 등록금채정권을 갖는 보조형, 현행과 같은 관리형으로 나눌 것을 제안한 바 있다.

과학기술부, 지자체 등이 일부 고등교육기관을 운영하고 있으나 우리나라 전체 고등교육기관의 규모와 비교해 보면 그 비중이 극히 작으며 교무, 학사, 시설기준 등 기본적으로 교육인적자원부의 법령이 정하는 체제 내에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제도적 다양성과 유연성에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표 V-2 교육인적자원부 이외 부처 설립대학 (2006년)

전문대	대학	대학원
기능대학 (24교) 경기공업대학 한국농업전문대 인천전문대학 강원전문대학 충북과학대학 청양대학, 경도대학 거창전문대, 남해전문대 담양대학, 장흥대학	경찰대, 사관학교(5교) 과학기술대학, 한국예술종합학교 한국전통문화학교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한국산업기술대학교 한국정보통신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인천대학교	국방대학교 국가정보대학원 한국학대학원 광주과학기술원 국제산업디자인대학원대학 한국정보통신대학원대학 국제대학원대학

* 인용: 정봉근 (2012). 국민의 정부 국가인적자원개발 정책 분석.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세미나자료집(12-s27): 청소년정책 총괄조정 현황 및 관련정책 동향 분석. p.175.

NHRD 정책 차원에서 고등교육의 인적자원 양성기능에 대한 수직적, 수평적 분담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변화를 고려해 보아야 한다.

전문대학을 포함하여 고등교육기관지원에 대한 지방정부의 역할과 책임의 확대가 필요하다. NHRD와 대비되는 지역의 인적자원개발(RHRD: Regional HRD, RIS: Regional Innovation System 등)체제 구축을 위해서는 중등이하만 관장하고 있는 교육청과 교육위원회가 지역의 고등교육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중앙정부와 분담할 필요가 있었다.

즉 특화된 고등교육기관의 설치와 운영에 관해서는 여러 부처의 역할과 책임으로 분산·확대되어야 한다. 이것은 고등교육기관에 대한 교육인적자원부의 책임과 권한을 수평적으로 분담시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과학기술부, 노동부, 산업자원부, 문화관광부 등이 소수의 특화된 고등교육기관을 운영하고 있으나 보다 실질적으로 수행하기위해 해당 분야의 인적자원 양성에 대한 책임의 분담구조를 정부조직관련 법령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 그런 이후 교육인적자원부는 이들 특성화 고등교육기관에 대한 성과평가(output control)에 의한 질 관리체제(quality assurance)를 구축하여 NHRD 차원에서의 총괄조정 기능이 수행되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었다.

교육자치와 일반행정자치의 연계에 수반하여 중앙으로부터 지방으로 고등교육의 수직적 분권체제

가 형성되었어야한다. 각 시도별 고교졸업생의 고등교육기관 진학률이 현저히 높아진 상황에서도 여전히 지방정부가 고등교육에 관한 권한과 책임을 갖지 못하고 있는 것은 제도적 부정합이었다고 할 수 있다. 교육인적자원부에 권한과 책임이 집중되어있는 체제는 고등교육진학률이 매우 낮았던 과거에 형성된 국립대학위주의 통치체제(governance)가 고교평준화와 대학정원확대, 설립준칙주의 등에 의해 고등교육이 보편화된 상황에서는 고등교육에 대한 중앙정부 간, 지방정부와의 새로운 수평적·수직적 분담체계가 필요하였다.

② 인적자원 배분 및 관리에 대한 전문적 정책역량 미흡

인적자원정책 총괄조정 기능에 대한 또 다른 구조적 장애요인은 양성 이외의 핵심영역인 인적자원의 배분, 활용 및 관리는 주로 노동시장 기제를 중심으로 기능하고 있다는 점이었다. 학교와 노동시장의 연계(STW, WTS, 산학협력)도 기본적으로는 노동시장의 신호가 학교에서 수신되고 반응이 일어나는 체제로 활성화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노동시장정책은 양성정책과 더불어 인적자원개발회의의 핵심적 정책영역이었다.

당시 국민의 정부가 시도한 부처간 교류, 공모제 등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부처내 순환보직을 중심으로 하는 공무원제도로는 교육인적자원부에서 형성된 정책인력이 노동시장정책 전문성을 갖도록 기대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 교육인적자원부의 인력과 예산은 학교교육에 편중되어있고 그나마 경제적 사회적으로 노동시장과 직접 연계영역(interfacing)을 형성하는 고등교육정책 부서는 정작 인적자원정책부서와는 분리되어있었다. 더구나 교육부의 고등교육법체제는 인적자원정책의 시각에서 볼 때 노동시장과의 구조적 기능적 연계가 미약하다. 투입 측면(input side) 정책에 해당하는 대학입학, 학사 및 교무, 정원, 재정지원, 사학분규 등의 업무를 통해 양성되는 교육부 소속 공무원들에게 산출 측면(output side)에 해당하는 노동시장정책의 전문성을 배양시키기는 쉽지 않은 일이다.

그러므로 인적자원정책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구조적 요인에 대한 근본적 대책과 함께 NHRD 예산의 사전조정권, NHRD관련 정책의 성과평가 등의 수단적 대책이 보완적으로 필요하였다. 그러나 교육인적자원부는 인적자원정책체제가 처해있는 지형(terrain)의 생김새를 고려하지 않고 예산조정 등 실천 수단 강화를 통해 인적자원 정책의 성과를 모색하고자 하였다.

NHRD 정책은 학교교육, 노동시장, 과학기술, 산업구조, 재정경제, 예산 등의 영역에서 양성된 정책전문인력이 전담하면서 종합적으로 다루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당시 NHRD

정책은 인적자원개발회의라는 비상설적 회의기구에 의한 총괄조정체제로서 교육인적자원부의 공무원들이 운영을 담당하고 있었다. 이러한 비상설적이며 전문성이 일정 영역에 제한된 추진체제로는 총괄조정의 실효성이 낮을 수밖에 없었다.

③ 국가인적자원 예산체계의 미 정립

국가인적자원 예산에 포함되는 범위를 어디까지 포함시킬 것인지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첫째, 중등이하 학교교육에 투입되는 예산은 개념상 인적자원 양성 예산으로 총괄조정 및 평가 대상이었으나 교육과 인적자원정책을 분리하려는 교육인적자원부 조직 내부 성향에 따라 지방교육예산은 인적자원정책 대상으로 간주하지 않았다.

〈표 V-3〉에서 보듯이 2006년 학교교육기관의 예산은 26조 4천억 원으로 NHRD 예산 38조 2천억 원의 69.1%로서 그 비중이 매우 크다. 그러나 NHRD 예산의 개념과 분류체제가 확립되지 못하여 학교교육예산의 포함여부가 계속 논란이 되었다. 〈표 V-3〉에서 교육인적자원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24조 6천억 원을 제외하고 27개 부·처·청의 경우 13조 692억 원을 HRD 예산으로 집계하고 있으나 제외에 따른 논란이 있었다. 제외할 경우 교원의 인건비, 학교시설비 등 경직성 경비의 효율화와 효과성 제고와 관련하여 교육재정의 조달 및 분배구조 전체의 효율성과 효과성에 대한 논의 자체가 제약되며 사학재정결합보조금의 경우도 사학자율화정책과 연계한 정책논의의 여지가 축소된다. 그러나 여성가족부의 영유아보육과 교육예산은 NHRD 예산으로 분류되어 있어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었다.

표 V-3 HRD 예산체제 및 규모(2006)

분류		예산액(단위, 억원)*
대분류	중분류	
인적자원양성	유아교육 및 보육	21,788.9
	초중등교육	6,586.9
	고등교육(학부)	6,880.0
	고등교육(대학원)	15,946.1
인적자원배분활용	평생교육	1,158.9
	재직자 및 실업자 직업훈련	31,335.9
	여성/군경/공공분야인력	10,296.7

	취약계층인력	12,848.2
인적자원개발기반조성	인력수급 및 정보생성제공	150.1
	인적자원평가/인증/지재권보호	467.8
	지역인적자원개발	4,405.0
	산학협력	979.4
	국제협력	527.0
인적자원개발기관지원	학교교육기관	264,046.1
	직업훈련기관	1,760.4
	학술연구기관	2,88.3
합계		382,058.5

* 인용: 강경종 외(2006), 인적자원중심의 예산체제연구 (정책연구 2006-5). 서울: 한국직업능력개발원. pp. 68-69.

* 국고(예산, 기금)+지방비+민간

그런가 하면 강경종·백성준·김종우(2006)는 <표 V-4>처럼 NHRD 관련예산을 약 6.5조원으로 산출하였으나 잠정적일 뿐 산출기관별로 다른 규모를 제시하고 있었다(한국개발연구원, 한국조세연구원, 2001; 교육인적자원부, 2006에서 재인용). 이렇듯 NHRD예산의 편성기준이 확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인적자원개발회의에 안건으로 성립될 수 없었고 이해관계가 가장 첨예한 예산조정기능이 미약할 수밖에 없었다.

약 6.5조원의 NHRD 관련예산 중 교육인적자원부의 예산은 2조 4,427억 원(37.3%) 이었다. 그러나 NHRD 정책의 개념상 중등이하 교육에 해당하는 여성가족부와 지자체의 유아보육관련 예산 1조 8764.2억 원을 제외하면 52.3%로 높아져 예산이 교육인적자원부에 집중된다. 양성예산이 배분예산의 2배 이상이었다. 이것이 양성부처인 교육부에 인적자원 총괄기능을 부여한 근거였지만 교육인적자원부에 예산구조가 그 만큼 총괄조정 필요성을 희석시키는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가져왔다.

둘째, 고등교육기관의 R&D 예산과 국가인적자원예산과의 관계가 명확하게 정리되지 않았다.

R&D 정책은 일반적으로 이공계와 과학기술분야에만 사용하고 있다. 이공계대학의 과학기술분야지원이라는 특정 정책영역이 R&D 정책 대상이다. R&D 정책의 명목으로 과학기술부총리 등 정부 각 부처들이 이공계 대학에 관여하는 권한과 책임 구조가 재구성될 필요가 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인적자원양성기제로 고등교육에 관한 총괄적 책임과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인적자원의 양성기관인 이공계대학에 지원되는 모든 재정은 R&D 예산이 아니라 NHRD 예산으로 정의되어야 한다. 그리고 R&D 예산은 정부산하에 설립되어 있는 특정목적의 연구소들에 대한 지원 및 민간연구기능에 대한 지원으로 정의하여야 한다. 이것이 60년대 초 과학기술처를 설치하면서 예산부처에서 형성되어온 R&D 예산의 정의에도 부합되고 2000년대 NHRD 정책의 도입으로 인한 NHRD 예산의 개념 및

범주에도 부합된다.

표 V-4 HRD 부처별 예산(2006)

부처	양성	배분활용	기반조성	기관지원	합계(억원)
과학기술부	1,197.3	32.5	5.3	—	1,235.1
교육인적자원부	19,044.3	309.2	4,211.7	861.8	24,427.0
국방부	—	904.6	—	—	904.6
노동부	830.0	7,315.4	483.3	—	8,638.7
농림부	—	180.0	736.0	—	916.0
문화관광부	284.8	328.0	18.2	—	631.0
보건복지부	388.0	5,309.0	41.0	—	5,738.0
산업자원부	405.2	387.0	878.0	—	1,670.2
여성가족부	17,286.0	1,476.4	1.8	—	18,764.2
정보통신부	832.4	—	143.0	—	975.4
중소기업청	158.0	194.0	—	—	352.0
행자부 등	304.5	910.3	11.0	—	1,215.8
합계	40,730.5	17,346.4	6,529.3	861.8	65,468.0

*인용: 강경중 외(2006), 인적자원중심의 예산체제연구 (정책연구 2006-5), 서울: 한국직업능력개발원, pp.72-73에서 재작성

④ 교육인적자원부 조직 내부의 총괄조정기제 미약

국가인적자원정책에 대한 총괄조정기능이 교육인적자원부의 업무로 설정되었지만 교육인적자원부 조직의 내부적 문제로 이러한 기능이 잘 작동하지 않았다.

가. 교육인적자원부 내 조정기재 부재

교육인적자원부 내부조직의 문제로서 인적자원개발회의에 관련 안건을 부의하기 이전에 거쳐야할 부내 조정기제가 결여되어있었다. 인적자원차관보 직제가 설치되어 있었으나 초·중등교육에는 관여하지 않도록 되어있었다.⁵⁾ 따라서 양성의 가장 큰 영역인 초·중등교육 관련 정책은 인적자원개발회의에 거의 부의되지 않았다. 예를 들어 평준화와 관련된 정책이나 대학진학관련 정책 등은 인적자원

5) 그러나 정부조직법 제28조는 교육인적자원부에 차관보1인을 둘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있고 교육인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직제 제4조는 차관보는 장관이 명하는 업무에 관하여 장관과 차관을 보좌한다고 정하고 있어 차관보가 학교정책 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었다.

양성의 질과 내용에 미치는 영향력에도 불구하고 “교육정책”이라는 이유로 인적자원개발회의에서 다루지 않았다.

또한 인적자원차관보는 총괄조정이라는 기능(function, process)을 위해 설치된 직제이나 차관보가 관할하는 고등교육, 평생교육 정책영역은 대상(client, institution)별로 소관 업무가 편제되어 있어 기능별 직제와 대상별 직제간의 업무적 단절 및 소관 여부를 둘러싼 이해갈등이 잠재하고 있었다. 예를 들어 고등교육기관의 통폐합, 정원정책, 재정지원 등은 인적자원개발회의에 부의하지 않거나 부의되어도 타 부처로서는 관련 권한이나 내걸린 이해관계(stake)가 없는 관계로 심의보다는 종종 보고서안으로 처리되었다.⁶⁾

나. 창의적 의제개발 기능 위축

교육인적자원부의 NHRD 정책 주도 수준은 인적자원의 양성, 배분, 활용과 관련된 정책의제를 창의적으로 설정하는 능력에 의해 좌우된다. 초기에는 제도적 기반을 갖추기 위해 인적자원개발기본법 등의 입법과 인적자원개발기본계획의 수립을 통하여 정책 의제설정을 주도할 수 있었다. 그러나 2003년 이후 참여정부에 의한 과학기술부총리의 도입과 각종 대통령직속 위원회들이 경쟁적으로 설치되면서 이들에 의해 인적자원개발회의의 정책의제설정 기능이 위축되기 시작하였다. 더욱이 교육인적자원부가 학교교육부문을 인적자원의 양성기능으로 간주하고 이와 관련된 업무에 여전히 묶여있는 구조는 지식분야, 노동시장, 과학기술, RHRD와 지역균형발전 등의 분야에서 정책주도권 발휘를 제약하였다.

다. 예산조정권이 없는 부총리제

정책 초기 교육인적자원부의 인적자원정책은 부처의 독자적인 예산과 사업, 포괄적인 행정책임으로 표현되는 고유의 정책영역을 전제하고 있지 않았다. 대신 인적자원의 양성, 배분, 관리와 관련된 여러 부처의 정책과 사업을 총괄조정하는 것이 교육인적자원부의 인적자원정책 기능으로 설정되어있고 이것이 교육부 장관에게 부총리의 지위를 부여한 이유였다.

그러나 이러한 부총리 지위에 의한 관련부처 총괄조정방식은 그 이전까지 종종 제기되었던 교육과 훈련, 과학기술, 청소년 등의 유관 업무부처를 통합하고자하는 방안과는 다른 구상이었다.⁷⁾ 그것은

6) 장관급회의기구인 인적자원개발회의에 차관이 대리 참석하는 경향은 이와 무관하지 않았다.

7) 영국의 교육고용성(DIEE) 설치 등 교육과 훈련, 노동시장 통합의 국제적 추세에 따라 국내의 논의가 지속되었으나 교육개혁위원회는 인적자원을 총괄할 부총리의 신설을 제안한 바 있다(교육개혁위원회, 1996).

부처 통합의 경우 예상되는 심각한 이해 갈등을 피하기 위한 대안적 방안이었다고 할 수 있다. 교육부의 업무능력과 예산조정권이 없는 부총리제 등으로 일정 부분 총괄조정 기능에 제한을 가져왔다.

2) 여성정책 사례 : 성 주류화 정책⁸⁾

(1) 여성정책 목표와 총괄조정의 필요성

한국의 여성정책은 1995년에 제정된 여성발전기본법에 기반하고 있다. 동 법에서는 남녀평등의 촉진, 인권강화, 모성보호,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을 폭넓게 규정하고 있다(여성발전기본법, 시행 2011.12.8] [법률 제10789호, 2011.6.7, 타법개정). 이 법은 헌법상의 남녀평등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남녀평등을 촉진하고 여성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구체적인 여성정책의 범위를 보면, 교육에서의 남녀평등, 정책결정과정의 여성참여 확대, 고용상의 남녀차별해소, 여성인적자원개발, 여성보건 및 모성보호에 관한 정책 등 상당히 다양하다(여성발전기본법시행령, 시행 2012.5.23] [대통령령 제23807호, 2012.5.23, 타법개정).⁹⁾

여성정책의 가장 궁극적인 목표는 성평등의 실현이다. 제2차 여성정책기본계획(2003-2007)에서는 성평등화를 위한 주요 추진전략으로 성주류화(gender mainstreaming)를 채택하고 있다(마경희, 2007: 40). 성 주류화란 모든 분야의 국가 정책에 젠더관점을 통합하려는 전략으로 90년대 후반 전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한국에서도 여성정책의 핵심전략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한정원, 2010: 16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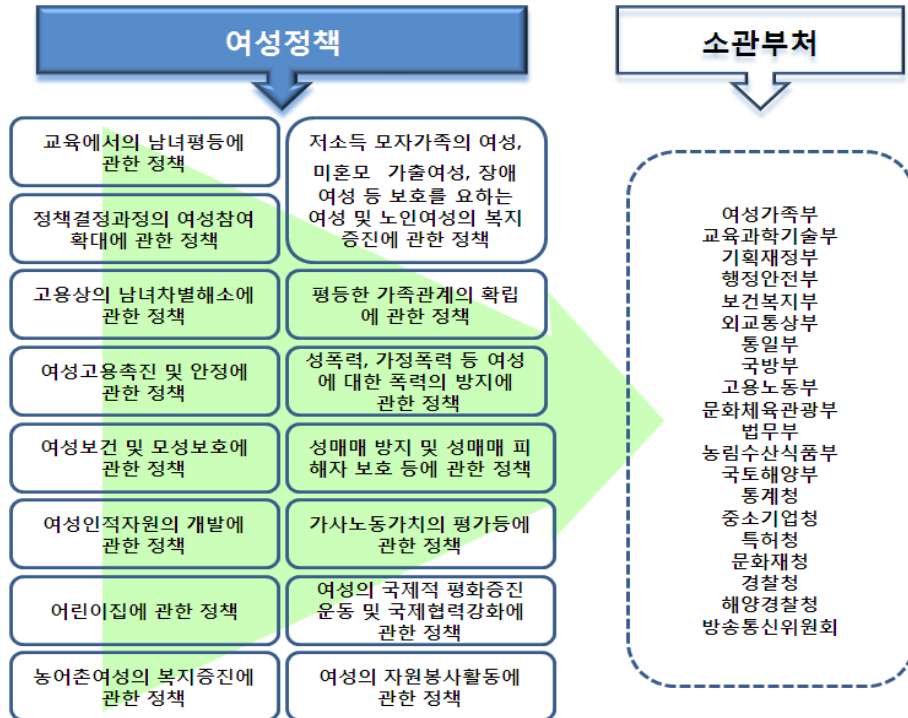
여성정책은 청소년정책과 마찬가지로 대상중심 정책으로 범부처에 걸쳐져 있기 때문에 국가정책 전반의 성 주류화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개별 부처정책들이 성 평등적 관점에서 실시될 수 있도록 하는 총괄조정이 필요하다.

8) 이 부분은 김둘순 연구위원(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주로 집필하였으며 성 인지예산, 성별분리통계, 성평등지수에 대한 부분은 강현주 부연구위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보완·집필하였음. 김둘순(2012). 여성정책 총괄조정 정책사례에 대한 성과 분석.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세미나자료집(12-s27): 청소년정책 총괄조정 현황 및 관련정책 동향 분석. pp.101-121에 게재되었음.

9) 기본법에서의 이러한 여성정책 정의가 성 평등에 대한 국내외적인 변화 흐름을 담아내는 데 미흡함이 있다고 지적하고, 개정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예를 들면 법 명칭을 ‘(가칭)성평등기본법’으로 변경하고 성 주류화, 성 인지 등 성평등 조항의 신설, 여성정책 조정회의의 대체 기구 신설 등을 포함하려고 하였다(여성가족부, 2008; [한겨레]2008-06-27|27면 |06판에서 재인용).

(2) 성주류화 정책과 총괄조정 내용

여성가족부는 여성발전기본법 상의 여성정책과 성평등 정책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 5년 단위의 여성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는데, 여기에 참여하는 소관부처로는 교육과학기술부,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등 19개 부처들이 함께 참여하고 있다(여성가족부, 2008).



【그림 V-2】 여성정책 범위 및 소관부처

* 인용: 김둘순(2012). 여성정책 총괄조정 정책사례에 대한 성과분석.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세미나자료집(12-s27): 청소년정책 총괄조정 현황 및 관련정책 동향 분석. p.104.

【그림 V-2】에 나타난 여성정책 범위 및 소관부처를 보면 여성정책은 교육, 노동, 문화, 복지, 환경 등 다양한 부처의 정책내용을 총괄조정 해야 한다. 여성가족부는 이를 위해 개별 행정부처의 정책, 예산, 통계 등을 양성평등적 관점에서 분석, 평가하며 총괄조정을 시도하고 있다.

(3) 성 주류화 정책과 총괄조정 수단

성주류화를 실현하기 위해 동원되는 총괄조정을 위한 수단(혹은 도구)은 다양하다. 여성정책조정회

의, 여성정책책임관제도¹⁰⁾, 성별영향평가, 성인지예산, 성별분리통계, 성인지교육 등의 수단들이 체계화되어 있고 각종 위원회 여성참여 목표제와 같은 정책결정과정에서의 여성참여 확대를 위한 조치들도 이루어지고 있다(한정원, 2010: 70)

① 성별영향분석평가(Gender Impact Assessment)

성별영향분석평가는 법령, 계획, 사업 등 정부의 주요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의 특성과 사회·경제적 격차 등의 요인들을 체계적으로 분석 평가함으로써 정부정책이 성평등 실현에 기여하도록 하는 제도이다(여성가족부, 2009a)

성별영향분석평가 추진체계는 여성가족부가 평가기획 및 운영을 하고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분석평가를 수행하도록 되어 있다(여성가족부, 2012a).

표 V-5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정책 및 적용기관

평가대상	적용기관
◦ 법률·대통령령·총리령·부령 및 조례·규칙의 제정 또는 개정안	◦ 중앙행정기관 : 부·처·청, 위원회 등
◦ 법률에 따라 3년 이상의 주기로 수립하는 계획	◦ 지방자치단체 : 시·도, 시·군·구, 시·도 교육청
◦ 중앙행정기관의 주요한 정책으로서 추진하는 사업의 계획 및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의 단위사업	

*인용: 경기도 여성가족과 (2011). 2011년 시·군 여성가족정책 평가지표. 내부자료 (미간행).

성별영향분석평가의 대상정책은 <표 V-5>와 같이 ① 법률·대통령령·총리령·부령 및 조례·규칙의 제정 또는 개정안, ② 법률에 따라 3년 이상의 주기로 수립하는 계획, ③ 중앙행정기관의 주요한 정책으로서 추진하는 사업의 계획 및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의 단위사업이다. 대상기관은 부·처·청, 위원회 등 중앙행정기관과 시·도, 시·군·구, 시·도 교육청 등 지방자치단체이다(경기도 여성가족과, 2011).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위한 정책수단은 크게 다음과 같다.

10) 이명박 대통령은 김영순 전 송파구청장을 청와대 여성특별보좌관에 임명했다. 여성특별보좌관 신설은 그동안 여성문제를 총괄, 조정하는 참모기능이 필요하다는 여성계의 요구가 받아들여진 것이다.

가.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정·시행

본 연구 제2장에서 전술한 바와 같이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정·시행을 통해 법적·제도적 근거를 강화하였다. 법은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분석평가 대상, 분석평가의 고려사항, 분석평가 시기, 분석평가서 작성, 분석평가결과 반영,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정책개선 권고, 종합분석보고서의 작성과 제출,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설치 및 기능, 분석평가책임관의 지정, 분석평가 교육, 분석평가 자문, 성별영향분석평가기관 등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다. 이로써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수행해야 하는 대상정책과 분석평가시 고려사항, 추진체계, 평가지원체계 등이 이전보다 훨씬 명료화되고 책무성이 강화되었다(성별영향분석평가법: [시행 2012.3.16])

또한 성별영향분석평가 제도 수행을 위한 총괄조정 수단도 강화되었다. 첫째, 평가대상 정책의 확대(법 제5조, 령 제2조)에 따라 제도 수행에 관련된 부처들과의 협력관계가 한층 더 강화되었다. 여성가족부와 법제처,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성별영향분석평가 총괄부서(여성정책 부서)와 조례규칙심의위원회와의 업무협의를 통해 총괄조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기관별 성별영향분석평가 추진실적을 국무회의 보고 및 국회에 제출하게 함으로써 행정기관의 참여와 기관 최고 책임자의 관심을 촉구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둘째,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분석평가 추진실적 및 정책개선 실적을 점검하고 종합 분석한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연 1회 이상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동법 제12조, 영 제9조). 이러한 법적 규정은 성별영향분석평가 제도에 대한 국회의 관심이 과거보다 훨씬 커지도록 할 것이며, 각 행정기관은 좀 더 적극적으로 제도 수행을 위해 노력할 것으로 기대된다. 과거에는 기관별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에 대한 종합분석 보고서가 국회에 제출되지 않았던 것과 대조된다고 볼 수 있다.

나. 성별영향분석평가지침

여성가족부는 해마다 당해 성별영향분석평가의 추진방향에 대한 지침을 마련하고 이를 각 수행기관에 제공하여 성별영향분석평가가 구체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돕고 있다. 동 지침은 공무원들이 성별영향분석평가서를 작성하기 시작한 2005년부터 제공되기 시작하였는데, 지침에는 성별영향분석평가의 목적, 평가대상 과제 선정기준과 선정방법, 추진체계, 추진일정, 평가지표 및 보고서 작성양식, 관련교육 일정 등이 안내되어 있다. 해마다 조금씩 내용이 변경되기는 하였지만 큰 틀은 대동소이하다(여성가족부, 2012a). 실제로 성별영향분석평가 수행기관들은 이 지침에 따라 분석평가를 추진하고 있다.

다.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의 구성·운영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도 다양한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수행할 수 있도록 총괄조정하는 중요 수단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동 위원회 구성 및 기능은 성별영향분석평가법(제13조) 및 령(제10조)에 기반하고 있다.

위원구성은 총 15명 이내로 하며, 위원장은 여성가족부 차관, 위원은 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 행정안전부, 여성가족부, 국무총리실, 법제처 등 분석평가책임관(6인)과 민간 전문가(6인)로 구성하였다. 위원회에 참여하는 관련부처들은 성별영향분석평가 제도를 실효성 있게 운영하기 위해서 업무협조가 매우 중요하게 요구되는 부처들이다. 예를 들면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정책에 법령 제·개정이 포함됨에 따라 법제처가 위원으로 참여하며, 중앙행정기관의 주요정책 성과관리 사업이 포함됨에 따라 국무총리실이 참여한다. 또한 성별영향분석평가와 함께 성 주류화 도구로 추진되고 있는 국가재정성인지 예산제도를 주관하는 기획재정부, 그리고 지방재정의 성인지 예산제도와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에 성별영향분석평가 실적을 연계시키는 업무를 주관하는 행정안전부 등이 참여한다.

민간위원들은 현장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도록 교육자·전문직업인·현장 활동가·연구자 등 각 분야별 대표이면서 경험과 전문지식이 풍부한 ‘현장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되어있다.

이 위원회의 주요기능은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 운영 및 정책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는 것이다. 실제로 올해 4월 하순에 여성가족부는 위원회 구성을 완료하고, ‘제1대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위촉식 및 회의를 개최하였다(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12. 4. 19). 이날 첫 회의에서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운영세칙을 정한 뒤 2012년 성별영향분석평가 추진방향과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정책 선정에 관한 안건을 상정해 심의하였다. 위원회는 관련부처 고위공무원 위원들 간에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 운영 취지 공감대 형성과 향후 필요한 협조사항 등을 공유하는 등 부처 간 총괄조정을 위한 공식적인 통로이다. 하지만 이 위원회는 아직 구성된 지 1개월 남짓 되었고, 실제 회의를 개최한 것도 한 차례에 불과하여, 아직 총괄조정 수단으로서의 성과를 논하기에는 시기상조이다. 따라서 이 위원회가 향후에 성별영향분석평가 제도 운영의 총괄조정 수단으로서 얼마나 유용한 역할을 할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다.

라. 성별영향분석평가 우수기관 및 우수사례 선정·시상

여성가족부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들로 하여금 성별영향분석평가 제도 운영에 협조를 유도하고 유공자 공무원들을 격려하며 성별영향분석평가에 대한 홍보를 할 목적으로 우수기관 및 우수사례를 선정·시상하고 있다(여성가족부, 2012b). 2005년 공무원이 직접 분석평가하기 시작한

해부터 실시하기 시작하여 매년 이루어지고 있다. 종합평가는 공무원이 아닌 민간 전문가들로 평가단을 구성하고 평가 기준표를 만들어서 점수매기기를 통한 서열화와 토론을 통한 질적평가 등 3~4단계의 평가절차를 거쳐서 최종결정한다. 표창의 종류는 대통령 표창, 국무총리 표창, 여성가족부 장관표창 등으로 나누어 시상하고 있다. 시상규모는 매년 약간씩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대략적으로 우수기관(대통령 표창 1, 국무총리 표창 2, 장관표창 10여건 내외), 분석평가서 우수사례(장관표창 10여 건) 등에 주어진다. 성별영향분석평가 제도 운영에서는 우수기관이나 공무원에 대해서는 표창을 시상하지만 분석평가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고 해서 패널티를 가하지는 않는다.

마. 타 행정기관 정책평가 제도와 연계 : 행정안전부 주관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지방자치단체가 성별영향분석평가 수행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게 된 계기는 행정안전부가 실시하는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지표에 성별영향분석평가 추진실적이 포함되면서부터였다.

합동평가 지표에 지방자치단체의 성별영향분석평가 추진실적을 포함하기 시작한 시기는 2006년 실적을 평가하는 2007년부터였다. 여성가족부가 공무원들이 직접 수행하는 성별영향분석평가를 본격적으로 실시하기 시작한 2005년 이듬해부터 적용된 셈이다.

여성가족부는 성별영향분석평가 제도 도입 초기부터 공무원들의 저항에 대응하고, 제도를 좀 더 빠르게 확산시키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수단으로 합동평가와 연계되었다. 구체적인 평가지표의 내용은 성별영향분석평가 발전정도와 여성가족부가 제도운영에 역점을 두고자 하는 부분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약간씩 변해 왔다. 합동평가에 처음 포함된 지표는 ‘성별영향분석평가 과제수’였다. 올해 실시한 2011년 실적에 대한 합동평가에서는 중점과제의 평가시책 중 ‘공정사회 구현’에 ‘양성평등 추진실적’이라는 평가지표로 포함되어 있다. 세부 지표로는 성별영향평가 지정과제 추진실적, 성별영향평가 전문인력 양성률(교육실적), 성별영향평가를 통한 정책개선 우수사례(정성평가)가 포함되어 있다(행정안전부, 2012).

② 성인지 예산

성인지 예산은 국가예산의 편성, 심의, 집행, 결산 등의 모든 과정에서 성별에게 미치는 효과를 고려하여 예산의 배분구조와 재정준칙을 효율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공공지출로부터 남녀가 균등한 수혜를 받도록 하고 공공예산 편성부터 집행까지 전 과정에 남녀의 우선순위와 요구를 체계적으로 통합하고자 하는 것이다(김영옥, 2004; 1).

성인지 예산제도는 국가재정법과 지방재정법을 법적 근거로 하고 있다.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개별 중앙부처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 즉 성인지 예산서를 작성하고 이를 예산안 및 첨부서류¹¹⁾와 함께 국회에 제출하고 정책집행 이후의 성인지 결산서도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국가재정법 제16조, 26조, 34조, 57조, 68조 참조).

지방재정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성인지예산서 작성과 제출, 분석, 평가에 관련된 사항을 자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행정안전부와 여성가족부가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성인지 예산센터와 지방자치단체 성인지 예산발전위원회의 컨설팅을 받아 성인지예산서 작성양식, 작성지침, 대상사업을 협의하여 각 시·도 예산담당관 및 시·군·구 예산담당관에게 통보하고 이를 통보받은 담당관들은 세부규정에 따라 성인지예산서를 작성하고 지방의회에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다(지방재정법 제36조, 40조).

성인지 예산제도는 여성정책기본계획에 포함된 사업, 최근 3년간 성별영향분석 평가사업, 매년 행정안전부장관이 여성가족부 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사업, 자치단체가 별도로 추진하는 사업 등을 대상으로 한다.

성인지적 예산분석은 세입과 세출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데, 세입부분은 주로 간접세인 부가가치세 등 세금을 중심으로 분석되어진다. 세출부분은 중앙과 지방, 부처별 혹은 사업별로 다양하게 검토될 수 있어서 상당히 광범위하게 이루어지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표 V-6>과 같다.

표 V-6 성인지 예산분석도구 및 주요 내용

도 구	주요내용
정책평가	특정 정책과 관련된 예산이 어떻게 성불평등을 감소시키거나 증가시키는지에 주목. 특정 정책의 예산구성, 예산사업의 내용, 예산 사업의 목표와 실제 집행결과 사이의 괴리, 정책효과가 성별에 따라 미친 영향들을 분석한다.
수급평가	여론조사나 태도조사를 통해서 요구나 개선사항을 물어보는 방식. 현재의 공공 서비스 전달이 시민들의 요구를 얼마나 충족시키고 있는지 의견을 수집하고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방식이다. 여성과 남성의 다른 요구와 우선순위가 있는지 살피는 것이 중요하다.
성별 공공지출분석	공공지출이 여성과 남성에게 각각 얼마큼 할당되는지 분석. 해당 서비스 사용금액을 수혜자 여성, 남성의 수로 나누어 평균비용을 산출하는 방식으로 성별 수급현황과 추이를 분석하는 것이다.
성별 시간사용 분석	가사, 양육, 기타 보살핌 노동을 위해 여성들이 주로 수행한 무급노동이 갖는 거시경제적 의미를 밝히기 위해 정부예산과 가구시간의 연관성을 밝히는 분석방법. 가구 구성원들이 간병하고 자녀를 양육하는 등 보살핌 노동을 하는데 투여되는 시간이 주요 분석대상.

11) 첨부서류에는 여성과 남성이 예산의 수혜를 받고 예산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기 위해 집행실적, 성 평등 효과분석, 평가 등이 포함된 보고서인 성인지결산서와 기금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 성인지 기금결산서 등이 있다

성인지적 중기 경제정책들	경제활동에서 남녀의 상이한 역할을 통합하는 거시경제의 정책들을 만들려는 분석. 기획예산처의 중기재정계획이 있으나 전체적인 성별영향을 분석하지 못하고 있음
성인지 예·결산 보고서	전체 공공지출과 부서별 지출이 갖고 있는 성별 불평등의 문제를 드러내기 위한 것으로 성인지 정책과 예산 집행에 대한 결과 보고서의 형태이거나 예산(안)의 형태이다.

*인용: 김양희·김경희 (2006). 성인지 예산 성별영향평가의 연계와 지원방안. 제32차 여성정책포럼. p. 31.

③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는 성인지통계라고도 불리며 모든 행정통계에 성별분석을 포함하여 발표해야 승인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성인지적 기반을 제공하기 위해 통계작성 시 조사사항에 있어 성별구분을 의무화한 것이다(통계법 제13조). 통계법, 여성정책기본계획 등에서 여성관련 문제를 범부처 차원에서 조사할 수 있는 법적 권한과 통계작성에 있어서의 성인지적 관점의 도입을 명시하고 있다(통계법 제18조 1항).

이는 통계 및 지표를 검토, 분석하여 여성의 상태를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성 주류화 전략의 가장 기본적인 사항이며 성 인지예산 분석을 현실화하기 위한 필수전략이다. 특히, 여성과 관련된 기존통계 및 지표의 문제점과 한계를 개선·보완하였으며 여성의 상태에 대한 체계적인 평가를 실시함으로써 여성관련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문유경, 2007: 26). 성별분리통계가 필요한 이유는 첫째, 정책형성 단계에서는 성별분리통계를 이용하여 각 행정부처의 성불평등 현황과 실태를 점검함으로써 양성평등정책의 현황과 이슈를 파악하는 데 유용하기 때문이다. 둘째 정책목표와 결과를 정의할 경우에 양성평등이나 여성권한과 관련된 지표들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성인지 예산정책의 정확한 분석을 위해서도 성별분리통계가 반드시 필요하다(문유경, 2007: 27).

사회의제 또는 국정의를 확인할 수 있는 기초자료들은 국가공식통계를 통해 확보할 수 있지만 개별 부처의 정책의제들에 요구되는 통계는 부처별 정책통계 자료를 통해 획득할 수밖에 없다. 성별분리통계의 산출은 여성정책의 총괄조정을 위한 수단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④ 성 평등지수

성 평등지수는 성인지 통계 중 하나로 성 평등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의 실태,

그리고 성별관계와 관련된 자료의 필요성에 따라 생산되는 성별 불평등 정도를 측정하는 합성지표(composite indicators)이다(김태홍 · 전기택 · 주재선 · 정형옥, 2011a: 1-3).

성 평등 지수에는 남녀평등지수(Gender-related Development Index, GDI), 여성권한척도(Gender Empowerment Measure, GEM), 성 격차지수(Gender Gap Index, GGI), Social Watch의 성 형평지수(Gender Equity Index, GEI), 사회제도와 성 평등지수(Social Institution and Gender Index, SIGI) 등이 있다. 이들 중 남녀평등지수와 여성권한척도가 세계적으로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다(전기택 · 문유경 · 주재선, 2009: 3).

2009년 개발된 국가 성 평등 지수와 2011년 개발된 지역 성 평등지수는 국가 및 지역 수준에서 부문별 성 평등 실태와 원인, 개선정도를 정기적으로 파악함으로써 성 평등정책의 방향과 과제를 점검하기 위한 것이다. 성 평등지수 영역(Dimension)은 현재 가족, 복지, 보건, 경제활동, 의사결정, 교육 · 직업훈련, 문화정보, 안전의 8개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다(김태홍 외, 2011b: 2). 향후 이러한 성 평등지수의 활용을 통해 불평등 정도가 악화된 지표에 대해 관련 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집중 관리할 수 있도록 하여 정책개선을 적극적으로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4) 성주류화정책의 총괄조정 성과 평가

첫째, 총괄조정에 성공적이었던 가장 강력한 정책수단은 ‘타 행정기관 정책평가 제도와 연계’인 것으로 판단된다. 구체적으로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와의 연계, 광역지자체가 실시하는 시 · 군 · 구 여성정책평가와의 연계를 들 수 있다. 판단 근거는 타 정책평가 제도와 연계가 이루어진 지방자치단체의 평가과제수 및 교육참여 실적과 연계가 이루어지지 않은 중앙행정기관의 평가과제수 및 교육참여 실적이 확연히 큰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어 성별영향분석평가 실적이 합동평가 지표에 반영된 2006년 이후부터 지방자치단체의 평가수행 정도는 양적으로 매우 급속히 증가하는 효과가 있었다(표 V-7). 반면 중앙행정기관은 거의 변화가 없음을 알 수 있다.

표 V-7 연도별, 기관유형별 성별영향평가 평균 참여과제 수 변화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중앙	1.4	1.6	2.1	2.5	2.1	2.7
광역	2.1	4.7	7.4	16.6	20.9	26.9
기초	-	1.3	2.3	5	6.4	8.4
교육청	-	-	1	1	1	1.07

*인용: 여성가족부(2011a), 2010년 성별영향평가 종합분석 결과보고서, p. 13.

그리고 성별영향분석평가 교육참여 실적으로 보아도 지방자치단체가 중앙행정기관에 비해서 매우 적극적이었음을 알 수 있다.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지표에 성별영향분석평가 교육 실적이 포함된 것과 관련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성별영향평가 교육을 받은 담당자 수를 보면 5~9급 공무원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2006년 133명에서 2008년 646명, 2009년 751명으로 크게 증가하였으나 중앙부처는 2006년 55명에서 2008년 87명으로 다소 증가하다가 2009년에는 37명으로 오히려 감소하였다(〈표 V-8〉).

표 V-8 성별영향평가의 연도별, 기관유형별, 직급별 교육실적

구분	연도 기관 유형	2006			2007				2008				2009			
		중앙	지방	계	중앙	지방	교육청	계	중앙	지방	교육청	계	중앙	지방	교육청	계
담당 공무 원	5급	17	4	21	17	5	1	23	22	3	1	26	12	5	0	17
	6급	22	42	64	25	52	15	92	34	121	23	178	13	136	0	149
	7급	16	58	74	13	113	2	128	26	309	1	336	11	375	0	387
	8급	0	19	19	2	31	0	33	4	133	0	137	1	157	1	158
	9급	0	10	10	1	19	0	20	1	80	2	83	0	78	1	79
	계	55	133	188	58	220	18	296	87	646	27	760	37	751	14*	802

*인용: 국회(2008), 2008년도 국정감사 회의록 부록(2008.11.13), pp.3-5; 여성가족부(2009b), 성별영향 평가의 연도별, 기관유형별, 직급별 교육실적, 내부자료(미간행).

현재 중앙행정기관에 대해서는 성별영향분석평가에 대해서 정책평가 제도와 연계되는 것이 없는 상태다. 중앙행정기관에 대해서도 총괄조정을 견인해 낼 수 있도록 기관평가나 고위직 성과평가 등과 연계시켜야 한다는 논의가 나오고 있지만, 아직 현실화되지는 못하고 있다.

둘째, 성별영향분석평가 우수기관 및 우수사례 선정·시상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분석평가 수행을 전인해 내는 데 긍정적 수단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만드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예를 들면 표창을 받은 지자체들은 청사 전광판이나 펼침막, 신문보도자료 등을 통해 수상사실을 홍보하고 있으며, 기관장의 관심이 높아졌다는 반응들이 있었다. 그리고 모 중앙부처는 연속적인 우수기관 선정·수상을 통해 부처 내·외에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적극 홍보함으로써 부처 공무원의 인지도를 높였을 뿐 아니라 분석평가 협조를 얻는데 용이하였고, 또 총괄관리 담당자가 승진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고 평가하고 있었다.

셋째,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정·시행이 행정기관 간 총괄조정 수단으로서의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동법 및 시행령이 실시된 지가 불과 두 달여밖에 되지 않았으므로 그 성과를 판단하기에 이르기는 하다. 그러나 동법의 제정·시행에 따라 법령 제·개정을 관할하는 법제처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규칙심의위원회 등과의 협조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점은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예를 들어 여성가족부와 법제처는 중앙행정기관의 법령 제·개정에 대해서 법제처의 법령안 심사전에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하여 분석평가서를 첨부해야 만이 그 이후 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업무협의를 하였다.¹²⁾ 그리하여 2012년 3월 16일부터는 중앙행정기관이 법령을 제·개정하려고 할 경우, 성별영향분석평가 체크리스트 및 분석평가서가 첨부하고 있으며, 만약에 이를 하지 않을 경우 법제처는 심사를 진행하지 않고 되돌려 보낸다. 때문에 중앙행정기관은 법령을 제·개정하려고 할 때는 반드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체크리스트 및 분석평가서를 작성하여 여성가족부로 제출해야 한다.

한편, 지방자치단체도 자치법규를 제·개정하려면, 성별영향분석평가 체크리스트 및 분석평가서를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 전에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각 지방자치단체는 자치법규 제·개정 절차에 따라 성별영향분석평가를 반드시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예를 들어 인천광역시는 사업부서가 자치법규를 제·개정하고자 할 때, 성별영향분석평가 체크리스트 및 분석평가서를 작성해서 첨부하도록 하고 있다(인천광역시, 2012).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이 제정·시행되기 전, 지난해까지만 해도 여성발전기본법의 성별영향분석평가 실시 근거조항(제10조)은 여러 행정기관이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하도록 조정할 수 있는 유일한 법적기반이었다. 동법에 근거해서 16개 광역자치단체는 조례에 성별영향분석평가 실시 근거조항을

12) 여성가족부(2012c), 2012년도 성별영향분석평가 컨설팅 워크숍(2012.2. 16~17)에서 여성가족부 관계자 발표자료(미간행).

신설하여 지자체에서의 분석평가 근거를 만들기도 하였다(김경희 외, 2010). 하지만 2012년부터는 이전보다는 훨씬 강력해진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이 시행되고 있으므로 조정기능이 약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넷째, 그리고 성별영향분석평가 지침도 여성가족부가 타 행정기관과의 총괄조정을 해 낼 수 있는 구체적인 실행수단으로 작용하였다고 판단된다. 지침은 매년 당해 연도의 성별영향분석평가 수행방법을 구체적으로 안내하고 있으며, 분석평가를 수행하는 공무원들은 이를 활용하고 있다.

다섯째, 국가재정법, 지방재정법에서 성인지 예산에 대한 세부사항을 구체화하고 있는 것은 총괄조정 대상이 되는 예산범위를 명확히 한다는 점에서 매우 적절하고 필요한 노력이었다.

여섯째, 성 인지 예산, 성별분리통계, 성 평등지수 개발 및 산출 등은 관련부처와의 협력관계를 강화하고 여러 행정기관의 참여와 기관 최고책임자의 관심을 촉구할 수 있는 강제적인 장치로서 부처별 통합을 유도하는 기반이 되고 있다. 모든 정책과정에서 기초자료는 필수적이지만 특히 여성정책의 경우 젠더적 관점에서 개별 부처정책들을 통합하기 위해서는 성별분리통계에 대한 자료가 매우 중요하다. 또한 성별분리통계의 경우 성인지 예산제도의 전제조건이 될 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 성주류화 및 여성정책 전반의 기초가 된다.

또한 성 평등지수는 여성정책기본계획 수립과 성과평가의 지표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도 매우 유용한 정책수단으로 판단된다. 불평등 정도가 악화된 지표에 대해 관련 부처의 관심과 집중적 관리를 유도하여 정책개선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총괄조정 수단으로서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에 대한 성과를 판단하기에는 아직 이르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위원회의 구성이 완료되었고, 회의는 한 차례 개최된 바 있지만 현재까지 조정 수단으로서의 위원회의 역할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면 공식적인 회의를 통해서가 아니더라도 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부처들과의 업무협약이 필요한 때는 수시로 회의가 개최되고 있다. 특히 법제처와의 업무조정이 눈에 띈다. 법령 제·개정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올해 처음으로 도입되었다. 이에 여성가족부는 법제처가 개최하는 각 부처 법제담당공무원 집체교육에서 법령 제·개정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의 필요성과 방법, 법제담당공무원의 역할 등에 대한 교육내용을 포함시켰다. 그리고 법령 제·개정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평가 대상에 있어서도 2012년 법제처가 추진하고 있는 ‘알기 쉬운 법령정비 대상’에 대해서는 분석평가를 하지 않는 것으로 4월에 추가 합의하였다(여성가족부, 2011a).

마지막으로 성별영향분석평가의 총괄조정 수단으로서 제3차 여성정책기본계획 역할은 상대적으로 약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관련 행정기관들로 하여금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해야 한다는 상징적인

방향을 제시해 준 정도에 그쳤다고 할 수 있다.

3) 시사점¹³⁾

(1) 국가인적자원개발정책

국가인적자원정책으로부터 도출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책내용이 수직적·수평적으로 분담되어 있을수록 총괄 조정의 필요성이 크다.

정봉근(2012)은 국민의 정부 NHRD 정책의 실패에 대해 양성부문에 해당하는 교육정책의 권한과 대상을 수직적, 수평적으로 중앙정부, 지방정부 및 민간주체에 분담시켜 자율화하지 못했던 점을 가장 큰 원인으로 지적하고 있다. 각 개별부처는 해당 부처의 특성에 맞는 정책과 사업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하고 이러한 자율적이고 분권화된 구조 속에서 총괄부처의 정책목표와 방향에 맞도록 다시 조정될 수 있어야 총괄조정 of 본래적 의미가 살 수 있다는 것이다. 국가인적자원정책에서 인적자원 양성기능이 총괄조정 주무부처의 업무로 집중되어 있어서 자기 부처의 업무에 대해 총괄조정은 필요로 하지 않는 한편 정작 필요한 타 부처 업무에 대한 총괄조정은 교육인적자원부의 전문적 정책역량의 부족으로 창의적 의제를 개발하기 어려웠다.

둘째, 총괄조정 대상 정책예산이 명확히 구분되어 정립되어야 한다.

국가인적자원개발정책에서 인적자원개발예산의 개념과 분류체계가 명확하게 구체화되지 못했으며 정부 내에서 NHRD 예산의 편성기준이 확립되지 않았다. 가장 이해관계가 첨예한 예산 조정기능이 미약함으로써 정책에 대한 총괄조정기능은 원활히 작동되기 어려웠다.

셋째, 총괄조정을 위한 조직 개편에서 정책기획 및 평가는 총괄조정기구가 하고 분야별 기획과 집행은 해당 부처가 수행하는 방식의 분담구도를 설정해야 책임과 역할이 명확히 구분되어 총괄조정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다.

넷째, 총괄조정 부처는 해당 정책에 대한 전문성과 창의적 의제 설정 능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전문적 정책역량이 부족할 때 의제설정의 주도성이 떨어져 총괄조정이 어렵다.

13) 이 부분은 윤철경 선임연구위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집필하였음.

(2) 여성분야 성 주류화 정책

여성분야 성 주류화 정책으로부터 얻은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영향평가제 도입이 필요하다. 여성정책의 경우,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가 상당히 유효했다. 각 부처 청소년관련 기본계획·시행계획에 대한 사전평가제 및 특정 과제에 대한 사후평가로서 청소년영향분석평가제(또는 세대별 영향분석 평가제) 도입이 필요하다.

또한 이러한 평가제도를 타 행정기관 정책평가제도와 연계시키는 것이 시급하다. 중앙행정기관에 대해서는 정부업무평가기본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특정평가에 청소년정책을 포함하는 것을 협의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성과관리 제도와의 연계를 생각해 볼 수 있다. 국무총리실에서는 매년 중앙행정기관의 주요정책에 대해서 성과목표와 지표를 정하게 하고 성과관리를 주관하고 있다. 여기에 청소년정책 소관부처들은 해당기관의 성과관리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청소년정책에 대해서도 주요 관리과제로 포함시키고 성과목표 및 지표로 포함시킬 것을 권장해 볼 수 있다. 국무총리실이 마련하여 제공하고 있는 ‘정부업무 성과관리운영 지침’(국무총리실, 2012)에 이 사항을 반영하는 것에 대해 협의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에 청소년정책에서 특히 더 중요시 되는 정책을 지표에 포함하도록 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현재 청소년정책 관련 지표로는 ‘청소년 활동 지원사업 추진성과, 청소년통합지원체계 활성화 정도, 청소년유해업소 단속실적’이 포함되어 있다(행정안전부, 2012). 이 지표는 고정불변의 것이 아니므로 여성가족부가 청소년정책 중에서 중점을 두고자 하는 사항이 변화하면 지표도 함께 변화시킬 필요가 있을 것이다.

둘째, 청소년정책에서 여러 행정기관이 서로 총괄조정해야 할 내용이 무엇인지를 구체화하고 부처별로 소관역할을 명료화하여 추진실태를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청소년 정책영역별로 소관부처가 어느 정도 구분되어 있다. 하지만 이들 부처의 청소년정책 추진실태에 대해서 모니터링 또는 관리를 좀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부처마다 정책 환경과 정책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청소년정책에 대한 합의된 인식이 없이는 많은 혼란과 충돌이 있게 되고 실질적인 협력관계가 형성되기 어렵다. 따라서 정부 각 부처에 대해 청소년 정책에 대한 기준과 범위를 제시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정부 각 부처의 사업예산 중 청소년예산의 범주를 설정할 수 있는 기준을 개발해야 한다.

연령구분 없이 실시하는 정부 각 부처의 예산이 청소년 사업예산으로 포함되기도 하고 청소년사업이 실시되고 있지만 기본사업일 경우 청소년예산에서 배제되기도 한다. 청소년예산의 범주를 확정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여 청소년예산 총괄조정 범위를 확정지어야 한다.

넷째, 정보관리능력을 확보해야 한다. 여성정책의 사례에서 보듯이 성별분리통계 및 성평등지수를 생산하고 이를 통해 개별 부처의 현황과 실태를 파악하여 기초자료를 확보하는 것은 정책목표의 실현을 위해 매우 중요한 기초작업이었다. 정책은 현실문제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자료분석, 지표를 바탕으로 형성되어야 한다. 여성과 관련된 문제에 대한 각종 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권한과 성인지적 관점에서 통계자료와 지표를 생산, 점검할 수 있는 권한은 타 행정부처를 여성정책의 측면에서 총괄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유용한 수단이었다. 정부 각 부처의 정책통계로 청소년 분리통계(청소년과 기타 세대를 구분하여 볼 수 있는 세대별 분리통계), 청소년지표(또는 청소년 육성 지표, 삶의 질 지표)를 확정, 지속적으로 산출하여야 한다.

다섯째, 청소년영향평가제의 도입과 더불어 청소년정책 우수기관, 우수사례 선정·시상 등 인센티브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청소년영향평가제 도입과 더불어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청 등에 대한 청소년정책 성과평가와 더불어 우수기관·우수사례에 대해 선정·시상하여 청소년영향분석평가제도에 대한 협조를 유인해내고 이에 대한 공무원의 인지도를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여섯째, 청소년영향평가제 도입시 실효성을 높이려면 법제처, 지방자치단체 조례규칙심의위원회 등과의 협조를 위한 업무협약이 필요하다.

중앙행정기관이 법령을 제·개정하려고 할 경우 청소년영향분석평가 체크리스트와 분석평가서를 첨부할 경우만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는 절차를 추진하여야 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도 자치법규 제·개정시 청소년영향분석평가 체크리스트와 분석평가서를 첨부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일곱째, 공무원의 의지 및 인식제고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어떤 정책에 대해서 행정기관간의 총괄조정이 잘 이루어지려면 무엇보다도 그 정책에 대한 필요성, 중요성에 대해 공감대가 이루어져 있어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청소년정책에 대한 행정기관들의 공감대가 어느 정도인 지 되새겨 볼 필요가 있으며 공무원 교육연수 등 공감대 형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여덟째, 청소년정책의 궁극적인 목표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만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들이 존재하고 그 추진전략들이 청소년관련 정책의 총괄 및 조정을 위한 구체적인 수단을 마련해 줄 수 있다. 여성정책의 경우 가장 궁극적인 목표는 성 평등화의 실현이었다. 이러한 목표달성을 위한 전략 중 하나가 성 주류화였다. 그러므로 국민적 공감대를 얻을 수 있는 청소년정책 총괄조정의 목표를 세우고 이를 위한 추진전략 개발이 필요하다.

3. 국외사례

이 절에서는 유럽 주요 국가들의 청소년정책 전반을 살펴봄으로써 한국 청소년 정책의 총괄조정에 대한 함의를 얻고자 한다. 특히 스웨덴, 핀란드, 독일, 영국의 청소년 정책을 대상으로 해당국의 청소년 정책의 의미와 대상연령, 주무부처와 정책추진체계, 관계법령 및 주요사업, 주무부처 외 수행체계, 총괄조정 현황 등의 순서로 검토하여 총괄조정 강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할 것이다.

1) 스웨덴¹⁴⁾

(1) 청소년정책의 의미

① 청소년정책 대상의 연령범주

스웨덴에서 청소년의 개념은 1994년 법안 (Proposition 1993/94:135)에서는 16세에서 24세까지의 학생 및 청년층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의 2004년 법안은 청소년층을 보다 포괄적으로 확대시켜 13세에서 25세까지로 규정하고 있다. 이 기간은 13세인 초등학교 7학년 (우리나라 개념의 중1)부터 대학을 졸업해 경제생활을 영위하는 25세까지를 포함한다(Proposition 2004/05:2).

또한 스웨덴에서 청소년 정책은 청년정책과 혼합하여 사용되기도 하는데, 청년그룹인 26세에서 29세까지를 포함한 연령층을 청소년 정책에 포함하기도 한다. 즉 위에서 언급한 13세에서 25세까지를 포함하면서 청년실업, 임금정책, 청년주택난 해소 등의 경제, 노동, 주택정책과 연관지어 29세까지를 포함한다(〈표 V-9〉 참조).

표 V-9 스웨덴 청소년정책 대상의 연령범주

구 분	해당법	연령범주
1	1994년 법안	16-24세까지의 학생, 청년
2	2004년 법안	13-25세 까지의 연령층
3	광의의 청소년 대상연령	13-29세 까지 포함

*인용: Proposition 1993/94:135; Proposition 2004/05:2.

14) 최연혁 교수(스웨덴 쇠데르팅겐대학교 정치학과)가 집필하였음.

② 청소년정책 주무 행정부처와 관련법령

스웨덴의 청소년 관련정책은 1956년 처음으로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정부에서 청소년 단체의 지원을 위해 예산을 확보하고 정부차원에서 관심을 보이기 시작하면서 청소년정책이 빛을 보기 시작했다. 1986년 들어 처음으로 청소년 분야를 책임지는 장관이 임명되기 시작하면서 청소년 정책이 현재의 틀을 갖추기 시작했다. 이때부터 청소년 정책을 총괄하는 정책부서가 만들어지면서 정부 내에서 다양한 정책영역을 조정하고 취합하는 기능을 담당하게 되었다.

표 V-10 스웨덴의 청소년정책 주무부처 및 관련법령

주무 부처	관련법령
청소년정책위원회	“청소년정책” 입법안(1994)
	청소년정책법안(1998)
	“청소년선택권” 입법안(2004)
교육부 통합평등부	의회 입법안(2007)
	정책백서 Regeringens Skrivelse 2009

*인용: Proposition 1993/94:135; Proposition 1998/99:115; Proposition 2004/05:2; Betänkande 2004/05:KrU2; Regeringens skrivelse 2004/05:94; Proposition 2007/08:1; Betänkande 2007/08:KrU1; Referingens skrivelse 2007/08:58; Regeringens skrivelse 2009/10:53.

1994년에는 청소년정책 입법안 (Proposition 1993/94:135) “청소년 정책 (Ungdomspolitik, Youth Policy)”이 제정되었다. 이에 따라 청소년 정책을 집행, 관리, 감독하는 중앙기관인 청소년 정책위원회 (Ungdomsstyrelsen, Swedish National Board for Youth Affairs)가 설립되었고, 이로써 본격적으로 청소년정책을 위한 정부의 중요한 종합조정 기능이 갖추어지게 되었다.¹⁵⁾ 청소년정책은 문화체육 분야에서 점차 참여 및 민주주의, 사회적 공평성, 그리고 미래진로 문제로 확대 발전되었으며 1998년 청소년 정책법안 (Proposition 1998/99:115)을 통해 구체화 되었다. 이어지는 정책지침서로 2004년에 입안된 청소년의 선택권이라는 제목의 입법안 (Proposition 2004/05:2, Betänkande 2004/05:KrU2, Regeringens skrivelse 2004/05:94)은 현재까지도 사용되고 있다.

2010년의 4개 정당으로 구성된 우익연립 정권 하에서는 교육부 내에 통합평등부 장관을 따로

15) 청년정책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규정은 관련법 (SFS 2007:1140)에 구체화되어 있다.

두어 청소년 정책전담부서로 기능하게 하고 있다. 정책목표는 2007년 의회에서 채택한 입법안 (Proposition 2007/08:1, Betänkande 2007/08:KrU1, Regeringens skrivelse 2007/08:58)에 잘 기록되어 있다.

이 입법안은 청소년 정책영역을 교육, 복지, 정치적 참여 및 영향력, 그리고 경제적 자립 등으로 확대했다. 이것은 실질적으로 경제적 주체로서 의무교육 이후 독립적으로 가정을 이루고 살 수 있는 경제적 주체를 만드는 것과, 민주적 시민의 역량을 갖추 수 있도록 하는데 주력하고 있으며 청소년정책의 실천사항을 담고 있어 청소년정책의 세부 정책내용을 잘 보여주고 있다.

2009년 채택된 정책백서인 Regeringens skrivelse (2009/10:53)는 청소년 정책의 미래전략을 담고 있다. 이 미래 전략에는 청소년의 건강, 실업문제, 정치참여, 문화 및 체육활동 등도 포함하고 있어 현재 13세부터 25세 청소년이 처해 있는 현실적 문제와 이에 대한 미래의 예측과 정책 방향 등이 나타나있다. 이 미래예측 보고서는 정치 및 사회분야의 다양한 유관기관이 참가해 함께 문제를 인식하고 청소년의 미래를 위한 정책 제안을 시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특이하다고 하겠다.

③ 주무 행정부처가 담당하는 정책영역과 사업내용

교육부 내의 독립 부처인 통합평등부는 스웨덴 청소년정책을 총괄하고 있다. 통합평등부는 청소년 정책 분야의 목표로 첫째, 청소년들이 실질적 사회복지를 향유할 수 있도록 하고, 둘째, 사회의 중요한 구성원으로서 실질적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정의는 2008년 정부예산안 (Proposition 2007/08:1, Betänkande 2007/08:KrU1, Regeringens skrivelse 2007/08:58)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다. 이를 실천하는 정책영역으로 교육분야, 노동 및 경제적 자립권, 건강 및 위험, 문화 및 여가 네 가지 영역을 제시하고 있다. 각 정책영역의 구체적인 정책내용은 <표 V-11>과 같다.

표 V-11 스웨덴 청소년정책의 영역

정책영역	정책내용
교육	• 중고등학교 교육을 통해 민주시민의 역량과 소양을 갖추도록 지원 • 중고등교육 학업 중단 예방을 위한 학업성취 지원 • 청소년 폭력과 집단따돌림 방지
노동 및 경제적 자립권	• 의무교육 이후 취직알선, 직업교육 지원
건강 및 위험	• 알콜 소비, 마약, 약물 및 흡연 (ANDT, Alcohol, Narcotics, Drug and Tobacco) 예방 및 치료
문화 및 여가	• 청소년의 심신건강, 건전여가활동을 위한 시설제공 및 관리

*인용: Proposition 2007/08:1, Betänkande 2007/08:KrU1, Regeringens skrivelse 2007/08:58; Proposition 2011/12:1.

통합평등부는 주요 사업내용으로 정부 산하 유관기관으로부터 80여개에 달하는 청소년관련 지표를 산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매년 6월 "청소년의 오늘 (Youth Today)"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각종 청소년 통계 및 지표를 보여줌으로써 청소년 삶의 질에 대한 포괄적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매년 청소년정책위원회는 4-6회의 전국청소년 정책회의를 개최해 정치인, 기초지방정부 및 청소년 단체 등이 참여하도록 유도해 청소년 정책의 목표, 현황 및 개선방향에 대한 정보교환, 정책보고, 의견청취 등의 기회를 제공해 주고 있다.

(2) 주무부처 외 청소년관련 정책의 수행체계

청소년 정책은 교육부 내 소관 부처인 통합평등부에 귀속되며 담당 통합평등부 장관이 청소년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통합평등부 산하에 있는 청소년정책위원회는 정부의 정책지침서 (Direktiv; Governmental Directions)에 따라 정책을 집행한다.

정책지침서는 청소년 정책위원회가 수행할 정책의 상세한 내용 뿐 아니라, 집행, 감독 등의 수행지침까지 포함하고 있는 포괄적 내용을 담고 있다. 예산 부분은 매년 의회에 제출되는 정부의 예산안 29개 항목 중 17번째 정책분야에 속하며 배분된 예산의 상세한 내용을 담고 있다.

청소년정책위원회는 다양한 청소년 정책의 종합적 집행 및 평가를 자체적으로 수행하면서 감독까지 담당한다. 또한 연구과제도 자체적으로 수행하면서 청소년 관련 정책의 비전과 목표수정, 그리고 국제적 비교 및 청소년들의 국제활동을 지원하고 보조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

청소년 정책위원회의 또 다른 중요한 활동분야로 청소년 문화 및 체육단체 등 사회단체들의 경제적

지원을 총괄하고 있다. 청소년 정책위원회에 배정되는 예산의 2/3를 청소년 관련 사회단체에 보조금으로 지원하고 있다.

청소년 정책의 업무수행 결과에 대한 평가는 재정감사원 (ESV; Ekonomi Styrningsverket, The Swedish National Financial Management Authority)의 평가를 받고 행정수행에 대한 평가는 행정감사원 (Statskontoret, The Swedish Agency for Public Management)의 평가를 받는다. 이들의 평가는 예산운용에 대한 감사, 정책목표 수행에 대한 감사 등으로 이루어진다.

(3) 청소년정책 총괄조정 사례

청소년 정책의 총괄은 교육부 내 소관부처인 통합평등부에서 담당하고 행정적 책임은 통합평등부장관이 진다. 2006년부터 청소년 정책을 보다 현실적으로 관리하고 집행하기 위해서 정부산하 유관기관에 청소년 관련 통계 및 지표산출을 의무화하고 있다. 2006년 이후 17개의 기관이 13세부터 25세까지의 청소년의 삶의 질, 복지, 그리고 정치적 영향력에 관한 각종 통계자료를 정부에 제공하고 있다.

집행방법은 통합평등부 장관 명의로 각 산하기관에 정부지침서를 하달해 따르도록 하고 있다. 지침서에는 청소년과 관련된 자료를 제공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표 V-12>에서 보듯이 16개 기관은 매년 정부에 청소년 관련 자료를 제공하며 정부는 이를 취합해 청소년 정책통계를 매년 발간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실질적인 작업은 청소년 정책위원회에서 이루어진다. 13세부터 25세까지의 청소년 관련 통계 및 각종 지표 (Statistics and indicators)를 정부에 제출하는 유관 기관과 그곳에서 제공되는 다양한 자료는 <표 V-12>와 같다.

표 V-12 스웨덴의 청소년정책에 대한 통계 및 각종 지표 제출기관과 자료

유관기관	제공자료
1. 국영직업소개소	청소년의 직업훈련자료, 취업자료, 청소년창업율, 창업지원금자료
2. 범죄예방위원회	청소년범죄통계, 청소년 비행소년·소녀통계집, 교화현황, 청소년의 집 운영실태, 재범방지 대책
3. 중앙주택국	청소년 주택상황, 청소년주택보조금 관련통계, 부모와의 독립여부, 지역별, 성별거주통계
4. 중앙학비지원국	청소년 학비지원 현황, 학생들의 아르바이트 현황, 유학생의 지원현황, 청소년 총 학비장기융자 현황
5. 국가보험국	청소년의 실업과 보조금 수령현황, 최저생계비 경험
6. 대학교육청	청소년 대학진학현황, 청소년대학졸업 통계

7. 중앙발전정책분석국	청소년의 경제적 자립현황, 경제적 현황
8. 개인채무집행국	청소년의 채무현황, 채무구제현황
9. 국세청	청소년의 세금납부 현황, 청소년의 평균수입현황, 청소년의 결혼, 자녀 및 가족현황
10. 건강보험청	청소년 건강정책, 청소년 성병감염 실태, 보건소 운영실태, 정신적 질환현황
11. 중앙건강청	청소년 알콜, 약물복용, 마약실태, 흡연, 건강상태 등, 질병, 암 발병 현황, 예방접종현황, 청소년 전화운영실태, 낙태경험
12. 중앙문화국	청소년의 문화체육 활동통계, 청소년의 박물관 방문통계, 신문방송소비성향, 도서관 방문, 도서임대, 독서량
13. 중앙교육청	청소년의 중등 및 고등학교 학업성취도, 학급학교 진학률, 왕따경험, 학교폭력 경험
14. 경제성장국	청소년의 경제수입상황
15. 청소년정책위원회	청소년 단체의 재정보조, 국제활동 통계, 자원봉사활동 통계
16. 선거관리위원회	청소년들의 선거참여, 투표율, 청소년성별 정치참여 현황, 정당가입, 지방자치 단체 등 진입율, 청소년연합활동 등

*인용: Statistics Sweden (2010), Swedish National Board for Youth Affairs

2) 핀란드¹⁶⁾

(1) 청소년정책의 의미

① 청소년정책 대상의 연령범주

표 V-13 핀란드 청소년정책 대상의 연령범주

구분	해당법	연령범주
1	핀란드 청소년법 (Youth Act 72/2006)	29세 이하 청소년
2	지자체의 청소년정책 대상	7-25세 혹은 13-17세

*인용: Finland National Youth Act(72/20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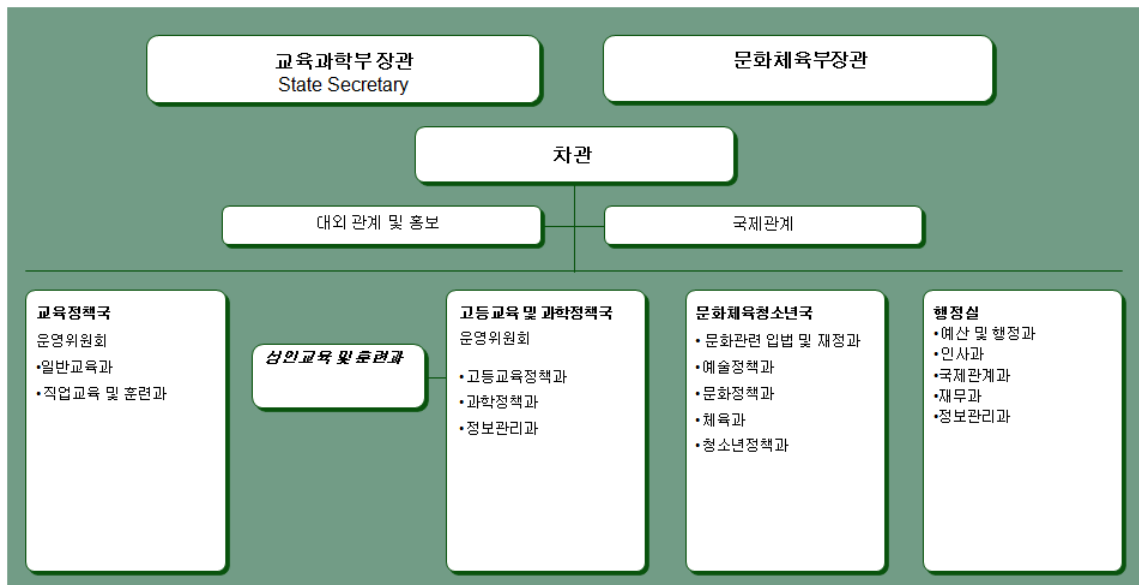
‘핀란드 청소년 법(Youth Act 72/2006)’에 따르면 청소년 보호보다 육성에 중점을 두어 29세 이하를 청소년 연령의 범주로 정의하고 있다. 다시 말해, 핀란드 전체 인구의 36%에 해당하는 29세 이하의 모든 아동과 청소년에 청소년 법이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청소년에 대한 정책을 시행할 때 다른 북유럽 국가처럼 아동법과 관련해서 겹치는 부분이 많다.

16) 이동섭(핀란드 탐페레대 교육학과 박사과정)이 집필하였음.

실제로 청소년 정책을 현장에서 수행하는 대다수 지자체에서는 7세부터 25세까지를 청소년의 활동연령 대상으로 보고 현실성 있게 정책을 실천하고 있다. 특히 법적인 참정권을 가지고 독립하여 결혼할 수 있는 18세부터 성인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실질적인 ‘표적 집단(target group)’은 질풍노도의 시기라 할 수 있는 13세에서 17세에 맞추어 거의 모든 청소년 정책이 실행되고 있다. 결국 핀란드에서 청소년의 연령범주는 신체적인 나이에 근거하여 정의내리기 보다 삶의 과정에서 개인이 독립하여 자아정체성을 실현할 수 있는 시기로 보고 있다.

② 청소년정책 주무 행정부처¹⁷⁾

핀란드의 청소년정책 주무부처는 교육문화부로 두 명의 장관 중 문화체육부 장관이 청소년업무를 관장하고 있으며 그 중 문화체육청소년국에서 청소년업무를 담당하고 있다(【그림 V-3】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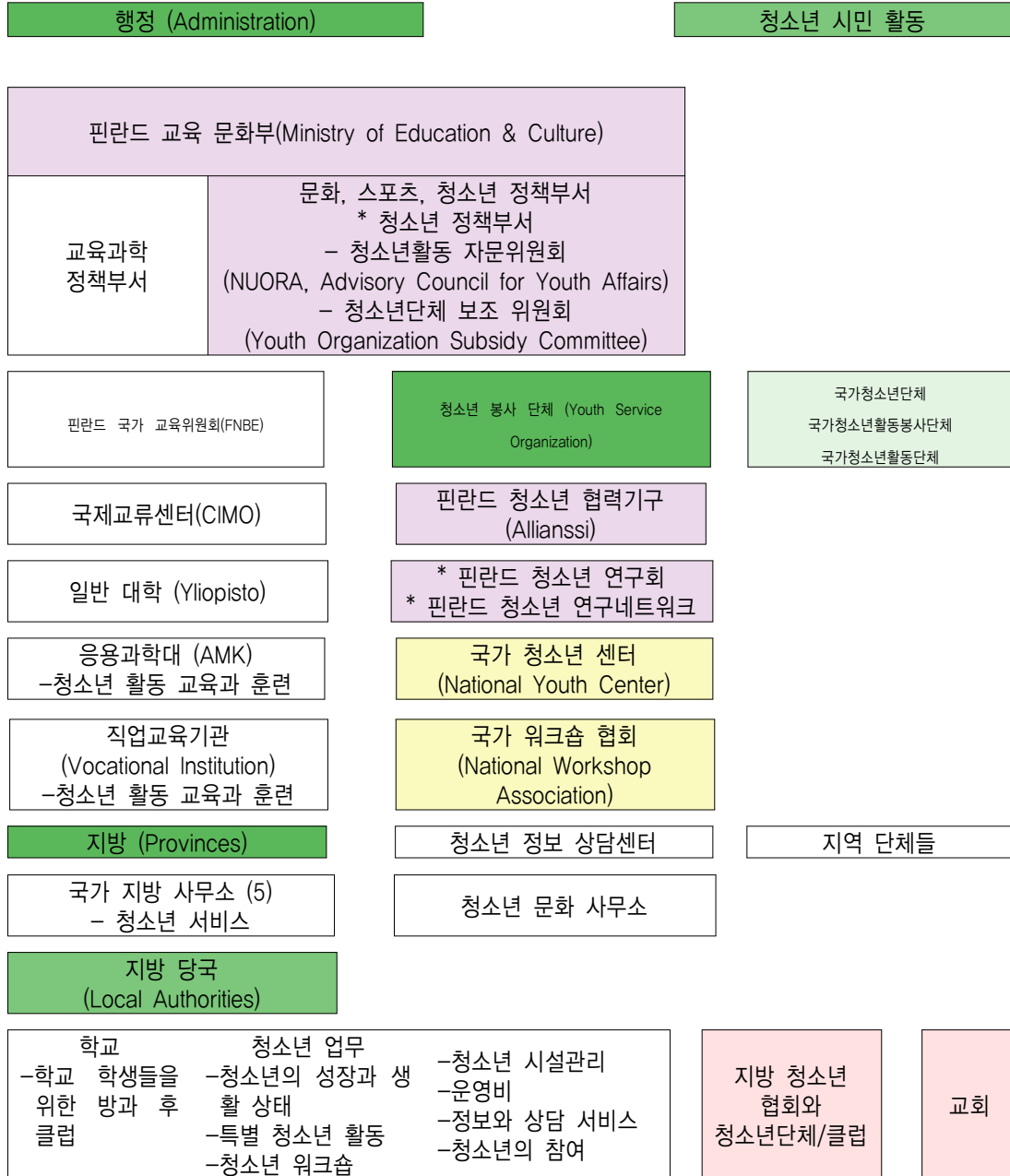
【그림 V-3】 핀란드 교육문화부 청소년부서

*인용: Finnish Ministry of Education & Culture, (2012), Youth Work Youth Policy in Finland, 내부자료(미간행).

교육문화부 내에는 청소년활동을 개선시키는 다양한 공공정책을 실행하는 공공조직이 있으며

17) Reijo Aholainen(교육문화부 Senior Officer) 와의 인터뷰 자료(2012. 6. 8).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시민활동단체가 있다.【그림 V-4】는 청소년의 재정 책정에 따라 구분해 놓은 청소년 정책 및 사업 단체들이다.



【그림 V-4】 청소년의 재정책정에 따른 청소년 정책 및 사업 단체들

*인용: Finnish Ministry of Education & Culture(2006). Youth Work & Youth Policy – Fact Sheet.

③ 주무 행정부처가 담당하는 정책영역과 사업내용

표 V-14 핀란드 정부 차원 청소년 기구 및 청소년 정책사업

구분	정책영역	청소년 사업
1	교육문화부	• 청소년사업은 문화부에서 담당 • 청소년관련 입법, 연구, 조사, 예산 • 4년 마다 아동, 청소년 위한 국가정책프로그램 개발
2	청소년 분과 자문위원회 (NUORA)	• 청소년정책개발 프로그램 주도 • 실행된 프로그램에 대한 연간평가서 정부에 제출, • 각종 청소년 지표조사 생산 • 청소년 고용율, 교육, 주거 등에 대한 자료구축, 점검, 심의, 평가
3	청소년 단체 보조위원회 (YOSC)	• 청소년 보조금 보조 • 국가청소년단체 및 봉사단체들에 재량적 전환할당금 제안서 제출
4	일반교육분과	• 학교와의 긴밀한 연계를 하며, 지자체를 통해 정책추진 • 방과 후 활동, 청소년미디어와 민주주의 교육, 청소년역량강화 프로그램 실행
5	국가교육위원회 (FNEB)	• 고등교육을 제외한 초중등교육 및 성인교육, 훈련에 대한 교육개발 및 집행 • 교육부에서 수립된 정책을 토대로 교육목표, 내용, 방법 등 개발 • 국가핵심교육과정 및 자격제 입안 및 승인 • 지자체와 학교의 방과후 활동에 대한 지침 수립(초등학교 1,2학년 대상 방과 후 활동은 국가핵심교육과정 사항임)
6	국제교류센터(CIMO)	• 유아부터 성인 대상 국제문화교류 프로그램 지원 및 연구활동 • 교육, 직업훈련, 직업(일자리) 등에 대한 교류 지원
7	국가청소년 센터	• 유럽위원회(European Council)의 정부간 프로그램 지원 • 환경, 생태, 캠프 등 청소년사업 전문기관으로 기능

*인용: Finnish Ministry of Education & Culture(2006). Youth Work & Youth Policy – Fact Sheet.

가. 교육문화부(Ministry of Education & Culture)

청소년 업무는 문화부 청소년 정책부서에서 담당하고 있다. 교육문화부는 상임위원회인 국가 청소년분과 자문위원회(NUORA)와 청소년단체 보조위원회의 보조를 받아 입법과 연구 및 조사, 예산을 담당하며 복권을 통해 기금을 마련하고 청소년 정책을 조정하여 4년마다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국가 정책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다.

나. 국가 청소년 분과 자문위원회(NUORA, Advisory Council for Youth Affairs)

중앙정부에서 임명된 청소년 육성과 정책분야의 전문가 집단이다. 주 업무로는 청소년정책개발프로그램을 주도하며 실행된 프로그램의 연간 평가서를 정부에 제출한다. 또한 연간 청소년지표를 통해 청소년의 가치와 태도, 미래의 기대와 사회의 영향에 대한 의견들을 조사한다. 청소년의 생활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청소년 고용율, 교육, 주거에 대한 자료를 구축하여 이를 매년 점검, 심의, 평가한다.

다. 청소년 단체 보조위원회(Youth Organization Subsidy Committee)

위원은 청소년 전문가들로 정부로부터 임명을 받는 상근직으로 구성되는데, 주 업무는 국가 청소년단체나 청소년 봉사(사업)단체에 재량적 전환 할당금에 대한 연간 제안서를 교육부에 작성, 제출하는 것이다. 위원회의 일원은 청소년기관의 활동에 대한 전문가들로 상근직이다. 위원회는 정당 활동을 하는 청소년과 학생기구, 청소년이익단체, 청소년문화와 여가활동을 담당하는 기관, 청소년 종교 활동단체, 10대 이전의 아동단체, 청소년활동봉사단체들에 할당금을 지원한다.

라. 교육문화부의 일반교육분과와 국가교육위원회(Finnish National Board of Education)

교육문화부의 핵심 동반자로서의 역할을 한다. 이들이 공동으로 하는 일들은 학교의 방과 후 활동, 청소년의 미디어와 민주주의 교육 뿐만 아니라 다양한 청소년 역량강화 프로그램들을 실행한다. 국가교육위원회는 초등, 중등, 성인교육과 훈련을 위한 교육개발과 집행을 담당하고 교육부에서 수립된 정책을 토대로 교육목표와 내용, 방법 등을 개발한다. 교육, 훈련에 대한 자료수집, 국제벤치마킹, 평가를 담당한다.

마. 핀란드 국제교류센터(CIMO)

유럽연합청소년 프로그램의 실행과 외국청소년의 문화교류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다양한 EU 프로그램과 국제청소년 봉사프로그램을 통해 교류, 훈련,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다.

바. 국가 청소년 센터(National Youth Center)

자연환경 안에서 환경교육, 캠프, 생태학교 등을 제공하는 사회청소년사업 전문기관이다. 핀란드 내 10여 군데 있는데, 소유는 지자체이며 재정지원은 교육부로부터 받고 있다. 청소년활동에 대한 통계데이터를 만들고 청소년 담당자들을 위한 훈련준비, 지자체와의 공동마케팅 등에 노력한다.

④ 청소년 사업단체

〈표 V-15〉은 주무부처 외 청소년정책 수행에 관련되는 협력단체 들을 명시한 것이다. 이들 단체들은 서로 다른 목적을 표방하며 활동하고 있다. 핀란드 교육문화부는 국가청소년단체, 청소년봉사 활동 단체 등에 동일한 근거에 기준하여 지방교육세를 지급하며 이들의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표 V-15 청소년단체의 사업과 활동내용

구분	청소년단체	주요사업 및 활동
주무 부처 외 정책 단체	청소년단체	• 정치와 정당사와 연결되어 정당의 정책형성과정에 적극 참여하여 청소년정책 형성에 영향을 미침
	청소년활동단체	• 청소년 성장, 시민활동, 생활환경개선, 소외방지, 국제협력에 우선순위를 두고 활동
	청소년봉사활동단체	• 알리안씨에 가입하고 있으며 알리안씨는 청소년단체와 활동을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함. • 알리안씨가 청소년 연구회와 청소년 연구네트워크와 협력하며 단체를 지원함 • 알리안씨는 청소년정보망, 청소년연구도서관, 청소년정보안내소, 청소년활동지도자를 위한 웹서비스 구축, 청소년활동잡지 출간, 유럽청소년 포럼 등 국제협력 활동에 참여하며 단체를 지원함.
	청소년 클럽협회	• 청소년의 문화, 여가활동 지원
	방과 후 클럽	• 청소년 교육, 시민의식 성취 지원

*인용: Höylä S. (2012). Youth Work in Finland.; Alliansai. (2012).; Finnish Youth Center. (2012).; Finnish Youth Clubs' Association. (2012)

(2)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 업무와 청소년 정책영역

핀란드 청소년정책의 실패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보아야 제대로 파악된다. 중앙정부는 정책 기획 및 평가 기능을 담당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자체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정책을 실행한다. 즉 청소년정책에 대한 책임이 지방자치단체에 있다.

핀란드에는 15개의 큰 도시를 포함하여 336개의 지자체가 있다.¹⁸⁾ 2009년 지자체의 전체 공공비용은 329억 유로에 이르며 1억5천 유로인 대략 0.6%가 청소년활동에 할당된다. 그러나 아동과 청소년에 전달되는 재정은 교육과 훈련, 보건, 스포츠, 문화, 아동복지, 주거비용을 포함하여 지자체 예산의 35-45%에 이른다. 청소년위원회가 있는 지자체는 12 곳이나 청소년 위원회가 따로 없는 다른 지역 당국은 스포츠, 문화, 교육, 여가, 복지문제와 함께 공동 위원회에서 청소년 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청소년 사업을 통해 핀란드의 청소년 정책영역을 살펴보면 <표 V-16>과 같다.

18) 이들 가운데 핀란드와 스웨덴어를 함께 국어를 사용하는 44개의 행정도시와 스웨덴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19개의 지자체가 있다. 3개의 북부지자체는 사미어를 공식어로 사용하고 있다. 2012년 현재 핀란드 인구는 5.4백만이고 이들 가운데 3.4%가 이민자이며 전체인구의 62%가 대도시에 거주하고 있다. 수도 헬싱키에는 56만 정도가 거주하고 가장 작은 섬인 소튼가(Sottunga)에는 127명이 거주하고 있다. 지자체의 평균 인구는 1만 2천명이다.

표 V-16 정책영역별 핀란드 지자체의 청소년정책사업

정책영역	청소년 사업
청소년 교육	청소년의 교육안내, 청소년의 환경교육
청소년 여가활동	청소년을 위한 시설과 여가 기회, 방과 후 활동 지원, 정보와 상담 서비스, 청소년 협회와 단체지원
청소년 고용	25세 미만의 청년 실업자들을 위하여 직업훈련과 노동실습 청소년 워크숍(Youth Workshop) 워크숍 서비스
국제활동	스포츠와 관련된 국제활동
청소년 참여	청소년위원회, 청소년의회, 온라인 참여 시스템을 통한 시민성 함양, 사회적 권한부여
사회통합	이민자 청소년들을 위한 활동
위기청소년지원	약물중독예방활동

*인용: Finland National Youth Act(72/2006).

지자체의 청소년 활동의 핵심사항은 적극적인 시민성 함양과 사회적 권한부여 뿐만 아니라 약물중독 예방활동, 자녀들의 방과 후 활동, 워크숍 서비스, 이민자 청소년들을 위한 활동들이다. 또한 청소년 법에서는 청소년의 교육안내, 청소년을 위한 시설과 여가 기회, 정보와 상담 서비스, 청소년 협회와 단체들을 위한 지원, 스포츠와 관련된 국제 다문화 청소년 활동, 청소년의 환경교육, 청소년 워크숍 서비스 등을 목표활동 사항으로 명시하고 있다(Finland National Youth Act 72/2006).

(3) 청소년정책 총괄조정 사례

핀란드의 경우, 공식적으로 명시된 법령 등이 없어도 부처 간 대화를 통한 정책조정이 비교적 원활히 수행되고 있다.

고용경제부가 주관하는 청소년보증프로그램(Youth Guarantee Program)에는 교육문화부, 국방부, 내무부 이주담당관, 사회보건복지부, 노동경제부 노동시장담당관, 재정경제부와 같은 타 부처들이 협력하며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또 국제교류센터(Center for International Mobility, CIMO)는 교육부 산하의 단체이기는 하나 유럽연합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 노르딕 장관위원회(Nordic Council of Ministers)에서 재정지원을 받는 독립기구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다. 외무부와 같은 타 부처들과 재원에 대한 협상이 이루어질 때는 교육문화부가 이를 총괄하여 조정하고 있다.

정부	프로그램 실행	평가
청소년 정책 개발 프로그램 (2012-2016)	정부부처들은 프로그램의 운영 및 재정계획과 예산 집행을 담당한다.	청소년분과 자문위원회는 매년 실행된 프로그램에 대해 평가한다.
교육부가 이끄는 공식실무그룹에 의해 프로그램을 준비	실무그룹은 프로그램 실행을 관장하고 필요에 따라 정부에 시정계획서를 작성한다.	자녀를 위한 옴부즈맨들은 18세 이하의 청소년들을 위해 실행된 프로그램을 평가할 수 있다.
청소년분과 자문위원회는 프로그램의 한 부분으로서 포함될 수 있는 안건들을 제안할 수 있다.		* 의회에 보고 정부는 의회에 프로그램에 관한 청소년정책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자녀를 위한 옴부즈맨은 프로그램의 제안서를 작성할 수 있다.		

【그림 V-5】 청소년 정책 운영 구조

*인용: Finnish Ministry of Education & Culture(2006). Youth Work & Youth Policy – Fact Sheet.

핀란드 청소년정책 총괄조정 사례로 국가청소년정책 프로그램 개발사례를 살펴보면 중앙정부는 매 4년 마다 청소년정책의 목표를 설정하고 지역의 국가행정기관과 지자체의 프로그램을 향상시키는 국가 청소년 정책개발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있다. 국가 청소년정책 개발프로그램은 타 부처나 지역, 지방과 연계하여 지자체와 함께 정책을 수행하나 실제로 청소년활동을 담당하는 곳은 지자체이며 모든 결정권은 지자체가 가지고 통합·조정하고 있다. 【그림 V-5】는 국가 청소년 정책 프로그램이 어떻게 조정되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3) 독일¹⁹⁾

(1) 청소년정책의 의미

① 청소년정책 대상의 연령범주

독일청소년정책의 대상연령은 청소년정책이 기반하고 있는 청소년정책 관련법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 대표적 청소년관련법인 아동청소년지원법(Kinder und Jugendhilfe Gesetz), 청소년보호법(Jugendschutzgesetz), 청소년노동보호법(Jugendarbeitsschutzgesetz)에 따른 연령범주를 살펴보면 <표 V-17>과 같다.

표 V-17 독일 청소년정책 대상의 연령범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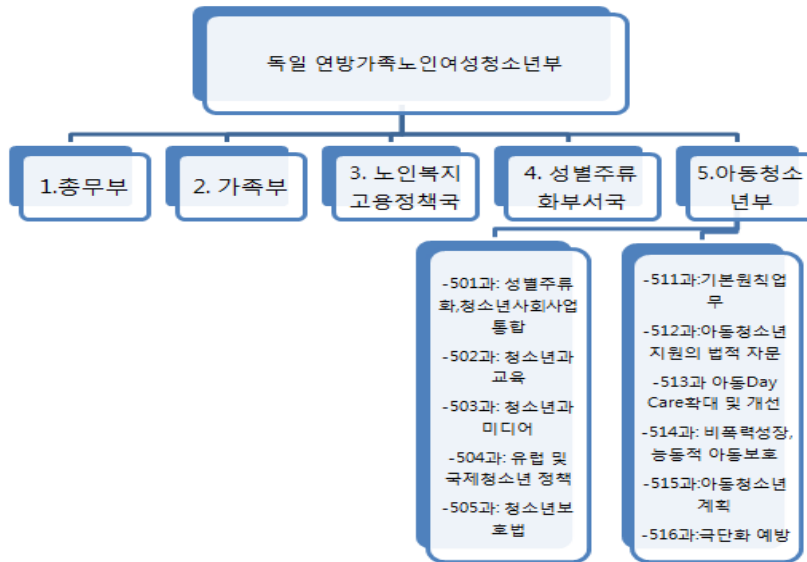
구분	해당법	연령범주
1	아동청소년지원법 (Kinder und Jugendhilfe Gesetz)	• 아동: 14세 미만 • 청소년: 27세미만 • 청소년(Jugend): 14세~18세 미만 • 후기 청소년(Junger volljaehriger): 18세~27세미만 ※ 아동청소년지원정책에서는 청소년이 청소년과 후기청소년으로 재분류되어 차별화된 정책대상이 되고 있음
2	청소년보호법 (Jugendschutzgesetz)	• 청소년: 14세~18세 미만(아동: 14세 미만)
3	청소년노동보호법 (Jugendarbeitsschutzgesetz)	• 청소년: 15세~18세 미만(아동: 15세 미만)

*인용: Bundesministerium der Justiz, SGB 8,

② 청소년정책 주무 행정부처와 관련법령

청소년사업을 담당하는 중앙행정부는 연방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Bundesministerium fuer Familie, Senioren, Frauen und Jugend 이하 BMFSFJ)이다(BMFSFJ, 2012c). 장관과 사무처장 하에 5개의 부서가 있는데, 청소년정책은 아동과 청소년부(Kinder und Jugend)에 속해있다. 아동과 청소년부서에서는 청소년의 기회균등과 통합, 청소년 성장, 국제청소년사업, 청소년과 매체, 청소년보호법, 극우 및 극좌파 예방, 아동과 청소년지원 권리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19) 박철웅 교수(백석대학교 사회복지학부)가 집필하였음. 박철웅(2012). 독일의 청소년정책과 총괄조정현황. 한국청소년정책 연구원 세미나 자료집(12-s27): 청소년정책 총괄조정 현황 및 관련정책 동향 분석. pp.129-148에 게재되었음.



【그림 V-6】 독일 청소년정책 주무 행정부서

*인용: Bundesministerium fuer Familie, Senioren, Frauen und Jugend(BMFSFJ) (2012c), <http://www.bmfsfj.de>.

표 V-18 독일의 청소년정책 관계법령 및 정책문서

구분	해당법	내용
1	사회법 제8장(아동청소년지원법)	• 방과 후 청소년교육 • 스포츠, 놀이와 공동체 활동관련 청소년사업 • 노동 · 학교 · 가족연계 청소년사업 • 국제 청소년사업 • 아동과 청소년휴양 • 청소년상담
2	연방 아동청소년계획(KJP)	• 청소년들이 개성을 발휘하고 권리를 인지하도록 정책적 실행경로 제시 • 사회적 인프라 형성을 위한 환경조성 • 남녀 성적 평등의 실현 • 국경 없는 이해와 관용, 세대 간 대화개선 및 사회통합 기여, 사회통합
3	청소년보호법 청소년매체보호 국가협약 청소년노동법 아동동보호에 대한 규약	• 유해환경으로 부터의 차단을 위한 법적 보호 • 청소년의 건강한 발달과정에 개입하여 청소년의 문제해결능력강화, 위험대처 능력촉진 등을 위한 교육적 보호 • 산업구조, 도시계획, 주택건설, 도로건설, 놀이시설 계획 등에 참여하여 유해환경을 감소하고 삶의 여건을 개선하는 구조적 보호

*출처: Bundesministerium der Justiz, SGB 8.; Bundesministerium des Innern(2012a), Richtlinien ueber die Gewaehrung von Zusuessen und Leistungen zur Foerderung der Kinder- und Jugendhilfe durch den Kinder- und Jugendplan des Bundes(KJP); 윤철경 외 (2005), 청소년보호정책 실태와 발전방안 (연구보고 05-10), pp.197-206에서 재인용.

독일 청소년정책의 법률적 근거는 사회법 제8장 즉 아동청소년지원법이며, 제11조 청소년정책의 6대 주요영역은 <표 V-18>과 같다. 사회법 제8장과 더불어 또 다른 청소년정책의 중요한 제도적 근거는 연방 아동청소년계획이다. 이 계획은 사회법 제8장에 근거하여 아동청소년 지원을 위한 실천행동을 조성하고 아동청소년 지원의 새로운 길(Neue Wege)을 제시하고 있다.

③ 주무 행정부처가 담당하는 정책영역과 사업내용

주무행정부처는 법령을 근거로 20 여개의 청소년 정책사업을 지원한다.

표 V-19 독일 주무 행정부처의 청소년정책 영역과 사업내용²⁰⁾

구분	정책영역	사업내용
1	청소년 교육	• 사회적 교육, 미디어역량 증진
2	청소년 고용	• 직업능력함양,
3	청소년 여가활동	• 스포츠, 문화교육, • 청소년단체
4	청소년 국제활동	• 국제청소년사업, 국제연수프로그램
5	청소년 참여	• 정치교육
6	청소년 사회통합	• 청소년 사회사업, 민간사회복지사업, 성 평등화, 장애청소년, 이주청소년 통합, 사회적응의 개발과 기회제공
7	가족지원	• 청소년과 가족지원,
8	위기청소년지원	• 아동청소년 보호 • 아동청소년지원, • 아동청소년지원시설 건립 및 유지

*인용: Bundesministerium des Innern (2012a), Richtlinien ueber die Gewaehrung von Zusuessen und Leistungen zur Foerderung der Kinder- und Jugendhilfe durch den Kinder- und Jugendplan des Bundes(KJP), Gemeinsames Ministerialblatt.

20) 독일은 사회법 외 청소년보호법을 별도로 가지고 있어 청소년활동, 복지(사회사업 포함) 외에 청소년보호를 포함하는 광범위한 정책영역을 갖고 있음.

(2) 주무부처 외 청소년관련 정책의 수행체계

표 V-20 독일 주무부처 외 청소년정책의 수행체계

구분	기관	세부사업
중앙	BMFSFJ, 의회	- 장관 밑에 두명의 사무처장 있음. 의회담당 사무처장은 의회와의 관계 및 대외협력을 조정·활성화하는 임무를 담당함 - 각 당 의원, 청소년정책 대변인들과의 협력을 통해 정책 환경 조성
지방자치단체	주 청소년청	- 주 청소년 지원위원회(자문조직)와 행정부서의 이원구조 - 청소년보호, 청소년사회사업, 주간아동보호, 교육지원, 사회적응, 청소년재판지원, 직업교육지원, 기획과 통계유지관리 등의 업무수행
	시단위 청소년청	- 인구 4만명 이상 시에 시 청소년청을 둠. - 가족, 여가, 주간아동보호, 상담, 청소년보호, 학교와 직업, 청소년문화사업, 가족위기지원, 재정지원, 입양문제 등의 업무수행
민간협력파트너 ²¹⁾	제1그룹	공공 아동청소년지원기관: 주정부 청소년-가정지원관청들의 사업연합 등으로 구성되는 지자체 대표연합
	제2그룹	민간 및 공공청소년 지원기관의 연대: 아동청소년지원사업공동체
	제3그룹	청소년조합 : 독일청소년연맹, 독일스포츠택소년단, 정치청소년연맹
	제4그룹	아동청소년지원 특수사업단체 : 청소년문화교육단체, 청소년정치교육단체, 청소년사업단체, 청소년사업 종교단체, 유스호스텔연맹

* 인용: Bundesministerium fuer Familie, Senioren, Frauen und Jugend(BMFSFJ)(2012); Muenchen Stadtjugendamt(2012); Bayerische Landesjugendamt(2012); BMFSFJ(2009), Internationale Jugendpolitik des BMFSFJ.

중앙행정 주무부처 외 독일의 청소년정책은 주로 의회, 주정부, 민간 및 공공단체들과의 연계를 통해 추진된다. 독일연방 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에는 두 명의 사무처장(Palamentarischer Staatssekretaer)이 있는데 그 중 의회 담당 사무처장은 의회와의 관계 및 대외협력을 조정·활성화하는 것이 주 임무이다. 대외 정치적 업무를 담당하는 것이다. 의회의 각 당 의원들, 특별히 각 당의 청소년정책 대변인들과의 협력을 통해서 정책의 정치적 환경을 조성한다.

주 정부차원에서 청소년정책을 추진하는 기관은 주청소년청이 있다. 자문조직인 주청소년지원위원회와 행정부서 등 이원조직으로 구성되어 있다.

지방자치단체단위의 청소년청이 있다. 청소년정책의 협력기관으로서 청소년사업에 종사하는 공공 및 민간 수행기관들이 있는데 이들은 국가적 과제나 공적 목적의 과제를 수행하는데 초점을 맞춘다. 회원단체들은 크게 〈표 V-20〉과 같이 4종류의 그룹으로 분류된다.

21) 이 분류는 BMFSFJ의 국제청소년사업협회가 활용하는 기관분류를 기준으로 한 것임(BMFSFJ, 2009).

(3) 청소년정책 총괄조정 현황

독일은 기존의 청소년정책과 제도들이 청소년과 그들을 둘러싼 환경변화에 따라가지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혼란과 문제에 대한 반성으로 ‘독자적 청소년정책(Eigenstaendige Jugendpolitik)’과 ‘청소년을 위한 연합(Eine Allianz fuer Jugend)’이라는 두 가지 슬로건을 내걸고 청소년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 이들은 용어상 서로 상반성을 띠는 것 같으나, 정책적으로 상호보완적이다. 독자성과 연합이라는 두 가지 정책방향을 통해 청소년정책에 대한 총괄조정을 위한 노력을 보여주고 있다.

표 V-21 독일 청소년정책의 총괄조정 현황

구분	정책방향	구체적 정책
1	독자적 청소년정책	• 보편 청소년정책: 모든 청소년을 대상 • 국가와 사회발전을 위한 미래정책으로서 청소년정책 인식 • 청소년을 위한 기회균등정책 • 미래 삶(교육, 직업, 가정)에 대한 기대와 확신을 주는 정책 • 청소년의 욕구(수요)에 부합되는 정책형성
2	연합적 청소년정책	• 청소년 중심 사회체계형성 정책 • 대화정책: 대화적 참여적 접근 지향 • 정치적 공감형성 정책: 범부처, 범사회적 담론형성을 위해 대화적 참여적 접근필요. • 연방가족노인청소년부 내 모든 청소년관련 분야의 클러스터화, “청소년을 위한 연합센터” 설치, 주제별 포럼, 국제적 협업, 청소년을 위한 범부처적 연합체 결성.

*인용: Bundesministerium fuer Familie, Senioren, Frauen und Jugend(BMFSFJ), (2012b), Eine Allianz fuer Jugend, Eckpunktepapier: Entwicklung Perspektiven einer Eigenstaendigen Jugendpolitik.

〈표 V-21〉에 제시된 바와 같이 독자적 청소년정책은 청소년정책을 타 부처에 소속된 부수적 정책으로 보지 않고 독자적인 영역으로 명확히 인정하고 청소년을 중심에 둔 정책을 기획하고 있다. 이러한 독자적 청소년정책은 주변 환경과 타 분야에 대한 종합적 파악과 조화로운 협조가 이루어질 때 성공할 수 있다. 따라서 타 분야와의 연합 또는 연합체 구성을 위한 노력도 함께 추진되고 있다. 지역사회의 각종 청소년관련 단체와 계획을 활성화시키는 방법으로 청소년정책 전반에 대한 총괄조정을 시도하고 있다.

사회법(SGBIII)에 근거한 청소년지원위원회를 재구성화시키고, 정책조정기구로서 청소년지원계획을 강화한다. 이미 지역사회에 존재하고 있던 지역청소년연합체들을 질적으로 개선하고, 광역자치단

체 차원의 보고서를 통해 청소년정책의 수요를 파악하고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또한 연합체에 대한 청소년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인터넷 참여장치를 마련하고, 구조적 연합뿐만 아니라 전문적인 주제를 통해 보다 실질적인 연합체제를 형성하려는 노력도 이루어지고 있다.

4) 영국²²⁾

(1) 청소년정책의 의미

① 청소년정책 대상의 연령범주

표 V-22 영국 청소년정책 대상의 연령범주

구분	해당법	연령범주
1	청소년정책보고서(2010, 유럽의회 제출)	13-30세
2	교육법, 교육과 감사에 관한 법, 아동법	13-19세
3	복지와 활동을 강조하는 법과 정책	16-25세/ 0-19세/ 18세 미만/14-19세/ 18-24세

*인용: Education Act 1996; Education and Inspection Act 2006; Children Act 2004: DFES, (2003), Every Child Matters: DFES, (2006), Youth Matters: DCFS, (2008), The Children's Plan: One Year On.

영국의 청소년 연령범주는 매우 다양하다. Child에 아동과 청소년이 모두 포함되기도 하고, 때로는 초등학생만 포함되기도 하여 정책에서 청소년연령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맥락을 반드시 파악해야 한다. <표 V-22>에서 보듯이 청소년정책 보고서에서는 청소년을 13-30세로 확장하여 보고 있으며, 학교교육과 관련해서는 중등학교 재학 중인 연령으로 13-19세로 보고 있다. 반면 청소년 복지와 활동에 관한 정책이나 법은 학교 밖 청소년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 학교에서 보다 더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청소년자원봉사를 강조했던 National Youth Volunteering Programme 같은 경우는 청소년의 연령을 16세에서 25세로 보았다. 가장 대표적인 청소년정책이라 할 수 있는 Every Child Matters나

22) 박선영 교수(동서대학교 사회복지학부)가 집필하였음. 박선영 (2012). 영국의 청소년정책과 총괄조정 현황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세미나자료집(12-s27): 청소년정책 총괄조정 현황 및 관련정책 동향 분석. pp.155-175에 게재됨.

Youth Matters 정책에서의 정책 대상 청소년은 0세부터 19세까지로 그 범위가 가장 넓기도 하다. 반면 위기 청소년 정책인 Targeted Youth Support에서는 청소년의 연령을 18세 미만으로 제한하고 있다. 반면 2008년 발표된 Children's Plan에서는 14세에서 19세를 청소년정책 대상으로 보았다.

청소년의 경제적 자립과 진로 준비를 목표로 하는 New Deal for Young People 정책에서는 18세에서 24세를 대상으로 했다. 그러나 사법부에서는 청소년의 범죄를 엄중하게 처벌하고 예방하기 위하여 18세를 기준으로 한다. 미혼청소년 정책에서도 18세 미만의 청소년이 집중 대상이다. 그러나 칼과 같은 무기소지에 있어서 처벌대상 청소년의 나이는 13세에서 24세이기도 하다. 가출청소년의 경우는 16세 미만을 가출청소년이라 정의하고 있는데 이는 16세 이상의 청소년이 영국에서는 독립하여 혼자 살 수 있는 법적 연령이 되기 때문에 16세 이상의 청소년을 가출청소년이라고 보지 않는다. 니트족(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 청소년의 연령은 16세에서 18세에 해당된다. 이처럼 청소년 연령은 정책목적과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다.

② 청소년정책 주무 행정부처와 관련 정책

영국에는 청소년전담부처가 없다. 다만 주요 청소년정책은 현재 교육부(Department for Education)에서 집행하고 있으므로 교육부가 청소년정책 주무부처라고 할 수 있다. 1996년 노동당정부 집권 이래 청소년정책을 주도적으로 담당해 온 부처는 감사원, 내무부, 내각부내 사회배제부, 교육고용부, 재무부, 교육기술부, 국회, 재무부내 아동가족학교부 등으로 끊임없이 변해왔다(Turnbull & Spence, 2011 : 944) 내각부의 사회배제부, 심지어 재무부 등 다양한 부처가 청소년정책을 제안할 수 있지만 각 부처 간의 행정적, 재정적 중복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Modernising Government라는 백서를 통해 모든 정책을 공유하면서 개별 부처가 각기 다른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표 V-23 참조).

표 V-23 영국의 청소년정책 주무행정부처와 관련 정책

구분	해당부처	정책방향	관련 법안 및 문서
노동당정부 (1996-2010)	감사원, 내무부, 내각부(사회배제부), 교육고용부, 재무부, 교육기술부, 국회, 재무부(아동가족학교부) 등으로 바뀌어옴.	- 중점 정책대상은 취약계층, 위기청소년이며 - 그 가족까지 확대하는 통합적 정책 실현. - 세대별 정책 추진	“ Modernizing Government” 백서
보수당 · 자유당 연합정부 (2010 이후)	교육부	- 세대간 융합정책 추진 - 지방자치단체에 사업과 권한 이양	“Big Society” 정책비전

*인용: Cabinet Office(1999), Modernising Government, The Stationery Office.; Cabinet Office(2012), <http://www.cabinetoffice.gov.uk/>

2010년부터는 보수당-자유당 연합정부 하에서는 교육부(Department for Education)를 중심으로 청소년정책이 입안 · 집행되고 있다. 연합정부는 ‘Big Society’라는 정책비전을 제시하면서 사회의 구성원들이 협력을 통해 위기를 극복하고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의 발전을 도모하자는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Cabinet Office, 2012).

이 비전은 중앙정부차원에서 행해지던 많은 사업과 권한들을 지방정부로 이양하는 등 그 어느 때보다 지방자치제를 활성화하고 있다. 그 결과 세대를 아우르는 세대 간 프로그램은 지자체가 많은 권한을 부여하여 지방자치는 활성화할 수 있겠지만 재정과 자원의 축소로 특정세대의 희생을 강요하게 되어 오히려 세대 간 갈등을 촉발 할 수도 있다. 연합정부는 기존의 노동당의 세대별 정책과 달리 전 세대를 아우르는 세대 간 융합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현 정부가 노동당의 청소년정책을 백지화하거나 축소하고 있지는 않지만 기존의 정책들을 전 세대를 아우르는 쪽으로 수정하고 있으며 신규 정책은 세대 간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③ 주무 행정부처가 담당하는 정책영역과 사업내용

교육부는 종전 아동학교가족부(Department for Children Schools and Families)의 기능과 명칭을 변경한 것으로 교육과 학업성취를 강조하고 있다. 교육부는 내각부와 연계하여 청소년의

사회적 배제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사회적 배제와 관련하여 교육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청소년정책의 특징은 <표 V-24>와 같다.

첫째, 교육부는 정책대상을 세분화하여, 청소년과 학교, 그리고 16세 이상의 청소년으로 나누었다. 특히 모든 청소년에게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과 여러 이유로 재학 중이지 않은 청소년을 구분하여 지원할 수 있는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둘째, 의무교육이 종료되는 16세 이상의 청소년이 직업을 갖거나 아니면 대학진학을 위해 상급고등학교에 진학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아예 16세 이상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학습과 상급학교 정책과 진로정책을 별도로 가지고 있다. 이 정책의 주요내용에는 직업교육과 상급학교에의 진학을 위한 교육이 모두 포함되어 있으며 2011년 이후 이들을 대상으로는 관련 자격증 취득을 위한 인턴제도가 강화되었다(박선영, 2011).

표 V-24 영국 교육부의 청소년 관련 정책 개요

정책 영역	아동과 가족	청소년	조기교육과 육아	학교	16세 이후의 학습	고등교육과 대학
세부 정책 주제	•입양과 양육 •통합 업무 •아동 서비스 •평등과 다양성 •건강과 장애 •보호 아동 •사회적 보호 •보호자와 가족 •아동 보호 •생애초기 지원	•NEET(니트족) •알코올, 약물남용 •10대 임신과 성 •청소년 범죄 •청소년 활동과 자원봉사 •사회통합 •위기행동 •정보, 상담 지원	•읽기, 쓰기, 셈하기 기술 개발 •생애초기와 아동보호 업무 •평등과 다양성 •재정지원 •놀이방, 유아원, 유치원 •학교밖 아동 보호 •학업 성취도와 평가 •특수교육 •슈어 스타트(Sure Start) •복지와 문제행동	•학교 선택 •교육단계 •교과목 •평등성과 다양성 •extra-curricular activities •시설과 환경 •학교운영과 재정 •학업성취도&평가 •특수교육 •학부모, 지역사회, 산업체 연계 •학생 수 •학생지원, 복지 •문제행동 •교사와 업무 •교수학습 •학교와 대안학교의 유형	•입학허가와 졸업 •인턴십 •평등과 다양성 •교육과정과 자격증 •학교운영과 재정 •강사와 학교 직원 •학업성취도&평가 •상급고등학교 •전문대학 •기술과 취업 •특수교육 •학생지원과 복지 •교수학습	•입학허가와 졸업 •교육과정&자격증 •평등과 다양성 •고등교육 재정 •학교운영과 재정 •강사와 교직원 •기관 및 연구소 •학업성취도&평가 •연구와 기업 •기술과 고용 •특수교육 •학비 •학생지원과 복지 •교수학습

*인용: Department for Education(2012), <http://www.education.gov.uk/>

(2) 주무부처 외 청소년 정책의 수행체계

1999년 노동당은 'Modernizing Government' 라는 백서를 발표하여 공공정책 수립과 정책전달체계에 대한 개혁을 도모하였다. 노동당정부는 정책이 일관성 있고 효과적으로 전달되도록 하기 위하여 무엇보다 부처 간 협력을 강조하였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협력을 요구하였다. 특히 범죄나 사회적 배제 같은 문제들은 부처 간의 협력과 공동대처 없이는 해결이 어렵다고 보았다(Cabinet Office, 1999).

청소년정책 전담부처는 없지만 교육부가 주무부처라고 본다면 교육부 외 Ofsted(Office for Standards in Education, Children's Services and Skills: 교육, 아동 서비스 기준국), 내각사무국 내 사회배제과, 내무부, 보건부 등이 주무부처 외 청소년정책 관련 부처들이다.

(3) 청소년정책 총괄조정 사례

영국 청소년정책의 총괄조정사례로는 내각부 내의 Strategy Unit의 정책평가 사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내각부의 Strategy Unit는 여러 부처에서 도모하는 연합정책을 평가한다. 재무부가 부처 간 연합정책의 실시 정도에 따라 예산지원을 결정하기 때문에 각 부처는 효율적이고 낭비가 없는 정책수립과 집행을 위해 협력하게 된다(Strategic Unit, 2012)

Strategy Unit은 프로젝트별 정책평가를 실시한다. 부처들의 백서, 녹서, 정책 자료 등 다양한 문서들을 평가하며 관련 자료를 공개한다. 전담 공무원의 전문가를 초빙하여 정책을 평가하고 이후 평가보고서를 공개한다. 정책평가에 적용되는 원칙은 다음과 같다.

- 전략우선 원칙(strategic focus: 정책의 시급성보다 중요성 평가)
- 엄격한 분석(analytic rigor: 충분한 근거와 원칙에 따른 분석)
- 창의성 원칙(creativity: 창의적이고 새로운 정책아이디어 중시)
- 부처간 협력원칙(cross-departmentalism: 관련부처 간의 협력정책 요구)

Strategy Unit는 이상과 같은 평가원칙을 반영하여 평가한 후 그 결과를 <표 V-25>와 같이 5단계로 제시한다.

표 V-25 정책 평가 결과

평가결과	설명
Strong	- 장기적으로도 정책 실현 가능성이 매우 높음 - 정책에 대한 소개와 개선과 중장기적으로 변화에의 분명한 의지가 표현됨
Well placed	- 이미 진행 중인 정책이나 계획된 정책 실현을 위해 필요한 것들이 잘 표현됨 - 중장기적으로 개선이 가능한 것인가가 표현됨
Development area	- 해당 부처가 정책 수행에 있어 중요한 문제점을 잘 파악하고 있음 - 중장기적인 정책 수행과 개선을 위해 요구되는 것들을 해결할 가능성이 있음
Urgent development area	- 정책 수행에 있어 급하게 해결되어야 할 과제와 문제가 있음 - 효과적인 정책수행 지원을 위한 부차적인 행위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제시되어 있지 않음 - 중장기적 계획이 제시되지 않음
Serious concern	- 정책수행능력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 - 정책수행을 위한 개입과 개선이 필요함 - 중장기적 계획에 문제가 있음

*인용: House of Common(2007). Governing the future: Second Report of Season 2006-07. Public Administration Select Committee.

5) 4개국 청소년정책 비교 및 시사점

(1) 4개국 청소년정책 및 총괄조정 특성 비교²³⁾

스웨덴, 핀란드, 독일, 영국 등 유럽 4개국의 청소년정책과 총괄조정의 특징을 요약한 결과는 <표 V-26>과 같다.

23) 강현주 부연구위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집필하였음.

표 V-26

4개국 청소년정책과 총괄조정 특성 비교

구분		스웨덴	핀란드	독일	영국
법·정책문서	법	●청소년 정책법안	●핀란드 청소년 법	●사회법 제8장(아동청소년지원법) ●청소년보호법 등	●판례, 국제조약
	정책문서	●정책백서 (regeringens skrivelser) ●청소년정책 위원회의 정책지침서	●국가청소년프로그램 개발계획	●KJP(연방아동청소년 계획)	●백서 (Modernising Government) ●녹서 등
청소년정책의 특성	청소년상	자원	자원	자원이면서 문제	문제
	청소년 연령범주	●16-24세에서 13-25세, 13-29세로 연장되어 있음.	●법적으로 29세 이하, 실제로 7-25세를 대상으로 하며 13-17세에 집중함	●청소년은 14세-18세 미만(18세-27세 미만은 법상 후기청소년)	●13-30세를 포함하며 학교정책에서는 주로 13-19세, 기타복지정책에서는 16-25세/0-19세/18세 미만/14-19세/18-24세 등 정책목표에 따라 다양함.
	주무 행정부처	●교육부 내 통합평등부(4개 영역 총괄) ●통합평등부 산하 청소년정책 위원회(실무부처, 지침서에 따라 정책 집행)	●핀란드 교육문화부	●독일 연방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BMFSFJ)	●전담부처 없음 ●주도적 부처가 다양하게 존재해 왔으나 현재는 교육부
	정책영역 및 주요사업	●교육 ●노동 및 경제적 자립 ●건강 및 위험 ●문화 및 여가	●교육 ●청소년시설과 여가 ●정보와 상담서비스 ●청소년협회, 단체 지원 ●스포츠 및 국제 다문화 청소년활동 ●청소년환경교육 ●위기청소년 직업훈련(청소년워크숍)	●청소년교육 ●청소년고용 ●청소년여가활동 ●청소년국제활동 ●청소년참여 ●청소년사회통합 ●가족지원 ●위기청소년지원 ●유해환경 규제 등 청소년보호 ●청소년사회사업	●니트족 ●약물, 성, 범죄 등 위기청소년 보호 ●청소년활동과 자원봉사 ●정보 및 상담 지원
총괄 조정의 특성		●통합평등부 장관 명의로 정부산하기관에 지침서를 하달하여 청소년정책 통계 발간	●고용경제부는 청소년보증프로그램, 교육문화부는 국제교류센터 총괄조정 등 부처간 협의에 의해 유연하게 총괄조정이 됨. ●교육문화부는 국가청소년정책 프로그램을 타부처, 지방자치단체, 청소년단체 등과	●타부처와의 총괄조정보다는 청소년정책의 독자성 강화를 통해 청소년정책을 사회의 중심으로 이끌어내고 이를 위해 청소년분야의 연합을 추구함.	●각 부처 연합정책에 대해 정책평가 전담기구(Strategy Unit)가 평가하여 총괄조정

		협력하여 개발 ●부문간 협력에 대해서는 지침서를 제공하여 지자체가 이를 주도하도록하나 현재 잘 안되고 있음.		
총괄 조정 수단	●정부유관기관에게 청소년관련 통계 및 지표 산출을 의무화하는 등 정보관리	●지방자치단체에 지침서 제공하여 부문간 협력 유도 ●청소년지표 산출을 준비하고 있음.	●총괄조정엔 관심이 없음.	●정책평가

먼저,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이미지를 볼 때 스웨덴과 핀란드는 청소년을 ‘자원으로 보는 보편주의 정책이 강하다. 독일은 ‘자원’과 ‘문제’ 양 측면을 포괄하는 보호정책을 갖고 있으며 청소년의 여러 측면에 대한 사회적 대응을 위해 청소년정책의 범위가 매우 광범위한 것이 특징이다. 이에 비해 영국은 청소년을 ‘문제’로 바라보며 취약계층, 위기청소년의 사회적 배제를 예방하고 사회통합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실시하고 있으며 청소년정책의 범위가 좁다.

둘째, 청소년의 연령범주는 스웨덴은 16~24세에서 위 아래로 점점 연장되어 13~29세를 포괄하게 되었으며 청년실업이나 주택난, 임금 등의 청년정책에 포함되었다. 핀란드의 경우, 청소년법 상 29세 이하를 의미하지만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는 7~25세를 대상으로 정책을 시행하고 있고 실제로 13~17세에 집중하여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독일은 아동과 청소년의 연령을 구분하여 14세미만은 아동(청소년노동보호법에서는 15세 미만), 청소년은 14세에서 18세미만(18세-27세미만은 아동청소년지원법 상 청소년이며 후기청소년으로 분류됨)으로 범주화하고 있다. 독일은 0세부터 27세 미만까지를 사회법 8장의 동일한 법에서 다루면서 연령별 연계를 이루고 있는 점이 특징이다. 이렇게 볼 때 4개국은 법적으로는 청소년기가 20대 후반까지 연장되지만 실제로 중등학교 시기에 집중됨을 알 수 있다.

셋째, 주무행정부처는 스웨덴은 교육부내 통합평등부, 핀란드는 교육문화부내 문화체육청소년부, 독일은 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이며 영국은 없지만 교육부에서 관련 업무를 관장하고 있다.

넷째, 이들이 관장하는 업무를 살펴보면 스웨덴의 경우 교육 및 고용, 건강, 문화여가활동을 모든 청소년을 위한 활동 지원이 주요 업무이며 핀란드 역시 교육, 여가 및 다양한 청소년활동 및 단체지원, 환경교육, 직업훈련 등 모든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보편적 서비스가 주요 업무이다. 그러나 독일의 경우, 이러한 업무와 더불어 아동보육업무, 청소년사회사업, 청소년보호정책(유해환경 규제 등), 아동청소년 양육지원을 위한 보호자 상담 및 가족지원 업무 등 매우 광범위한 사업영역을

가지고 있다. 이에 비해 영국은 청소년정책의 영역이 니트족이나 약물, 성, 범죄 등 위기청소년의 사회통합을 위한 지원 사업에 국한된 경향을 보였다.

다섯째, 총괄조정 특징을 살펴보면 스웨덴은 통합평등부 장관이 정부유관기관에 지침서를 하달하여 청소년관련통계와 지표산출을 의무화함으로써 청소년에 대한 정보관리를 하고 있다. 스웨덴 통합평등부가 산출하는 청소년고용, 범죄, 주거, 학비, 실업수당, 대학진학, 경제적 자립, 채무, 수입 및 세금납부, 건강, 문화여가활동, 중고등학교 학업, 청소년단체 재정보조, 청소년들의 선거참여 등과 같은 청소년생활의 전 영역을 알 수 있는 광범위한 정보가 수집되고 있다.

핀란드의 경우, 중앙부처간 협력은 공식적 제도보다는 부처 간 협의를 통해 비교적 유연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청소년 주무부처는 현재 청소년지표 산출을 준비 중인 단계이다. 청소년정책의 실행은 지방자치단체가 거의 대부분을 담당하고 있는데 지방정부의 부문 간 협력을 유도하기 위해 지침서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지만 아직 잘 작동되고 있지는 않다.

독일은 청소년정책 고유영역, 즉 부문화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진 국가이다. 그래서인지 청소년정책에 대한 총괄조정에 대해서는 관심이 별로 없으며 현재로서는 청소년정책의 독자성 강화와 연합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영국의 경우, 청소년정책의 부문화 수준이 가장 낮은 국가 그룹에 속한다. 위기청소년 지원과 사회통합이 청소년정책의 고유영역으로 설정되어 있으며 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여러 부처의 개입이 요구되고 있다. 정부평가전담기관이 이를 평가하게 함으로써 청소년정책의 총괄조정을 촉진하고 있다.

(2) 시사점 ²⁴⁾

외국의 사례로부터 한국에 필요한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한국청소년정책 상황이 더불어 논의되어야 한다. 이상 각국의 청소년정책과 총괄조정의 특징을 한국과 비교해보면 한국청소년정책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진단할 수 있다.

첫째, 한국은 청소년기본법 등 형식적인 법제를 잘 갖추고 있는 국가이다. 의원내각제인 유럽 국가들은 법제가 갖추어지지 않았다하더라도 의회에서 채택·예산을 편성한 정책은 실행이 가능한데 반해 한국은 법제가 갖추어졌다하더라도 대통령과 행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없다면 추진이 어렵다는

24) 윤철경 선임연구위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집필하였음.

차이가 있다.

둘째, 한국의 청소년연령범주는 9세~24세로 유럽 4개국에 비해 연령범위가 넓은 편이나 실제로는 초중고 학생을 정책대상으로 하고 있어 앞의 3개국과 유사하다. 독일이 사회법에 청소년에 대한 규정을 통합하고 있는데 반해 한국은 아동복지법과 청소년기본법이라는 서로 다른 법에서 동일한 대상으로 놓고 연령범위를 다르게 규정함으로써 혼선이 발생하는 것을 비교해 볼 수 있다.²⁵⁾

셋째, 한국의 청소년행정 주무부처는 독일보다는 관장업무의 범위가 좁지만 나머지 국가에 비해서는 관장업무 범위가 넓은 편이다. 한국에서는 독일의 청소년 담당부처의 관장업무 중 아동보육, 청소년 사회사업은 보건복지부에서, 가족지원 및 상담업무 등은 여성가족부 가족정책 담당부서에서 관장하고 있다. 또한 스웨덴이나 핀란드의 청소년 담당부처는 청소년활동 분야만 관장하고 있는데 한국의 청소년담당부처는 청소년활동과 보호, 그리고 작은 규모이기는 하지만 복지업무까지 관장하고 있다. 한국은 청소년정책대상 연령범위도 넓은 편이고 활동, 복지, 보호 등 관장하는 정책영역도 넓은 편이어서 상대적으로 청소년예산은 특정대상에 집중되기 어렵다. 따라서 청소년 개인의 입장에서 받는 정책수혜는 작을 수 있다.

넷째, 총괄조정수단으로 스웨덴은 청소년통계 산출, 핀란드는 부처 간 협의 조정, 영국은 정책평가를 활용하고 있다. 관장업무의 범위가 넓은 독일은 총괄조정에 대한 관심이 적다. 부처 간 협의조정이라는 연성적 총괄조정수단은 한국의 경직된 조직문화에서는 성공가능성이 낮다. 따라서 한국이 도입할 수 있는 총괄조정수단은 스웨덴의 청소년통계 및 지표산출 작업, 영국의 정책평가기준 등 정보관리와 관련된 것으로 아직 정보관리가 미흡한 수준에 있는 한국청소년정책에 유용할 것이다.

이상과 같은 외국사례 분석을 통해 도출한 한국청소년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관련 각종 통계 및 지표의 산출이 필요하다.

스웨덴은 2006년 이후 통계청의 자료 뿐만이 아니라 유관기관에서 청소년 관련 각종 통계를 제공받고 있다. 청소년의 삶의 질, 복지, 건강, 교육, 정치적 참여, 체육 및 문화 활동, 노동, 실업, 범죄율, 질병율 등 다양한 정보를 통계청에서 제공할 수 없기 때문에 유관기관에서 책임지고 청소년 관련 자료를 산출해 정부에 제공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 같은 청소년지표에 대해 부정적인 통계치를 보여줄 때 정부는 유관기관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정책에 적극 반영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청소년의 학업성취도가 떨어질 때 중앙교육청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지침서를 하달하여 학업성취도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한다. 청소년통계와 정책이

25) 아동복지법상 아동연령(18세 미만)과 청소년기본법 상 청소년연령(9세~24세) 규정을 달리하면서 9세~18세미만 연령집단은 연령적으로 중복되며 사회적으로는 아동과 청소년이라는 법적 용어의 혼선이 발생하고 있음.

따로 작동하게 되면 실질적인 정책변화를 유도하는 것이 쉽지 않다.

둘째, 청소년예산에 대한 정확한 예산항목과 규모를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스웨덴 청소년 정책의 특징을 보면, 정부예산에 따라 청소년 예산 항목이 포함되어 있어 정확한 예산규모를 알 수 있고, 어떻게 집행되어야 하는지 지침서를 통해 하달되기 때문에 정책평가도 비교적 쉽게 할 수 있게 된다. 예산의 책정과 집행 그리고 평가 및 감독 기능이 유기적으로 이루어질 때 청소년 정책이 보다 구체적으로 실천되는지 알 수 있게 됨으로 청소년예산에 대한 개념정의와 더불어 산출기준을 작성하여 타 부처와 공유하여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청소년정책 총괄조정기구가 필요하다. 한국에서는 영국처럼 부처 간 협력을 단시일 내 이루어내기도 어렵다. 핀란드처럼 부처 간 협의조정도 어렵다. 청소년정책의 수립과 실시를 총괄조정하고, 적절한 예산과 인력을 배치하여 청소년정책이 의도하는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하는 총괄조정기구가 필요하다. 스웨덴은 통합평등부 산하에 ‘청소년정책위원회’를 두고 장관명의로 정책지침서를 지방과 기타 관련기관에 하달하여 통계청 외에도 여러 유관기관에서 청소년통계를 산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총괄조정기구가 실질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이를 지원할 실무조직이 또한 필요함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넷째, 총괄조정수단으로 정책평가제를 도입해야 한다. 영국의 정책평가기구 Strategy Unit 이 총괄조정 주요 수단이 되었다. 청소년정책 총괄조정기관이 범부처 청소년관련정책을 평가하도록 하는 기능의 도입이 필요하다. 이제까지 여성가족부의 청소년정책 관계기관 협의회가 청소년정책 총괄조정기구로서 역할을 다하지 못한 것은 다른 정부기관의 협력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이것은 청소년정책 관계기관 협의회의 힘이 타부처 청소년관련정책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다. 청소년정책 총괄조정 수단으로 범부처 청소년정책에 대한 정책평가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부처 간에 수평적 업무분담이 이루어져야 한다. 스웨덴의 경우 통합평등부의 관장사무가 많지 않았다. 그러므로 통합평등부는 타부처에 대해 강력한 통합기능을 무기로 정책지침서에 의거 청소년업무 총괄조정기능을 수행하였다. 한국의 경우, 청소년정책 주무부처의 업무가 독일에 비해서는 적은 편이지만 나머지 3개 국가에 비해서는 많은 편이다. 청소년정책의 총괄조정을 위해서는 청소년 주무부처와 타 부처의 업무영역을 엄격히 구분하여 부처 간의 수평적 분담구조를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

여섯째, 청소년지표와 통계 산출영역을 청소년의 삶을 다면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영역과 지표로 구체화하여야 한다. 현재 청소년백서와 통계청이 제공하는 통계는 청소년의 삶을 다면적으로 이해하기에는 부족하다. 스웨덴의 지표(핀란드도 준비 중임)를 참조하여 청소년고용, 범죄, 주거, 학비,

실업수당, 대학진학, 경제적 자립, 채무, 수입 및 세금납부, 건강, 문화여가활동, 중고등학교 학업, 청소년단체 재정보조, 청소년들의 선거참여 등과 같은 청소년생활의 전 영역을 가시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해야 할 것이다.

제 6 장

요약 및 결론 : 청소년정책 총괄조정기능 강화방안

1. 연구결과 요약
2. 청소년정책 총괄조정기능
강화방안

제 6 장 요약 및 결론 : 청소년정책 총괄조정기능 강화방안*

1. 연구결과 요약

청소년정책은 대상중심정책이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들은 교육, 복지, 문화, 고용 등 기능 중심 정부조직에 따라 여러 부처에 산재해 있다. 정부 각 부처가 갖는 정책목표는 각각 다르기 때문에 청소년이라는 동일 대상을 놓고 서로 다른 정책을 펼칠 수가 있다. 국가사회에 필요한 인재 육성이라는 차원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정책은 시너지 효과를 내야 하기 때문에 총괄조정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국제기준에 따라 청소년정책의 영역구분을 시도하였으며 국가마다 청소년정책의 고유영역화(부문화)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청소년정책의 총괄조정(관련업무의 수평적 분담)수준과 정책수단도 다를 것이라는 이론적 가정을 갖고 출발하였다.

제일 먼저, 한국의 청소년정책 추진현황을 분석하였다. 행정각부의 청소년관련 사무관장 현황을 정부조직법과 직제규정을 통해 살펴보고 중앙행정기관의 청소년정책 시행계획 분석을 통해 정부부처별 · 정책영역별 · 청소년연령집단 및 청소년유형별 · 전달체계별 정책추진현황을 살펴보았다.

둘째, 중 · 고생과 대학생, 위기청소년, 초 · 중 · 고 학부모(대학생 의견으로 대체가능하여 학부모는 제외)를 대상으로 청소년정책에 대한 수요를 조사하였다.

셋째, 청소년정책 총괄조정방안 모색에 시사점을 얻기 위해 총괄조정정책으로서의 성격을 갖는 국가인적자원개발정책과 여성분야 성주류화정책의 총괄조정방안 및 성과를 살펴보고 청소년정책의 부문화수준이 다른 유럽 4개국을 택하여 해당 국가의 청소년정책과 총괄조정의 특징을 살펴보았다.

주요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윤철경 선임연구위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집필하였음.

1) 부처별 청소년정책 추진현황 분석

먼저, 정부조직법과 직제규정을 분석한 결과 청소년정책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와 타 부처 간에 중복이 있는 업무는 유해 매체물(여가부, 문화체육관광부, 방송위원회)과 인터넷중독(여가부, 교육과학기술부, 행정안전부), 다문화가정(여가부, 교육과학기술부, 보건복지부)업무였다.

둘째, 청소년 관련 예산규모는 교과부, 고용부, 여가부, 복지부, 농림부, 문화부, 국토부 순으로 많았다(이상은 1,000억 원 이상).

셋째, 각 부처가 중점적으로 예산투자를 하고 있는 정책영역을 보면 여가부, 교과부, 통일부, 농림부, 복지부, 국토부는 사회통합·위기지원에 가장 많이 예산을 투입하고 있었고 그 다음으로 교육에 투자하고 있었다. 그런가 하면 국방부, 행안부, 지경부, 환경부, 국민권익위원회는 교육에 대해 가장 많이 투자하고 있었다. 그 외에 법무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유해환경 관련 사업에, 외교부는 국제 활동, 문화부는 여가활동, 고용부는 고용지원 등 부처 기능과 밀착된 사업에 가장 많이 예산을 투입하고 있었다.

넷째, 부처별 사업전달체계를 보면 대부분 공적전달체계가 가장 강했으며 통일부, 고용부, 농림부, 복지부는 타 부처에 비해 민간 전달체계가 강했다.

다섯째, 총괄조정이 필요한 정책영역의 우선순위와 해당 부처를 도출한 결과 사회통합·위기청소년 지원·청소년교육·청소년유해환경 단속영역이 개입부처 수와 예산규모가 커서 총괄조정의 필요가 가장 컸다. 그 다음으로는 여가활동, 고용, 건강·가족지원의 순으로 총괄조정의 필요성이 컸다.

청소년정책영역별로 총괄조정의 상대부처를 도출한 결과 교과부가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이 복지부였다. 교과부와 복지부는 청소년정책 주무부서와 정책의 많은 영역에서 협력해야 할 상대 부처임을 알 수 있었다. 여가활동과 관련해서는 문화부, 고용과 관련해서는 고용부와 지경부, 국제 활동에 대해서는 외교부가 총괄조정 상대부처였다.

다섯째, 연령집단별 예산투입 현황을 분석한 결과, 대학생, 중·고생, 초·중·고생, 초등생 순으로 예산투입이 많았다. 연령집단별·정책영역별 예산 투입 현황을 분석한 결과, 모든 연령집단에서 사회통합과 위기지원이 가장 강조되었다. 차이가 있다면 초·중·고생에게는 여가활동이, 대학생에게는 고용이 그 다음으로 강조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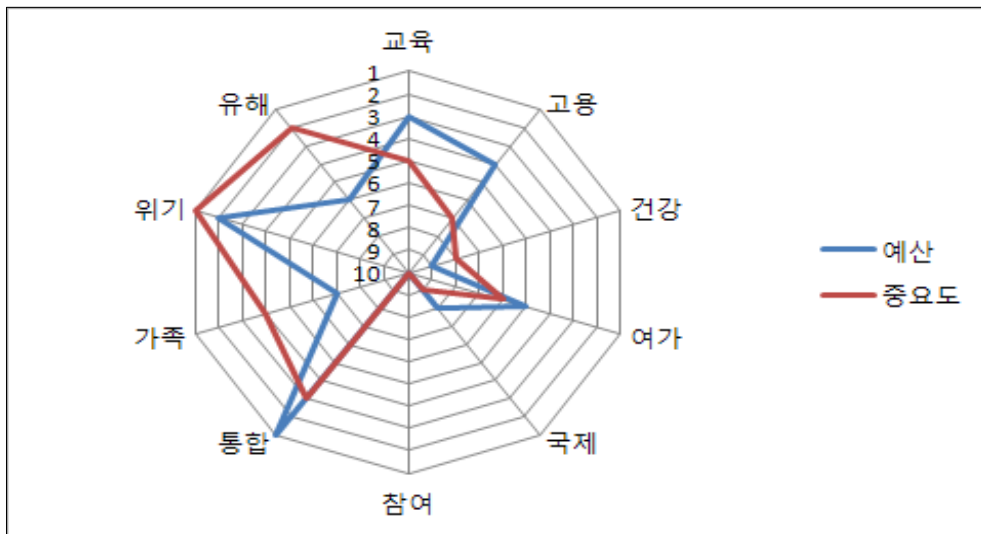
여섯째, 청소년유형별 예산투입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일반청소년에 대해서는 고용과 교육, 여가활동, 국제 활동 순으로 예산이 투입되고 있었으나 위기청소년에 대해서는 위기지원, 교육, 고용, 여가활동 순으로 나타나 일반청소년에 비해 고용보다 위기지원이 강조되었고 여가활동이 가장 후순위였으며

국제 활동에 대한 예산투입은 없었다.

일곱째, 청소년의 위기유형별로 예산투입현황을 분석한 결과, 빈곤 등 여러 가지 요인으로 가정이 취약한 청소년, 가출·비행 등 위기청소년, 탈북·다문화 청소년, 장애청소년, 미혼부모 청소년 순으로 예산투입이 이루어졌다. 위기유형별로 중점 투입 부처를 살펴본 결과, 빈곤 등 여러 가지 요인으로 가정이 취약한 청소년에 대해서는 교과부가, 가출·비행 등 위기청소년에 대해서는 고용부가, 탈북·다문화 청소년에 대해서는 통일부가, 장애청소년에 대해서는 복지부가, 미혼부모 청소년에 대해서는 여가부가 1순위로 예산투자가 많은 부처였다.

2) 청소년정책에 대한 수요분석 결과와 정책추진 현황 비교

(1) 정책영역별 수요조사결과 중요도와 예산투입 순위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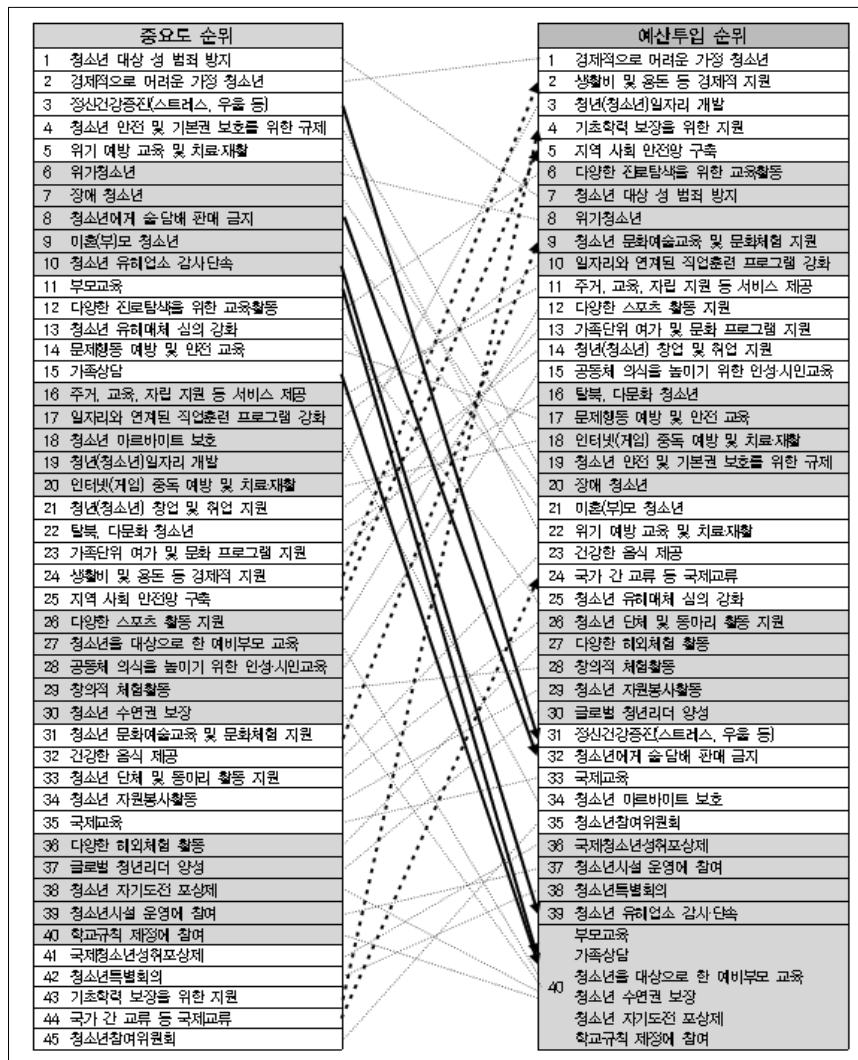
【그림 VII-1】 청소년 정책영역별 중요도와 예산투입 순위 비교

청소년정책영역에 대한 수요조사 결과 정책영역별로 중요도 순위와 정책영역별 예산투입현황 순위 간 격차가 가장 큰 것은 유해환경 영역이었다. 학부모와 청소년들은 청소년 유해환경 단속정책영역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나 실제 예산투입은 타 정책영역에 비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해환경단속이 성격 상 규제정책이라는 특성이 있어 예산투입은 적지만 이 정책에 대한 국민적 수요가 크다는 점을 감안하면 정책총괄조정이 매우 필요한 영역이다. 이 외에 수요조사결과 중요도에 비해 예산투입 순위가 떨어지는 정책영역은 가족지원영역, 건강영역, 위기청소년지원영역이다.

반면 수요조사결과 중요도에 비해 예산투입 순위가 가장 높은 정책영역은 고용영역이다. 사회통합, 교육영역은 그 다음으로 예산투입 순위가 중요도 순위에 비해 더 높으며 여가활동, 국제 활동 영역도 중요도 순위에 비해서는 예산투입 순위가 더 높게 나타났다.

정책영역별 수요와 추진현황 간의 격차가 큰 유해환경단속, 가족지원 영역과 건강, 위기청소년지원 영역은 시급히 정책적 지원이 강화되어야 한다. 그에 반해 청소년고용이나 사회통합, 청소년 교육영역에 대해서는 정책내용에 대한 점검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2) 세부 정책사업 수요의 중요도와 예산투입현황 비교



【그림 VI-2】 청소년 정책사업 중요도 순위와 예산투입 순위 비교

【그림 VII-2】는 청소년 정책사업에 대한 수요조사결과 중요도 순위와 정책추진 현황분석결과 예산투입 순위를 비교한 것이다. 수요조사결과를 보면, 성범죄방지,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소년 지원, 정신건강증진, 청소년 안전 및 기본권 보호, 위기청소년에 대한 위기 예방교육 및 치료·재활, 위기청소년·장애청소년 지원, 청소년에 대한 술·담배 판매 금지, 미혼부모 청소년 지원, 청소년 유해업소 감시·단속 등에 대한 수요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 부모교육, 다양한 진로탐색을 위한 교육활동, 청소년 유해매체 심의 강화, 일반청소년에 대한 문제행동 예방 및 안전교육, 가족상담 등도 정책적 수요가 높았다.

정책수요가 높은 사업 중에 예산투입이 현격히 작은 사업은 정신건강증진, 부모교육, 가족상담 등이다. 술·담배 판매 금지, 청소년 유해업소 감시·단속 등은 청소년보호정책의 주요 영역으로 해당 사업에 대한 국민적 지지는 매우 높으나 예산투입은 작다. 따라서 이러한 정책들에 대한 지원과 더불어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총괄조정을 강화하여야 한다.

역으로 예산투입순위가 높은 사업 중에 중요도 순위가 현격히 낮은 사업은 기초학력보장을 위한 지원 사업이었으며 생활비 및 용돈 등 경제적 지원, 지역사회안전망 구축, 청소년문화예술교육 및 문화체험 지원 등이었다. 이러한 사업들은 청소년 및 학부모 조사에서 중요성이 낮게 나타난 사업으로 해당 사업에 대한 정책수요자의 이해, 또는 필요가 부족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해당 사업들을 청소년 및 학부모 수요자에게 필요한 사업으로 사업내용을 변경하거나 또는 해당 사업에 대한 청소년 및 학부모의 이해를 증진시킬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사업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3) 국내외 정책사례와 시사점

효과적인 청소년정책 총괄조정 수단을 파악하기 위해 기존의 국내외 정책사례를 분석하였다. 국내사례로는 인적자원개발이라는 국가정책의제에 따라 전 부처 관련정책을 총괄하고자 수립된 인적자원개발정책과 여성분야의 성주류화정책을 살펴보았다. 해외사례로는 청소년정책을 상당한 정도로 부문화하고 있는 국가인 독일, 소규모로 부문화하고 다른 정책에 많은 부문을 의존하고 있는 핀란드와 스웨덴, 청소년정책을 전혀 부문화하고 있지 않은 영국의 청소년정책 사례를 검토했다. 총 6개 정책 사례분석을 통해 해당정책의 총괄조정 노력과 수단, 그 성과를 검토하였다.

먼저, 국가인적자원개발정책은 법적·형식적 제도는 잘 구비하였지만 수평적 업무분담구조와 타 분야에 대한 정책역량의 미흡으로 인해 실패한 정책으로, 여성정책의 성주류화전략은 지속적인 역량의 투입으로 점진적 발전을 해나가는 정책으로 평가되고 있었다.

해외 4개국의 총괄조정 특징을 살펴보면 스웨덴은 통합평등부 장관이 정부유관기관에 지침서를 하달하여 청소년관련통계와 지표산출을 의무화함으로써 청소년생활의 전 영역을 알 수 있는 광범위한 정보를 수집·관리하고 있었다. 핀란드의 경우, 중앙부처간 협력은 공식적 제도보다는 부처 간 협의라는 방식을 통해 비교적 유연하게 이루어지고 있었다. 독일은 청소년정책 고유영역, 즉 부문화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진 국가로서 청소년정책총괄조정에 대해서는 욕구가 높지 않았다. 부처간 총괄조정 보다는 청소년정책의 독자성을 강화하여 청소년정책을 주류화하고자 하는 정책방향을 보이고 있었다. 영국의 경우, 청소년정책의 부문화 수준이 가장 낮은 국가로 정부평가전담기관의 평가를 통해 청소년정책의 총괄조정을 유도하고 있었다.

이상의 사례로부터 얻은 구체적인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부 각 부처별 관장업무에 대해 수평적 분담 구조를 만들어야 총괄조정이 가능하다.

둘째, 총괄조정 대상 정책 예산을 추출해 내기 위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이러한 기준이 있어야 청소년정책에 대한 정확한 예산항목과 규모를 파악할 수 있다.

셋째, 총괄조정을 위한 조직 개편에서 정책기획 및 평가를 담당할 총괄조정기구가 필요하며 각 부처는 분야별 기획과 집행을 수행하는 방식으로 분담구조를 설정해야 총괄조정을 위한 책임과 역할이 명확히 구분되어 총괄조정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다.

넷째, 총괄조정 부처는 해당 정책에 대한 전문성과 창의적 의제설정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이러한 전문적 정책역량을 바탕으로 국민적 공감대를 얻을 수 있는 청소년정책 총괄조정의 목표를 세우고 이를 추진할 수 있는 전략을 개발해야 한다.

다섯째, 청소년정책에 개입하는 여러 행정기관이 상호조정 되어야 할 내용이 무엇인지를 구체화하고 부처별로 소관 업무를 명료화하여 추진실태를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는 것이 필요하다.

여섯째, 청소년정책영향분석평가제 도입이 필요하다. 각 부처 청소년관련 기본계획·시행계획에 대한 사전평가제 및 특정 과제에 대한 사후평가로서 청소년정책영향분석평가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일곱째, 각 부처의 정책통계로 청소년 분리통계(청소년세대를 기타 세대와 구분하여 볼 수 있는 통계), 청소년지표(또는 청소년 육성 지표, 삶의 질 지표) 등을 지속적으로 산출하여야 한다.

4) 한국 청소년정책의 특징과 방향성 모색

학부모와 청소년에 대한 조사결과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이미지는 긍정성과 부정성이 혼재되어

있는 상태이다. 어느 한 쪽으로 치우치고 있지 않다. 부모세대는 청소년세대에 비해 청소년에 대한 긍정과 부정이 모두 강하다. 청소년세대가 부모세대에 비해 청소년에 대한 긍정도, 부정도 강하지 않다. 청소년 연령대별로 볼 때 중고생은 대학생보다 긍정적 이미지, 대학생은 중고생보다 부정적 이미지에 더 동의하고 있다. 즉, 전체적으로 대학생들이 중고생보다 청소년에 대한 부정성이 더 강하다고 볼 수 있다. 한 가지 특이한 것은 일반청소년들이 위기청소년들에 비해 긍정적 이미지에 대한 동의 수준이 낮다는 점이다. 부정적 이미지에 대해서는 ‘충동적이어서 문제를 야기한다’는 항목에서만 위기청소년의 동의수준이 높고 다른 항목에서는 별 차이가 없다. 일반청소년들이 긍정적 자의식이 낮다는 점과 위기청소년이라고 해서 부정적 자의식이 더 강하지 않다는 점은 유념해볼만한 결과이다.

우리사회의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이미지는 ‘향후 발전가능성이 큰 존재’이면서 ‘어디로 튈지 몰라 무서운 존재’이거나 ‘충동적이어서 문제를 야기’하는 존재이다. 즉, 청소년을 미래의 인적 자원으로 보기도 하지만 ‘문제거리’로 보는 경향도 있다. 이는 양 측면에 대한 정책 모두를 필요로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정책대상 연령의 우선순위를 질문한 결과, 중고생과 초등학교 고학년을 정책대상의 우선순위로 동의하고 있다. 9세에서 24세를 청소년정책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한국의 청소년정책은 유럽 4개국에 비해 비교적 정책대상의 연령 범주가 넓은 편이다. 또한 청소년정책의 고유영역으로 확보하고 있는 범위(부문화 수준)는 독일에 비해서는 작지만 영국, 핀란드, 스웨덴에 비해서는 넓은 편이다. 따라서 독일처럼 청소년정책을 독자적 정책으로 강화해내기도 영국처럼 총괄조정만으로 정책을 이끌어가기에도 어려움이 있다. 정책대상의 연령범주와 정책영역이 넓어 정책 간 조정은 매우 필요한 실정으로 한국의 정치체계, 행정부 우위의 정책 집행체계 하에서 실효성을 발휘할 수 있는 정책총괄조정 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다.

2. 청소년정책 총괄조정기능 강화방안¹⁾

1) 청소년정책영향분석평가제 도입

대상중심 정책의 특성을 갖고 있는 여성정책은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를 도입하여 총괄조정에

1) 윤철경 선임연구위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박병식 교수(동국대학교 법학과), 최진식 교수(국민대학교 행정학과)가 공동집필하였음.

유효하게 활용하고 있다. 청소년정책 역시 각 부처 청소년관련 기본계획·시행계획에 대한 사전평가제 및 특정 과제에 대한 사후평가로서 청소년영향분석평가제를 도입하면 청소년정책의 총괄조정기능을 촉진하는데 상당히 유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청소년정책 총괄조정 목적은 각 부처가 담당하고 있는 정책이 청소년의 필요에 부합하게 청소년 친화적으로 실시되고 있는가, 청소년에게 유효한 방식으로 실시되고 있는가를 분석·평가하는 것이다. 세대구분 없이 추진되고 있는 많은 정책들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실시되고 있지만 청소년의 특성과 욕구, 생활환경에 부합되는 방식으로 제공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청소년이 소외되는 결과를 낳고 있다. 청소년정책영향분석평가제는 이러한 점들을 분석, 평가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청소년정책의 유효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각 부처 정책 기능 중 청소년에게 필요한 정책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다면 이에 대한 정책 아젠더를 제시하는 것 또한 청소년정책 영향 분석평가제를 도입하는 목적이다.

(1) 청소년정책영향분석평가지표 개발 및 시범 운영

청소년정책영향분석평가제 도입을 위해서는 가장 먼저 청소년정책에 대한 영향을 볼 수 있는 평가지표를 개발하여야 한다. 청소년의 다양한 삶의 영역을 포괄하는 정책지표 개발을 통해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가시화된 정책지표를 개발하여야 한다. 이는 그 동안의 청소년지표에 대한 연구 성과를 토대로 변화하는 청소년의 수요에 부합하는 핵심지표로 구성하면 될 것이다. 또한 청소년정책영향분석평가 지표를 개발한 후 이의 타당성 및 실효성 검증을 위한 시범운영이 필요하다.

(2) 청소년정책영향분석평가제 도입을 위한 청소년기본법 개정

청소년정책영향분석평가제 실행을 위한 법안 작성과 법 개정 작업이 필요하다. 청소년정책의 총괄·조정을 위해서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진하는 정책과 법령의 제정 및 개정이 청소년의 활동, 보호, 복지 등 청소년육성에 미칠 영향을 분석 평가하는 「청소년정책영향분석평가제도」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현재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제정·개정을 추진하는 법령과 성 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대하여 분석 평가하는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가 실시되고 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정책의 양성평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성 평등 관점으로 국가정책을 분석평가 하도록 2002년 「여성발전기본법」에 근거 규정을 신설하여 추진하였으나, 「여성발전기본법」에는 선언적 조항만 있어 각 기관의 책임 있는 추진을 이끌어내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따라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을 제정하여

성별영향분석평가의 대상이 되는 정책과 기관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평가결과를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는 한편, 공무원의 교육, 지원기관 지정 등 지원과 관련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의 원활한 추진과 정책의 수립·시행에 성 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같은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와 마찬가지로 청소년정책영향분석평가제도를 실시하는 것이다, 청소년정책영향분석평가제도는 「청소년기본법」에 장(章)을 신설하여 규정한다. 주된 내용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분석평가의 대상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정·개정을 추진하는 법령(법률·대통령령·총리령·부령 및 조례·규칙을 포함한다)과 청소년의 활동, 보호, 복지 등 청소년육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획 및 사업으로 한다.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사업 중에서 청소년의 활동, 보호, 복지 등 청소년육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을 특정하여 분석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둘째, 여성가족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분석평가 추진 실적 및 정책개선 실적을 점검하고 종합 분석한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연 1회 이상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국회에 제출한다.

셋째, 분석평가 제도의 운영 및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장관 소속으로 청소년정책영향분석평가위원회를 둔다. 그리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에는 해당 기관의 분석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분석평가책임관을 지정한다.

넷째,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분석평가에 필요한 지원을 하기 위하여 국공립연구기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연구기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연구기관을 청소년정책영향분석평가기관으로 지정한다.

〈표 VI-1〉 청소년정책영향분석평가와 관련된 청소년기본법의 시안이다.

표 VI-1 **청소년정책영향분석평가와 관련된 청소년기본법 시안**

제○장 청소년정책영향분석평가

제○조(분석평가의 시기)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청소년의 활동, 보호, 육성, 복지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분석평가를 실시한다. 다만, 소관 법령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법제처의 법령안 심사 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제○조(분석평가서의 작성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분석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석평가서를 작성하여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제출받은 분석평가서에 대한 검토의견을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에게 통보할 수 있다.

제○조(분석평가결과의 반영)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분석평가의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여야 하고, 매년 그 결과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조(특정정책영향분석평가)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소관 정책 또는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수행하는 사업 중 청소년의 활동, 보호, 육성, 복지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을 특정하여 분석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분석평가의 결과를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를 통보받은 기관의 장은 해당 정책 또는 사업에 반영하고 반영 결과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조(정책개선 권고)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제○조에 따른 특정정책영향분석평가의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정책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정책개선 권고를 받은 기관의 장은 개선 대책을 수립·시행하고 그 결과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조(종합분석보고서의 작성과 제출 등) 여성가족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분석평가 추진 실적 및 정책개선 실적을 점검하고 종합 분석한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연 1회 이상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조(청소년정책영향분석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분석평가 제도의 운영 및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장관 소속으로 청소년정책영향분석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분석평가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분석평가의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한 사항
3. 분석평가결과에 따른 정책개선 권고에 관한 사항
4. 분석평가결과의 공표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조(분석평가책임관의 지정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기관의 분석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분석평가책임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분석평가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조(분석평가 자문)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분석평가에 대하여 자문을 제공할 수 있다.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자문에 관한 업무를 공공 또는 민간 기관·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조(영향분석평가기관) 여성가족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분석평가에 필요한 지원을 하기 위하여 국공립연구기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연구기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연구기관을 청소년정책영향분석평가기관(이하 “평가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조(분석평가 정보의 수집·보급 및 전문 인력의 육성 등)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분석평가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분석평가와 관련된 정보를 수집·보급하여야 하며, 분석평가 전문 인력 육성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분석평가 관련 정보의 수집·보급 등을 위하여 분석평가와 관련된 정보지원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3) 타 행정기관평가에 연계·시행

청소년영향분석평가제의 본격적 실시에 앞서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와 연계하여 활용하거나 정부업무평가와 연계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중앙행정기관에 대해서는 정부업무평가기본법에서 명시

하고 있는 특정평가에 청소년정책을 포함하는 것을 협의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성과관리 제도와의 연계를 생각해 볼 수 있다. 국무총리실에서는 매년 중앙행정기관의 주요정책에 대해서 성과목표와 지표를 정하게 하고 성과관리를 주관하고 있다. 여기에 청소년정책 소관부처들은 해당기관의 성과관리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청소년정책에 대해서도 주요 관리과제로 포함시키고 성과목표 및 지표로 포함시키는 것을 권장해 볼 수 있다. 국무총리실이 마련하여 제공하고 있는 ‘정부업무 성과관리운영 지침’(국무총리실, 2012)에 이 사항을 반영하는 것에 대해 협의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에 청소년정책에서 특히 더 중요시 되는 정책을 지표에 포함하도록 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현재 청소년정책과 관련한 지표로는 ‘청소년 활동 지원사업 추진성과, 청소년통합지원체계 활성화 정도, 청소년유해업소 단속실적’이 포함되어 있다(행정안전부, 2012: 김둘순, 2012: 117에서 재인용). 따라서 청소년을 중심으로 고용, 건강, 가족지원, 교육 등이 유기적으로 이뤄지도록 지자체 부서 간 협력사업 추진실적을 지표로 포함시킨다.

2) 범부처 청소년예산체계 확립

(1) 청소년예산의 개념 및 범주를 확정할 수 있는 기준 마련

국가인적자원개발정책에서 인적자원개발예산의 개념과 분류체계가 명확하게 구체화되지 못했으며 정부 내에서 NHRD 예산의 편성기준이 확립되지 않았다. 가장 이해관계가 첨예한 예산 조정기능이 미약함으로 인해 정책에 대한 총괄조정기능이 원활하지 못하였다. 정책총괄조정을 위해서는 조정해야 할 예산을 구체화하는 것이 선결조건이다.

현재의 청소년정책 시행계획상의 중앙행정기관 예산자료는 정책대상이 분명하지 않고 경상비, 인건비, 사업비 등이 혼재되어 있으며 부처에 따라서는 국고 일반예산은 제외하고 사업비만 제출하는 등 청소년예산이 정확히 추계되지 않고 있다. 시행계획 상의 예산은 각 부처가 제출한 사업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동일한 사업을 중복적으로 계상하고 있어 정확한 예산규모를 파악하기 어렵다. 각 부처 청소년정책 시행계획 제출 시 동일한 기준에 따라 청소년예산 및 사업을 제출하도록 하기 위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

정부 각 부처 예산 중 청소년예산의 범위를 어떻게 규명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추후 연구가 필요하다. 이를 통해 청소년예산의 개념 정의와 기준, 산출방법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2) 청소년 총예산 및 부처별 청소년예산 규모를 산출하여 이를 기준으로 매년 일정 기준 이상의 부처별 청소년예산 확보 기준을 제시

청소년예산의 개념 및 범위를 설정한 후 국가예산 중 청소년예산을 일정 수준 이상 확보하도록 목표치를 설정한다. 여가부를 포함, 교과부, 복지부, 노동부, 법무부 등의 청소년시설 및 사업 운영 예산을 포함, 국가예산 대비 청소년 총예산 비율, 부처별 분담 비율 등을 산출한다. 각 부처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사업에 투입하고 있는 비율을 기준 선으로 부처별 청소년예산 분담비율을 제시하고 매년 그 이상을 확보하도록 제시한다.

청소년정책 주무부처는 각 부처의 청소년예산 확보비율과 그에 준하는 사업에 대한 기본계획, 집행과정, 성과평가 등을 모니터링하는 등 정책평가를 담당한다.

3) 청소년관련 정보관리 능력 확보

(1) 청소년지표 개발

청소년정보 관리는 총괄조정 of 주요 수단이다. 청소년업무 주무부처로서 관계기관에 지표산출 지침을 내려 청소년의 삶을 다면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영역을 지표로 구체화하여야 한다. 현재 청소년백서와 통계청이 제공하는 통계는 청소년의 삶을 다면적으로 이해하기에는 부족하다. 스웨덴의 지표(핀란드도 준비 중임)를 참조하여 청소년고용, 범죄, 주거, 학비, 실업수당, 대학진학, 경제적 자립, 채무, 수입 및 세금납부, 건강, 문화여가활동, 중·고등학교 학업, 청소년단체 재정보조, 청소년들의 선거참여 등과 같은 청소년생활의 전 영역을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지표를 산출하여 한국청소년의 다양한 삶의 영역을 포괄하는 지표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2) 청소년지표 및 청소년통계의 산출 및 관리, 활용

그 동안 청소년지표를 개발하기 위한 시도가 수차례 있었다. 그러나 지표를 생산·구축·관리하는 시스템이 갖추어지지 않아 청소년지표의 지속적 산출이 어려웠다. 지표의 개발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표의 산출과 관리이다. 청소년통계센터를 구축하여 필요한 지표와 통계를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산출된 자료가 있어야 각 분야별 청소년정책의 성과를 드러내고 정책의 개선을 꾀하는데도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청소년정책연구원에 청소년지표의 산출 및 관리를 담당할 수 있는 청소년통계 센터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3) 청소년통계 발간 (청소년백서와 연계 등)

청소년정책의 기초자료로서 정책성과를 드러내는 청소년지표 및 통계에 대한 간행물이 필요하다. 현재 청소년백서는 정부행정통계로 구성되어 청소년지표로서의 기능이 부족하다. 청소년백서의 행정통계를 보완할 수 있는 지표를 산출하여 청소년백서와 연계하도록 한다.

4) 청소년정책 총괄조정계획 수립

(1) 청소년정책 총괄조정 우선순위 영역 및 상대부처 설정 등 로드맵

정책영역별 수요와 추진현황을 비교하여 총괄조정해야 할 정책영역의 우선순위와 상대부처를 【그림 VI-3】과 같이 도출하였다.

유해환경단속	➤	교과부, 복지부
사회통합	➤	교과부, 복지부
청소년교육		교과부, 복지부, 고용부
건강	➤	복지부, 교과부
가족지원		문화부
위기청소년지원		교과부
고용	➤	고용부, 지경부

【그림 VI-3】 총괄조정 우선순위 정책영역과 상대부처

첫째, 총괄조정이 가장 시급한 정책영역으로 나타난 것은 유해환경 단속영역이다. 유해환경단속영역은 투입하는 예산규모는 크지 않으나 개입하는 부처 수가 많으며 학부모와 청소년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에 비해 예산투입은 떨어진다. 이 정책에 대한 국민적 수요가 크다는 점을 고려할 때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대응이 다른 어느 정책영역보다 필요하다.

둘째, 사회통합, 위기청소년지원, 청소년교육영역은 개입부처수도 많고 실제 투입하는 예산규모도 크다. 이 중 사회통합, 청소년 교육영역은 사회적 수요에 비해 예산투입 순위가 높다. 해당 정책내용이

사회적 수요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이다. 사회적 수요에 부합하는 정책으로 전환시키기 위한 정책총괄조정이 필요하다.

셋째, 가족지원과 건강, 위기청소년지원 영역은 사회적 수요에 비해 실제 예산투입 순위는 떨어지는 영역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수요는 높은 데 비해 그 만큼 예산은 뒷받침되고 있지 못하다는 의미이다. 가족지원, 건강, 위기청소년 지원을 위한 정책예산 투입을 증가시켜야하며 이를 위한 정책개발이 필요하다.

넷째, 반면에 고용영역은 사회적 수요에 비해 예산투입순위가 높다. 즉 사회적 수요에 앞서 정책개발이 이루어진 것이다. 청소년 고용정책을 청소년 및 사회적 수요에 부합하는 정책으로 전환시키기 위한 총괄조정노력이 필요하다.

(2) 청소년정책에 대한 정기적 수요조사를 통한 사업우선순위 설정 및 추진

조사결과에 따르면 학부모들은 당면 정책과제로 학교폭력 근절을 가장 많이 꼽았으며, 위기청소년 지원, 청소년 정신건강 문제를 그 다음으로 제시했다. 청소년들은 학교폭력 근절을 필두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소년 지원, 위기청소년 지원을 들고 있다.

또한 청소년 정책영역의 중요도에 대해 학부모들은 청소년 유해환경 단속, 위기 청소년 지원, 청소년 교육의 순으로 답하였으나, 청소년들은 위기 청소년 지원, 청소년 유해환경 단속, 청소년 사회통합의 순으로 답하였다.

청소년 정책사업별 중요도를 보면 「청소년대상 성범죄 방지」가 가장 높았으며,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소년 지원, 정신건강 지원, 청소년 안전 및 기본권 보호를 위한 규제의 순이었다. 다만, 청소년의 경우에는 청소년대상 성범죄 방지,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소년 지원, 청소년 안전 및 기본권 보호를 위한 규제, 장애 청소년 지원의 순으로 청소년 자신의 문제에 집중하고 있는 반면, 학부모들은 청소년 대상 성범죄 방지, 청소년 대상 술·담배 판매금지, 청소년 유해업소 감시 단속, 청소년 유해매체 심의 강화를 들어 압도적으로 「청소년 유해환경 단속」사업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과 학부모 등 정책수요자가 필요로 하는 정책과 실제 각 부처가 추진하는 정책이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다. 또한 청소년과 학부모 간에 중요시 하는 정책사업도 상이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수요자의 수요와 국가정책의 정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청소년·학부모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한 정책추진이 필요하다. 따라서 향후 정부 부처가 추진하는 청소년정책은 정기적인 청소년·학부모의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의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이에 따라 예산을 확보·배분해야 한다.

(3) 청소년 정책사업 예산 확보 및 조정

본 연구에서 추진한 수요조사 결과와 정책추진현황분석 결과를 토대로 할 때 다음과 같은 사업에 대한 예산 확보 및 예산조정이 필요하다.

첫째, 청소년 건강영역에서는 정신건강 증진 사업, 가족지원영역에서는 부모교육 및 가족 상담 등 사업에 대한 수요가 매우 높다. 반면에 이들 사업에 대한 예산투입은 매우 낮다. 따라서 이들 사업을 위한 예산확보가 시급하다.

둘째, 술·담배판매 금지,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 등 유해환경 규제를 위한 예산확보 노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단속과 규제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추진체계 및 추진실적 점검, 규제를 강화하기 위한 정책대안 개발 및 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확보가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청소년·학부모의 정책 수요도에 비해 예산투입 순위가 현저히 높은 사업으로는 기초학력보장을 위한 지원사업, 생활비 및 용돈 등 위기청소년을 위한 경제적 지원, 지역사회안전망 구축, 청소년문화 예술교육 및 문화체험 지원 등이다. 청소년 사업 중 비교적 규모 있는 예산을 확보하고 있는 사업이지만 정책수요자인 학부모와 청소년들의 사업필요성에 대한 동의수준은 낮은 편이라 할 수 있다. 사업내용 및 정책성과에 대한 점검을 통해 정책수요자에게 보다 밀착된 사업으로 내용을 전환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

5) 부처별 청소년정책 업무분담체계 확립

(1) 행정 각 부 직제규정 개정 시 청소년업무 주무부처와 협의하도록 조치

정부조직법상 아동·청소년 관련 업무를 직접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부처는 여성가족부(청소년 및 다문화가족과 건강가정사업을 위한 아동업무)와 보건복지부(영·유아 보육을 포함한 아동업무) 등 2개 부처이다. 여기에 유아교육과 학교교육을 포함시키면 교육과학기술부가 추가된다.

제33조(보건복지부)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위생·방역·의정·약정·생활보호·자활지원·사회보장·아동(영·유아 보육을 포함한다)·노인 및 장애인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제36조(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장관은 여성정책의 기획·종합, 여성의 권익증진 등 지위향상, 청소년 및 가족(다문화가족과 건강가정사업을 위한 아동업무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여성가족부의 관장사무에는 다른 부처의 관장사무와 관계가 밀접하거나 상호 중복되고 있는 업무가 적지 않다. 예를 들어 유해매체물은 문화체육관광부와 방송위원회, 인터넷 중독은 교육과학기술부와

행정안전부, 다문화 가정은 교육과학기술부와 보건복지부의 업무와 서로 중복되고 있는 것처럼, 부처 간에 유사한 사업들이 시행되고 있다.

아동·청소년 정책 및 업무의 총괄·조정을 위해 각부의 직제규정을 재검토하고 직제규정에 아동·청소년 업무를 추가하거나 제외할 경우에는 주무 부처인 여성가족부와 협의를 거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는 부처 간의 청소년 관련업무의 중복을 피하고 업무의 효율화를 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2) 부처별 청소년업무현황에 기초한 수평적 업무분담 체계 설계

현재 청소년 정책영역별로 소관부처가 어느 정도 구분되어 있다. 그러나 부처마다 정책 환경과 정책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청소년정책에 대한 합의된 인식 없이는 많은 혼란과 충돌이 있게 되고 실질적이고 협력적인 관계가 형성되기 어렵다. 따라서 정부 각 부처가 해당 정책에서 청소년정책의 범위와 기준이 무엇인지를 인지할 수 있는 기준과 범위를 제시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표 VI-2 청소년 정책영역별 부처별 업무분담(안)

정책영역	1순위	2순위
청소년 교육	교과부	복지부
청소년 고용	고용부	지경부
청소년 건강	복지부	교과부
청소년 여가활동	문화부	여가부
청소년 국제활동	여가부	외교부
청소년 참여	여가부	교과부
청소년 사회통합	복지부	교과부
가족지원	여가부	복지부
위기청소년 지원	여가부	교과부/법무부
청소년 유해환경 단속	행안부	여가부

〈표 VI-2〉는 청소년의 삶의 전 영역을 담당할 부처별 분담구조(안)를 설계 한 것이다. 각 부처가 해당 영역의 청소년정책을 정책목표에 맞게 추진해 갈 수 있도록 청소년업무 주무부처는 이에 대한 종합적 기획을 설계하고 이를 청소년정책기본계획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청소년정책 총괄조정기구에서는 청소년정책에서 여러 행정기관이 서로 총괄 조정해야 할 내용이 무엇인지를 구체화하고 부처별로 소관역할을 명료화, 추진실태를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하여 해당 업무가 순조롭게 추진되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6) 청소년정책 총괄조정기구 강화

(1) '청소년정책 관계기관 협의회'를 '청소년정책조정위원회'로 강화

청소년 기본법은 청소년정책에 관한 관계기관 간의 연계·조정과 상호협력을 주관하는 정부기관으로서 여성가족부 소속의 '청소년 정책 관계기관 협의회'를 규정하고 있다(동법 제10조). 그러나 이러한 규정과 협의회는 실제 활동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정책과 관련한 각 부처 간의 중복투자와 혼선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청소년정책 총괄조정을 위한 기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총괄조정 기구를 강화하는 방안은 크게 ① 국무총리실에 조정기구를 두는 방안과 ② 청소년기본법 상 규정되어 있는 '청소년정책 관계기관 협의회'의 조정기구로 개편하는 방안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먼저, 국무총리실 산하에 '(가칭)청소년정책조정위원회' 설치하는 것을 검토해 볼 수 있다. 국무총리실 산하에 청소년정책조정업무만을 전담하는 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은 청소년정책에 대한 각 행정부처의 협조를 용이하게 유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한국과 같은 대통령중심제 정치체제와 행정부 권한이 강한 국가체제 하에서는 부처의 권한관계가 일정 부분 총괄조정능력에 영향을 미치게 됨을 고려할 때 총리실 소속 위원회 체제가 총괄조정기구로서 영향력을 발휘하기에 보다 수월할 것이다. 그러나 총리실은 청소년정책 추진을 위한 종합적 역량을 집중시키는 데에 미흡할 가능성이 높으며 총리실 산하에 많은 위원회 중의 하나로 형식적으로 기능할 가능성 또한 높다.

현재 아동복지법은 "아동의 권리증진과 건강한 출생 및 성장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정책을 수립하고 관계부처의 의견을 조정하며, 그 정책의 이행을 감독하고 평가하기 위하여 국무총리소속 하에 아동정책 조정위원회를 둔다."고 하여, 아동정책의 수립과 관계부처의 의견 조정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정책 이행의 감독과 평가까지 포괄하는 정책조정위원회를 국무총리실에 두고 있다.

정책의 시너지효과를 높이기 위해 정책대상 연령이 일정 부분 중첩되고 있는 아동정책과 청소년정책을 통합한 정책조정기구로서 '(가칭) 아동·청소년정책조정위원회'를 두는 것도 검토해 볼 만하다.²⁾

2) 이 경우 아동·청소년 관련 법 체계 개편도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 현행 청소년기본법을 아동·청소년기본법으로 바꾸고 아동·청소년기본법을 청소년의 육성·보호·복지에 관한 기본원칙과 아동권리증진을 위한 '기본법'으로 하고, 그 하위법

둘째, 청소년기본법 상 규정되어 있는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 관계기관 협의회’를 ‘청소년정책조정 위원회’로 격상시키고 심의의결권을 강화하는 방안이다. 이 방안은 여성가족부가 그간 축적해 온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어 청소년정책 추진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으며 관련 법 개정을 최소화할 수 있어 정치적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청소년정책조정위원회(또는 아동·청소년정책조정위원회)를 총리실 산하에 두는 것보다 기존 조직을 활용해 현행 법 테두리 내에서 조정기구를 강화하는 이 방안은 실현시키기에 용이하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실행방안은 <표 VI-3>과 같다.

표 VI-3 청소년정책조정위원회로의 격상을 위한 청소년 기본법(시행령 포함) 개정안

현행	개정안
<청소년 기본법> 제2장 청소년육성정책의 총괄 · 조정 제9조(청소년육성정책의 총괄 · 조정) 청소년육성정책은 여성가족부장관이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이를 총괄 · 조정한다. 제10조(청소년정책 관계기관 협의회) ① 청소년정책에 관한 관계기관간의 연계 · 조정과 상호협력력을 위하여 여성가족부에 관계기관의 공무원 등으로 구성되는 <u>청소년정책 관계기관 협의회</u>(이하 "<u>협의회</u>"라 한다)를 둔다. ②<u>협의회</u>는 다음의 사항을 <u>협의</u>한다. 1. 2 이상의 행정기관에 관련되는 청소년정책의 조정에 관한 사항 2. 여러 부처가 협력하여 추진하여야 하는 청소년정책에 관한 사항 ③<u>협의회</u>의 구성 · 조직 그 밖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청소년기본법 시행령> 제2장 청소년육성정책의 총괄 · 조정 제3조(청소년정책 관계기관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10조에 따른 청소년정책 관계기관 협의회(이하	<청소년 기본법> 제2장 청소년정책의 총괄 · 조정 제9조(청소년정책의 총괄 · 조정) 청소년정책은 여성가족부장관이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이를 총괄 · 조정한다. 제10조(청소년정책조정위원회) ① 청소년정책에 관한 관계기관간의 연계 · 조정과 상호협력력을 위하여 여성가족부에 관계기관의 공무원 등으로 구성되는 <u>청소년정책조정위원회</u> (이하 "<u>위원회</u>"라 한다)를 둔다. ②<u>위원회</u>는 다음의 사항을 <u>심의 · 의결</u>한다. 1. 2 이상의 행정기관에 관련되는 청소년정책의 조정에 관한 사항 2. 여러 부처가 협력하여 추진하여야 하는 청소년정책에 관한 사항 ③<u>위원회</u>의 구성 · 조직 그 밖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청소년기본법 시행령> 제2장 청소년정책의 총괄 · 조정 제3조(청소년정책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법 제10조에 따른 <u>청소년정책조정위원회</u> (이하 "<u>위원</u>

물로 청소년복지지원법, 청소년활동진흥법, 청소년보호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를 위한 법률(이상 여성가족부), 아동복지법,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이상 보건복지부)을 배치하는 것이다.

하 "협의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여성가족부 장관이 되고, 협의회의 위원은 기획재정부 차관, 교육과학기술부 차관, 법무부 차관, 행정안전부 차관,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지식경제부 차관, 보건복지부 차관, 고용노동부 차관, 경찰청장, 그 밖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그 밖에 이에 상응하는 지위를 가진 사람 중에서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③ 협의회의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④ 협의회의 회의는 협의회의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청소년정책에 관한 전문적인 사항을 조사·연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5명 이내의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⑥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여성가족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협의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 ⑦ 협의회는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계 기관 등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거나 관계 기관 등의 직원 또는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⑧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과 관련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협의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여성가족부 장관이 되고, 위원회의 위원은 기획재정부 차관, 교육과학기술부 차관, 법무부 차관, 행정안전부 차관,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지식경제부 차관, 보건복지부 차관, 고용노동부 차관, 경찰청장, 그 밖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그 밖에 이에 상응하는 지위를 가진 사람 중에서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청소년정책에 관한 전문적인 사항을 조사·연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5명 이내의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여성가족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 ⑦ 위원회는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계 기관 등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거나 관계 기관 등의 직원 또는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⑧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관련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2) 부처별 청소년정책 영역의 우선순위 검토

정책총괄조정기구는 총괄 또는 조정을 필요로 하는 개별 부처들의 사업의 효과적인 집행을 위해서 공통 에너지를 집약할 뿐만 아니라 시스템 전반의 역동성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사업을 우선순위를 두어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와 같은 총괄조정기구의 정책우선순위 검토는 청소년 정책과 관련하여 ‘(가칭)청소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현행 청소년정책 관계기관 실무협의회를 규정하고 있는 청소년기본법 시행령 제4조에서는 협의회의 기능을 “협의회에 상정할 안전에 대한 사전검토 및 조정, 협의에서 위임한 사항의 처리, 협의회의 효율적 운영지원”만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동

시행령 동 조항을 개정하여 ‘(가칭)청소년정책조정위원회’의 기능에 “부처별 청소년정책 영역의 우선순위 검토”를 추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그리고 청소년기본법 시행령 제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존의 ‘청소년정책 관계기관 협의회’ 산하의 ‘청소년정책 관계기관 실무협의회’를 ‘(가칭)전문위원회’로 전환하여 실무적인 예비심의·의결을 거칠 필요가 있다.

표 VI-4

우선순위 검토기능 추가를 위한 청소년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현행	개정안
〈청소년기본법 시행령〉 제4조 (청소년정책 관계기관 실무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u>협의회</u>에 상정할 안건에 대한 사전 검토 및 조정, <u>협의회</u>에서 위임한 사항의 처리, <u>협의회</u>의 효율적 운영 지원을 위하여 <u>협의회</u>에 청소년정책 관계기관 실무협의회(이하 이 조에서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실무협의회의 위원장은 여성가족부차관이 되며, 위원은 제3조제2항에 따른 <u>협의회</u> 위원이 소속된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③ 실무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3조제7항 및 제8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u>협의회</u>"는 "<u>실무협의회</u>"로 본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u>실무협의회</u>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u>실무협의회</u>의 의결을 거쳐 <u>실무협의회</u>의 위원장이 정한다.	〈청소년기본법 시행령〉 제4조 (청소년정책조정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u>위원회</u>에 상정할 안건에 대한 사전 검토 및 조정, <u>위원회</u>에서 위임한 사항의 처리, 부처별 청소년정책 영역의 우선순위 검토, <u>위원회</u>의 효율적 운영 지원을 위하여 <u>위원회</u>에 <u>청소년정책 조정 전문위원회</u>(이하 이 조에서 "<u>전문위원회</u>"라 한다)를 둔다. ② <u>전문위원회</u>의 위원장은 여성가족부차관이 되며, 위원은 제3조제2항에 따른 <u>위원회</u> 위원이 소속된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③ <u>전문위원회</u>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3조제7항 및 제8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u>위원회</u>"는 "<u>전문위원회</u>"로 본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u>전문위원회</u>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u>전문위원회</u>의 의결을 거쳐 <u>전문위원회</u>의 위원장이 정한다.

7) 정책실행 로드맵

표 VI-5 정책실행 로드맵

	정책과제	2013	2014 - 2015	2015 - 이후	소요 예산	주관기관	관련대상
1) 청소년 정책영향 분석평가 제 도입	평가제 도입을 위한 청소년기본법 개정	○			비예산	여가부	국회
	청소년정책영향분석 평가지표 개발		○		5천만원	NYPI	-
	청소년정책영향분석 평가 시범운영		○		연1억원	NYPI	관계부처
	타 행정기관 평가에 연 계 · 시행			○	비예산	여가부	-
	•지방자치단체합동평가 연계			○	비예산	여가부	행안부
	•정부업무평가연계			○	비예산	여가부	총리실
2) 범부처 청소년 예산체계 확립	범부처 청소년예산 산출기 준 및 분석지침 정립		○	○	비예산	여가부	-
	청소년 예산규모 산출기준에 따른 청소년 예산 확보 기준 제시			○	비예산	여가부	범부처
3) 청소년 관련정보 관리능력 확보	청소년지표 개발	○			5천만원	NYPI	-
	청소년지표 및 통계 산출		○	○	연 1억원	NYPI	통계청
	청소년통계 발간			○	비예산	NYPI	-
4) 청소년 정책 총괄조정 계획수립	총괄조정 우선순위 정책영 역 로드맵 작성		○	○	비예산	여가부	-
	청소년정책 수요조사		○	○	매3년당 5천만원	NYPI	-
5) 부처별 업무분담 계획수립	행정각부 직제규정 개정에 대한 협의 조치 시행	○	○	○	비예산	여가부	범부처
	부처별 수평적 업무분담 체계 설계		○	○	비예산	여가부	범부처
6) 총괄 조정기구 강화	청소년정책 조정위원회 설치	○	○	○	비예산	여가부	-

참 고 문 헌

참 고 문 헌

[국내문헌]

- 강경종, 백성준, 김중우 (2006). **인적자원 중심의 예산체계 연구** (정책연구 2006-5). 서울: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경기도 여성가족과 (2011). 2011년 시·군 여성가족정책 평가지표. 내부자료 (미간행).
- 교육개혁위원회 (1996). **신교육체제 수립을 위한 교육개혁방안(II)**. 서울: 교육개혁위원회.
- 교육과학기술부 (2000). **2000~2004 교육부문 자율화 추진과제 현황**. 서울: 교육과학기술부.
- 교육인적자원부 (2006). **국가인적자원개발백서**. 서울: 교육과학기술부.
- 국무총리실 (2012). **2012년 정부업무 성과관리운영 지침**. 서울: 국무총리실.
- 국회 (2008). **2008년도 국정감사 회의록 부록**. 서울: 국회자료실.
- 김경준 (2008). 아동청소년 투자에 대한 생애주기적 접근. **미래세대 리포트**, 제1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김경희, 양애정, 문유경, 김둘순, 송치선, 남궁운영, 박기남, 류연구 (2010). **성 주류화 관련제도의 효과적 정착을 위한 연구(III): 성별영향평가 제도의 성과와 과제** (2010 연구보고서-15). 서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김동환 (2004). **인적자원개발정책 총괄·조정체제 개선방안에 관한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둘순 (2012). 여성정책 총괄조정 정책사례에 대한 성과분석: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 운영을 중심으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세미나자료집(12-s27): 청소년정책 총괄조정 현황 및 관련정책 동향 분석**, 101-121.
- 김양희, 김경희 (2006). 성인지 예산·성별영향평가의 연계와 지원방안. **제32차 여성정책포럼**, 21-50.
- 김영옥 (2004). 여성정책의 새 패러다임 정립을 위한 시론. **젠더리뷰**, 6. 6-11.

- 김영평 (1991). **불확실성과 정책의 정당성**. 서울: 고려대학교출판부. 283-298.
- 김영평, 신신우 (1991). 한국관료제의 기관갈등과 정책조정. **한국행정학보** 25(1). 307-324
- 김태홍, 전기택, 주재선, 정형옥 (2011a). **2011 한국의 성평등보고서**. (연구보고 2011-12). 서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김태홍, 전기택, 주재선, 정형옥 (2011b). **지역 성평등지수 표준안 연구** (연구보고 2011-31). 서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남기범 (2011). **현대정책학 개론**. 서울: 조명문화사.
- 노화준 (2003). **정책학원론**. 서울: 박영사.
- 마정희 (2007). 성주류화에 대한 비판적 성찰: 여성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인가? 함정인가?. **한국여성학**, 23(1), 39-67.
- 문유경 (2007). 성인지 통계, 어디까지 왔나? **젠더리뷰**, 9월호.
- 박병식 (2012). 범부처 청소년정책 추진현황 분석.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세미나 자료집 (12-s27): 청소년정책 총괄조정 현황 및 관련정책 동향 분석**, 31-73.
- 박선영 (2011). 영국의 청소년 진로지도 정책분석. **글로벌 청소년학연구**, 1(2). 27-45.
- 박선영 (2012). 영국의 청소년정책과 총괄조정 현황.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세미나자료집 (12-s27): 청소년정책 총괄조정 현황 및 관련정책 동향 분석**, 155-175.
- 박철웅 (2012). 독일의 청소년정책과 총괄조정현황.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세미나 자료집 (12-s27): 청소년정책 총괄조정 현황 및 관련정책 동향 분석**, 129-148.
- 백성준 (2006). 국가인적자원개발 정책 성과와 과제. **한국 HRD연구**, 1(2). 43-70.
- 여성가족부 (2008). **제3차 여성정책기본계획수정(판)(2008~2012)**. 서울: 여성가족부.
- 여성가족부 (2009a). **2008년 성별영향평가 종합분석 결과보고서**. 서울: 여성가족부.
- 여성가족부 (2009b). **성별영향 평가의 연도별, 기관유형별, 직급별 교육실적**. 내부자료 (미간행).
- 여성가족부 (2010). **제4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 2010년도 시행계획: 중앙행정기관**. 서울: 여성가족부.
- 여성가족부 (2011a). **2010년 성별영향평가 종합분석 결과보고서**. 서울: 여성가족부.
- 여성가족부 (2011b). **청소년 백서**. 서울: 여성가족부.
- 여성가족부 (2011c). **제5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서울: 여성가족부.
- 여성가족부 (2011d). **제4차 청소년정책(수정·보완) 기본계획 2011년도 시행계획: 중앙행**

- 정기관. 서울: 여성가족부.
- 여성가족부 (2012a). **성별영향평가지침**. 2005년~2011년 각 년도. 서울: 여성가족부.
- 여성가족부 (2012b). **2011년 성별영향평가 추진 우수기기관 및 유공자 포상 세부운영계획** (안). 내부자료.
- 여성가족부 (2012c). 2012년도 성별영향분석평가 컨설팅 워크숍(2012.2.16~17). 여성가족부 관계자 발표자료(미간행).
- 유종상, 하민철 (2009). 국무총리실의 정책조정 성과 연구: 정책조정백서의 조정과제와 조정수단을 중심으로. **한국정책학회 추계학술대회**, 3-28.
- 윤철경, 박병식, 김현주, 이봉주, 김성경 (2005). **청소년보호정책 실태와 발전방안** (연구보고 05-10). 서울: 한국청소년개발원.
- 윤철경, 이상오, 황성하, 서수경 (2003). **연령대별 외국 청소년정책비교와 정책방안**. 서울: 문화관광부 · 한국청소년개발원.
- 윤철경, 정희욱 (2001). **유럽 국가의 청소년 정책** (연구보고 01-R07). 서울: 한국청소년개발원.
- 이광호 (2009). 청소년정책 이해의 핵심 코드와 한국 사회 청소년정책의 내재적 특성에 관한 연구. **청소년복지연구**, 11(4), 129-153.
- 이광호 (2012).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전문가 자문회의(2012.2) 발표자료(미간행).
- 인천광역시 · 인천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 (2012). 2012년 인천광역시 **성별영향분석평가 공무원 특별교육 자료집**.
- 임도빈 (2004). **한국지방조직론**. 서울: 박영사.
- 전기택, 문유경, 주재선 (2009).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성평등지수 관리방안** (2009 연구보고서-19). 서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정봉근 (2012). 국민의 정부 국가인적자원개발 정책 분석.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세미나자료집(12-s27): 청소년정책 총괄조정 현황 및 관련정책 동향 분석**, 79-98.
- 정진곤 (2001). **의무교육확대실시에 따른 사립중학교의 위상정립에 관한 연구** (교육정책연구 2001-특-34). 서울: 교육과학기술부.
- 조아미 (2012). 청소년정책 영역에 대한 고찰: 주요 국제기구를 중심으로(토론).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세미나 자료집(12-s27): 청소년정책 총괄조정 현황 및 관련정책 동향 분석**, 26.

조영승 (2002). 청소년육성정책의 탄생배경과 의의에 관한 연구. **경기대학교 연구교류처 논문집**, 46, 165-201.

한국청소년개발원 (2003). **청소년정책의 국제적 동향 및 발전 방향**. 서울: 한국청소년개발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2). **청소년정책 총괄조정 현황 및 관련 정책 동향 분석**. 세미나 자료집(12-s27).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정원 (2010). 성주류화 제도 논의와 발전방향 연구. **여성학연구** 20(1), 161-192.

행정안전부 (2012). 2012년('11년 실적)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합동평가 실시 및 "합동평가단 운영" 운영계획. 행정안전부 내부자료 (미간행).

[국외문헌]

Bundesministerium des Innern. (2012a). Richtlinien ueber die Gewaehrung von Zusuessen und Leistungen zur Foerderung der Kinder- und Jugendhilfe durch den Kinder- und Jugendplan des Bundes(KJP). *Gemeinsames Ministerialblatt*. Bundesministerium fuer Familie, Senioren, Frauen und Jugend(BMFSFJ). (2009). *Internationale Jugendpolitik des BMFSFJ*.

Bundesministerium fuer Familie, Senioren, Frauen und Jugend(BMFSFJ). (2012 b). Eine Allianz fuer Jugend. *Eckpunktepapier: Entwicklung Perspektiven einer Eigenstaendigen Jugendpolitik*.

Cabinet Office. (1999). *Modernising Government*. The Stationery Office.

Chrisholm, D. (1989). *Coordination without hierachy: Informal Structures in Multiorganization Systems*. Berk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DCFS. (2008). *The Children's Plan: One Year On*. The Stationery Office.

DfES. (2003). *Every Child Matters*. The Stationery Office.

DfES. (2006). *Youth Matters*. DfES Publications.

Finnish Ministry of Education and Culture. (2012). Youth Work And Youth Policy in Finland. 내부자료 (미간행).

House of Common. (2007). *Governing the future: Second Report of Season 2006-07*. Public Administration Select Committee.

Peters, B. Guy. (1998). Managing Horizontal Government : The Politics of Co-

- ordination. *Public Administration*, 76(2), 295-311.
- Turnbull, G. & Spence, J. (2011). What's at risk? The proliferation of risk across child and youth policy in England. *Journal of Youth Studies*, 14(8), 939-959.
- Wallace, C & Bendit, R. (2009). Youth Policies in Europe : Towards a Classification of Different Tendencies in Youth Policies in the European Union. *Perspectives on European Politics and Society*, 10(3), 441-458.

[인터넷자료]

-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12. 4. 19). '제1대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위촉식 및 회의개최'.
여성가족부 홈페이지(www.mogef.go.kr)에서 2012년 8월 20일 인출.
- 청소년기본법, 인적자원개발기본법, 여성발전기본법, 성별영향분석평가법, 다문화가족지원법, 정부업무평가기본법, 헌법, 정부조직법.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main.html>)에서 2012년 5월 15일 인출.
- 한겨레 (2008.6.27). '성평등 기본법' 8월에 초안 마련/성평등 조항 신설·평등지수 명시 추진. <http://www.hani.co.kr/arti/society/women/295594.html>에서 2012년 5월 27일 인출.
- Alliansai. (2012). <http://www.alli.fi/etusivu/>에서 2012년 6월 5일 인출.
- Bayerische Landesjugendamt. (2012). <http://www.blja.bayern.de>에서 2012년 6월 1일 인출.
- Betänkande2004/05: KrU2. <http://www.riksdagen.se/sv/Dokument-Lagar/Utskottens-dokument/Betankanden/Makt-att-bestamma---ratt-till-GS01KRU2/>에서 2012년 6월 13일 인출
- Betänkande2007/08: KrU1. http://www.riksdagen.se/sv/Dokument-Lagar/Utskottens-dokument/Betankanden/Utgiftsomrade-17-Kultur--medi_GV01KrU1/?html=true에서 2012년 6월 13일 인출
- Bundesministerium der Justiz. SGB 8. <http://www.bmfsfj.de>에서 2012년 6월 1일 인출.
- Bundesministerium fuer Familie, Senioren, Frauen und Jugend(BMFSFJ). (2012c). <http://www.bmfsfj.de>에서 2012년 6월 1일 인출.

Cabinet Office. (2012). <http://www.cabinetoffice.gov.UK> 에서 2012년 5월 9일 인출.

Children Act 2004. www.legislation.gov.uk/ukpga/2004에서 2012년 5월 9일 인출
Department for Education. (2012). <http://www.education.gov.uk/>에서 2012년 5월 9일 인출

Education Act 1996. www.transitioninfonetwork.org.uk/.../education_act_1996.aspx에서 2012년 5월 9일 인출

Education and Ispection Act 2006. www.legislation.gov.uk/ukpga/2006/40/contents에서 2012년 5월 9일 인출

European Commission. (2010). EU Youth Strategy. <http://europa.eu/about-eu/institutions-bodies/european-commission>에서 2012년 5월 18일 인출.

Finland National Youth Act(72/2006). <http://www.minedu.fi>에서 2012년 6월 5일 인출.

Finnish Ministry of Education & Culture (2006). *Youth Work & Youth Policy – Fact Sheet*. <http://www.minedu.fi>에서 2012년 6월 5일 인출.

Finnish Youth Center. (2012). <http://www.snk.fi/fi/keskukset/>에서 2012년 6월 5일 인출.

Finnish Youth Clubs' Association. (2012). <http://www.nuorisoseurat.fi/nuorisoseuraliike>에서 2012년 6월 5일 인출.

Muenchen Stadtjugendamt. (2012). <http://www.bkj.de>에서 2012년 6월 1일 인출.

OECD. (2011). *Work on Education(2011–2012)*. <http://www.oecd.org/document/>에서 2012년 5월 18일 인출.

Proposition 1993/94:135. http://www.riksdagen.se/sv/Dokument-Lagar/Forslag/Propositioner-och-skrivelser/prop-199394135-Ungdomspoliti_GH03135/에서 2012년 6월 13일 인출

Proposition 1998/99:115. <http://www.regeringen.se/sb/d/108/a/2571>에서 2012년 6월 13일 인출

Proposition 2004/05:2. www.regeringen.se/content/1/c6/02/98/06/3942ed96.pdf에서 2012년 6월 13일 인출

- Proposition 2007/08:1. www.regeringen.se/sb/d/.../88169에서 2012년 6월 13일
인출
- Proposition 2011:12. www.regeringen.se/content/1/c6/17/55/29/dacaae9d.pdf
에서 2012년 6월 15일 인출
- Regeringsens skrivelse 2004/05: 94. <http://www.riksdagen.se/sv/Dokument-Lagar/Forslag/Propositioner-och-skrivelser/?sortorder=asc&p=311&sort=rel>에서 2012년 6월 15일 인출
- Regeringsens skrivelse 2007/08: 58. http://www.riksdagen.se/sv/Dokument-Lagar/Forslag/Propositioner-och-skrivelser/Samordningsnummer-och-anmalan-_GV0358/?text=true에서 2012년 6월 13일 인출
- Regeringsens skrivelse 2009/10: 53. <http://www.regeringen.se/content/1/c6/13/45/52/166e3cda.pdf>에서 2012년 6월 13일 인출
- SFS 2007:1140. http://www.lagboken.se/dokument/Andrings-SFS/172107/SFS-2007_1에서 2012년 6월 13일 인출
- Statistics Sweden. (2010). *Swedish National Board for Youth Affair*. http://www.scb.se/Pages/List____139369.aspx에서 2012년 6월 9일 인출
- Strategy Unit (2012). <http://webarchive.nationalarchives.gov.uk/>에서 2012년 5월 9일 인출.
- UN. (2012). *World Programme of Action for Youth*. www.un.org/en/development/desa에서 2012년 5월 8일 인출.
- World Bank. (2012). *World Development Report 2007: Development and the Next Generation*. <http://search.worldbank.org/> 2012년 5월 20일 인출.



부 록

범부처 청소년정책 추진사업 현황
설문지

부 록

1. 범부처 청소년정책 추진사업 현황¹⁾

No.	부처명	프로그램명	사업내용	예산(천원)
1	여성가족부	체험활동 지원사업의 체계성 확립	청소년 활동에 대한 실태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조사	0
2	여성가족부	체험활동 정보제공체계 마련	청소년활동자원지도(YRM)-체험활동 프로그램과 관련시설 안내지도 제작	0
3	여성가족부	청소년활동종합기록관리시스템 구축·운영	청소년활동 통합전산시스템 개발 구축에 대한 연구조사	200,000
4	여성가족부	건강한 놀이문화조성 및 스포츠활동 여건강화	청소년문화존 운영지원	5,280,000
5	여성가족부	청소년동아리 활성화	청소년동아리활동운영매뉴얼제작,보급	1,760,000
6	여성가족부	체험활동프로그램 국가인증제 개선	청소년수련활동인증 프로그램의 품질 제고	531,000
7	여성가족부	체험활동프로그램 국가인증제 개선	국제청소년성취포상제 운영	300,000
8	여성가족부	체험활동프로그램 국가인증제 개선	한국형 성취포상제 시범운영	0
9	여성가족부	청소년활동프로그램 공모사업 개선	청소년활동프로그램공모사업 컨설팅 및 평가사업 실시(평가지표 개발 및 사례집 제작,보급)	1,831,000
10	여성가족부	청소년 참여활동 체계 강화	청소년특별회의 위상 및 기능 강화	180,000
11	여성가족부	청소년 참여활동 체계 강화	청소년참여위원회 지역사회 참여활동 강화	317,000
12	여성가족부	청소년 참여활동 체계 강화	청소년운영위원회 설치, 운영	286,000
13	여성가족부	온라인·미디어 매체 활용 참여 확대	트위터, SNS, 스마트폰 등을 통한 정책참여 기반 마련	0
14	여성가족부	청소년 지역사회 변화 운동 지원	지역사회변화프로그램 확대 운영	180,000
15	여성가족부	청소년 자원봉사활동 활성화	청소년자원봉사활동 사이트(Dovol.net) 운영	1,201,010
16	여성가족부	가정의 청소년 인성 교육기능 강화	청소년 자녀를 둔 부모대상 자녀대화법 교육	0
17	여성가족부	인성 및 언어순화 저해 매체환경 대응 강화	관계기관 합동 '청소년 언어사용 건전화방안' 수립	0

1) 출처: 여성가족부 (2011d). 제4차 청소년정책(수정·보안)기본계획 2011년도 시행계획: 중앙행정기관. 서울: 여성가족부.

No.	부처명	프로그램명	사업내용	예산(천원)
18	여성가족부	인성함양을 위한 사회적 지원체계 강화	성인지적 인권교육 전문강사 양성과정	42,076
19	여성가족부	청소년의 다양한 국제교류 기회 확대	국가간 청소년 교류	2,235,000
20	여성가족부	청소년의 다양한 국제교류 기회 확대	청소년해외체험프로그램, 국제청소년행사 지원	2,778,000
21	여성가족부	국제교류 사업 체계화	청소년 교류센터를 통한 국제교류사업 지원 강화	No Data
22	여성가족부	직업체험활동 인프라 확대	청소년수련시설에서 직업체험 프로그램 제공	0
23	여성가족부	청소년 근로보호 강화	청소년보호법시행령상 고용금지업소에 신행 청소년유해업소 반영 및 개정	0
24	여성가족부	부모교육 확대	부모·아버지교육	0
25	여성가족부	청소년 예비부모교육 실시	예비부모교육프로그램 실시	0
26	여성가족부	청소년(상담)지원센터와 건강가정지원센터간 협력 강화	발달단계에 따른 상담제공	0
27	여성가족부	청소년상담지원센터와 건강가정지원센터간 협력 강화	청소년상담지원센터와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연계 강화 추진	0
28	여성가족부	찾아가는 가족관계 상담 및 가족캠프 운영	가족상담 및 캠프 제공	0
29	여성가족부	가족친화 사회문화 조성	가족사랑의 날 홍보강화 및 연계 운영하는 가족프로그램 개발, 보급	0
30	여성가족부	가족친화 사회문화 조성	매주 수요일 '가족사랑의 날' 확산 추진	0
31	여성가족부	가족 공유시간 지원 프로그램 및 인프라 확충	가족여가 프로그램 개발, 운영	0
32	여성가족부	'지역사회 청소년 사회안전망(CYS-Net)' 확대·강화	지역사회 청소년 사회안전망(CYS-Net) 구축, 운영 확대	17,141,500
33	여성가족부	'지역사회청소년사회안전망' 내 주요 유관기관과의 연계강화	지역사회 기관과의 연계 강화 추진	0
34	여성가족부	위기청소년 조기발견체제 구축	청소년사이버상담센터 설치, 운영	1,895,800
35	여성가족부	위기 청소년 사례 관리 강화	청소년동반자 배치(880명) 및 운영	10,079,520
36	여성가족부	방과후 돌봄서비스 강화 및 서비스간 연계·조성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지원	31,416,643
37	여성가족부	취약계층청소년 자립지원 강화	두드림존 프로그램 운영 확대 및 연계 강화	2,054,000
38	여성가족부	특별지원을 통한 위기청소년지원 사각지대 해소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 지원	1,107,000
39	여성가족부	후견인 풀 구성 확대	멘토-멘티 프로그램	0
40	여성가족부	가출청소년 보호지원 강화	청소년 쉼터 운영, 거리 아웃리치 활동	6,262,000
41	여성가족부	비행·범죄청소년 교육적 선도를 통한 사회복지 지원강화(소년원 출원 청소년 교육적 선도 및	청소년 동반자 사업 강화 및 지원 활성화	190,000

No.	부처명	프로그램명	사업내용	예산(천원)
		자립지원)		
42	여성가족부	고위기 청소년 치료·재활을 위한 '국립중앙청소년치료재활센터' 건립	국립중앙청소년치료재활센터 건립	4,318,000
43	여성가족부	학업중단 청소년 상담·교육 등 지원 강화	학업중단 청소년 기숙형 대안캠프 운영, 전문적 사례관리 지원 등	618,000
44	여성가족부	청소년한부모 상담·교육·자립지원 강화	권역별 미혼모·부자 지원기관 운영지원사업	9,240,629
45	여성가족부	저소득층 청소년 지원 및 복지서비스 확대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 교육비 지원	89,448,745
46	여성가족부	취약·소외계층 청소년 지원 강화	저소득 조손가정 지원(아동학습, 생활가사 돌봄, 문화체험 활동, 심리건강 서비스 지원)	800,000
47	여성가족부	다문화청소년 지원체계 강화	중도입국청소년 실태조사 실시	300,000
48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 청소년 교육지원 강화	언어발달지원사업	8,065,000
49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 청소년 자립지원 강화	생활 지원 서비스 제공(자녀생활지도사-1가정당 5개월간 주2회)	37,307
50	여성가족부	청소년 인터넷 게임중독 예방 및 치료 강화	청소년 인터넷중독 예방 및 해소 지원	1,230,000
51	여성가족부	청소년유해매체물 규제·감시 강화 및 기업의 자율정화 유도	유해매체환경 감시체계 강화(청소년유해매체 모니터링 강화, 음반의 청소년 유해성 심의 강화 등)	625,030
52	여성가족부	청소년의 비판적 미디어 이용능력 제고	청소년스스로지킴이(YP) 프로그램 보급	780,000
53	여성가족부	음주·흡연·유해업소에 대한 사회적 관리체계 강화	술, 담배 구매시 신분증 제시 의무화, 대리구매 금지 법제화, 멀티방 청소년출입, 고용금지업소 지정	733,000
54	여성가족부	도시계획 수립시 유해업소 접촉 최소화 방안 마련	청소년 통행금지·제한구역 정비 및 운영활성화(순찰강화,현황관리)	0
55	여성가족부	청소년 대상 성범죄 대책 강화를 위한 추진체계 정비	아동여성보호대책 추진점검단 운영 활성화	1,411,000
56	여성가족부	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활동 강화	성폭력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아동·청소년을 여성전문상담원과 1:1 결연	0
57	여성가족부	성범죄자 재범방지 조치 강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등록·공개제도	1,324,000
58	여성가족부	성범죄 가해·피해 청소년 치료 및 재활교육 강화	아동성폭력 피해자 전담기관 운영	8,860,200
59	여성가족부	청소년 성문화교육 및 성보호 관련 홍보 강화	청소년성문화센터를 통한 성범죄 피해예방교육 지속추진	3,081,000
60	여성가족부	학교폭력 가해·피해 청소년 교육 및 치유 프로그램 강화	폭력 피해청소년 및 그 가족 대상 프로그램 운영	66,000
61	여성가족부	청소년활동 시설·단체의 안전성	청소년 수련시설에 대한 안점점검	438,000

No.	부처명	프로그램명	사업내용	예산(천원)
		강화		
62	여성가족부	청소년 건강증진을 위한 종합적 대책 추진	청소년종합정보서비스(www.all4yout.net)에 청소년 건강관리 종합정보 제공	0
63	여성가족부	청소년 건강증진을 위한 종합적 대책 추진	관계부처 합동 「가칭」청소년건강종합대책 수립 추진	0
64	여성가족부	청소년 정신건강 및 자살예방 대책 추진	청소년 및 가족이 함께 하는 가족상담 프로그램 제공	0
65	여성가족부	청소년친화지수 개발	청소년친화지수 개발	0
66	여성가족부	청소년친화마을 확산 추진	청소년친화마을 선정 추진	0
67	여성가족부	청소년권리모니터링 강화	청소년권리센터 운영	120,000
68	여성가족부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 추진체계 마련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대한 홍보 및 교육 추진	0
69	여성가족부	청소년 권리에 대한 교육 실시 및 문화조성	청소년권리센터 운영	80,000
70	여성가족부	청소년 연예인 기본권 보호	청소년 연예인 기본권 보장에 대한 정부와 언론 매체간 공동 협력 추진	0
71	여성가족부	청소년활동시설의 전략적 확충	국·공립청소년수련시설 신규건립 및 기능보강	119,786,000
72	여성가족부	청소년 시설·단체·기관 인프라 확대 및 역량강화	청소년단체 공모프로그램 운영	138,000
73	여성가족부	청소년지도사 양성과정 개편	청소년지도사 양성과정 개편	453,000
74	여성가족부	청소년상담사 전문영역 확대	청소년상담사 자격연수시 진로상담 및 진로지도 강화	463,954
75	여성가족부	청소년지도사 직무보수교육 강화	청소년지도사 직무보수교육	61,000
76	여성가족부	청소년상담사 직무보수교육 강화	청소년상담사 보수교육	26,400
77	여성가족부	청소년지도사의 복지 개선	청소년지도사의 '국가표준임금기준표' 및 '경력인정기준표' 마련	0
78	여성가족부	청소년상담사의 복지 개선	청소년상담사의 '국가표준임금기준표' 및 '경력인정기준표' 마련	0
79	여성가족부	(중앙)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운영 개선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운영지원	16,002,000
80	여성가족부	(시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 지역 연계기반 구축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 활동지원-지역 청소년활동 활성화 및 활동 연계, 지원	7,996,500
81	여성가족부	「청소년지원 지역협의회」 설치·운영	「청소년지원 지역협의회」 운영방안 연구	0
82	여성가족부	「가족·청소년친화자원 전자지도」 제작 추진	「가족·청소년친화자원 전자지도」 제작 추진	No Data
83	여성가족부	지자체별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 활성화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 활성화 방안 연구	0
84	여성가족부	지자체 정책역량 강화 지원	지자체 청소년업무담당공무원 직무교육	100,000
85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관계기관협의회」	「청소년정책관계기관협의회」 관련규정 정비	0

No.	부처명	프로그램명	사업내용	예산(천원)
		관련규정 정비		
86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관계기관협의회’ 기능 및 위상 강화	‘청소년정책관계기관협의회’에 민간분야의 주요인사 및 전문가가 참여하는 방안 마련 및 추진	0
87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분석평가센터’ 설치·운영	‘청소년정책분석평가센터’ 설치·운영	380,000
88	여성가족부	중앙부처 및 시도별 시행계획 성과평가를 통한 정책의 효과성 제고	청소년정책 시행계획 분석	0
89	교육과학기술부	체험활동 정보제공체계 마련	"창의적 체험활동" 프로그램 및 자원 정보에 대한 통합관리사이트 제작	0
90	교육과학기술부	학교의 창의적 체험활동 지원체계 강화	창의적 체험활동 지원단 구성 및 운영=>초, 중등학교 창의적 체험활동 지원	1,780,000
91	교육과학기술부	학교자치활동강화	학교생활규정 제·개정 및 운영매뉴얼 개발	0
92	교육과학기술부	청소년 자원봉사활동 활성화(교과부 대학생 인턴사업 참가 시 우대)	해외 인턴십 활동 지원	1,300,000
93	교육과학기술부	청소년 자원봉사활동 활성화	청소년자원봉사 인력풀 운영 및 인센티브 제공, 청소년 봉사활동 영역 확대 및 다양화	0
94	교육과학기술부	가정의 청소년 인성 교육기능 강화	학부모 강사요원 심화과정 운영(자녀교육 경험이 풍부한 학부모를 강사로 육성), 학부모 대상 자료 및 프로그램 개발	0
95	교육과학기술부	학교의 인성교육 및 올바른 언어습관 교육과정 내실화	학교문화 선진학교 확대 운영, 언어순화 캠페인 추진, 언어순화 교육자료 개발	0
96	교육과학기술부	인성 및 언어순화 저해 매체환경 대응 강화	청소년, 부모, 교사 등을 위한 언어순화 콘텐츠 개발, 보급	0
97	교육과학기술부	직업체험활동 및 진로상담 프로그램 확대	진로체험프로그램 운영	3,000,000
98	교육과학기술부	학교 내에서의 진로교육 강화	진로교육 활성화 지원체제 구축, 교육과정과 연계된 진로교육 교과통합 매뉴얼 개발, 보급, 진로교육 단계별 목표설정 가이드라인 개발	80,000
99	교육과학기술부	‘지역사회청소년사회안전망’ 내주요유관기관과의연계강화	Wee 프로젝트	18,200,000
100	교육과학기술부	가출청소년 보호지원 강화	Wee 프로젝트 시설 인프라 확대	67,400,000
101	교육과학기술부	학업중단 청소년 상담·교육 등 지원 강화	Wee센터와 청소년상담지원센터간 연계 강화	850,000
102	교육과학기술부	취약·소외계층 청소년 지원 강화	학생미혼모 학습권 보장을 위한 대안교육위탁기관 확대	0
103	교육과학기술부	저소득층 청소년 지원 및 복지서비스 확대	저소득층 장학금 지원	331,300,000
104	교육과학기술부	장애청소년 교육·복지 지원 확대	특수교육보조원 배치, 통합형 직업교육 거점학교 운영	2,318,000

No.	부처명	프로그램명	사업내용	예산(천원)
105	교육과학기술부	인터넷 중독 조기발견 및 상담 · 치료 지원 강화	정보통신윤리 부처 및 교육청 협의체 활성화, Wee 센터 및 상담교사를 통한 인터넷중독 상담기회 확대	688,000
106	교육과학기술부	음주 · 흡연 · 유해업소에 대한 사회적 관리체계 강화	학교주변 유해환경 정비 추진,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에 대한 유해인식도 조사 실시	30,000
107	교육과학기술부	도시계획 수립시 유해업소 접촉 최소화 방안 마련	교육환경평가를통해학교주변유해업소차단할 수 있는 학교용지 선정	110,000
108	교육과학기술부	청소년 대상 성범죄 대책 강화를 위한 추진체계 정비	배움터지킴이(학생안전 및 성범죄로부터 학생보호) 운영 및 확대	85,400,000
109	교육과학기술부	청소년 대상 성범죄 예방활동 강화	학생안전강화학교 추가 선정 및 운영, 배움터지킴이 배치 확대 및 CCTV 설치 확대, 성폭력 예방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27,500,000
110	교육과학기술부	성범죄자 재범방지 조치 강화	교육기관 취업자에 대한 성범죄 경력 확인	0
111	교육과학기술부	성범죄 가해 · 피해 청소년 치료 및 재활교육 강화	가해학생 선도 및 피해학생 치유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인프라 확대 구축, 위기 · 부적응 학생 예방 지원을 위한 담당자 역량강화	No Data
112	교육과학기술부	청소년 성문화교육 및 성보호 관련 홍보 강화	학교폭력 · 성폭력 예방프로그램 개발 · 보급 추진, 시도교육청 담당장학관, 장학사 회의를 통해 단위학교에서 성교육이 활성화 될 수 있는 안내 · 홍보	100,000
113	교육과학기술부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학교-지자체-정부 연계 체계 강화	학교폭력대책기획위원회를 중심으로 관계부처간 협력 강화	315,000
114	교육과학기술부	민관협력을 통한 등하굣길 안전 강화	배움터지킴이 근무 활동 강화 및 확대 배치, 초등학교 '등 · 하교안심알리미' 보급 확대	0
115	교육과학기술부	학교폭력 가해 · 피해 청소년 교육 및 치유 프로그램 강화	Wee 센터 등을 통한 학교폭력 가 · 피해 학생 특별상담 및 교육 실시	0
116	교육과학기술부	생활안전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실시	중 · 고등학생용 안전교육 교재개발 · 보급	0
117	교육과학기술부	청소년활동 시설 · 단체의 안전성 강화	청소년시설, 단체 등에 대한 학교안전공제 가입확대 추진	0
118	교육과학기술부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	자전거 안전하게 타기 교육프로그램 개발, 보급	0
119	교육과학기술부	청소년 건강증진을 위한 종합적 대책 추진	건강증진학교 시범운영 확대, 청소년 건강행태 온라인 조사 실시	200,000
120	교육과학기술부	신체적 · 정신적 건강환경 조성	청소년 수면을 저해하는 여건 개선-학교교과교습학원 및 교습소의 교습시간을 밤10시 제한하는 조례개정 추진	0
121	교육과학기술부	청소년 정신건강 및 자살예방 대책 추진	학생 정서 · 행동발달 선별검사 실시 및 추구관리 시범학교 운영, 학생정신건강관리 담당교사 연수, 학생자살위기관리 매뉴얼 개발, 보급	125,000
122	교육과학기술부	청소년 권리에 대한 교육실시 및 문화조성	학생선수보호규정 개정, 학교운동부지도자 자격기준 강화, 학생선수, 학교운동부지도자	0

No.	부처명	프로그램명	사업내용	예산(천원)
			인권교육 강화	
123	교육과학기술부	학교의 인성교육 및 올바른 언어습관 교육과정 내실화(교·사대 창의·인성교육 강화)	창의·인성교육 내용을 포함하는 과목을 교직과정 포함과 교양 필수로 개설 및 교육교재 개발 유도	0
124	외교통상부	외교부 견학 프로그램	외교통상부 견학 프로그램(정기, 수시견학) 실시	15,600
125	외교통상부	고등학교 방문 강연 프로그램	고등학교 방문 강연(강사:외교관)	4,500
126	외교통상부	대학생 외교통상부 워크샵	워크샵 실시(한국외교 및 국제관계 이슈에 대한 강의, 외교통상부 견학 등)	27,000
127	외교통상부	국제협력특강	국제개발협력 주제 특강(강사:협력단 임직원)	8,000
128	외교통상부	견학프로그램	한국국제협력단 견학(정기, 수시)	15,000
129	외교통상부	사진 및 수기 공모전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사진 및 수기 공모전	100,000
130	외교통상부	글짓기 공모전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글짓기 공모전	100,000
131	외교통상부	지구촌체험관 운영	나라별 및 지구촌 이슈별 전시전 실시	322,000
132	외교통상부	한·미 청소년 교류	미국청소년 대표단 방한초청사업	950,000
133	외교통상부	한·중 청소년 교류	중국 청년대표단 방한초청	850,000
134	외교통상부	한·일 대학생 교류	일본 대학생 대표단 방한초청사업	50,000
135	외교통상부	세계한인청소년대학생 모국연수	재외동포 청소년 모국연수	1,255,000
136	통일부	북한이탈청소년 교육·자립지원 강화	탈북청소년 교육지원, 장학사업, 미래리더 육성, 취업지원	5,519,890
137	통일부	디딤돌 학교 운영	특성화학교(한겨레중,고등학교) 지원	1,190,000
138	통일부	북한이탈주민 중고교 편입학·등록금 지원 및 대학 입학지원 강화	하나돌학교 초기적응교육 강화(하나돌학교 운영)	3,614,000
139	법무부	직업체험활동 및 진로상담 프로그램 확대	소년원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과 연계된 잡스쿨 프로그램	0
140	법무부	부모교육 확대	위기, 비행청소년의 보호자에 대한 교육 실시	0
141	법무부	부모교육 확대	보호관찰대상자의 보호자에 대한 교육 실시	0
142	법무부	찾아가는 가족관계 상담 및 가족캠프 운영	청소년과 보호자가 함께 참여하는 캠프 운영	40,000
143	법무부	‘지역사회청소년사회안전망’ 내 주요 유관기관과의 연계강화	유관기관과의 연계 활성화(지속적 업무협의로 정보공유 및 연계 강화)	0
144	법무부	취약계층청소년 자립지원 강화	취업성공패키지 운영(취업지원서비스), 경제적 자립 지원(사랑의 리퀘스트 후원금, 장학금 지급 등)	0
145	법무부	취약계층청소년 자립지원 강화	보호관찰 청소년에 대한 자립지원 체계 강화(직업훈련, 취업알선, 복학준선, 장학금 지급 등)	0
146	법무부	소년원 출원 청소년 교육적 선도 및 자립 지원	성공출원생 발굴, 인력풀 구축 및 다큐멘터리 제작, 보급	0

No.	부처명	프로그램명	사업내용	예산(천원)
147	법무부	청소년 대상 성범죄 대책 강화를 위한 추진체계 정비	청소년성문화센터 방문 체험교육, 성폭력예방 전문지도자교육	0
148	법무부	성범죄자 재범방지 조치 강화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제도 시행('11.7.)	160,000
149	법무부	성범죄자 재범방지 조치 강화	성폭력범죄자의 신상정보 공개제도 시행('11.4.)	899,000
150	법무부	성범죄자 재범방지 조치 강화	폭력사범에 대한 외출제한 명령 부과 요청, 성범죄 재범방지 특별프로그램 운영	0
151	법무부	성범죄 가해·피해 청소년 치료 및 재활교육 강화	성범죄 가해·피해청소년 교정·치료프로그램 운영	0
152	법무부	성범죄 가해·피해 청소년 치료 및 재활교육 강화	보호관찰 개시교육 시 성폭력 예방교육 강화, 성폭력치료 수강 프로그램 매뉴얼 수정, 보완 및 사내 강사 양성 등	0
153	법무부	청소년 성문화교육 및 성보호 관련 홍보 강화	성폭력예방 전문지도자 교육 실시	0
154	법무부	학교폭력 가해·피해 청소년 교육 및 치유 프로그램 강화	학교폭력 가해학생 대상 대안교육 실시	0
155	법무부	학교폭력 가해·피해 청소년 교육 및 치유 프로그램 강화	지역사회 일반청소년 대상 심리검사 실시	0
156	대검찰청	청소년 대상 성범죄 대책 강화를 위한 추진체계 정비	성폭력범죄 전문가 양성, 아동·지적장애여성 성폭력 범죄 수사에 전문가 활용, 성폭력(아동)전담검사 및 수사관의 수사역량 강화,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법 시행	0
157	국방부	청소년 안보체험활동 지원	청소년단체 호국수련활동, 육군 특전캠프, 해병대 캠프, 공군 항공우주캠프	0
158	국가보훈처	나라사랑 체험활동 프로그램 개발 보급	나라사랑 연수교육, 청소년 보훈캠프, 독립군 체험학교, 우리고장 현충시설 탐방, 국외 독립운동사적지 탐방, 청소년 나라사랑 봉사 프로그램	1,472,145
159	행정안전부	청소년 자원봉사활동 활성화	자원봉사 통합포털 시스템 연계 확대	176,000
160	행정안전부	인성함양을 위한 사회적 지원체계 강화	아름누리 지킴이 동아리 지원	260,000
161	행정안전부	가족친화 사회문화 조성	유연근무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운영실태 점검 및 홍보추진	0
162	행정안전부	청소년 인터넷 게임중독 예방 및 치료 강화	인터넷 중독 예방, 상담사업 강화를 위한 법률 정비	4,662,000
163	행정안전부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	전 시,군,구에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	40,800
164	행정안전부	민관협력을 통한 등하굣길 안전 강화	초등학교 보행안전 지도사(자원봉사자) 확대 배치	0
165	경찰청	과학수사요원 체험 등	과학수사체험학교	3,885
166	경찰청	명예경찰소년단 운영	명예경찰소년단 운영	511,200
167	경찰청	CCTV 설치 및 실시간 모니터링	범죄취약지역 CCTV 설치사업	No Data

No.	부처명	프로그램명	사업내용	예산(천원)
168	경찰청	성폭력 피해아동 조사시 전문가 참여제	성폭력 피해아동 조사시 전문가 참여 및 행동·진술 분석 실시	260,000
169	경찰청	아동안전지킴이 운영	아동안전지킴이 운영-집중순찰을 통해 아동보호활동 추진	0
170	경찰청	아동안전지킴이집 운영	아동지킴이집(문구점, 편의점, 약국 등)운영, 아동안전수호천사(야쿠르트여사, 집배원, 모범택시기사, 태권도 사범)활용	650,000
171	경찰청	소년법 조사시 전문가 참여제	소년법 조사시 전문가 참여	596,000
172	소방방재청	직업체험활동 및 진로상담 프로그램 확대	소방안전체험관 건립 등 체험시설 확충	8,000
173	소방방재청	생활안전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실시	안전사고에 대한 체험중심의 교재개발, 보급	7,500,000
174	소방방재청	청소년활동 시설·단체의 안전성 강화	공공기관 및 청소년 수련시설 안전점검	0
175	문화체육관광부	한옥체험 지원	한옥 개보수 및 편의시설 설치 지원, 한옥체험프로그램 운영 지원	1,800,000
176	문화체육관광부	초등학교 스포츠강사 배치 지원	스포츠강사(1,500명) 배치지원	26,490,000
177	문화체육관광부	제5회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	881,750
178	문화체육관광부	장애청소년 생활체육활동 지원	장애청소년체육활동 지원(장애청소년 체육교실, 장애유소년체육캠프, 어울림체육캠프)	865,600
179	문화체육관광부	생활체육 즐기기 문화보급	종목별 강습회 운영(트레킹, 달리기, 등산, 자전거, 인라인 등), 교재 제작	1,400,000
180	문화체육관광부	가족여가 프로그램 개발·운영	절기별 세시민속행사 추진, 야외캠핑장 조성 지원	22,661,000
181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여가캠핑장 조성사업	국민여가캠핑장 조성 지원	10,000,000
182	문화체육관광부	문화바우처	문화예술 프로그램 관람료 또는 구입비 지원(문화카드 운영)	34,700,000
183	문화체육관광부	여행바우처	여행바우처 사업지원	4,800,000
184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바우처	스포츠바우처 운영 및 확대	12,308,000
185	문화체육관광부	청소년 인터넷 게임중독 예방 및 치료 강화	청소년 게임 과몰입 예방 및 상담치료 지원	1,500,000
186	문화체육관광부	청소년유해매체물 규제·감시 강화 및 기업의 자율정화 유도	영상물 등급 표시제 및 내용정보표시제도 홍보(포스터 및 리플렛 제작·배포, 교육홍보 동영상제작, 캠페인)	70,000
187	문화체육관광부	청소년 저작권 교실	청소년 대상 저작권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연구	2,835,000
188	문화체육관광부	찾아가는 게임문화 교실 운영	게임문화 지도자 양성과정 개발, 초중학교 대상 찾아가는 게임문화교실 확대 운영	800,000
189	문화체육관광부	청소년 권리에 대한 교육실시 및 문화조성	영상물에 대한 등급분류 체험 프로그램 운영	10,000
190	문화체육관광부	학생선수 권익보호	스포츠 인권향상 교육 및 홍보	715,000
191	문화체육관광부	청소년 연예인 기본권 보호	대중문화예술산업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250,000

No.	부처명	프로그램명	사업내용	예산(천원)
			지원	
192	문화재청	문화유산 방문교육 지원 및 으뜸학교 지정·운영	문화유산 방문교육 지원: 주관단체 방문교사가 직접 학교를 방문, 문화유산교육실시	500,000
193	문화재청	고궁 청소년 문화학교	고궁에 대한 교육, 현장답사 및 체험학습 운영	70,000
194	문화재청	청소년 문화재 지킴이단	청소년문화재지킴이단 위촉 및 관리	0
195	문화체육관광부 국립국어원	아름다운 우리말 선생님	방송언어 품격향상을 위한 월별 분석 및 대안 발표(방송 프로그램의 시간당 저품격 언어 노출 횟수)	160,000
196	국립국어원	청소년 언어 실태 의식조사	청소년 언어 실태, 의식 전국조사, 청소년 언어 개선 효과 방송 프로그램 제작, 방영, 배포, 청소년 언어 개선 자율 활동 프로그램 기획, 운영	300,000
197	국립문화재 연구소	어린이 자연유산 체험학습 프로그램	어린이 자연유산 체험학습 프로그램 운영, 초등학생을 위한 자연문화재 교실 운영	0
198	국립민속박물관	어린이박물관 교육	박물관 교육프로그램 운영	519,004
199	국립어린이 청소년도서관	도서관과 함께 책읽기, 책 꾸러미 돌려보기 사업	도서관과 함께 책읽기(독서프로그램 운영, 어린이도서 지원 등)	514,000
200	국립어린이 청소년도서관	어린이·청소년 독서진흥	1318 책벌레들의 도서관 점령기(독서프로그램 운영·지원, 청소년추천도서 목록 개발 및 보급, 책벌레 리더스 구성 및 운영, 온라인커뮤니티 운영 및 운영사례집 발간)	295,000
201	국립어린이 청소년도서관	어린이·청소년 독서문화 프로그램 운영	어린이·청소년 독서문화 프로그램	137,420
202	국립어린이 청소년도서관	다문화가정을 위한 동화구연 콘텐츠 제작	다문화가정을 위한 동화구연 콘텐츠 개발, 보급	500,000
203	국립어린이 청소년도서관	가족 공유시간 지원 프로그램 운영	친구(가족)과 함께하는 영화, 아동극 감상 프로그램 운영	15,500
204	국립중앙도서관 국립장애인 도서관지원센터	2011년 제4회 장애아동·청소년 독후감대회	독후감대회	20,000
205	국립현대미술관	국립현대미술관 청소년 대상 교육프로그램 운영	기획전시 연계 청소년 감상교육, 문화소외지역 청소년 초청 교육	210,000
206	국립고궁박물관	청소년 대상 문화프로그램 운영	학교교육과 연계한 고궁박물관 체험교육 프로그램 운영	68,000
207	국립국악원 및 지방국악원	청소년 대상 국악공연 및 연수프로그램 운영	청소년 체험형 국악공연관람 및 교육, 체험활동 운영, 장애청소년 국악 교육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	468,590
208	고용노동부	종합직업체험관 신축(직업체험활동 인프라 확대)	종합직업체험관 건립	98,835,000
209	고용노동부	직업체험활동 및 진로상담 프로그램 확대	청년직장체험프로그램	7,583,000
210	고용노동부	직업체험활동 및 진로상담	직업체험 및 취업캠프	7,583,000

No.	부처명	프로그램명	사업내용	예산(천원)
		프로그램 확대		
211	고용노동부	청소년 근로보호 강화	연소자 다수 고용 사업장 근로감독 강화, 연소자 관련 노동관계법령 내용 교육, 홍보 강화	408,000
212	고용노동부	교육적 고용프로그램 운영 확대	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제(6개월 간 약정임금의 50% 지원, 정규직 채용시 추가 지원)	193,380,000
213	고용노동부	청년 일자리정보 제공 강화	청소년 워크넷 운영-취업관련 정보제공, 온라인 직업심리검사 실시 지원	10,939,000
214	고용노동부	청년 창업 지원	인턴십 지원(6개월 간 약정임금의 50% 지원, 성공수당 지급)	18,900,000
215	고용노동부	취약계층청소년 자립지원 강화	취업성공패키지 사업, 내일배움카드제, 취업사관학교	61,167,000
213	농림수산식품부	녹색농촌체험마을조성	녹색농촌체험마을 지원(지원액:체험관 건축, 체험프로그램 개발 등 사용)	13,062,000
217	농림수산식품부	농어업인 영유아 양육지원	농어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	61,922,000
218	농림수산식품부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 융자지원	학자금(등록금) 무이자 융자지원	94,500,000
219	농림수산식품부	건강한 식생활 확산	식생활 교육 및 체험 기회 확대를 위한 인프라 구축-전문인력 양성, 교육기관·우수 체험공간 지정 등	3,230,000
220	농촌진흥청	4-H 회원 농촌체험활동 프로그램 사업 활성화 지원	청년 4-H육성 활동, 청년4-H(영농) 리더십배양교육	1,322,000
221	산림청	청소년 산림체험·교육강화	학교 교육과정내 산림교육 강화, 산림체험 교육장 운영 활성화 및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 운영	8,847,000
222	지식경제부	기술꿈나무육성사업	청소년 미래 상상기술 경진대회 개최	644,000
223	지식경제부	한국청소년디자인전람회	디자인공모전	120,000
224	지식경제부	임베디드SW공모대전-주니어부문	임베디드SW공모대전	500,000
225	지식경제부	테크로드 챌린저-청소년 산업기술 체험 프로그램	산업기술 체험프로그램 운영	200,000
226	지식경제부	교육용로봇 시범사업 지원	교육용로봇 시범사업	5,000,000
227	중소기업청	중소기업 체험학습	중소기업 현장연수	1,200,000
228	중소기업청	2011년 청소년 비즈쿨 지원 사업(청년 창업 지원)	비즈쿨 페스티벌, 비즈쿨 캠프	4,387,000
229	특허청	발명교육활성화	발명교육 인프라 구축·운영(발명교실 운영, 교육 지원, 지도인력 역량강화,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발명대회 등)	9,759,000
230	공정거래위원회	청소년 연예인 기본권 보호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표준전속계약서 개정안 마련 및 시행	0
231	보건복지부	방과후 돌봄서비스 강화 및 서비스간 연계·조성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187,059,469
232	보건복지부	저소득층 청소년 지원 및 복지서비스 확대	드림스타트 사업	37,236,000

No.	부처명	프로그램명	사업내용	예산(천원)
233	보건복지부	저소득층 청소년 지원 및 복지서비스 확대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 확대	11,029,429
234	보건복지부	취약·소외계층 청소년 지원 강화	아동자립지원센터 운영 지원	918,000
235	보건복지부	장애청소년가족의 양육지원 강화	장애아가족양육지원(돌봄서비스, 휴식지원)	6,064,785
236	보건복지부	음주에 대한 사회적 관리체계 강화	보건·상담교사 음주예방교육, 청소년 금주신문 발간, 청소년주류불법판매 감시, 대학교절주동아리 지원	292,600
237	보건복지부	민관협력을 통한 등하교길 안전 강화	아동안전지킴이(퇴직경찰관 등) 배치	7,190,000
238	보건복지부	자녀학대 부모에 대한 친권상실제도 현실화 및 교육강화	학대피해아동 보호지원 강화	1,285,000
239	보건복지부	청소년건강행태 온라인조사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흡연, 음주, 비만 및 체중조절, 신체활동, 식습관 등)	458,000
240	보건복지부	청소년 정신건강 및 자살예방 대책 추진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정신건강검진	1,050,000
241	보건복지부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 추진체계 마련	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 운영	100,000
242	식약청	청소년 건강증진을 위한 종합적 대책 추진	건강한 식품선택을 위한 영양표시 제도 및 서비스	553,000
243	식약청	청소년의 건강한 식생활 여건 조성	학교주변지역 식품안전보호구역으로 지정	1,680,000
244	환경부	체험활동 정보제공체계 마련	환경교육인증 프로그램 소개 및 정보 제공(여가부, 교과부와 연계)	180,000
245	환경부	체험활동 프로그램 개발·보급	청소년 환경체험교육사업 확대, 강화	8,606,000
246	국토해양부	학교교육과 연계한 다양한 체험활동 마련	해양교육시범학교 운영, 해양체험 프로그램, 한국해양소년단 연맹활동 지원	1,350,000
247	국토해양부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임대 지원(가출청소년 보호지원 강화)	전세임대 지원	53,650,000
248	국토해양부	신도시 개발시 청소년 유해업소 격리구획화 시범도입(2010년)~2011년 해당사항 없음	신도시 개발시 청소년 유해업소 격리구획화 시범도입(동탄2신도시)	0
249	국토해양부	성범죄자 공동주택 취업제한 강화	공동 주택관리업(경비) 직원 채용시 성범죄 여부를 확인, 취업제한	0
250	방송통신위원회	가정의 청소년 인성 교육기능 강화	건전한 방송이용 환경 조성 특집 프로그램 제작, 방송 및 캠페인 추진	250,000
251	방송통신위원회	인성 및 언어순화 저해 매체환경 대응 강화	방송 콘텐츠 제작자에 대한 방송언어 등 교육 지원	2,293,000
252	방송통신위원회	인성 및 언어순화 저해 매체환경 대응 강화	정보통신망의 언어폭력에 대한 제재조치 마련	200,000
253	방송통신위원회	청소년유해매체물 규제·감시 강화 및 기업의 자율정화 유도	심의기구들의 심의결과와 심의사례 공유를 위한 디지털 방송심의시스템 구축	889,000

No.	부처명	프로그램명	사업내용	예산(천원)
254	방송통신위원회	청소년유해매체물 규제·감시 강화 및 기업의 자율정화 유도	청소년유해매체물 심의기구 심의결과 DB 구축 및 심의사례 공유	461,000
255	방송통신위원회	청소년의 비판적 미디어 이용능력 제고	인터넷 윤리교육	1,337,000
256	방송통신위원회	청소년 연예인 기본권 보호	청소년 연예인 보호 관련 법, 제도 개선시 즉시 반영 추진	0
257	국민권익위원회	청소년 시민의식과 공동체 의식 함양	청년을 주제로 한 국민참여 프로그램 운영, 대학생 청렴홍보단, 청렴연구시범학교 운영	712,000

2. 설문지

1) 중고등학생용 설문지

조사학교 ID
(기록하지 마세요)

청소년 정책에 대한 수요 조사 [중고등학생용]

안녕하십니까?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국무총리실에 소속된 국가 연구 기관으로 아동·청소년 관련 각종 조사 연구와 정책 개발 업무를 맡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본 연구원에서는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청소년의 욕구에 맞는 정책을 개발하고자 청소년 정책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응답하신 내용은 **무기명으로(이름을 밝히지 않고)** 처리되어 아동·청소년 관련 정책 수립을 위한 연구 자료로만 활용되므로 개인의 비밀이 철저히 보장됩니다. 또한 **여러분의 응답 내용은 학교에서나 선생님이 절대로 볼 수 없으며, 모든 결론에는 맞고 틀린 답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의견이 정확하게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설문에 솔직하고 성실하게 응답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바쁘신데 본 조사에 응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2년 5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137-715) 서울특별시 서초구 태봉로 114
<http://www.nypr.re.kr>

주관기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담당자: 윤철경 연구위원

(02)2188-8804

수행기관: (주)한국리서치

담당자: 박선경 대리/염숙희 팀장

(02)3014-1016/0131

조사 일시	2012년 ____월 ____일 ____시 ____분부터 ____시 ____분까지		
면접원 성명		면접원 ID	

설문지 작성 요령

설문지에는 여러분 자신에 관한 질문들이 들어있습니다. 사실대로 대답해야 하는 질문도 있고, 여러분의 생각을 밝혀야 하는 질문도 있습니다. 질문의 내용을 잘 읽고 정확하고 솔직하게 응답해 주세요. 만일 이해가 되지 않거나 궁금한 것이 있으면 앞에 계신 면접원 또는 선생님께 손을 들고 질문해도 좋습니다.

❖ 표시하는 방법

질문 다음에는 대개 1에서 7까지의 숫자 중 하나를 골라 답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왼쪽의 문장을 읽고, 여러분이 생각할 때 ‘전혀 중요하지 않음’이면 ①에, ‘중요하지 않은 편’이면 ③에, ‘중요함’이면 ⑥에, ‘매우 중요함’이면 ⑦에 동그라미(○)로 표시해 주세요.

<보기1>

	전혀 중요하지 않음	중요하지 않음	중요하지 않은 편	반반	중요한 편	중요함	매우 중요함
a 주5일제에 따른 토요 방과 후 학교	①	②	③	④	⑤	⑥	⑦

☞ 나는 주5일제에 따른 토요 방과 후 학교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⑦’에 ○를 표시했습니다.

❖ 표시한 것을 바꾸고 싶을 때

<보기2>와 같이 처음 답을 한 곳에 가위표(X)를 하고 맞다고 생각하는 답에 동그라미(○) 표시를 하십시오. 지우개 또는 볼펜으로 지우지 않아도 됩니다.

<보기2>

	전혀 중요하지 않음	중요하지 않음	중요하지 않은 편	반반	중요한 편	중요함	매우 중요함
a 주5일제에 따른 토요 방과 후 학교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청소년에 대한 의견

문 1. 우리나라 '청소년'하면 떠오르는 생각에 대한 질문입니다. 다음 항목에 대해 동의하는 정도를 전혀 그렇지 않다(1점) ~ 매우 그렇다(4점)로 응답해 주세요.

청소년에 대한 생각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청소년은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크다	①	②	③	④
2) 청소년은 권리의식은 높지만 책임감은 없다	①	②	③	④
3) 청소년은 불합리한 상황에서 용감하고 정의롭다	①	②	③	④
4) 청소년은 예의가 없다	①	②	③	④
5) 청소년은 새로운 일에 대한 도전정신이 강하다	①	②	③	④
6) 청소년은 어디로 튈지 모르기 때문에 무섭다	①	②	③	④
7) 청소년은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다	①	②	③	④
8) 청소년은 충동적이어서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다	①	②	③	④
9) 청소년은 어떤 문제에 창의적으로 접근한다	①	②	③	④
10) 청소년은 어떤 한 분야에 뛰어난 자질을 보이며 몰입하는 경향이 많다	①	②	③	④

문 2. 여러분은 정부가 청소년정책을 실시할 때 다음 연령 중 어느 연령대를 가장 중요시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먼저 우선순위를 중요한 순서대로 1, 2, 3, 4, 5, 6번으로 작성한 후, 각 연령대에 대해 중요한 정도를 전혀 중요하지 않다(1점) ~ 매우 중요하다(4점)로 응답해 주세요.

정책 대상 연령	우선순위	전혀 중요하지 않음	별로 중요하지 않음	대체로 중요함	매우 중요함
1) 초등학교 저학년 연령 (9세 ~ 10세)		①	②	③	④
2) 초등학교 고학년 연령 (11세 ~ 13세)		①	②	③	④
3) 중학생 연령 (14세 ~ 16세)		①	②	③	④
4) 고등학생 연령 (17 ~ 19세)		①	②	③	④
5) 대학생 연령 (20세 ~ 24세)		①	②	③	④
6) 나이에 상관 없이 부모로부터 자립할 때까지 (25세 이상)		①	②	③	④

문 3. 여러분이 맺고 있는 **인간관계나 고민거리**에 대한 질문입니다. 다음의 항목들로 인해 어느 정도 **스트레스를 받는지**를 전혀 받지 않는다(1점) ~ 매우 많이 받는다(4점)로 응답해 주세요.

구분	내용	전혀 받지 않음	별로 받지 않음	조금 받음	매우 많이 받음
인 간 관 계	1) 부모님과과의 관계	①	②	③	④
	2) 동성친구와의 관계 (예: 갈등, 따돌림, 폭력 등)	①	②	③	④
	3) 선후배와의 관계 (예: 갈등, 따돌림, 폭력 등)	①	②	③	④
	4) 이성친구와의 관계	①	②	③	④
	5) 선생님과의 관계	①	②	③	④
고 민 거 리	6) 학업문제 (시험, 성적문제 등)	①	②	③	④
	7) 진로문제 (진학, 취업 등 장래 걱정)	①	②	③	④
	8) 가정형편 (경제적 문제)	①	②	③	④
	9) 외모 (예: 비만, 키, 몸매, 생김새 등)	①	②	③	④
	10) 정신건강 (예: 우울, 불안, 중독 등)	①	②	③	④

문 4. 다음은 우리나라 **청소년정책이 해결해야 할 과제**들입니다. 먼저 다음 항목에 대해 **우선순위를** 빠른 해결이 필요한 순서대로 1, 2, 3, 4, 5, 6, 7번으로 작성한 후, 각 과제별로 **해결이 시급한 정도**를 전혀 시급하지 않다(1점) ~ 매우 시급하다(4점)로 응답해주세요.

청소년정책의 당면 과제	우선순위	전혀 중요하지 않음	별로 중요하지 않음	다체로 중요함	매우 중요함
1) 학교폭력 근절		①	②	③	④
2) 주5일제에 따른 토요일 방과 후 활동 지원		①	②	③	④
3) 청소년 일자리 개발 및 직업역량 강화, 취업·창업 지원		①	②	③	④
4) 가출, 폭력, 학업중단, 성매매 등 위기 청소년 지원		①	②	③	④
5) 문화, 예술, 스포츠 등 다양한 청소년 활동 기회 제공		①	②	③	④
6) 인터넷(게임 포함) 중독 등 청소년 정신건강 문제 예방 및 치료		①	②	③	④
7)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소년에 대한 지원 (학자금, 전세·임대 등 주거 지원)		①	②	③	④

청소년 정책에 대한 의견

문 5. 다음은 청소년들을 도울 수 있는 다양한 정책 영역입니다. 정책영역에 대한 설명을 읽은 후, 해당 정책 영역이 중요한 정도를 전혀 중요하지 않다(1점)~매우 중요하다(7점)로 응답해 주세요.

정책 영역	정책 내용	전혀 중요하지 않음	중요하지 않음	별로 중요하지 않음	반반	조금 중요함	중요함	매우 중요함
1) 청소년 교육	기초학력 신장, 학교 부적응 및 문제행동 예방, 맞벌이 가정 청소년 보호 등을 위한 인성교육 및 안전 교육, 방과 후 학습 및 체험활동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 청소년 고용	청소년들의 취업 및 창업을 지원 하기 위해 사회변화에 맞는 새로운 일자리 창출, 또는 이에 맞는 직업 훈련 등을 지원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 청소년 건강	청소년의 비만 예방, 영양 및 먹거리 안전, 정신 건강 등을 위한 보건 교육 및 건강검진 등 건강 서비스를 제공	①	②	③	④	⑤	⑥	⑦
4) 청소년 여가 활동	문화, 예술, 스포츠 동아리, 봉사활동 등 청소년들이 자유로이 참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활동	①	②	③	④	⑤	⑥	⑦
5) 청소년 국제 활동	국제교류, 해외봉사, 해외인턴, 국제기구(또는 행사) 참여 등 글로벌 사회에서 필요한 자질을 키우는 활동 및 교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6) 청소년 참여	자신이 사는 지역이나 국가의 청소년 정책을 청소년 대표가 참여하여 제안하고 결정하는 활동	①	②	③	④	⑤	⑥	⑦
7) 청소년 사회 통합	빈곤, 한 부모, 다문화, 성 차별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을 지원	①	②	③	④	⑤	⑥	⑦
8) 가족 지원	청소년의 가족문제 해결을 위한 지원 (부모-자녀와의 관계 개선을 위한 상담,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여가활동 지원 등)	①	②	③	④	⑤	⑥	⑦
9) 위기 청소년 지원	폭력, 가출, 학업중단, 약물 및 인터넷 중독, 범죄 등 위기에 빠진 청소년이 그 위기에서 벗어나도록 돕는 일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0) 청소년 유해 환경 단속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술, 담배 등)을 팔거나 유해한 행위(성매매, 폭력 등)를 하거나 청소년을 불법으로 고용하는 업소를 단속하고, 청소년에게 유해한 내용의 책이나 게임 등이 파지지 않도록 감시하고 단속하여 청소년 기본권 및 안전을 보호하는 일	①	②	③	④	⑤	⑥	⑦

※ 다음은 청소년 정책영역별 주요 사업에 대한 질문입니다.

문 6. 다음은 청소년 **교육** 영역의 주요 사업입니다. 각 항목에 대해 **중요한 정도**를 전혀 중요하지 않다(1점) ~ 매우 중요하다(7점)로 응답해 주세요.

주요 사업	전혀 중요하지 않음	중요하지 않음	별로 중요하지 않음	반반	조금 중요함	중요함	매우 중요함
1) 주5일제에 따른 토요 방과 후 학교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지원 (방과 후 학습, 학업부적응 예방 등)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 공동체 의식을 높이기 위한 인성교육· 시민교육(고운 말 쓰기, 환경보호, 나라사랑, 인권 교육 등)	①	②	③	④	⑤	⑥	⑦
4) 창의적 체험활동	①	②	③	④	⑤	⑥	⑦
5) 다양한 진로탐색을 위한 교육활동	①	②	③	④	⑤	⑥	⑦
6) 문제행동 예방 및 안전 교육 (폭력 및 약물 예방교육, 성 교육, 미디어 교육, 안전교육 등)	①	②	③	④	⑤	⑥	⑦

문 7. 다음은 청소년 **고용** 영역의 주요 사업입니다. 각 항목에 대해 **중요한 정도**를 전혀 중요하지 않다(1점) ~ 매우 중요하다(7점)로 응답해 주세요.

주요 사업	전혀 중요하지 않음	중요하지 않음	별로 중요하지 않음	반반	조금 중요함	중요함	매우 중요함
1) 청년(청소년) 일자리 개발 (다양한 직종에서 할 수 있는 직장체험 프로그램 및 인턴제 개발)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 청년(청소년) 창업 및 취업 지원 (취업 상담 및 정보 제공, 창업 훈련 및 창업자금 지원 등)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 일자리와 연계된 직업훈련 프로그램 강화 (직업전문학교 등)	①	②	③	④	⑤	⑥	⑦
4) 청소년 아르바이트 보호 (청소년 아르바이트 피해 신고센터 운영 등)	①	②	③	④	⑤	⑥	⑦

문 8. 다음은 청소년 **건강** 영역의 주요 사업입니다. 각 항목에 대해 **중요한 정도**를 전혀 중요하지 않다(1점) ~ 매우 중요하다(7점)로 응답해 주세요.

주요 사업	전혀 중요하지 않음	중요하지 않음	별로 중요하지 않음	반반	조금 중요함	중요함	매우 중요함
1) 청소년 수면권 보장 (밤 10시 이후 학원 수업 제한, 심야 시간 인터넷게임 제공시간 제한)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 건강한 음식 제공 (학교 내 탄산음료 패스트푸드 판매 금지, 과일 등 건강 음식 판매하는 건강매점 설치)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 정신건강 증진 (스트레스, 우울, 불안, ADHD 등 발견 및 치료, 자살예방 등)	①	②	③	④	⑤	⑥	⑦

문 9. 다음은 청소년 **여가활동** 영역의 주요 사업입니다. 각 항목에 대해 **중요한 정도**를 전혀 중요하지 않다(1점) ~ 매우 중요하다(7점)로 응답해 주세요.

주요 사업	전혀 중요하지 않음	중요하지 않음	별로 중요하지 않음	반반	조금 중요함	중요함	매우 중요함
1) 청소년 단체 및 동아리 활동 지원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 국제청소년성취포상제 (만14세~25세 청소년의 신체, 봉사, 자기 개발, 탐험 등 활동 실적에 대한 국제적 포상제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 청소년 자기도전 포상제 (만9세~13세 청소년의 다양한 활동실적에 대한 한국형 포상제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4) 청소년 문화예술교육 및 문화체험 지원 (문화예술 강사 지원 등)	①	②	③	④	⑤	⑥	⑦
5) 다양한 스포츠 활동 지원	①	②	③	④	⑤	⑥	⑦
6) 청소년 자원봉사활동	①	②	③	④	⑤	⑥	⑦

문 10. 다음은 청소년 **국제활동** 영역의 주요 사업입니다. 각 항목에 대해 **중요한 정도**를 전혀 중요하지 않다(1점) ~ 매우 중요하다(7점)로 응답해 주세요.

주요 사업	전혀 중요하지 않음	중요하지 않음	별로 중요하지 않음	반반	조금 중요함	중요함	매우 중요함
1) 국가 간 교류 등 국제교류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 글로벌 청년리더 양성 (해외취업, 해외인턴, 해외자원봉사)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 다양한 해외체험 활동 (조사연수, 국제회의 참가 등)	①	②	③	④	⑤	⑥	⑦
4) 국제교육 (문화다양성, 국제 이해 등)	①	②	③	④	⑤	⑥	⑦

문 11. 다음은 청소년 **참여** 영역의 주요 사업입니다. 각 항목에 대해 **중요한 정도**를 전혀 중요하지 않다(1점) ~ 매우 중요하다(7점)로 응답해 주세요.

주요 사업	전혀 중요하지 않음	중요하지 않음	별로 중요하지 않음	반반	조금 중요함	중요함	매우 중요함
1) 학교규칙 제정에 참여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 청소년시설 운영에 참여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 지방자치단체 청소년정책 결정에 참여 (청소년참여위원회)	①	②	③	④	⑤	⑥	⑦
4) 정부와 전국 청소년대표가 함께 하는 회의에서 청소년정책을 제안(청소년특별회의)	①	②	③	④	⑤	⑥	⑦

문 12. 다음은 **사회통합** 영역의 주요 사업입니다. 각 항목에 대해 **중요한 정도**를 전혀 중요하지 않다(1점) ~ 매우 중요하다(7점)로 응답해 주세요.

주요 사업	전혀 중요하지 않음	중요하지 않음	별로 중요하지 않음	반반	조금 중요함	중요함	매우 중요함
1)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 소년소녀가장, 조손 한부모 가정 청소년 지원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 탈북·다문화 청소년 지원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 장애 청소년 지원	①	②	③	④	⑤	⑥	⑦
4) 기출, 비행, 성매매, 학업중단, 각종 중독 등 위기청소년 지원	①	②	③	④	⑤	⑥	⑦
5) 미혼(부)모 청소년 지원	①	②	③	④	⑤	⑥	⑦

문 13. 다음은 청소년 가족지원 영역의 주요 사업입니다. 각 항목에 대해 **중요한 정도**를 전혀 중요하지 않다(1점) ~ 매우 중요하다(7점)로 응답해 주세요.

주요 사업	전혀 중요하지 않음	중요하지 않음	별로 중요하지 않음	반반	조금 중요함	중요함	매우 중요함
1) 부모교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 가족상담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 가족단위 여가 및 문화 프로그램 지원	①	②	③	④	⑤	⑥	⑦
4)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예비부모 교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문 14. 다음은 위기청소년(빈곤, 가족, 학업중단, 비행, 약물 중독 등 다양한 위기 상황에 처해 있는 청소년) 지원 영역의 주요 사업입니다. 각 항목에 대해 **중요한 정도**를 전혀 중요하지 않다(1점) ~ 매우 중요하다(7점)로 응답해 주세요.

주요 사업	전혀 중요하지 않음	중요하지 않음	별로 중요하지 않음	반반	조금 중요함	중요함	매우 중요함
1) 지역 사회 안전망 구축(상담지원센터, Wee Center 등에서 상담을 포함하여 청소년이 필요로 하는 여러 가지 도움을 연계해 줌)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 인터넷(게임) 중독 예방 및 치료 재활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 주거, 교육, 자립 지원 등 여러 가지 서비스 제공(청소년쉼터, 대안학교, 직업훈련, 취업지원, 전세임대 등)	①	②	③	④	⑤	⑥	⑦
4) 생활비 및 용돈 등 경제적 지원(청소년 특별지원)	①	②	③	④	⑤	⑥	⑦
5) 위기 예방(폭력, 범죄, 성 등) 교육 및 치료재활	①	②	③	④	⑤	⑥	⑦

문 15. 다음은 청소년 유해 환경 단속 영역의 주요 사업입니다. 각 항목에 대해 **중요한 정도**를 전혀 중요하지 않다(1점) ~ 매우 중요하다(7점)로 응답해 주세요.

주요 사업	전혀 중요하지 않음	중요하지 않음	별로 중요하지 않음	반반	조금 중요함	중요함	매우 중요함
1) 청소년 유해업소 감사 단속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 청소년에게 술 담배 판매 금지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 청소년 유해매체 심의 강화	①	②	③	④	⑤	⑥	⑦
4) 청소년 대상 성 범죄 방지	①	②	③	④	⑤	⑥	⑦
5) 청소년 안전 및 기본권 보호를 위한 규제	①	②	③	④	⑤	⑥	⑦

배경 질문

※ 다음은 설문 조사의 결과분석을 위한 질문입니다. 응답 내용에 대한 비밀은 보장되거나 솔직하게 응답해 주세요.

배문1. 학생의 성별은?

- ① 남자 ② 여자

배문2. 아래에 학생의 가족구성원을 모두 표시해 주십시오.

※ 가족구성원 중에서 결혼을 해 따로 살고 있는 가족(예: 시집간 언니)은 제외하고,

1) 함께 살고 있거나,

2) 직장 또는 학교 때문에 따로 떨어져 살고 있는 가족은 모두 표시해 주세요.

※ 예 1: 시집 가서 따로 사는 언니, 삼촌 집에서 사는 시촌형 ☞ 표시하지 않습니다.

예 2: (같이 살다가) 직장이 지방에 있어서 내려가 있는 큰형 ☞ 표시합니다.

- ① (외)할아버지 ② (외)할머니 ③ 아버지 ④ 어머니
⑤ 형제 또는 자매 ⑥ 친척 ⑦ 기타() ⑧ 없음

배문3. 부모님은 학교를 어디까지 다니셨나요? 아래에 부모님께서 완전히 마치신(졸업하신) 학교를

표시해 주세요. (중간에 학교를 그만 둔 경우는 '졸업'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중학교를 다니다가 졸업하지 않고 중간에 그만둔 경우 초등학교 졸업(②번)에 표시합니다)

	학교 안다님	초등학교 졸업	중학교 졸업	고등학교 졸업	2-3년제 대학 졸업	4년제 대학 졸업	대학원 졸업 (석사박사)	잘 모르겠음
1. 아버지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2. 어머니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배문4. 부모님께서 현재 직업을 갖고 계십니까? 부모님 각각에 대하여 응답해 주세요.

	현재 직업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	
	없음	있음
1. 아버지	①	②
2. 어머니	①	②

배문5. 학생의 학업 성적(2012년 1학기)이 반에서 대략 어디에 해당한다고 생각합니까?

※ 다른 사람에게 알려지지 않으므로 솔직하게 응답해 주세요.

매우 못하는 수준	못하는 수준	중 간	잘하는 수준	매우 잘하는 수준
①	②	③	④	⑤

배문6. 학생의 가정 형편(경제 수준)이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한다고 생각합니까?

매우 못산다		← 보통 수준 →				매우 잘산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배문7. 현재 살고 있는 집은 어디입니까?

()시/도 ()시/군/구 ()읍/면/동

※ 사는 곳이 서울시 서초구 우면동이라면 (서울)시/도 (서초)시/군/구 (우면)읍/면/동으로 표기함

※ 사는 곳이 충청남도 아산시 배방읍이라면 (충청남)시/도 (아산)시/군/구 (배방)읍/면/동으로 표기함

♣ 조사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2) 대학생용 설문지

조사학교 ID
(기록하지 마세요)

청소년 정책에 대한 수요 조사 [대학생용]

안녕하십니까?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국무총리 산하 정책 연구 기관으로 아동·청소년 관련 각종 조사 연구와 정책 개발 업무를 맡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본 연구원에서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청소년의 욕구에 맞는 정책을 개발하고자 청소년 정책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응답하신 내용은 통계법 제33조에 의거, 조사결과와 통계적인 분석을 통해 아동·청소년 관련 정책 수립을 위한 연구 자료로만 활용되므로 개인의 비밀이 철저히 보장됩니다.

여러분의 의견이 정확하게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설문에 솔직하고 성실하게 응답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바쁘신데 본 조사에 응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2년 5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137-715) 서울특별시 서초구 태봉로 114

<http://www.nypi.re.kr>

주관기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담당자: 윤철경 연구위원	(02)2188-8804
수행기관: (주)한국리서치	담당자: 박선경 대리/염숙희 팀장	(02)3014-1016/0131

조사 일시	2012년 ____월 ____일 ____시 ____분부터 ____시 ____분까지		
면접원 성명		면접원 ID	
응답자 성명		응답자 휴대전화	

선정 질문

선문1. 귀하는 현재 다니고 있는 학교에서 몇 학년입니까?

- ① 1학년 → 면접중단
- ② 2학년 → 선문2로
- ③ 3학년 → 면접중단
- ④ 4학년 → 면접중단

선문2. 귀하의 성별은?

- ① 남자
- ② 여자

선문3. 귀하께서 현재 다니고 있는 학교의 유형은 무엇입니까?

- ① 23년제 대학
- ② 4년제 대학교

선문4. 전공 계열은 무엇입니까?

- ① 인문·사회·교육 계열
- ② 이공·의학 계열
- ③ 예·체능 계열

청소년에 대한 의견

문 1. 우리나라 '청소년'하면 떠오르는 생각에 대한 질문입니다. 다음 항목에 대해 동의하는 정도를 전혀 그렇지 않다(1 점) ~ 매우 그렇다(4점)로 응답해 주세요.

청소년에 대한 생각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청소년은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크다	①	②	③	④
2) 청소년은 권리의식은 높지만 책임감은 없다	①	②	③	④
3) 청소년은 불합리한 상황에서 용감하고 정의롭다	①	②	③	④
4) 청소년은 예의가 없다	①	②	③	④
5) 청소년은 새로운 일에 대한 도전정신이 강하다	①	②	③	④
6) 청소년은 어디로 튈지 모르기 때문에 무섭다	①	②	③	④
7) 청소년은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다	①	②	③	④
8) 청소년은 충동적이어서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다	①	②	③	④
9) 청소년은 어떤 문제에 창의적으로 접근한다	①	②	③	④
10) 청소년은 어떤 한 분야에 뛰어난 자질을 보이며 몰입하는 경향이 많다	①	②	③	④

문 2. 귀하께서는 정부가 청소년정책을 실시할 때 다음 연령 중 어느 연령대를 가장 중요시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먼저 우선순위를 중요한 순서대로 1, 2, 3, 4, 5, 6번으로 작성한 후, 각 연령대에 대해 중요한 정도를 전혀 중요하지 않다(1점) ~ 매우 중요하다(4점)로 응답해 주세요.

정책 대상 연령	우선순위	전혀 중요하지 않음	별로 중요하지 않음	대체로 중요함	매우 중요함
1) 초등학교 저학년 연령 (9세 ~ 10세)		①	②	③	④
2) 초등학교 고학년 연령 (11세 ~ 13세)		①	②	③	④
3) 중학생 연령 (14세 ~ 16세)		①	②	③	④
4) 고등학생 연령 (17 ~ 19세)		①	②	③	④
5) 대학생 연령 (20세 ~ 24세)		①	②	③	④
6) 나이에 상관 없이 부모로부터 자립할 때까지 (25세 이상)		①	②	③	④

문 3. 귀하께서 맺고 있는 **인간관계나 고민거리**에 대한 질문입니다. 다음의 항목들로 인해 어느 정도 **스트레스를 받는지**를 전혀 받지 않는다(1점) ~ 매우 많이 받는다(4점)로 응답해 주세요.

구분	내용	전혀 받지 않음	별로 받지 않음	조금 받음	매우 많이 받음
인 간 관 계	1) 부모님과 관계	①	②	③	④
	2) 동성친구와의 관계 (예: 갈등, 따돌림, 폭력 등)	①	②	③	④
	3) 선후배와의 관계 (예: 갈등, 따돌림, 폭력 등)	①	②	③	④
	4) 이성친구와의 관계	①	②	③	④
	5) 교수님과의 관계	①	②	③	④
고 민 거 리	6) 학업문제 (시험, 성적문제 등)	①	②	③	④
	7) 진로문제 (진학, 취업 등 장래 걱정)	①	②	③	④
	8) 가정형편 (경제적 문제)	①	②	③	④
	9) 외모 (예: 비만, 키, 몸매, 생김새 등)	①	②	③	④
	10) 정신건강 (예: 우울, 불안, 중독 등)	①	②	③	④

문 4. 다음은 우리나라 **청소년정책이 해결해야 할 과제**들입니다. 먼저 다음 항목에 대해 **우선순위를** 빠른 해결이 필요한 순서대로 1, 2, 3, 4, 5, 6, 7번으로 작성한 후, 각 과제별로 **해결이 시급한 정도**를 전혀 시급하지 않다(1점) ~ 매우 시급하다(4점)로 응답해주세요.

청소년정책의 당면 과제	우선순위	전혀 중요하지 않음	별로 중요하지 않음	다체로 중요함	매우 중요함
1) 학교폭력 근절		①	②	③	④
2) 주5일제에 따른 토요일 방과 후 활동 지원		①	②	③	④
3) 청소년 일자리 개발 및 직업역량 강화, 취업·창업 지원		①	②	③	④
4) 가출, 폭력, 학업중단, 성매매 등 위기 청소년 지원		①	②	③	④
5) 문화, 예술, 스포츠 등 다양한 청소년 활동 기회 제공		①	②	③	④
6) 인터넷(게임 포함) 중독 등 청소년 정신건강 문제 예방 및 치료		①	②	③	④
7)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소년에 대한 지원 (학자금, 전세·임대 등 주거 지원)		①	②	③	④

청소년 정책에 대한 의견

문 5. 다음은 청소년들을 도울 수 있는 다양한 정책 영역입니다. 정책영역에 대한 설명을 읽은 후, 해당 정책 영역이 중요한 정도를 전혀 중요하지 않다(1점)~매우 중요하다(7점)로 응답해 주세요.

정책 영역	정책 내용	전혀 중요하지 않음	중요하지 않음	별로 중요하지 않음	반반	조금 중요함	중요함	매우 중요함
1) 청소년 교육	기초학력 신장, 학교 부적응 및 문제행동 예방, 맞벌이 가정 청소년 보호 등을 위한 인성교육 및 안전 교육, 방과 후 학습 및 체험활동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 청소년 고용	청소년들의 취업 및 창업을 지원 하기 위해 사회변화에 맞는 새로운 일자리 창출, 또는 이에 맞는 직업 훈련 등을 지원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 청소년 건강	청소년의 비만 예방, 영양 및 먹거리 안전, 정신 건강 등을 위한 보건 교육 및 건강검진 등 건강 서비스를 제공	①	②	③	④	⑤	⑥	⑦
4) 청소년 여가 활동	문화, 예술, 스포츠 동아리, 봉사활동 등 청소년들이 자유로이 참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활동	①	②	③	④	⑤	⑥	⑦
5) 청소년 국제 활동	국제교류, 해외봉사, 해외인턴, 국제기구(또는 행사) 참여 등 글로벌 사회에서 필요한 자질을 키우는 활동 및 교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6) 청소년 참여	자신이 사는 지역이나 국가의 청소년 정책을 청소년 대표가 참여하여 제안하고 결정하는 활동	①	②	③	④	⑤	⑥	⑦
7) 청소년 사회 통합	빈곤, 한 부모, 다문화, 성 차별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을 지원	①	②	③	④	⑤	⑥	⑦
8) 가족 지원	청소년의 가족문제 해결을 위한 지원 (부모-자녀와의 관계 개선을 위한 상담,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여가활동 지원 등)	①	②	③	④	⑤	⑥	⑦
9) 위기 청소년 지원	폭력, 가출, 학업중단, 약물 및 인터넷 중독, 범죄 등 위기에 빠진 청소년이 그 위기에서 벗어나도록 돕는 일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0) 청소년 유해 환경 단속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술, 담배 등)을 팔거나 유해한 행위(성매매, 폭력 등)를 하거나 청소년을 불법으로 고용하는 업소를 단속하고, 청소년에게 유해한 내용의 책이나 게임 등이 파지지 않도록 감시하고 단속하며 청소년 기본권 및 안전을 보호하는 일	①	②	③	④	⑤	⑥	⑦

※ 다음은 청소년 정책영역별 주요 사업에 대한 질문입니다.

문 6. 다음은 청소년 **교육** 영역의 주요 사업입니다. 각 항목에 대해 **중요한 정도**를 전혀 중요하지 않다(1점) ~ 매우 중요하다(7점)로 응답해 주세요.

주요 사업	전혀 중요하지 않음	중요하지 않음	별로 중요하지 않음	반반	조금 중요함	중요함	매우 중요함
1) 주5일제에 따른 토요 방과 후 학교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지원 (방과 후 학습, 학업부적응 예방 등)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 공동체 의식을 높이기 위한 인성교육· 시민교육(고운 말 쓰기, 환경보호, 나라 사랑, 인권 교육 등)	①	②	③	④	⑤	⑥	⑦
4) 창의적 체험활동	①	②	③	④	⑤	⑥	⑦
5) 다양한 진로탐색을 위한 교육활동	①	②	③	④	⑤	⑥	⑦
6) 문제행동 예방 및 안전 교육 (폭력 및 약물 예방교육, 성 교육, 미디어 교육, 안전교육 등)	①	②	③	④	⑤	⑥	⑦

문 7. 다음은 청소년 **고용** 영역의 주요 사업입니다. 각 항목에 대해 **중요한 정도**를 전혀 중요하지 않다(1점) ~ 매우 중요하다(7점)로 응답해 주세요.

주요 사업	전혀 중요하지 않음	중요하지 않음	별로 중요하지 않음	반반	조금 중요함	중요함	매우 중요함
1) 청년(청소년) 일자리 개발 (다양한 직종에서 할 수 있는 직장체험 프로그램 및 인턴제 개발)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 청년(청소년) 창업 및 취업 지원 (취업 상담 및 정보 제공, 창업 훈련 및 창업자금 지원 등)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 일자리와 연계된 직업훈련 프로그램 강화 (직업전문학교 등)	①	②	③	④	⑤	⑥	⑦
4) 청소년 아르바이트 보호 (청소년 아르바이트 피해 신고센터 운영 등)	①	②	③	④	⑤	⑥	⑦

문 8. 다음은 청소년 **건강** 영역의 주요 사업입니다. 각 항목에 대해 **중요한 정도**를 전혀 중요하지 않다(1점) ~ 매우 중요하다(7점)로 응답해 주세요.

주요 사업	전혀 중요하지 않음	중요하지 않음	별로 중요하지 않음	반반	조금 중요함	중요함	매우 중요함
1) 청소년 수면권 보장 (밤 10시 이후 학원 수업 제한, 심야 시간 인터넷게임 제공시간 제한)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 건강한 음식 제공 (학교 내 탄산음료·패스트푸드 판매 금지, 과일 등 건강 음식 판매하는 건강매점 설치)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 정신건강 증진 (스트레스, 우울, 불안, ADHD 등 발견 및 치료, 자살예방 등)	①	②	③	④	⑤	⑥	⑦

문 9. 다음은 청소년 **여가활동** 영역의 주요 사업입니다. 각 항목에 대해 **중요한 정도**를 전혀 중요하지 않다(1점) ~ 매우 중요하다(7점)로 응답해 주세요.

주요 사업	전혀 중요하지 않음	중요하지 않음	별로 중요하지 않음	반반	조금 중요함	중요함	매우 중요함
1) 청소년 단체 및 동아리 활동 지원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 국제청소년성취포상제 (만14세~25세 청소년의 신체, 봉사, 자기 개발, 탐험 등 활동 실적에 대한 국제적 포상제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 청소년 자기도전 포상제 (만9세~13세 청소년의 다양한 활동실적에 대한 한국형 포상제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4) 청소년 문화예술교육 및 문화체험 지원 (문화예술 강사 지원 등)	①	②	③	④	⑤	⑥	⑦
5) 다양한 스포츠 활동 지원	①	②	③	④	⑤	⑥	⑦
6) 청소년 자원봉사활동	①	②	③	④	⑤	⑥	⑦

문 10. 다음은 청소년 **국제활동** 영역의 주요 사업입니다. 각 항목에 대해 **중요한** 정도를 전혀 중요하지 않다 (1점) ~ 매우 중요하다(7점)로 응답해 주세요.

주요 사업	전혀 중요하지 않음	중요하지 않음	별로 중요하지 않음	반반	조금 중요함	중요함	매우 중요함
1) 국가 간 교류 등 국제교류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 글로벌 청년리더 양성 (해외취업, 해외인턴, 해외자원봉사)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 다양한 해외체험 활동 (조사연구, 국제회의 참가 등)	①	②	③	④	⑤	⑥	⑦
4) 국제교육 (문화다양성, 국제 이해 등)	①	②	③	④	⑤	⑥	⑦

문 11. 다음은 청소년 **참여** 영역의 주요 사업입니다. 각 항목에 대해 **중요한** 정도를 전혀 중요하지 않다(1점) ~ 매우 중요하다(7점)로 응답해 주세요.

주요 사업	전혀 중요하지 않음	중요하지 않음	별로 중요하지 않음	반반	조금 중요함	중요함	매우 중요함
1) 학교규칙 제정에 참여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 청소년시설 운영에 참여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 지방자치단체 청소년정책 결정에 참여 (청소년참여위원회)	①	②	③	④	⑤	⑥	⑦
4) 정부와 전국 청소년대표가 함께 하는 회의에서 청소년정책을 제안(청소년특별회의)	①	②	③	④	⑤	⑥	⑦

문 12. 다음은 청소년 **사회통합** 영역의 주요 사업입니다. 각 항목에 대해 **중요한** 정도를 전혀 중요하지 않다 (1점) ~ 매우 중요하다(7점)로 응답해 주세요.

주요 사업	전혀 중요하지 않음	중요하지 않음	별로 중요하지 않음	반반	조금 중요함	중요함	매우 중요함
1)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 소년소녀가장, 조손 한부모 가정 청소년 지원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 탈북·다문화 청소년 지원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 장애 청소년 지원	①	②	③	④	⑤	⑥	⑦
4) 가출, 비행, 성매매, 학업중단, 각종 중독 등 위기청소년 지원	①	②	③	④	⑤	⑥	⑦
5) 미혼(부)모 청소년 지원	①	②	③	④	⑤	⑥	⑦

문 13. 다음은 청소년 가족 지원영역의 주요 사업입니다. 각 항목에 대해 **중요한 정도**를 전혀 중요하지 않다(1점) ~ 매우 중요하다(7점)로 응답해 주세요.

주요 사업	전혀 중요하지 않음	중요하지 않음	별로 중요하지 않음	반반	조금 중요함	중요함	매우 중요함
1) 부모교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 가족상담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 가족단위 여가 및 문화 프로그램 지원	①	②	③	④	⑤	⑥	⑦
4)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예비부모 교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문 14. 다음은 위기청소년(빈곤, 가족, 학업중단, 비행, 약물 중독 등 다양한 위기 상황에 처해 있는 청소년) 지원 영역의 주요 사업입니다. 각 항목에 대해 **중요한 정도**를 전혀 중요하지 않다(1점) ~ 매우 중요하다(7점)로 응답해 주세요.

주요 사업	전혀 중요하지 않음	중요하지 않음	별로 중요하지 않음	반반	조금 중요함	중요함	매우 중요함
1) 지역 사회 안전망 구축(상담지원센터, Wee Center 등에서 상담을 포함하여 청소년이 필요로 하는 여러 가지 도움을 연계해 줌)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 인터넷(게임) 중독 예방 및 치료 재활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 주거, 교육, 자립 지원 등 여러 가지 서비스 제공(청소년쉼터, 대안학교, 직업훈련, 취업지원, 전세임대 등)	①	②	③	④	⑤	⑥	⑦
4) 생활비 및 용돈 등 경제적 지원(청소년 특별지원)	①	②	③	④	⑤	⑥	⑦
5) 위기 예방(폭력, 범죄, 성 등) 교육 및 치료재활	①	②	③	④	⑤	⑥	⑦

문 15. 다음은 청소년 유해 환경 단속 영역의 주요 사업입니다. 각 항목에 대해 **중요한 정도**를 전혀 중요하지 않다(1점) ~ 매우 중요하다(7점)로 응답해 주세요.

주요 사업	전혀 중요하지 않음	중요하지 않음	별로 중요하지 않음	반반	조금 중요함	중요함	매우 중요함
1) 청소년 유해업소 감사 단속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 청소년에게 술 담배 판매 금지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 청소년 유해매체 심의 강화	①	②	③	④	⑤	⑥	⑦
4) 청소년 대상 성 범죄 방지	①	②	③	④	⑤	⑥	⑦
5) 청소년 안전 및 기본권 보호를 위한 규제	①	②	③	④	⑤	⑥	⑦

문16. 우리나라 청소년정책에서 대학생 등 후기 청소년 세대를 위한 정책은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다음 대학생 등 후기 청소년 세대를 위한 정책 항목에 대해 중요한 정도를 전혀 중요하지 않다(1점) ~ 매우 중요하다(7점)로 응답해 주세요.

주요 사업	전혀 중요하지 않음	중요하지 않음	별로 중요하지 않음	반반	조금 중요함	중요함	매우 중요함
1) 학자금 지원 (장학금 지원, 등록금 인하, 학자금 대출 등)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 주거 지원 (기숙사, 대학생 임대주택 및 전세 임대 지원)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 상담 지원 (전공교수와 삶의 전반적 문제 상담 등 심리정서적 지원)	①	②	③	④	⑤	⑥	⑦
4) 문화예술 향유 기회 지원 (공연 관람 등에 대한 할인 등)	①	②	③	④	⑤	⑥	⑦
5) 대학생을 지원하는 다양한 사업에 대한 정보 제공	①	②	③	④	⑤	⑥	⑦
6) 대학생의 글로벌 역량 강화 지원 (해외봉사 및 국제교류, 해외 인턴십 등)	①	②	③	④	⑤	⑥	⑦

배경 질문

※ 다음은 설문 조사의 결과분석을 위한 질문입니다. 응답 내용에 대한 비밀은 보장되오니 솔직하게 응답해 주세요.

배문1. 아래에 귀하의 가족구성원을 모두 표시해 주십시오.

※ 가족구성원 중에서 결혼을 해 따로 살고 있는 가족(예: 시집간 언니)은 제외하고.

1) 함께 살고 있거나.

2) 직장 또는 학교 때문에 따로 떨어져 살고 있는 가족은 모두 표시해 주세요.

※ 예 1: 시집 가서 따로 사는 언니, 삼촌 집에서 사는 시촌형 ☞ 표시하지 않습니다.

예 2: (같이 살다가) 직장이 지방에 있어서 내려가 있는 큰형 ☞ 표시합니다.

① (외)할아버지 ② (외)할머니 ③ 아버지 ④ 어머니

⑤ 형제 또는 자매 ⑥ 친척 ⑦ 기타() ⑧ 없음

배문2. 부모님은 학교를 어디까지 다니셨나요? 아래에 부모님께서 완전히 마치신(졸업하신) 학교를 표시해 주세요. (중간에 학교를 그만 둔 경우는 '졸업'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중학교를 다니다가 졸업하지 않고 중간에 그만둔 경우 초등학교 졸업(②번)에 표시합니다)

	학교 만다님	초등학교 졸업	중학교 졸업	고등학교 졸업	2-3년제 대학 졸업	4년제 대학 졸업	대학원 졸업 (석사박사)	잘 모르겠음
1. 아버지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2. 어머니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배문3. 부모님께서 현재 직업을 갖고 계십니까? 부모님 각각에 대하여 응답해 주세요.

	현재 직업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	
	있음	없음
1. 아버지	①	②
2. 어머니	①	②

배문4. 귀하께서는 현재 대학에 다니기 위해 본가를 떠나 다른 곳에 거주하고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요

배문5. 귀하의 학업 성적(2012년 1학기)이 과에서 대략 어디에 해당한다고 생각합니까?

※ 다른 사람에게 알려지지 않으므로 솔직하게 응답해 주세요.

매우 못하는 수준	못하는 수준	중 간	잘하는 수준	매우 잘하는 수준
①	②	③	④	⑤

배문6. 귀하의 가정 형편(경제 수준)이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한다고 생각합니까?

매우 못산다	<————— 보통 수준 —————>					매우 잘산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배문7. 현재 살고 있는 집은 어디입니까?

()시/도 ()시/군/구 ()읍/면/동

※ 사는 곳이 서울시 서초구 우면동이라면 (서울)도 (서초)시/군/구 (우면)읍/면/동으로 표기함

※ 사는 곳이 충청남도 아산시 배방읍이라면 (충청남)시 (아산)군/구 (배방)읍/면/동으로 표기함

♣ 조사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3) 학부모용 설문지

청소년 정책에 대한 수요 조사 [학부모용]

안녕하십니까?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국무총리 산하 정책 연구 기관으로 아동·청소년 관련 각종 조사 연구와 정책 개발 업무를 맡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본 연구원에서는 학부모님을 대상으로 청소년의 욕구에 맞는 정책을 개발하고자 청소년 정책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응답하신 내용은 통계법 제33조에 의거, 조사결과와 통계적인 분석을 통해 아동·청소년 관련 정책 수립을 위한 연구 자료로만 활용되므로 개인의 비밀이 철저히 보장됩니다.

여러분의 의견이 정확하게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설문에 솔직하고 성실하게 응답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바쁘신데 본 조사에 응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2년 5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137-715) 서울특별시 서초구 태봉로 114

<http://www.nypi.re.kr>

주관기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담당자: 윤철경 연구위원

(02)2188-8804

수행기관: (주)한글리서치

담당자: 박선경 대리/염숙희 팀장

(02)3014-1016/0131

선정 질문

선문1. 귀하께서는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가 있습니까?

- ① 있다 ⇒ **선문 2로 이동**
 ② 없다 ⇒ **질문 중단**

선문2. 귀하의 자녀는 몇 학년입니까? 재학 중인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첫째 자녀를 기준으로 응답해 주십시오.

① 초등학교 1학년	② 초등학교 2학년	③ 초등학교 3학년
④ 초등학교 4학년	⑤ 초등학교 5학년	⑥ 초등학교 6학년
⑦ 중학교 1학년	⑧ 중학교 2학년	⑨ 중학교 3학년
⑩ 고등학교 1학년	⑪ 고등학교 2학년	⑫ 고등학교 3학년

청소년에 대한 의견

문 1. 우리나라 '청소년'하면 떠오르는 생각에 대한 질문입니다. 다음 항목에 대해 동의하는 정도를 전혀 그렇지 않다(1 점) ~ 매우 그렇다(4점)로 응답해 주세요.

청소년에 대한 생각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청소년은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크다	①	②	③	④
2) 청소년은 권리의식은 높지만 책임감은 없다	①	②	③	④
3) 청소년은 불합리한 상황에서 용감하고 정의롭다	①	②	③	④
4) 청소년은 예의가 없다	①	②	③	④
5) 청소년은 새로운 일에 대한 도전정신이 강하다	①	②	③	④
6) 청소년은 어디로 튈지 모르기 때문에 무섭다	①	②	③	④
7) 청소년은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다	①	②	③	④
8) 청소년은 충동적이어서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다	①	②	③	④
9) 청소년은 어떤 문제에 창의적으로 접근한다	①	②	③	④
10) 청소년은 어떤 한 분야에 뛰어난 자질을 보이며 몰입하는 경향이 많다	①	②	③	④

문 2. 귀하께서는 정부가 청소년정책을 실시할 때 다음 연령 중 어느 연령대를 가장 중요시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먼저 우선순위를 중요한 순서대로 1, 2, 3, 4, 5, 6번으로 작성한 후, 각 연령대에 대해 중요한 정도를 전혀 중요하지 않다(1점) ~ 매우 중요하다(4점)로 응답해 주세요.

정책 대상 연령	우선순위	전혀 중요하지 않음	별로 중요하지 않음	대체로 중요함	매우 중요함
1) 초등학교 저학년 연령 (9세 ~ 10세)		①	②	③	④
2) 초등학교 고학년 연령 (11세 ~ 13세)		①	②	③	④
3) 중학생 연령 (14세 ~ 16세)		①	②	③	④
4) 고등학생 연령 (17 ~ 19세)		①	②	③	④
5) 대학생 연령 (20세 ~ 24세)		①	②	③	④
6) 나이에 상관 없이 부모로부터 자립할 때까지 (25세 이상)		①	②	③	④

문 3. 다음은 우리나라 청소년정책이 해결해야 할 과제들입니다. 다음 항목에 대해 ■른 해결이 필요한 정도를 전혀 시급하지 않다(1점) ~ 매우 시급하다(4점)로 응답해주세요.

청소년정책의 당면 과제	전혀 시급하지 않음	별로 시급하지 않음	조금 시급함	매우 시급함
1) 학교폭력 근절	①	②	③	④
2) 주5일제에 따른 토요일 방과 후 활동 지원	①	②	③	④
3) 청소년 일자리 개발 및 직업역량 강화, 취업·창업 지원	①	②	③	④
4) 가출, 폭력, 학업중단, 성매매 등 위기 청소년 지원	①	②	③	④
5) 문화, 예술, 스포츠 등 다양한 청소년 활동 기회 제공	①	②	③	④
6) 인터넷(게임 포함) 중독 등 청소년 정신건강 문제 예방 및 치료	①	②	③	④
7)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소년에 대한 지원 (학자금, 전세·임대 등 주거 지원)	①	②	③	④

청소년 정책에 대한 의견

문 4. 다음은 청소년들을 도울 수 있는 다양한 정책 영역입니다. 정책영역에 대한 설명을 읽은 후, 해당 정책 영역이 중요한 정도를 전혀 중요하지 않다(1점)~매우 중요하다(7점)로 응답해 주세요.

정책 영역	정책 내용	전혀 중요하지 않음	중요하지 않음	별로 중요하지 않음	반반	조금 중요함	중요함	매우 중요함
1) 청소년 교육	기초학력 신장, 학교 부적응 및 문제행동 예방, 맞벌이 가정 청소년 보호 등을 위한 인성교육 및 안전 교육, 방과 후 학습 및 체험활동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 청소년 고용	청소년들의 취업 및 창업을 지원 하기 위해 사회변화에 맞는 새로운 일자리 창출, 또는 이에 맞는 직업 훈련 등을 지원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 청소년 건강	청소년의 비만 예방, 영양 및 먹거리 안전, 정신 건강 등을 위한 보건 교육 및 건강검진 등 건강 서비스를 제공	①	②	③	④	⑤	⑥	⑦
4) 청소년 여가 활동	문화, 예술, 스포츠 동아리, 봉사활동 등 청소년들이 자유로이 참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활동	①	②	③	④	⑤	⑥	⑦
5) 청소년 국제 활동	국제교류, 해외봉사, 해외인턴, 국제기구(또는 행사) 참여 등 글로벌 사회에서 필요한 자질을 키우는 활동 및 교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6) 청소년 참여	자신이 사는 지역이나 국가의 청소년 정책을 청소년 대표가 참여하여 제안하고 결정하는 활동	①	②	③	④	⑤	⑥	⑦
7) 청소년 사회 통합	빈곤, 한 부모, 다문화, 성 차별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을 지원	①	②	③	④	⑤	⑥	⑦
8) 가족 지원	청소년의 가족문제 해결을 위한 지원 (부모-자녀와의 관계 개선을 위한 상담,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여가활동 지원 등)	①	②	③	④	⑤	⑥	⑦
9) 위기 청소년 지원	폭력, 가출, 학업중단, 약물 및 인터넷 중독, 범죄 등 위기에 빠진 청소년이 그 위기에서 벗어나도록 돕는 일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0) 청소년 유해 환경 단속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술, 담배 등)을 팔거나 유해한 행위(성매매, 폭력 등)를 하거나 청소년을 불법으로 고용하는 업소를 단속하고, 청소년에게 유해한 내용의 책이나 게임 등이 파지지 않도록 감시하고 단속하며 청소년 기본권 및 안전을 보호하는 일	①	②	③	④	⑤	⑥	⑦

※ 다음은 청소년 정책영역별 주요 사업에 대한 질문입니다.

문 5. 다음은 청소년 **교육** 영역의 주요 사업입니다. 각 항목에 대해 **중요한 정도**를 전혀 중요하지 않다(1점) ~ 매우 중요하다(7점)로 응답해 주세요.

주요 사업	전혀 중요하지 않음	중요하지 않음	별로 중요하지 않음	반반	조금 중요함	중요함	매우 중요함
1) 주5일제에 따른 토요 방과 후 학교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지원 (방과 후 학습, 학업부적응 예방 등)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 공동체 의식을 높이기 위한 인성교육 시민교육(고운 말 쓰기, 환경보호, 나라 사랑, 인권 교육 등)	①	②	③	④	⑤	⑥	⑦
4) 창의적 체험활동	①	②	③	④	⑤	⑥	⑦
5) 다양한 진로탐색을 위한 교육활동	①	②	③	④	⑤	⑥	⑦
6) 문제행동 예방 및 안전 교육 (폭력 및 약물 예방교육, 성 교육, 미디어 교육, 안전교육 등)	①	②	③	④	⑤	⑥	⑦

문 6. 다음은 청소년 **고용** 영역의 주요 사업입니다. 각 항목에 대해 **중요한 정도**를 전혀 중요하지 않다(1점) ~ 매우 중요하다(7점)로 응답해 주세요.

주요 사업	전혀 중요하지 않음	중요하지 않음	별로 중요하지 않음	반반	조금 중요함	중요함	매우 중요함
1) 청년(청소년) 일자리 개발 (다양한 직종에서 할 수 있는 직장체험 프로그램 및 인턴제 개발)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 청년(청소년) 창업 및 취업 지원 (취업 상담 및 정보 제공, 창업 훈련 및 창업자금 지원 등)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 일자리와 연계된 직업훈련 프로그램 강화 (직업전문학교 등)	①	②	③	④	⑤	⑥	⑦
4) 청소년 아르바이트 보호 (청소년 아르바이트 피해 신고센터 운영 등)	①	②	③	④	⑤	⑥	⑦

문 7. 다음은 청소년 **건강** 영역의 주요 사업입니다. 각 항목에 대해 **중요한 정도**를 전혀 중요하지 않다(1점) ~ 매우 중요하다(7점)로 응답해 주세요.

주요 사업	전혀 중요하지 않음	중요하지 않음	별로 중요하지 않음	반반	조금 중요함	중요함	매우 중요함
1) 청소년 수면권 보장 (밤 10시 이후 학원 수업 제한, 심야 시간 인터넷게임 제공시간 제한)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 건강한 음식 제공 (학교 내 탄산음료 패스트푸드 판매 금지, 과일 등 건강 음식 판매하는 건강매점 설치)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 정신건강 증진 (스트레스, 우울, 불안, ADHD 등 발견 및 치료, 자살예방 등)	①	②	③	④	⑤	⑥	⑦

문 8. 다음은 청소년 **여가활동** 영역의 주요 사업입니다. 각 항목에 대해 **중요한 정도**를 전혀 중요하지 않다(1점) ~ 매우 중요하다(7점)로 응답해 주세요.

주요 사업	전혀 중요하지 않음	중요하지 않음	별로 중요하지 않음	반반	조금 중요함	중요함	매우 중요함
1) 청소년 단체 및 동아리 활동 지원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 국제청 소년성취포상제 (만14세~25세 청소년의 신체, 봉사, 자기 개발, 탐험 등 활동 실적에 대한 국제적 포상제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 청소년 자기도전 포상제 (만9세~13세 청소년의 다양한 활동실적에 대한 한국형 포상제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4) 청소년 문화예술교육 및 문화체험 지원 (문화예술 강사 지원 등)	①	②	③	④	⑤	⑥	⑦
5) 다양한 스포츠 활동 지원	①	②	③	④	⑤	⑥	⑦
6) 청소년 자원봉사활동	①	②	③	④	⑤	⑥	⑦

문 9. 다음은 청소년 **국제활동** 영역의 주요 사업입니다. 각 항목에 대해 **중요한 정도**를 전혀 중요하지 않다(1점) ~ 매우 중요하다(7점)로 응답해 주세요.

주요 사업	전혀 중요하지 않음	중요하지 않음	별로 중요하지 않음	반반	조금 중요함	중요함	매우 중요함
1) 국가 간 교류 등 국제교류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 글로벌 청년리더 양성 (해외취업, 해외인턴, 해외자원봉사)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 다양한 해외체험 활동 (조사연구, 국제회의 참가 등)	①	②	③	④	⑤	⑥	⑦
4) 국제교육 (문화다양성, 국제 이해 등)	①	②	③	④	⑤	⑥	⑦

문 10. 다음은 청소년 **참여** 영역의 주요 사업입니다. 각 항목에 대해 **중요한 정도**를 전혀 중요하지 않다(1점) ~ 매우 중요하다(7점)로 응답해 주세요.

주요 사업	전혀 중요하지 않음	중요하지 않음	별로 중요하지 않음	반반	조금 중요함	중요함	매우 중요함
1) 학교규칙 제정에 참여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 청소년시설 운영에 참여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 지방자치단체 청소년정책 결정에 참여 (청소년참여위원회)	①	②	③	④	⑤	⑥	⑦
4) 정부와 전국 청소년대표가 함께 하는 회의에서 청소년정책을 제안(청소년특별회의)	①	②	③	④	⑤	⑥	⑦

문 11. 다음은 청소년 **사회통합** 영역의 주요 사업입니다. 각 항목에 대해 **중요한 정도**를 전혀 중요하지 않다(1점) ~ 매우 중요하다(7점)로 응답해 주세요.

주요 사업	전혀 중요하지 않음	중요하지 않음	별로 중요하지 않음	반반	조금 중요함	중요함	매우 중요함
1)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 소년소녀가장, 조손 한부모 가정 청소년 지원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 탈북·다문화 청소년 지원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 장애 청소년 지원	①	②	③	④	⑤	⑥	⑦
4) 가출, 비행, 성매매, 학업중단, 각종 중독 등 위기청소년 지원	①	②	③	④	⑤	⑥	⑦
5) 미혼(부)모 청소년 지원	①	②	③	④	⑤	⑥	⑦

문 12. 다음은 청소년 가족지원 영역의 주요 사업입니다. 각 항목에 대해 **중요한 정도**를 전혀 중요하지 않다(1점) ~ 매우 중요하다(7점)로 응답해 주세요.

주요 사업	전혀 중요하지 않음	중요하지 않음	별로 중요하지 않음	반반	조금 중요함	중요함	매우 중요함
1) 부모교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 가족상담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 가족단위 여가 및 문화 프로그램 지원	①	②	③	④	⑤	⑥	⑦
4)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예비부모 교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문 13. 다음은 위기청소년(빈곤, 가출, 학업중단, 비행, 약물 중독 등 다양한 위기 상황에 처해 있는 청소년) 지원 영역의 주요 사업입니다. 각 항목에 대해 **중요한 정도**를 전혀 중요하지 않다(1점) ~ 매우 중요하다(7점)로 응답해 주세요.

주요 사업	전혀 중요하지 않음	중요하지 않음	별로 중요하지 않음	반반	조금 중요함	중요함	매우 중요함
1) 지역 사회 안전망 구축(상담지원센터, Wee Center 등에서 상담을 포함하여 청소년이 필요로 하는 여러 가지 도움을 연계해 줌)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 인터넷(게임) 중독 예방 및 치료·재활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 주거, 교육, 자립 지원 등 여러 가지 서비스 제공(청소년쉼터, 대안학교, 직업훈련, 취업 지원, 전세임대 등)	①	②	③	④	⑤	⑥	⑦
4) 생활비 및 용돈 등 경제적 지원 (청소년 특별지원)	①	②	③	④	⑤	⑥	⑦
5) 위기 예방(폭력, 범죄, 성 등) 교육 및 치료·재활	①	②	③	④	⑤	⑥	⑦

문 14. 다음은 청소년 유해 환경 단속 영역의 주요 사업입니다. 각 항목에 대해 **중요한 정도**를 전혀 중요하지 않다(1점) ~ 매우 중요하다(7점)로 응답해 주세요.

주요 사업	전혀 중요하지 않음	중요하지 않음	별로 중요하지 않음	반반	조금 중요함	중요함	매우 중요함
1) 청소년 유해업소 감시·단속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 청소년에게 술 판매 판매 금지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 청소년 유해매체 심의 강화	①	②	③	④	⑤	⑥	⑦
4) 청소년 대상 성 범죄 방지	①	②	③	④	⑤	⑥	⑦
5) 청소년 안전 및 기본권 보호를 위한 규제	①	②	③	④	⑤	⑥	⑦

배경 질문

※ 다음은 설문 조사의 결과분석을 위한 질문입니다. 응답 내용에 대한 비밀은 보장되오니 솔직하게 응답해 주세요.

배문1. 귀하의 성별은?

- ① 남자 ② 여자

배문2. 귀하의 나이는? ()세

배문3. 자녀는 현재 누구와 살고 있나요? 아래에 **자녀의 가족구성원을 모두** 표시해 주십시오.

※ 가족구성원 중에서 **결혼을 해 따로 살고 있는 가족(예: 시집간 언니)은 제외**하고.

1) 함께 살고 있거나.

2) 직장 또는 학교 때문에 따로 떨어져 살고 있는 가족은 모두 표시해 주세요.

※ 예 1: 시집 가서 따로 사는 언니, 삼촌 집에서 사는 시촌형 ☞ 표시하지 않습니다.

예 2: (같이 살다가) 직장이 지방에 있어서 내려가 있는 큰형 ☞ 표시합니다.

- ① (외)할아버지 ② (외)할머니 ③ 아버지 ④ 어머니
⑤ 형제 또는 자매 ⑥ 친척 ⑦ 기타() ⑧ 없음

배문4. 귀하는 학교를 어디까지 다니셨나요? 완전히 마치신(졸업하신) 학교를 표시해 주세요.

(중간에 학교를 그만 둔 경우는 '졸업'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중학교를 다니다가 졸업하지 않고 중간에 그만둔 경우 초등학교 졸업에 표시합니다)

- ① 학교 안다님 ② 초등학교 졸업 ③ 중학교 졸업 ④ 고등학교 졸업
⑤ 2-3년제 대학 졸업 ⑥ 4년제 대학 졸업 ⑦ 대학원 졸업(석사박사) ⑧ 잘 모르겠음

배문5. 귀하와 귀하의 배우자는 현재 직업을 갖고 계십니까?

	현재 직업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	
	있음	없음
1. 본인	①	②
2. 배우자	①	②

배문6. 자녀의 학업 성적(2012년 1학기)이 반에서 대략 어디에 해당한다고 생각합니까?

※ 다른 사람에게 알려지지 않으므로 솔직하게 응답해 주세요.

매우 못하는 수준	못하는 수준	중 간	잘하는 수준	매우 잘하는 수준
①	②	③	④	⑤

배문7. 귀하의 가장 형편(경제 수준)이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한다고 생각합니까?

매우 못산다		← 보통 수준 →				매우 잘산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배문8. 현재 살고 있는 집은 어디입니까?

()시/도 ()시/군/구 ()읍/면/동

※ 사는 곳이 서울시 서초구 우면동이라면 (서울)시/도 (서초)시/군/구 (우면)읍/면/동으로 표기함

※ 사는 곳이 충청남도 아산시 배방읍이라면 (충청남)시/도 (아산)시/군/구 (배방)읍/면/동으로 표기함

♣ 조사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4) 위기청소년용 설문지

조사기관 ID
(기록하지 마세요)

청소년 정책에 대한 수요 조사 [청소년용]

안녕하십니까?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국무총리실에 소속된 국가 연구 기관으로 아동·청소년 관련 각종 조사 연구와 정책 개발 업무를 맡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본 연구원에서는 청소년의 욕구에 맞는 정책을 개발하고자 청소년정책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응답하신 내용은 **무기명으로(이름을 밝히지 않고)** 처리되어 아동·청소년 관련 정책 수립을 위한 연구 자료로만 활용되므로 개인의 비밀이 철저히 보장됩니다. 또한 **여러분의 응답 내용은 아무도 볼 수 없으며, 모든 질문에는 맞고 틀린 답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의견이 정확하게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설문에 솔직하고 성실하게 응답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바쁘신데 본 조사에 응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2년 5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137-715) 서울특별시 서초구 태봉로 114

<http://www.nyppr.re.kr>

주관기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담당자: 윤철경 연구위원	(02)2188-8804
수행기관: 한국청소년쉼터협의회	담당자: 신지현 사무국장	(02)6403-9171

조사 일시	2012년 ____월 ____일 ____시 ____분부터 ____시 ____분까지
기관 실무자 성명	

설문지 작성 요령

설문지에는 여러분 자신에 관한 질문들이 들어있습니다. 사실대로 대답해야 하는 질문도 있고, 여러분의 생각을 밝혀야 하는 질문도 있습니다. 질문의 내용을 잘 읽고 정확하고 솔직하게 응답해 주세요. 만일 이해가 되지 않거나 궁금한 것이 있으면 앞에 계신 면접원 또는 선생님께 손을 들고 질문해도 좋습니다.

❖ 표시하는 방법

질문 다음에는 대개 1에서 7까지의 숫자 중 하나를 골라 답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왼쪽의 문장을 읽고, 여러분이 생각할 때 '전혀 중요하지 않음' ①에, '중요하지 않은 편' ③에, '중요함' ⑥에, '매우 중요함' ⑦에 동그라미(○)로 표시해 주세요.

<보기1>

	전혀 중요하지 않음	중요하지 않음	중요하지 않은 편	반반	중요한 편	중요함	매우 중요함
a 주5일제에 따른 토요 방과 후 학교	①	②	③	④	⑤	⑥	⑦

☞ 나는 주5일제에 따른 토요 방과 후 학교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⑦'에 ○를 표시했습니다.

❖ 표시한 것을 바꾸고 싶을 때

<보기2>와 같이 처음 답을 한 곳에 가위표(X)를 하고 맞다고 생각하는 답에 동그라미(○) 표시를 하십시오. 지우개 또는 볼펜으로 지우지 않아도 됩니다.

<보기2>

	전혀 중요하지 않음	중요하지 않음	중요하지 않은 편	반반	중요한 편	중요함	매우 중요함
a 주5일제에 따른 토요 방과 후 학교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청소년에 대한 의견

문 1. 우리나라 '청소년'하면 떠오르는 생각에 대한 질문입니다. 다음 항목에 대해 동의하는 정도를 전혀 그렇지 않다(1점) ~ 매우 그렇다(4점)로 응답해 주세요.

청소년에 대한 생각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청소년은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크다	①	②	③	④
2) 청소년은 권리의식은 높지만 책임감은 없다	①	②	③	④
3) 청소년은 불합리한 상황에서 용감하고 정의롭다	①	②	③	④
4) 청소년은 예의가 없다	①	②	③	④
5) 청소년은 새로운 일에 대한 도전정신이 강하다	①	②	③	④
6) 청소년은 어디로 튈지 모르기 때문에 무섭다	①	②	③	④
7) 청소년은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다	①	②	③	④
8) 청소년은 충동적이어서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다	①	②	③	④
9) 청소년은 어떤 문제에 창의적으로 접근한다	①	②	③	④
10) 청소년은 어떤 한 분야에 뛰어난 자질을 보이며 몰입하는 경향이 많다	①	②	③	④

문 2. 여러분은 정부가 청소년정책을 실시할 때 다음 연령 중 어느 연령대를 가장 중요시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먼저 우선순위를 중요한 순서대로 1, 2, 3, 4, 5, 6번으로 작성한 후, 각 연령대에 대해 중요한 정도를 전혀 중요하지 않다(1점) ~ 매우 중요하다(4점)로 응답해 주세요.

정책 대상 연령	우선순위	전혀 중요하지 않음	별로 중요하지 않음	대체로 중요함	매우 중요함
1) 초등학교 저학년 연령 (9세 ~ 10세)		①	②	③	④
2) 초등학교 고학년 연령 (11세 ~ 13세)		①	②	③	④
3) 중학생 연령 (14세 ~ 16세)		①	②	③	④
4) 고등학생 연령 (17 ~ 19세)		①	②	③	④
5) 대학생 연령 (20세 ~ 24세)		①	②	③	④
6) 나이에 상관 없이 부모로부터 자립할 때까지 (25세 이상)		①	②	③	④

문 3. 여러분이 맺고 있는 **인간관계나 고민거리**에 대한 질문입니다. 다음의 항목들로 인해 어느 정도 **스트레스를 받는지**를 전혀 받지 않는다(1점) ~ 매우 많이 받는다(4점)로 응답해 주세요.

구분	내용	전혀 받지 않음	별로 받지 않음	조금 받음	매우 많이 받음
인 간 관 계	1) 부모님과과의 관계	①	②	③	④
	2) 동성친구와의 관계 (예: 갈등, 따돌림, 폭력 등)	①	②	③	④
	3) 선후배와의 관계 (예: 갈등, 따돌림, 폭력 등)	①	②	③	④
	4) 이성친구와의 관계	①	②	③	④
	5) 선생님과의 관계	①	②	③	④
고 민 거 리	6) 학업문제 (시험, 성적문제 등)	①	②	③	④
	7) 진로문제 (진학, 취업 등 장래 걱정)	①	②	③	④
	8) 가정형편 (경제적 문제)	①	②	③	④
	9) 외모 (예: 비만, 키, 몸매, 생김새 등)	①	②	③	④
	10) 정신건강 (예: 우울, 불안, 증독 등)	①	②	③	④

문 4. 다음은 우리나라 **청소년정책이 해결해야 할 과제**들입니다. 먼저 다음 항목에 대해 **우선순위를** 빠른 해결이 필요한 순서대로 1, 2, 3, 4, 5, 6, 7번으로 작성한 후, 각 과제별로 **해결이 시급한 정도**를 전혀 시급하지 않다(1점) ~ 매우 시급하다(4점)로 응답해주세요.

청소년정책의 당면 과제	우선순위	전혀 중요하지 않음	별로 중요하지 않음	다체로 중요함	매우 중요함
1) 학교폭력 근절		①	②	③	④
2) 주5일제에 따른 토요일 방과 후 활동 지원		①	②	③	④
3) 청소년 일자리 개발 및 직업역량 강화, 취업·창업 지원		①	②	③	④
4) 가출, 폭력, 학업중단, 성매매 등 위기 청소년 지원		①	②	③	④
5) 문화, 예술, 스포츠 등 다양한 청소년 활동 기회 제공		①	②	③	④
6) 인터넷(게임 포함) 중독 등 청소년 정신건강 문제 예방 및 치료		①	②	③	④
7)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소년에 대한 지원 (학자금, 전세·임대 등 주거 지원)		①	②	③	④

청소년 정책에 대한 의견

문 5. 다음은 청소년들을 도울 수 있는 다양한 정책 영역입니다. 정책영역에 대한 설명을 읽은 후, 해당 정책 영역이 중요한 정도를 전혀 중요하지 않다(1점)~매우 중요하다(7점)로 응답해 주세요.

정책 영역	정책 내용	전혀 중요하지 않음	중요하지 않음	별로 중요하지 않음	반반	조금 중요함	중요함	매우 중요함
1) 청소년 교육	기초학력 신장, 학교 부적응 및 문제행동 예방, 맞벌이 가정 청소년 보호 등을 위한 인성교육 및 안전 교육, 방과 후 학습 및 체험활동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 청소년 고용	청소년들의 취업 및 창업을 지원 하기 위해 사회변화에 맞는 새로운 일자리 창출, 또는 이에 맞는 직업 훈련 등을 지원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 청소년 건강	청소년의 비만 예방, 영양 및 먹거리 안전, 정신 건강 등을 위한 보건 교육 및 건강검진 등 건강 서비스를 제공	①	②	③	④	⑤	⑥	⑦
4) 청소년 여가 활동	문화, 예술, 스포츠 동아리, 봉사활동 등 청소년들이 자유로이 참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활동	①	②	③	④	⑤	⑥	⑦
5) 청소년 국제 활동	국제교류, 해외봉사, 해외인턴, 국제기구(또는 행사) 참여 등 글로벌 사회에서 필요한 자질을 키우는 활동 및 교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6) 청소년 참여	자신이 사는 지역이나 국가의 청소년 정책을 청소년 대표가 참여하여 제안하고 결정하는 활동	①	②	③	④	⑤	⑥	⑦
7) 청소년 사회 통합	빈곤, 한 부모, 다문화, 성 차별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을 지원	①	②	③	④	⑤	⑥	⑦
8) 가족 지원	청소년의 가족문제 해결을 위한 지원 (부모-자녀와의 관계 개선을 위한 상담,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여가활동 지원 등)	①	②	③	④	⑤	⑥	⑦
9) 위기 청소년 지원	폭력, 가출, 학업중단, 약물 및 인터넷 중독, 범죄 등 위기에 빠진 청소년이 그 위기에서 벗어나도록 돕는 일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0) 청소년 유해 환경 단속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술, 담배 등)을 팔거나 유해한 행위(성매매, 폭력 등)를 하거나 청소년을 불법으로 고용하는 업소를 단속하고, 청소년에게 유해한 내용의 책이나 게임 등이 파지지 않도록 감시하고 단속하여 청소년 기본권 및 안전을 보호하는 일	①	②	③	④	⑤	⑥	⑦

※ 다음은 청소년 정책영역별 주요 사업에 대한 질문입니다.

문 6. 다음은 청소년 **교육** 영역의 주요 사업입니다. 각 항목에 대해 **중요한 정도**를 전혀 중요하지 않다(1점) ~ 매우 중요하다(7점)로 응답해 주세요.

주요 사업	전혀 중요하지 않음	중요하지 않음	별로 중요하지 않음	반반	조금 중요함	중요함	매우 중요함
1) 주5일제에 따른 토요 방과 후 학교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지원 (방과 후 학습, 학업부적응 예방 등)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 공동체 의식을 높이기 위한 인성교육· 시민교육(고운 말 쓰기, 환경보호, 나라사랑, 인권 교육 등)	①	②	③	④	⑤	⑥	⑦
4) 창의적 체험활동	①	②	③	④	⑤	⑥	⑦
5) 다양한 진로탐색을 위한 교육활동	①	②	③	④	⑤	⑥	⑦
6) 문제행동 예방 및 안전 교육 (폭력 및 약물 예방교육, 성 교육, 미디어 교육, 안전교육 등)	①	②	③	④	⑤	⑥	⑦

문 7. 다음은 청소년 **고용** 영역의 주요 사업입니다. 각 항목에 대해 **중요한 정도**를 전혀 중요하지 않다(1점) ~ 매우 중요하다(7점)로 응답해 주세요.

주요 사업	전혀 중요하지 않음	중요하지 않음	별로 중요하지 않음	반반	조금 중요함	중요함	매우 중요함
1) 청년(청소년) 일자리 개발 (다양한 직종에서 할 수 있는 직장체험 프로그램 및 인턴제 개발)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 청년(청소년) 창업 및 취업 지원 (취업 상담 및 정보 제공, 창업 훈련 및 창업자금 지원 등)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 일자리와 연계된 직업훈련 프로그램 강화 (직업전문학교 등)	①	②	③	④	⑤	⑥	⑦
4) 청소년 아르바이트 보호 (청소년 아르바이트 피해 신고센터 운영 등)	①	②	③	④	⑤	⑥	⑦

문 8. 다음은 청소년 **건강** 영역의 주요 사업입니다. 각 항목에 대해 **중요한 정도**를 전혀 중요하지 않다(1점) ~ 매우 중요하다(7점)로 응답해 주세요.

주요 사업	전혀 중요하지 않음	중요하지 않음	별로 중요하지 않음	반반	조금 중요함	중요함	매우 중요함
1) 청소년 수면권 보장 (밤 10시 이후 학원 수업 제한, 심야 시간 인터넷게임 제공시간 제한)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 건강한 음식 제공 (학교 내 탄산음료 패스트푸드 판매 금지, 과일 등 건강 음식 판매하는 건강매점 설치)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 정신건강 증진 (스트레스, 우울, 불안, ADHD 등 발견 및 치료, 자살예방 등)	①	②	③	④	⑤	⑥	⑦

문 9. 다음은 청소년 **여가활동** 영역의 주요 사업입니다. 각 항목에 대해 **중요한 정도**를 전혀 중요하지 않다(1점) ~ 매우 중요하다(7점)로 응답해 주세요.

주요 사업	전혀 중요하지 않음	중요하지 않음	별로 중요하지 않음	반반	조금 중요함	중요함	매우 중요함
1) 청소년 단체 및 동아리 활동 지원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 국제청소년성취포상제 (만14세~25세 청소년의 신체, 봉사, 자기 개발, 탐험 등 활동 실적에 대한 국제적 포상제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 청소년 자기도전 포상제 (만9세~13세 청소년의 다양한 활동실적에 대한 한국형 포상제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4) 청소년 문화예술교육 및 문화체험 지원 (문화예술 감사 지원 등)	①	②	③	④	⑤	⑥	⑦
5) 다양한 스포츠 활동 지원	①	②	③	④	⑤	⑥	⑦
6) 청소년 자원봉사활동	①	②	③	④	⑤	⑥	⑦

문 10. 다음은 청소년 **국제활동** 영역의 주요 사업입니다. 각 항목에 대해 **중요한 정도**를 전혀 중요하지 않다(1점) ~ 매우 중요하다(7점)로 응답해 주세요.

주요 사업	전혀 중요하지 않음	중요하지 않음	별로 중요하지 않음	반반	조금 중요함	중요함	매우 중요함
1) 국가 간 교류 등 국제교류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 글로벌 청년리더 양성 (해외취업, 해외인턴, 해외자원봉사)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 다양한 해외체험 활동 (조사연수, 국제회의 참가 등)	①	②	③	④	⑤	⑥	⑦
4) 국제교육 (문화다양성, 국제 이해 등)	①	②	③	④	⑤	⑥	⑦

문 11. 다음은 청소년 **참여** 영역의 주요 사업입니다. 각 항목에 대해 **중요한 정도**를 전혀 중요하지 않다(1점) ~ 매우 중요하다(7점)로 응답해 주세요.

주요 사업	전혀 중요하지 않음	중요하지 않음	별로 중요하지 않음	반반	조금 중요함	중요함	매우 중요함
1) 학교규칙 제정에 참여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 청소년시설 운영에 참여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 지방자치단체 청소년정책 결정에 참여 (청소년참여위원회)	①	②	③	④	⑤	⑥	⑦
4) 정부와 전국 청소년대표가 함께 하는 회의에서 청소년정책을 제안(청소년특별회의)	①	②	③	④	⑤	⑥	⑦

문 12. 다음은 청소년 **사회통합** 영역의 주요 사업입니다. 각 항목에 대해 **중요한 정도**를 전혀 중요하지 않다(1점) ~ 매우 중요하다(7점)로 응답해 주세요.

주요 사업	전혀 중요하지 않음	중요하지 않음	별로 중요하지 않음	반반	조금 중요함	중요함	매우 중요함
1)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 소년소녀가장, 조손 한부모 가정 청소년 지원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 탈북·다문화 청소년 지원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 장애 청소년 지원	①	②	③	④	⑤	⑥	⑦
4) 기출, 비행, 성매매, 학업중단, 각종 중독 등 위기청소년 지원	①	②	③	④	⑤	⑥	⑦
5) 미혼(부)모 청소년 지원	①	②	③	④	⑤	⑥	⑦

문 13. 다음은 청소년 가족지원 영역의 주요 사업입니다. 각 항목에 대해 **중요한 정도**를 전혀 중요하지 않다(1점) ~ 매우 중요하다(7점)로 응답해 주세요.

주요 사업	전혀 중요하지 않음	중요하지 않음	별로 중요하지 않음	반반	조금 중요함	중요함	매우 중요함
1) 부모교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 가족상담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 가족단위 여가 및 문화 프로그램 지원	①	②	③	④	⑤	⑥	⑦
4)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예비부모 교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문 14. 다음은 위기청소년(빈곤, 가족, 학업중단, 비행, 약물 중독 등 다양한 위기 상황에 처해 있는 청소년) 지원 영역의 주요 사업입니다. 각 항목에 대해 **중요한 정도**를 전혀 중요하지 않다(1점) ~ 매우 중요하다(7점)로 응답해 주세요.

주요 사업	전혀 중요하지 않음	중요하지 않음	별로 중요하지 않음	반반	조금 중요함	중요함	매우 중요함
1) 지역 사회 안전망 구축(상담지원센터, Wee Center 등에서 상담을 포함하여 청소년이 필요로 하는 여러 가지 도움을 연계해 줌)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 인터넷(게임) 중독 예방 및 치료 재활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 주거, 교육, 자립 지원 등 여러 가지 서비스 제공(청소년쉼터, 대안학교, 직업훈련, 취업지원, 전세임대 등)	①	②	③	④	⑤	⑥	⑦
4) 생활비 및 용돈 등 경제적 지원(청소년 특별지원)	①	②	③	④	⑤	⑥	⑦
5) 위기 예방(폭력, 범죄, 성 등) 교육 및 치료재활	①	②	③	④	⑤	⑥	⑦

문 15. 다음은 청소년 유해 환경 단속 영역의 주요 사업입니다. 각 항목에 대해 **중요한 정도**를 전혀 중요하지 않다(1점) ~ 매우 중요하다(7점)로 응답해 주세요.

주요 사업	전혀 중요하지 않음	중요하지 않음	별로 중요하지 않음	반반	조금 중요함	중요함	매우 중요함
1) 청소년 유해업소 감사 단속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 청소년에게 술 담배 판매 금지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 청소년 유해매체 심의 강화	①	②	③	④	⑤	⑥	⑦
4) 청소년 대상 성 범죄 방지	①	②	③	④	⑤	⑥	⑦
5) 청소년 안전 및 기본권 보호를 위한 규제	①	②	③	④	⑤	⑥	⑦

문16. 우리나라 청소년정책에서 특별히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들을 위해서는 어떤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다음 정책 항목에 대해 **중요한 정도**를 전혀 중요하지 않다(1점) ~ 매우 중요하다(7점)로 응답해 주세요.

주요 사업	전혀 중요하지 않음	중요하지 않음	별로 중요하지 않음	반반	조금 중요함	중요함	매우 중요함
1) 생활비 및 용돈 등 일상생활을 위한 경제적 지원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 장학금 등 학비 지원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 주거 지원 (임대주택, 전세지원 등)	①	②	③	④	⑤	⑥	⑦
4) 정서적 후원자 지원 (상담, 멘토링 등)	①	②	③	④	⑤	⑥	⑦
5) 교육지원 (검정고시, 대안학교 등)	①	②	③	④	⑤	⑥	⑦
6) 직업훈련 지원 (직업훈련 수당, 직업전문학교, 직업훈련 프로그램, 학원비 지원 등)	①	②	③	④	⑤	⑥	⑦
7) 취업지원 (청소년 일자리 개발 및 취업 정보 제공, 취업연계 등)	①	②	③	④	⑤	⑥	⑦

배경 질문

※ 다음은 설문 조사의 결과분석을 위한 질문입니다. 응답 내용에 대한 비밀은 보장되거나 솔직하게 응답해 주세요.

배문1. 당신의 성별은?

- ① 남자 ② 여자

배문2. **심터에 오기 전에** 당신은 누구와 살고 있었나요? 당신이 함께 살고 있던 가족구성원을 모두 표시해 주십시오.

※ 가족구성원 중에서 **결혼을 해 따로 살고 있는 가족(예: 시집간 언니)**은 제외하고,

- 1) 함께 살고 있거나,
2) 직장 또는 학교 때문에 따로 떨어져 살고 있는 가족은 모두 표시해 주세요.

※ 예 1: 시집 가서 따로 사는 언니, 삼촌 집에서 사는 사촌형 ☞ 표시하지 않습니다.

예 2: (같이 살다가) 직장이 지방에 있어서 내려가 있는 큰형 ☞ 표시합니다.

- ① (외)할아버지 ② (외)할머니 ③ 아버지 ④ 어머니
⑤ 형제 또는 자매 ⑥ 친척 ⑦ 기타() ⑧ 없음

배문3. 부모님은 학교를 어디까지 다니셨나요? 아래에 부모님께서 완전히 마치신(졸업하신) 학교를 표시해 주세요. (중간에 학교를 그만 둔 경우는 '졸업'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중학교를 다니다가 졸업하지 않고 중간에 그만둔 경우 초등학교 졸업(②번)에 표시합니다)

	학교 안다님	초등학교 졸업	중학교 졸업	고등학교 졸업	2-3년제 대학 졸업	4년제 대학 졸업	대학원 졸업 (석사박사)	잘 모르겠음
1. 아버지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2. 어머니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배문4. 부모님께서 현재 직업을 갖고 계십니까? 부모님 각각에 대하여 응답해 주세요.

	현재 직업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		
	없음	있음	잘 모르겠음
1. 아버지	①	②	③
2. 어머니	①	②	③

배문5. 현재 살고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시/도 ()시/군/구 ()읍/면/동

※ 사는 곳이 서울시 서초구 우면동이라면 (서울)④도 (서초)시/군/구⑤ (우면)읍/면/동⑥으로 표기함

※ 사는 곳이 충청남도 아산시 배방읍이라면 (충청남)시/도① (아산)시/군/구② (배방)읍/면/동으로 표기함

♣ 조사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Abstract

A study on measures for general revision of youth policy

This study aims to find solutions for problems related to youth policy driven by various governmental departments of education, welfare, culture and employment without coherent purpose and direction. This study also aims to seek measures for a general revision of the youth policy to improve the synergy effect for the youth.

First of all, this study classifies different areas of youth policy according to the international criteria, such as the UN's, and establishes the category for the general revision of youth policy. The present state of management and policy handling is investigated through the analysis of the organizational laws of the government, other organizational regulations, and the policy references on central administrative organizations. Also, a survey on the demand for youth policy has been conducted for 3,000 candidates, including parents and students. The implications for the general revisions to the youth policy are explained through the analysis of related policy examples in and out of Korea.

When an investigation was made on youth policy of each relevant Ministry, it turned out that the budget for the youth-related policy was the greatest in the Ministry of Education according to the budget size, followed by the Ministry of Employment, the Ministry of Woman and Family, and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From the main policy's point of view, the Ministries, including Woman and Family, Education, Reunification, Agriculture and Forestry, and Health and Welfare, concentrate on the support for youth at risk. On the other hand, other Ministries, including Defence, Public Administration and Security, Knowledge and Economy, and Environment, focus on youth education. The Ministry of Justice and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on noxious environment,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and Trade on international activities, the Ministry of Culture on leisure activities, and the Ministry of Employment put a majority of its budget into the support of youth employment. Taking into consideration the number of departments and budget size involved, the areas where the general policy revision is urgently required turned out to be social reintegration, support for youth at risk, youth education and the control of obnoxious environment for youth. It turned out that the department in charge of youth policy needs to cooperate with several Ministries: the Ministry of Education and the Ministry of Welfare for the most parts, the Ministry of Culture for leisure activities, the Ministry of Employment and the Ministry of Knowledge and Economy for employment, and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and Trade for international activities.

When the comparison between the application of budget and the policy demand from the survey done by youth and their parents was made, the areas which had less priorities in budget compared to how important they are turned out to include the control over obnoxious environment, family support, health, and support for youth at risk. From the more detailed policies' point of view, the areas of improving mental health, educating parents, consulting families, prohibiting sales of alcohol and cigarettes, and supervising and controlling of harmful businesses turned out to have the lowest budget application in comparison to the policy demand. Therefore, it is essential to have a policy revision that supports the above policy areas and the related projects.

In order to strengthen the function of a general revision for youth policy, evaluation for youth policy effects should be introduced, and standards for youth budget need to be established. Also, information management competence, such as calculation and application of youth index and statistics, should be secured. In addition, it is essential to establish a road map to plan for a general revision, such as prioritizing

projects and setting the order of general revision through regularly conducting research on demands for youth policy.

Keyword: general revision, policy areas, budget application and policy demand, prioritizing projects in general revision

2012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간행물 안내

기관고유과제

- 12-R01 청소년활동시설 평가모형 개발 연구Ⅲ: 청소년문화의집을 중심으로 / 김형주 · 황진구 · 김정주 · 권순달
- 12-R01-1 청소년문화의집 평가편람 / 김형주 · 황진구
- 12-R02 창의적 체험활동 지역사회 운영모형 개발연구Ⅱ / 김현철 · 황여정 · 민경석 · 윤혜순
- 12-R03 후기청소년 세대 생활 · 의식 실태조사 및 정책과제 연구Ⅰ / 조혜영 · 김지경 · 전상진
- 12-R04 주5일수업제에 따른 청소년활동 활성화 방안 연구 / 맹영임 · 이광호 · 이진원
- 12-R05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이용실태 연구 / 이창호 · 성윤숙 · 정낙원
- 12-R06 청소년정책 총괄조정방안 연구 / 윤철경 · 박병식 · 김진호 · 강현주
- 12-R07 청소년 생활실태 국제비교연구 : 진로준비 / 안선영 · 김희진 · 강영배 · 송민경
- 12-R08 다문화가족 아동 · 청소년의 발달과정 추적을 위한 종단연구Ⅲ / 양계민 · 김승경 · 김윤영
- 12-R09 취약계층 아동 · 청소년 종단조사Ⅲ / 이해연 · 박영균 · 유성렬 · 정선욱
- 12-R10 청소년의 사회적 참여 활성화를 통한 저소득가정 아동 지원방안 연구Ⅲ : 청소년멘토링 활성화 방안 연구 / 김경준 · 김영지 · 정익중 · 김지혜
- 12-R10-1 청소년의 사회적 참여 활성화를 통한 저소득가정 아동 지원방안 연구Ⅲ : 청소년멘토링 시범사업 보고서 / 김경준 · 김영지 · 정익중 · 김지혜
- 12-R11 한국 아동 · 청소년 인권실태 연구Ⅱ / 임희진 · 김현신
- 12-R11-1 한국 아동 · 청소년 인권실태 연구Ⅱ : 2012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통계 / 임희진 · 김현신 · 강현철
- 12-R11-2 한국 아동 · 청소년 인권실태 연구Ⅱ 아동 · 청소년의 놀 권리 : 현실과 대안 / 황옥경
- 12-R12 청소년 도덕성 검사도구 표준화 연구Ⅱ / 김영한 · 이승하
- 12-R12-1 청소년 도덕성 검사도구 표준화 연구Ⅱ : 청소년 도덕 감수성 및 판단력 검사도구 개발 / 임영식 · 손경원 · 신태수 · 정경원
- 12-R12-2 청소년 도덕성 검사도구 표준화 연구Ⅱ : 청소년 도덕 동기화 및 품성화 검사도구 개발 / 이인재 · 박균열 · 홍승훈 · 윤영돈 · 유숙희 · 전종희
- 12-R13 아동 · 청소년 성보호 종합대책 연구Ⅰ: 아동 · 청소년 성폭력 예방 및 피해지원 대책연구 / 이유진 · 강지명 · 조윤오 · 윤옥경
- 12-R14 한국아동 · 청소년패널조사2010 Ⅲ 사업보고서 / 이경상 · 서정아 · 배상률 · 성은모 · 김지영 · 강현철
- 12-R14-1 한국아동 · 청소년패널조사2010 Ⅲ 데이터분석보고서 1 : 범죄유발적 지식구조와 청소년비행에 관한 연구 / 이경상 · 이순래 · 박철현
- 12-R14-2 한국아동 · 청소년패널조사2010 Ⅲ 데이터분석보고서 2 : 중학교 2학년 청소년의 뉴미디어활용이 인지, 정서, 사회 발달에 미치는 영향 / 성은모
- 12-R14-3 한국아동 · 청소년패널조사2010 Ⅲ 데이터분석보고서 3 : 미디어가 청소년에게 미치는 문화배양효과 연구 / 배상률
- 12-R14-4 한국아동 · 청소년패널조사2010 Ⅲ 데이터분석보고서 4 : 사회자본이 청소년의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 가족, 지역사회 사회자본을 중심으로 / 서정아 · 조홍식

협동연구과제

-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2-21-01 아동 · 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방안 연구Ⅱ :총괄보고서 / 최인재 · 모상현 · 이선영 (자체번호 12-R15)
-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2-21-02 아동 · 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방안 연구Ⅱ :조사 결과 자료집 / 최인재 (자체번호 12-R15-1)
-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2-21-03 아동 · 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방안 연구Ⅱ :아동 · 청소년 정신건강증진 인프라현황 및 서비스 전달체계 개선방안 연구 / 최은진 · 김미숙 · 이명수 · 윤명주 · 정지원 (자체번호 12-R15-2)
-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2-21-04 아동 · 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방안 연구Ⅱ :아동 · 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지역별 지원모형 개발 연구 / 이창호 · 최보영 · 유춘자 (자체번호 12-R15-3)
-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2-22-01 아동 · 청소년의 민주시민역량 국제비교 및 지원체계 개발 연구Ⅱ : 2012 청소년 민주시민역량 실태조사 / 이종원 · 김준홍 (자체번호 12-R16)
-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2-22-02 아동 · 청소년의 민주시민역량 국제비교 및 지원체계 개발 연구Ⅱ : 미디어 이용과 가족내 사회적 자본 / 이종원 · 김준홍 · 정선아 (자체번호 12-R16-1)
-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2-22-03 아동 · 청소년의 민주시민역량 국제비교 및 지원체계 개발 연구Ⅱ : 교육분야 민주시민역량 요인과 관계성 분석 / 김태준 · 이민영 (자체번호 12-R16-2)
-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2-23-01 청소년 한부모가족 종합대책 연구Ⅰ : 총괄보고서 / 백혜정 · 김지연 · 김혜영 · 방은령(자체번호 12-R17)
-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2-23-02 청소년 한부모가족 종합대책 연구Ⅰ : 청소년 한부모의 발생과정에 따른 예방 및 지원정책 연구 / 김은지 · 김동식 · 최인희 · 선보영 (자체번호 12-R17-1)
-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2-23-03 청소년 한부모가족 종합대책 연구Ⅰ : 청소년 한부모가족 지원정책 국가 비교 연구 / 신윤정 · 이상림 · 김윤희 (자체번호 12-R17-2)
-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2-23-04 청소년 한부모가족 종합대책 연구Ⅰ : 청소년 한부모가족 지원사업 편람 / 백혜정 · 김지연 (자체번호 12-R17-3)

수 시 과 제

- 12-R18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개선방안 연구 / 박영균 · 김호순
- 12-R18-1 청소년수련시설 운영매뉴얼 : 청소년수련원 청소년수련관 / 박영균 · 김호순
- 12-R19 청소년 흡연 · 음주 실태와 효과적인 정책적 대응방안 / 이경상 · 김지연 · 최수미 · 이순래
- 12-R20 차기정부 청소년정책 방향과 과제 / 김기현 · 장근영
- 12-R21 청소년활동정책 체계화 방안 연구 / 김현철
- 12-R22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경제적 효과성 분석을 위한 기초연구 / 김지경 · 우석진
- 12-R23 학교폭력 및 학교문화에 대한 학부모 · 교사 인식조사 연구 / 윤철경 · 강명숙
- 12-R24 예술영재청소년의 정신건강 연구 : 한예종 사례를 중심으로 / 안선영 · 김희진 · 김준홍 · 김정희 · 최인호
- 12-R25 청소년운영위원회 운영활성화 기초 연구 / 서정아 · 김지경
- 12-R26 소년보호기관 자원봉사자들의 참여도 제고를 위한 역할 강화 방안 연구 / 서정아
- 12-R27 지역사회 청소년 보호 효과(이슈페이퍼 발간) / 황여정
- 12-R28 청소년정책 환경변화에 따른 청소년지도사교재 개선방안(이슈페이퍼 발간) / 황진규

수탁과제

- 12-R29 청소년보호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 / 김경준 · 김희진 · 성윤숙
- 12-R29-1 제1차 청소년보호종합대책(안) : 2013~2015 / 김경준 · 김희진 · 성윤숙
- 12-R30 청소년 인터넷게임 건전이용제도관련 평가척도개발 연구 / 이창호 · 이경상 · 변승환 · 유홍식 · 김현수 · 김동일 · 이형초
- 12-R31 청소년 자살예방을 위한 효과적인 사업 방향 및 대응방안 연구 / 최인재 · 김영지 · 김지연 · 오승근
- 12-R32 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동아리 활성화를 위한 운영모델 및 매뉴얼 개발연구 : 총괄보고서 / 모상현 · 이진숙 · 조남익
- 12-R32-1 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동아리 활성화를 위한 운영모델 및 매뉴얼 개발연구 : 청소년 동아리 활동 운영 매뉴얼 (지도자용) / 모상현
- 12-R32-2 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동아리 활성화를 위한 운영모델 및 매뉴얼 개발연구 : 청소년 동아리활동 실태조사 결과 보고서 / 모상현 · 이진숙 · 조남익
- 12-R33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 개선 연구 / 김형주 · 김진호 · 김혁진
- 12-R34 디지털게임에 대한 이미지분석 연구 / 모상현 · 장근영 · 이장주
- 12-R35 공생발전 종합연구 아동, 청소년과 함께하는 공생의 사회구현 실행방안 연구 / 김지연
- 12-R36 CYS-Net과 Wee센터의 효율적 연계 운영방안 / 김지연 · 전연진 · 차성현
- 12-R37 학교규칙 운영 매뉴얼(초등용, 중등용) / 이창호 · 성윤숙 · 김경준 · 김영지
- 12-R37-1 학교규칙 평가표 개발 연구 / 허종렬 · 조진우 · 박형근 · 이수경 · 이지혜
- 12-R37-2 학교규칙 운영 내실화 정책사례 분석 및 지원방안 연구 / 한유경 · 정제영 · 김성기 · 정성수
- 12-R38 2012 청소년 가치관 국제비교 조사 / 임희진 · 백혜정 · 김현철
- 12-R39 청소년동아리활동인증 시범운영 / 맹영임 · 조남익 · 손익숙 · 김현경
- 12-R40 제8회 청소년특별회의 의제연구 / 김영한
- 12-R41 한 · 중 청년의 국제관과 문화자원의 가치에 대한 인식비교 / 윤철경 · 장수현 · 정계영
- 12-R42 2012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효과 · 만족도 조사 연구 / 양계민
- 12-R43 청소년 유해환경별 현황분석 및 제도개선 방안 연구 / 김영한
- 12-R44 2012년도 청소년 유해환경 접촉 종합실태조사 / 이종원 · 이유진 · 김준홍
- 12-R45 청소년 체험활동의 발달적 가치 및 사회 · 경제적 가치 연구 / 성은모 · 이해연 · 황여정
- 12-R46 멘토링 수행기관 유형별 사례지침서(매뉴얼) 개발 / 성은모
- 12-R47 경제사회지표 변화 조사 연구 - 청소년정책 부문 / 이종원 · 김기현 · 이경상
- 12-R48 한국가족의 변화와 청소년정책 / 김준홍 · 장근영 · 배상률
- 12-R49 한국의 가족변화에 대응하는 Public Relations 정책의 진단과 정책과제 / 김준홍 · 김지경 · 배상률
- 12-R50 체험중심 진로교육 인프라 구축을 위한 전문기관간 연계협력 방안 / 김현철 · 안선영
- 12-R51 포래조정 시범학교사업(2013년 1월 발간예정) / 양계민 · 김지경 · 맹영임 · 조혜영
- 12-R52 청소년의 인터넷게임 이용 실태조사(2013년 1월 발간예정) / 배상률 · 김준홍 · 이창호
- 12-R53 인성교육실천 우수학교(2013년 2월 발간예정) / 김경준 · 성윤숙 · 김영지
- 12-R54 학생모니터단 운영 사업 결과보고서(2013년 2월 발간예정) / 박영균 · 최인재 · 모상현
- 12-R55 학업중단 학생 중단 정책연구(2013년 2월 발간예정) / 윤철경 · 김영지 · 유성렬 · 강명숙
- 12-R56 학업중단학생 교육지원사업 성과분석 연구(2013년 2월 발간예정) / 윤철경 · 김성기
- 12-R57 서울 교육복지정책 적정성 분석 및 체계화 방안(2013년 2월 발간예정) / 김준홍 · 윤철경 · 우창빈

세미나 및 워크숍 자료집

- 12-S01 개원 23주년 기념 특별 세미나 : 19대 국회에 청소년정책을 묻는다(7/6)
- 12-S02 연구성과발표회(2/26)
- 12-S03 청소년 한부모가족 종합대책 연구 I 콜로키움 자료집 : 청소년 한부모 지원정책의 쟁점과 방향(3/20)
- 12-S04 2012년 한국아동·청소년패널 1차 콜로키움 자료집 : 한국교육종단연구 2005의 설계, 결과 그리고 종단조사에서 유의해야할 개인정보보호법(3/21)
- 12-S05 청소년과 SNS 소통(4/6)
- 12-S06 2012년 한국아동·청소년패널 2차 콜로키움 자료집 : 고령화연구패널조사(4/4)
- 12-S07 학생대상교사의 표본설계와 조사데이터 분석(4/5)
- 12-S08 인성교육실천 우수학교 워크숍(4/9, 10)
- 12-S09 청소년활동 관점에서 바라본 주5일 수업제(4/13)
- 12-S10 지역사회 자원활용 진로체험활동 국내외 사례(4/12)
- 12-S11 청소년활동시설 평가모형 개발 연구Ⅲ(4/24)
- 12-S12 제2차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1년도 고유과제 연구성과발표회 :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4/19)
- 12-S13 질적연구에서의 자료수집방법에 대한 이해(4/25)
- 12-S14 정책의 원리 및 정책분석·평가의 이해(4/24)
- 12-S15 2012년 인성교육실천우수학교 컨설팅위원 워크숍(4/30)
- 12-S16 청소년보호대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5/2)
- 12-S17 정책분석 및 성과평가의 방법(5/11)
- 12-S18 2012년 진로진학상담교사 배치교 교장 특별연수(4/25)
- 12-S19 2012년 청소년활동정책 체계화 방안 : 육성·수련·활동·역량, 개념의 고리를 찾아서
- 12-S20 주5일수업제와 청소년활동(5/25)
- 12-S21 청소년활동시설 평가모형 개발 연구Ⅲ 제1차 콜로키움 자료집 : 지역아동센터 평가제도에 대한 이해
- 12-S22 질적연구 자료분석방법의 다양성 이해(5/24)
- 12-S23 청소년활동시설 평가모형 개발 연구Ⅲ 제2차 콜로키움 자료집 : -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평가제도에 대한 이해 -(6/11)
- 12-S24 아동·청소년 인권 관련 국내·외 동향(6/5)
- 12-S25 청소년멘토링 국내·외 실태 및 활성화 과제 모색(6/8)
- 12-S26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의 발달과정 추적을 위한 종단연구Ⅲ
- 12-S27 청소년정책 총괄조정 현황 및 관련정책 동향 분석 : 국내외 사례를 중심으로(6/8)
- 12-S28 청소년 도덕성 검사도구 표준화 연구Ⅱ 콜로키움 혼합형 모형 : 아동·청소년 발달연구에서의 대상 중심적 접근과 적용
- 12-S29 인성교육실천우수학교 2차 워크숍
- 12-S30 한국아동·청소년 패널조사2010 Ⅲ : 데이터방법론 세미나(7/5)
- 12-S31 후기청소년세대 연구를 위한 쟁점과 이슈(2/10)
- 12-S32 청소년동아리활동 인증 시범운영워크숍
- 12-S33 청소년 한부모가족 지원정책 국가비교와 예방접근 모색(7/13)
- 12-S34 청소년심터 평가제도에 대한 이해
- 12-S35 2012 전국청소년운영위원회 워크숍(8/8)

- 12-S36 2012 초·중·고 진로업무담당교사 직무연수
- 12-S37 주5일 수업제 전면실시에 따른 청소년활동 활성화 방안(8/23)
- 12-S38 청소년보호대책안 전문가 워크숍(8/24)
- 12-S39 청소년 도덕성 검사도구 표준화 연구Ⅱ : 제2차 콜로키움 자료집(9/4)
- 12-S40 학교규칙을 통한 실천적 인성교육 구현방안 학술대회 및 우수사례 발표대회(9/26)
- 12-S41 청소년멘토링 효과분석 및 활성화 정책과제
- 12-S42 청소년멘토링 시범사업 기관 성과발표회
- 12-S43 청소년활동시설 평가모형 개발 연구Ⅲ 워크숍 자료집 : - 청소년문화의집 시범평가용 편람(안) -
- 12-S44 교과속의 체험활동요소(9/27)
- 12-S45 청소년 한부모와 학습권(10/16)
- 12-S46 일본의 진로교육정책 콜로키움(10/19)
- 12-S47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리더러시 증진을 위한 정책세미나(11/12)
- 12-S48 제2회 한국아동·청소년 패널조사 학술대회(11/16)
- 12-S49 소셜텍스트를 활용한 사회문제분석 : 빅데이터를 중심으로(11/29)
- 12-S50 진로교육정책 이해과정
- 12-S51 아동·청소년 성보호 종합대책 연구Ⅰ : 아동·청소년 성폭력 예방 및 피해지원 대책 연구결과 발표 워크숍(12/18)

학 술 지

- 「한국청소년연구」 제23권 제1호(통권 제64호)
- 「한국청소년연구」 제23권 제2호(통권 제65호)
- 「한국청소년연구」 제23권 제3호(통권 제66호)
- 「한국청소년연구」 제23권 제4호(통권 제67호)

청소년지도총서

- 청소년지도총서① 「청소년정책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② 「청소년수련활동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③ 「청소년지도방법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④ 「청소년문제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⑤ 「청소년교류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⑥ 「청소년환경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⑦ 「청소년심리학」,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⑨ 「청소년상담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⑩ 「청소년복지론」,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⑪ 「청소년문화론」,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⑫ 「청소년 프로그램개발 및 평가론」,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⑬ 「청소년 자원봉사 및 동아리활동론」,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⑭ 「청소년기관운영론」,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⑮ 「청소년육성제도론」,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 「청소년학 연구방법론」,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 「청소년학 개론」, 교육과학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문고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문고 01 「좋은교사와 제자의 만남」, 교육과학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문고 02 「행복한 심대 만들기 10가지」, 교육과학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문고 03 「집나간 아이들 - 독일 청소년 중심」, 교육과학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문고 04 「청소년학 용어집」, 교육과학사

기타 발간물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29호 : 청년층의 효과적인 성인기 이행 지원 방안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30호 : 청소년 정신건강 실태 및 대응 방안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31호 : 청소년 멘토링 활성화 정책 방안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32호 : 다문화가족 청소년의 발달실태 및 지원정책 개선방안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33호 : 대학 재학 후기청소년 현안과 정책과제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34호 : 청소년문화의집 현황과 평가방안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35호 : 청소년 국제교류 현황 및 정책안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36호 : 주5일수업제 전면 실시에 따른 청소년활동 활성화 방안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37호 :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한 창의적 체험활동 활성화 방안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38호 : 청소년정책 총괄조정 방안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39호 : 지역사회의 청소년 보호 효과
 NYPI 청소년 통계브리프 1호 : 2011 민주시민역량 실태조사
 NYPI 청소년 통계브리프 2호 : 2011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
 NYPI 청소년 통계브리프 3호 : 다문화가정 아동·청소년의 발달과정 추적을 위한 종단연구 결과
 NYPI 청소년 통계브리프 4호 : 2011 한국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실태조사
 NYPI 청소년 통계브리프 5호 : 제19대 국회의원 청소년정책 의견조사
 NYPI 청소년 통계브리프 6호 :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이용실태조사

연구에 도움을 주신 분들

◆ 집필진 ◆

김둘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연구위원
박선영 동서대학교 · 교수
박철웅 백석대학교 · 교수
이동섭 땀페레 대학교 · 박사과정
정봉근 서울대학교 · 교수
최연혁 쇠데르테른대학교 · 교수
최진식 국민대학교 · 교수

◆ 자문진 ◆

김민아 여성가족부 · 사무관
김용수 한일장신대학교 · 교수
남기범 성결대학교 · 교수
박옥식 청소년폭력예방재단 · 사무국장
박정애 여성가족부 · 사무관
송민경 경기대학교 · 교수
송호신 이화여자대학교 · 교수
유낙준 한국청소년쉼터협의회 · 회장
윤소영 교육과학기술부 · 학교폭력근절과장
이광호 경기대학교 · 교수
이맹주 강남대학교 · 교수
이민희 평택대학교 · 교수
이재호 한국행정연구원 · 연구위원
조아미 명지대학교 · 교수
천정웅 대구카톨릭대학교 · 교수
한상철 대구한의대학교 · 교수

연구보고 12-R06

청소년정책 총괄조정 방안 연구

인 쇄 2012년 12월 24일

발 행 2012년 12월 26일

발행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서울특별시 서초구 태봉로 114

발행인 이 재 연

등 록 1993. 10. 23 제 21-500호

인쇄처 문영사 전화 02)2263-5087 대표 김희자

사전 승인없이 보고서 내용의 무단전재·복제를 금함.

구독문의 : (02) 2188-8844(연구기획·대외협력팀)

ISBN 978-89-7816-345-3 93330